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박사학위논문

2000년대 이후 북한 고등교육정책 연구

- ‘세계적 추세’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김 유 연

2000년대 이후 북한 고등교육정책 연구

- '세계적 추세'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유 성 상

이 논문을 교육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김 유 연

김유연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월

위 원 장 우 용 제 (인)

부위원장 김 범 수 (인)

위 원 조 정 아 (인)

위 원 신 효 숙 (인)

위 원 유 성 상 (인)

VITA

EDUCATION

2014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 석사
2011년 8월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정치외교학 학사

RESEARCH EXPERIENCE

2020년 3월 - 2021년 4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프로젝트연구원
2016년 1월 - 2018년 2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사업운영원
2014년 4월 - 2015년 3월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원
2012년 9월 - 2012년 12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연구보조원

PUBLICATIONS

김유연, 박상민·이혜원, 송원준, 이종민, 정은미, 이정철(2022). 북한사회변동 2012-2020. 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학령, 김유연, 이민영, 장인숙(2021). 탈북 아동청소년의 실태 및 욕구조사 설계를 위한 델파이조사 연구. 미래사회복지연구, 12(3), 137-174.

김유연, 유성상(2021). 북한 고등교육 학계에서 인식한 '세계 교육발전 추세'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22(4), 859-887.

김학재, 정은미, 이종민, 박상민, 이혜원, 김유연, 최은정, 임경훈, 최현정(2021). 북한사회변동 2020. 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범수, 김병연, 김학재, 이경수, 조용신, 김유연, 최현정(2021). 2020 남북통합지수. 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유연(2020). 개성공단 근무 경험자가 인식한 북한 근로자의 특성과 그에 따른 관계형성 전략. 통일과 평화, 12(2), 183-228.

이인영, 김유연, 문정민, 이규빈, 유성상(2019). 세계시민교육으로서의 국제교류협력 프로그램: 경기도교육청 사례연구. 국제이해교육연구, 14(2), 139-172.

Kim, Y. (2019). A COMPARATIVE STUDY ON COMPUTER EDUCATION IN NORTH KOREA'S No.1 MIDDLE SCHOOL AND GENERAL MIDDLE SCHOOL IN KIM JONG-IL ERA. TOJET Special Issue for IETC, ITEC & INTE 2019 Vol. 2, 6-16.

강구섭, 정재훈, 김유연(2019). 탈북학생 문화예술 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 고찰 - 교육부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용봉인문논총, 55, 5-39.

김유연, 이규빈(2018). 한국과 호주의 이중언어 교육정책 비교 - 발전 과정 및 현황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73, 29-63.

김유연, 손명아, 김석호(2018). 가족과 사회적 관계가 탈북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41(1), 179-205.

김유연(2014). 북한 제1중학교 정책 실태 및 변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국문초록

1990년대 초 냉전 종식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교육 세계화는 각국에 상이하고 불평등한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주의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로 간주되는 북한 또한 스스로 부정함에도 교육 세계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세계적 추세'에 따라 고등교육정책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양상과 특징, 요인을 분석하였다. 북한의 공간문헌을 분석하여 북측에서 인식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가 무엇인지 밝히고, 박재윤 외(2008)의 교육 세계화 개념틀을 수정·적용하여 북한이 고등교육정책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정리하였다. 또한 북한 고등교육기관 관련 경험을 갖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내국인과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실태 및 특징,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교육신문」 기사 분석 결과, '세계적 추세' 관련 담론은 네 시기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1기는 김정일이 2009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에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구호를 하달한 이후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재대국'이 될 것을 강조하기 시작한 2009-2011년이다. 2기는 김정일 사망 후 세계 교육발전 추세를 따라잡는 것이 그의 '유훈'이 되었고 구체적인 성과들이 도출되기 시작한 2012-2015년이다. 3기는 북한이 4-6차 핵실험을 자행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자강력제일주의' 노선을 천명하여 세계적 추세 관련 기사가 감소했던 2016-2017년이다. 4기는 북한이 한국, 미국과 외교적 협상을 시도하면서 세계적 추세 관련 기사도 증가하고, 특히 교원들의 역할이 강조됐던 2018-2019년이다. 시기

별 담론 분석을 통해 북한에서 세계적 추세에 대한 강조는 실용적 의미뿐만 아니라 선전선동의 성격을 가지며, 대외관계의 변동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개념틀에 따라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교육제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개방되어 있다. 북한은 1999년 채택된 교육법과 2011년 채택된 고등교육법, 2015년 채택된 교원법에 교육 교류협력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의 경우 외국 교수의 초빙강의와 유학생 교류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과학연구원 교육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은 유일한 사립 국제대학, 남북합작 대학으로 외국인 교수진이 영어로 북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북한 교육제도의 제한적 개방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둘째, 교육 분야 인적·물적 교류가 미미하게 이어져 왔다. 유학생 교류의 경우 2000년대 이후 파견국을 다변화하고, 2009년 자비유학생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0년대 후반에는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재북 유학생 전공 분야를 확대하였다. 교육자 교류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외국인 교원을 유치했고 북한 교원들이 해외연수를 가기도 했으며, 2011-2018년에는 매년 북측에서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물적 교류는 인적 교류 수반 물적 교류와 교육 원조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아직까지 호혜적 교류보다는 시혜적 교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세계적 추세에 맞게 고등교육정책을 모방해왔다. 북한 학자들은 교육계획 수립에 관심을 갖고 통계 역량을 개선해나가려 하고 있으며,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주요 대학을 '세계일류급대학'이자 '연구형 대학'으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고 토론식 교수법, '문제에 기초한 교수방법' 등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공학에 관심을 갖고 있

으며 원격교육체계를 확립하여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교육 당국은 교원 양성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원들의 학위 취득을 장려하고 있다.

즉, 2009년 이후 ‘세계적 추세’는 북한 당국이 고등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으며, 대학 학자들의 연구주제이자 성과 산출의 기준이 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특징을 세 가지로 도출하였다. 첫째, 정치경제체제를 완전히 개혁개방하지 않고 제한적으로만 교육제도를 개방했다. 김정일이 김일성종합대학에 하달한 구호에서 보듯이 북한 학생 및 학자들은 세계를 보아야 함에도 발은 자기 땅에 붙여야 하는 물리적, 정신적 통제를 받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국내외 이동의 자유가 부족하고 외부 정보 및 외국인 접촉을 제한 당한다. 정신적으로도 북한 주민들은 세계시민성보다 경쟁의식을 가질 것을 강요받고 있다.

둘째, 인적·물적 교류가 중국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 중국은 북한 학자들이 세계적 추세를 파악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는 국가이며, 국제 협력 공동연구를 가장 빈번하게 수행한 국가이다. 또한 북한의 고등교육정책은 철저하게 국가 주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 후발기술이 아닌 첨단기술의 혁신을 추구한다는 점, 비대칭적 군사전략을 위해 고등교육 자원이 활용된다는 점에서 ‘베이징 컨센서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호환성이 미비하지만, 세계적 추세를 모방하고 있다. 북한은 2005년 옵서버로 가입을 시도했음에도 핵문제, 미국과 일본 등의 반대, 통계 공개문제 등으로 교육서비스 무역을 주도하는 WTO에 가입하지 못했다. 또한 북한은 정치사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능력에 따른 평가 및 선발체계가 공고하지 않기 때문에 고등교육 프로그램이 국제적인 질 인증을

받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고등교육은 2000년대 이후 외국의 교육발전정책을 연구하여 고등교육 부문에 적용함으로써 기술적으로 세계적 추세에 상당히 동형화되었다.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세계적 추세에 따라 고등교육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요인은 세계화 시대의 학술적, 경제적 경쟁이다. 치열한 국제경쟁 가운데 북한은 더 이상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세계적 추세에 맞게 고등교육정책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단번도약'하기 위한 '우선순위 투자 프로젝트'로 전개하고 있다. 두 번째 요인은 엘리트 및 청년세대의 특성이다. 고난의 행군기 이후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북한에도 외부 정보가 유입되었고, 청년세대는 한류 등 문화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엘리트들 또한 김일성 시대와 달리 김정일, 김정은 시대에는 '거래적 리더십'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의 체제 자부심을 강화하여 포섭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고등교육정책을 발전시키려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렇다면 북한의 고등교육이 세계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박재윤 외(2008)의 교육 세계화 정의와 개념틀에 비추어봤을 때 북한 고등교육이 세계화의 영향은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세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국가 주도 대학교육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북한 대학들이 세계일류급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학문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통계체계를 정교화하고 공개하고, 전반적 체제를 더 개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진 북한의 고등교육정책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교육 세계화의 특수한 사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용적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는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용한 자료가 실태를 충분히 드러내주지 못한다는 점과 2020년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 교육 세계화 및 능력주의 체계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겠다.

주요어 : 교육 세계화, 교육 동형화, 세계적 추세, 교육 교류협력, 사회주의 교육, 북한 고등교육
학 번 : 2017-38256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 3

제 3 절 연구 대상 및 내용 ····· 6

제 2 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 12

제 1 절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변화 ····· 12

1. 정치외교적 변화 ····· 12

2. 경제적 변화 ····· 15

3. 교육적 변화 ····· 19

제 2 절 선행연구 분석 ····· 22

1. 북한 고등교육 연구 ····· 22

2. 북한교육의 '세계적 추세' 지향성 연구 ····· 25

제 3 절 교육의 세계화 및 동형화 ····· 28

1. 교육의 세계화 및 동형화 ····· 28

2. 세계화에 대한 북한의 이해 ····· 36

제 4 절 사회주의 국가들의 교육 세계화 ····· 39

1. 러시아 ····· 40

2. 중국 ····· 44

3. 베트남 ····· 49

4. 쿠바 ····· 52

5. 사회주의 국가 고등교육 세계화의 특징 ····· 56

제 3 장 연구방법 ····· 62

제 1 절 방법론에 대한 설명 ····· 62
제 2 절 분석 자료 및 절차 ····· 65
1. 북한 공간문헌 분석 ····· 65
2. 심층면담 자료 분석 ····· 70
제 3 절 분석을 위한 개념틀 ····· 73

제 4 장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양상 ····· 76
제 1 절 고등교육의 '세계적 추세' ····· 76
1. 시기별 담론 분석 ····· 76
2. 참고 국가 ····· 93
제 2 절 교육제도의 제한적 개방성 ····· 98
1. 교육 교류협력 관련 법령 ····· 100
2. 평양과학기술대학 사례 ····· 108
제 3 절 인적·물적 교류 ····· 115
1. 인적 교류 ····· 116
2. 물적 교류 ····· 146
제 4 절 고등교육정책의 모방 ····· 155
1. 교육계획 ····· 156
2. 대학 운영 ····· 158
3. 교육 내용 및 방법 ····· 161
4. 교육공학 ····· 165
5. 교원 양성 및 관리 ····· 167
제 5 절 소결 ····· 169

제 5 장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특징 및 요인 ·· 175
제 1 절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특징 ····· 175
1. 통제사회의 교육제도 개방 ····· 176

2. 베이징 컨센서스의 영향 ····· 186
3. 국제호환성 미비한 '세계적 추세' 모방 ····· 193
제 2 절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요인 ····· 199
1. 세계화 시대의 학술적, 경제적 경쟁 ····· 200
2. 엘리트 및 청년세대의 특성 ····· 205

제 6 장 결론 ····· 211
제 1 절 요약 및 논의 ····· 211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219

참고문헌 ····· 223
Abstract ····· 243
감사의 글 ····· 249

표 목 차

[표 1] 북한 고등교육기관의 종류 ····· 7
[표 2] 2020년 각국 유학생의 행선지 순위 및 유학생 수, 비율 ··· 56
[표 3] 2020년 각국 해외 유학생의 출신국 순위 및 유학생 수, 비율 ··· 58
[표 4] 「고등교육」 내 세계 교육발전 추세 관련 기사 코드, 범주, 빈도 ···· 69
[표 5] 연구 참여자 정보 ····· 71
[표 6] 심층면담 사례 분석 코드 ····· 72
[표 7] 「고등교육」 세계 교육발전 추세 관련 기사의 등장 국가 빈도 ··· 94
[표 8] 2005-2015년 북한 과학자들의 주요 국가별 공동연구 수행 추이 ··· 96
[표 9] 2005-2015년 북한 과학자들의 주요 해외 공동 연구기관 현황 ···· 97
[표 10] 북한 과학기술, 지적소유권, 체신부문 법률 중 국제교류협력 관련 조항 104
[표 11] 평양과학기술대학 재학생 현황(2021년 4월말 기준) ····· 112
[표 12] 평양과학기술대학 졸업생 현황(2021년 기준) ····· 112
[표 13] 평양과학기술대학 중국 단기연수 내용 ····· 114
[표 14] 북한 해외유학생 파견 통계(1946-1972) ····· 117
[표 15] 2000-2019년 유학 지역에 따른 북한 유학생 수 ····· 121
[표 16] 2019-2020년 상위 20위 유학대상국(중국 제외)의 북한 유학생 수 122
[표 17] 2000-2020년 미국에 유학한 북한 유학생 수 ····· 123
[표 18] 재북 유학생의 구분 ····· 127
[표 19] 북한 대학 교원들의 주요 해외연수 사례 ····· 133
[표 20] 2009-2019년 북한 신문에 보도된 북한 측 개최 국제학술토론회 ····· 136
[표 21] 평양과학기술대학 주최 국제학술대회 ····· 140
[표 22] 2000년대 남북한 간 주요 언어학·한국학·역사학 학술교류 ··· 142
[표 23] 2000년대 남북한 간 주요 과학기술 학술교류 ····· 143
[표 24] 남북한 대학 간 주요 학술교류 ····· 144
[표 25] 북한의 주요 유학대상국별 유학경비 규모 추산 ····· 147
[표 26] UNOCHA에 보고된 2000년대 대북 교육 원조 ····· 150
[표 27] 2020년 각국 유학생의 행선지 순위 및 유학생 수, 비율 · 171

그 림 목 차

[그림 1] 박재윤 외(2008)의 교육 세계화 분석틀 ····· 35
[그림 2] 1990-2019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세계'의 언급빈도 ·· 38
[그림 3] 「고등교육」 세계 교육발전 추세 관련 기사의 기자 소속 분류 ···· 68
[그림 4] '세계적 추세'에 따른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 개념틀 74
[그림 5] 연도별 「고등교육」 관련 기사 빈도 추이 ····· 77
[그림 6] 연도별 「교육신문」 관련 기사 빈도 추이 ····· 78
[그림 7] 2011-2015년 「로동신문」 키워드 검색 빈도수 ····· 81
[그림 8] 북한의 출국 유학생 행선지 인포그래픽 ····· 120
[그림 9] 북한이탈주민 연령대별 재북 당시 남한문화 경험도 ··· 206
[그림 10] 북한이탈주민 연령대별 탈북 결심 이유 ····· 206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냉전시기 양극의 한 축을 차지하던 사회주의 국가들은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걸쳐 고전적 체제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갔다. 1978년 덩샤오핑은 중국의 '역사적 노선 전환'을 선언했고, 1985년 러시아에서 집권한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를 실시했으며, 1986년 베트남 정부는 중앙집권적 계획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도이머이를 채택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체제 개혁개방은 1990년대 급속하게 진행된 세계화의 흐름과 맞물려 '탈냉전으로 인한 새로운 지구적 네트워크'를 형성했다(최용환, 2005). 자연스럽게 경제체제의 변화는 곧 교육의 변화로 이어졌다. 시장경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주도적 사회주의 교육체제가 재정비되어야 했다. 중국은 1979년 문화대혁명 시기 황폐화되었던 교육체제를 복구하기 시작했고, 베트남도 1986년 수립한 주요 국가 개혁안의 결과 교육개혁이 실시되었다(이성준, 2012). 러시아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집단주의적 훈육과 정치사상 중심의 사회주의 교육체제를 민주화와 다양화, 개별화를 강조하는 교육체제로 탈바꿈시키고자 했다(신효숙, 2012). 이러한 교육개혁은 경제분야와 마찬가지로 세계화에 의해 가속화되었는데, 사회주의 국가들은 교육 세계화의 후발 주자로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교육정책을 도입하고 국제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한편,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 흐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쿠바는 여전히 고전적 체제의 근간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1]에 있는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비합리적이고 알 수 없는, '나쁘거나

1) 「남북기본합의서」 1991년 12월 13일, 1쪽.

미친' 국가로 그려진다(Smith, 2000). 그러나 북한도 1984년에는 김정일의 지시로 대외 경제교류를 위한 합영법을 시도했으며, 199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국제사회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실리주의'를 강조하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경제적 성격의 정책으로 평가되는 조치들을 실시하였다. 2012년 집권한 김정은 또한 여러 경제개혁 조치를 도입했다. 물론 핵 문제로 인한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이 완전한 개혁개방을 실시하고 있고 보기는 어렵지만, 김수현, 손욱(2020)은 북한의 경제관련 학술지 「경제연구」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바탕으로 김정은 시기에 선대에 비해서 개혁개방에 대해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세계 경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반(反) 제국주의 시선'으로 인식했다면, 김정은 시기에는 '생존과 경쟁의 공간'이자 대외무역을 통해 진출해야 할 무대로 인식하고 있다(정영철, 2018).

경제 분야에서 개혁 조치가 취해질 때마다 북한의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본래 북한의 교육체제는 해방 후 소련의 영향을 받아 구축되었고, 1970년대부터는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 평등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에서 주체'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84년 김정일은 정치사상교육뿐만 아니라 기초과학교육과 외국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중등교육 수준에서 과학기술 수재(영재)를 양성하기 위한 평양제1중학교가 설립되었다. 그 후 제1중학교는 점차 확대 설립되어 1999년 전국 시·군·구역에 1개교씩 200여 개의 학교가 일제히 개교하였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도 1999년 김일성종합대학에 컴퓨터과학대학이, 김책공업대학에 정보과학기술대학과 기계과학기술대학이 설립되었고, 2002년 6년제로 운영되던 리과대학이 4년제로 개편되는 등 정보화 추세를 반영한 개혁이 이루어졌다(조정아, 이춘근, 2008).

북한 교육의 변화는 점차 '세계적인 교육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김정일 시대에는 '정보산업시대'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화를 주었고, 김정은 집권 후 부쩍 '세계적 추세'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 '세계화'라는 단어는 '미제에 의한' '일체화'라는 의미로 부정적으로 쓰이지만(정영철, 2018), 2009년 12월 김정일이 "자기 땅

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라는 구호를 강조한 데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며 교육을 변화시키고 있다. 김정은 시대 교육정책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그러한 특성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조정아 외, 2015; 김지수 외, 2019). 그러나 구체적으로 북한이 따라가려고 하는 '세계적 추세'가 무엇인지, 그로 인한 북한 교육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세계적 추세'에 따른 북한 교육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고등교육은 세계화 추세에 따른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학교급이다. 북한에서도 '세계일류급대학'이 될 것을 목표로 개혁해나가고 있는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해 고등교육기관들이 세계적 추세를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고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고,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거나 개방하지 못하고 세계적 추세의 일부분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세계적 추세에 따른 북한 고등교육정책의 변화를 연구할 때 북한의 공식 담론 및 정책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실천 맥락에서 그 실태와 한계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논문의 목적은 2000년대 이후 '세계적 추세'에 따른 북한 고등교육정책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고등교육 단계에서 따라가고자 하는 '세계적 추세'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그에 맞게 고등교육정책을 변화시키는 양상과 특징, 요인(main cause)을 분석한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각국 제도 및 정책의 유사성 혹은 동형화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정책도 글로벌 수준에서 수렴함에 따라 여러 국가 및 지역의 고등교육 세계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성열관, 2010; Mok, 2003;

King, Marginson & Naidoo, 2011; Altbach et al., 2017).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북한이 세계적 추세에 맞춰 교육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본 논문은 세 가지 연구 문제에 천착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은 '세계적 추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고등교육정책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가? 여기서 세계적 추세를 인식하는 주체는 북한 교육당국과 학자들로 구분해서 살펴본다. 북한 당국은 세계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세계 교육발전 추세를 따라잡아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재대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09년 이후 부쩍 증가한 북한 「교육신문」의 관련 기사 속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당국이 인식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정치적 선전선동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당국의 지시에 따라 북한 대학 학자들도 세계적 추세를 연구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열람 가능한 2005년부터의 북한 정기간행물 「고등교육」의 관련 기사를 분석하여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세계 교육발전 추세가 무엇인지 밝힌다. 그리고 북한 교육실태에 대한 선행연구 및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당국과 학자들이 세계적 추세를 북한 고등교육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박재윤 외(2008)가 한국의 교육 세계화를 분석한 개념틀을 북한 상황에 맞도록 수정하고 적용하여 교육제도의 제한적 개방성과 인적·물적 교류, 고등교육정책의 모방에 대해서 정리한다.

둘째, 세계적 추세에 따른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특징은 무엇인가?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아직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교육 분야 세계적 추세를 상대적으로 늦게 받아들이고 있는 북한의 변화는 다른 사회주의, 자본주의 국가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제2장에서 분석한 사회주의 국가 고등교육 세계화의 특징과 제4장에서 박재윤 외(2008)의 개념틀을 북한 사례에 적용한 결과, 그리고 북한 고등교육 관련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내국인과의 심층면담 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특징을 세 가지

로 도출한다.

셋째, 북한은 왜 세계적 추세에 맞게 고등교육정책을 변화시켜왔는가?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 북한이 세계적 추세에 따라 고등교육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은 모순적으로 보이며, 그만큼 북한의 동기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의사결정체계가 중앙집권적이고 그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북한 당국이 특정 정책을 시행하는 의도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북한의 경제적·사회적 맥락과 함께 추정해볼 수 있다. 2000-2010년대 북한의 경제 및 사회 분야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와 연구 참여자 심층면담 결과를 토대로 고등교육 분야에서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고자 하는 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세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북한 교육의 변화를 국제적 맥락에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해방 후 소련을 모델로 하여 교육체제를 설립하였으나, 1970년대에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규정한 이후 모든 분야에서 소련의 흔적을 지워나갔다(김동규, 1990). 그 이후 시대의 북한 교육에 대한 연구도 국제적 영향보다는 북한이라는 국가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상술한 바와 같이 김정일 시대부터 북한 교육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모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음에도 그것을 국제적 맥락에서 비교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 들어서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고자 하는 북한 교육의 변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세계 교육발전 추세가 어떤 것인지 함께 조망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 세계화가 사회주의 국가에 영향을 미친 특수한 사례를 보여줄 수 있다. 1970년대 중반 Wallerstein이 세계체제론을 주창한 이후 1990-2000년대에 활발하게 진행된 세계화 논의는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신자유주의적 혹은 후기식민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Burbules & Torres, 2000; Rizvi, 2007).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국제기구에 가입하면서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의 교육 세계화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지

만(Mok, 2005a; Froumin & Kouzminov, 2015; Nguyen & Tran, 2018), 북한과 같이 아직까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국가에 교육 세계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북한 교육 변화의 특징을 드러내고, 교육 세계화가 변형되고 굴절되어 적용되는 특수한 사례를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국제협력 및 남북한 교육 교류협력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북한은 1995년 8월 대홍수 후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교육 분야 국제 지원 및 협력의 대상이 되었고, 1989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이 제정된 이후 남북한의 학자들의 교육 교류협력이 시작되었다(윤종혁 외, 2007). 그러나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및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대북 교류협력 규모는 급속도로 축소되었고, 교육 분야에서도 매우 제한적인 교류만 이루어졌다. 2018년 남북 간, 북미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다시 교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교육 분야 협력에 대비한 연구들도 수행되었지만, 오랜 시간 남북 교류가 제한되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준비하기에는 연구 성과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 고등교육정책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재개 시 북한의 수요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제 3 절 연구 대상 및 내용

고등교육(higher education)은 좁은 의미에서 중등후 교육(post secondary education) 및 제3단계 교육(tertiary education)과 구별되는 학문중심의 전통적 대학교육을 의미한다. 북한 고등교육제도는 종합대학, 부문별 대학, 직업기술대학 등으로 이루어진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산업체 부설 현장대학, 원격교육대학 등으로 이루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다. 대학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박사원으로, 석사반과 박사반이 운영되고, 박사원 이후에는 3-5년제 과학연구원이 존재한다. 종합대학은 2010년대 초반까지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성균관 3개 학교에 불과했지만, 2010년대 중반에 종합대학화 정책으로 10여 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2019년 10월에 다시 대부분의 종합대학을 부문별 대학으로 환원하여 현재는 <표 1>에 명기한 5개 학교가 해당된다(조정아 외, 2020). 이를 제외하면 모든 대학이 단과대학이고, 학과도 세분화되어 있다. 북한 최초의 국제대학이자 남북합작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제외하면 모든 대학이 국립대학이고, 공식적으로는 무상교육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1년 북한의 대학은 총 490여 개이며,[2]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UIS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의 고등교육 등록률은 26.8%이다.[3]

<표 1> 북한 고등교육기관의 종류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
종합대학(4-6년) - 김일성종합대학 - 김책공업종합대학 - 고려성균관 - 리과대학 -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부문별 대학(4-6년) 교원대학(3년)	직업기술대학 (3-4년 추정)	공장/농장/어장대학 원격교육대학

출처: 조정아 외(2020)를 참고하여 재구성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의 경우 중등후 교육에 해당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를 중점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즉, '세계적 추세'에 따라 북한의 종합대학, 부문별 대학, 교원대학, 직업기술대학에 대한 각종 정책에서 일어나

2) KOSIS 홈페이지 (검색일: 2022.12.27.)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BUKHAN&menuId=M_02_02
3) UNESCO UIS 홈페이지 (검색일: 2022.12.27.) https://uis.unesco.org/en/country/kp

는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하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대한 내용도 일부 함께 연구한다. 특히 원격교육대학의 경우 과거 통신대학이 원격교육기술의 발달로 전환된 것으로, 그 자체가 '세계적 추세'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해당 내용에서 분석한다.

한만길, 손계림(1996a)은 북한 고등교육의 발전과정을 4단계로 나누었고, 김병로(2018)는 1단계를 추가하여 5단계로 나누었다. 제1단계는 김일성종합대학 육성 시기(1945-1953년)로, 해방 직후부터 6.25전쟁이 휴전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 나갈 "새형의 민족간부"를 양성해야 했기 때문에 교육제도 전반의 기초를 확립하는 한편, 고등교육 부문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을 설립하였다. 대학교 설립은 1946년 3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발표한 '20개조 정강'에 명시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1946년 10월 북한 최초의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이 7개 학부, 24개 학과, 30개 학급으로 창설되었다. 제2단계는 기술교육 발전 시기(1953-1972년)로, 전후 복구사업과 경제 건설을 위해 기술교육을 강조하던 시기이다.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1953년 2년제 고등기술전문학교가 설치되었고, 이후 성인교육을 위해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이 설치되었다. 제3단계는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 시기(1972-1984년)로, 1970년대 중반 이후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을 통해 산업현장의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여 고등기술전문학교를 고등전문학교로 개편하고,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을 증설하였다. 1982년에는 텔레비전 방송대학이 설립되었고, 통신종합대학인 인민대학습당이 개관하였다. 제4단계는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정예화 시기(1984-2000년)로, '전 사회의 인텔리화'라는 구호를 내걸고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도모하며 동시에 10여 개의 대학을 '중심대학'으로 선정하여 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교육과 외국어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도 1984년부터이다. 김병로(2018)가 추가한 제5단계는 과학기술인재 양성시기(2000년-현재)로, 김정일 집권 시 강성대국 건설과 선군정치를 위한 과학기술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교육에서의 실리주의'를 강조하였다. 2012년 김정은 집권 후에도 북한 당국은 대학을 통해 IT, 과학기술 교육

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 시기는 북한 고등교육 발전의 제5단계에 해당하는 2000-2019년이다. 세계적 추세에 맞게 고등교육정책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김정은 시대 들어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김정일 시대에도 존재했다. 분석대상 자료인 북한 정기간행물 「고등교육」에서도 한국에 입수되어 있는 2005년부터 '세계교육발전추세'라는 코너를 싣고 있다. 그리고 2008년을 기점으로 부쩍 '세계적 추세'에 대한 강조가 다른 자료에서도 빈번하게 관찰된다. 그때부터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인민교육」에서도 '세계교육동향자료'나 '세계교육발전추세자료'와 같은 코너가 연재되어 있다. 2008년 5월 7일 김정일이 조선로동당[4]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에서 "교육발전의 세계적 추세를 잘 알아야" 한다고 지시하였고, 교육발전 5개년계획(2008-2012)을 세운 것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5] 이후 2009년 김정일은 김일성종합대학에 세계를 보는 안목을 가질 것을 지시했고, 201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경제와 과학기술을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인 분야를 세계적인 높이에 올려 세"울 것을 강조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 이후 북한 고등교육정책의 변화를 연구하되, 2008년 이후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19 펜데믹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후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북한 「교육신문」과 「고등교육」의 입수가 지연되고 있는 바, 연구 대상 시기를 2019년까지로 한정하고자 한다.

제2장 이하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적 추세'에 따른 북한 고등교육정책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이론적 배경을 탐색한다. 먼저 고등교육의 변화와 관련 있는 타 분야의 변화를 정리하여 2000년대 이후 정치외교, 경제, 초중등교육 부문에 대한

4) 본 논문에서 북한 공간문헌 원문을 인용할 때 띄어쓰기는 남한 식으로 수정하되 '력사'와 같은 단어는 그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상응하는 남한 단어를 병기하고자 한다. 다만 '조선로동당'과 같은 고유명사는 남한 단어를 병기하지 않는다.

5) "공동사설과업관철에서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자," 「교육신문」 2008년 1월 24일, 1면.

이해를 전제한다. 이후 북한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선행연구와 북한교육의 '세계적 추세' 지향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본 연구의 차별점을 밝히고, 교육의 세계화와 동형화에 대한 이론적 자원을 검토한다. 이때 세계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도 함께 정리한다. 북한의 변화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교육 세계화 사례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분석되어야 하는 바, 본 연구를 비교사회주의 연구라고 말할 순 없으나, 러시아, 중국, 베트남, 쿠바의 사례를 살펴보고 사회주의 국가 고등교육 세계화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는 연구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문헌 분석과 심층면담 사례연구라는 연구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주요 연구 자료로 활용한 북한 공간(公刊)문헌의 특징을 살펴보고, 분석 절차에 대해 정리하였다. 심층면담에 대해서도 연구 참여자 선정 이유, 모집 방법, 면담 진행 및 자료 분석 절차를 제시하였다. 또한 북한의 고등교육정책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틀로써 박재윤 외(2008)가 한국의 교육 세계화를 분석한 틀을 어떻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는지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세계적 추세'에 따른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 최고지도자의 의지로 시작된 고등교육 정책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공간문헌에 드러난 '세계적 추세'에 대한 공적담론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해왔고, 어느 국가 사례를 주로 참고하는지 알아보았다. 제2절에서는 북한 교육제도의 제한적 개방성을 법령 내 교육 교류협력 관련 내용과 평양과학기술대학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교육 세계화는 국제 인적·물적 교류에 의해 촉진되는 바, 제3절에서는 학생 교류, 교육자 교류, 그리고 인적 교류 수반 물적 교류와 교육 원조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4절에서는 교육제도의 제한적 개방성과 인적·물적 교류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정책을 모방하고 있는 북한 학자들이 세부 주제별로 '세계적 추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적용하였는지 알아본다.

제5장에서는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의미에 대해 분석한다. 제4장에서 분석한 내용과 심층면담 사례연구 결과를 사회주의 국가 교육 세계

화 사례와 비교하여 그 특징 및 요인을 도출하였다. 제1절에서 교육제도를 부분적으로 개방하였음에도 북한 주민과 외국인에 대해 통제를 가하고 있는 점,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점, 국제호환성은 미비하지만 세계적 추세를 모방하고 있는 점 세 가지를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교육당국이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는 요인으로는 제2절에서 세계화 시대의 학술적, 경제적 경쟁 및 엘리트, 청년세대의 특성 두 가지로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를 과연 '교육 세계화'라고 볼 수 있을지 논의한 후 그러한 변화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 2 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제 1 절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변화

교육현상은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현상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교육사회학은 그것을 설명함으로써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일차적 관심을 둔다(김영화, 2010). 고등교육의 변화를 분석하는 일도 다른 분야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지 않으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더욱이 북한과 같은 일당 지배체제에서는 교육정책이 독립적으로 수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북한에 대한 선행연구 자료들을 참고하여 '세계적 추세'에 따른 북한 고등교육정책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정치외교적, 경제적 변화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이어 전반적인 교육정책의 흐름 속에서 고등교육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초중등교육의 변화도 요약하였다. 2000년대 이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서두에 과거 역사에 대한 짧은 정리도 덧붙였다.

1. 정치외교적 변화

북한의 정치체제는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한 수령 체제이고 조선로동당에 의해 지배되는 일당 지배체제이다. 해방 후 소련군의 지원으로 사회주의 당·국가체제를 설립한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통치이념으로 삼았으나, 1967년 5월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김일성 중심의 수령 유일체제를 구축하였다.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주체사상을 조선로동당의 공식 이념으로 채택하였고, 1972년에는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통해 김일성 유일체제를 공식화하였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21). 즉, 북한체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당·국가체제라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수령 중심체제라는 특

수성을 가지고 있다. 근대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족적 조합주의 국가질서, 3대 세습, 자립노선에 기초한 인민동원 성장전략, 반체제적 대중운동 경험이나 시민사회의 부재 등 외견상 사회주의체제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북한적 현상'이 있다고 평가된다(최완규 외, 2001).

유일체제를 구축한 김일성은 1971년 김정일에게 권력을 승계하기 위한 문제를 검토했고, 1973년 그를 '조직 및 선전 담당 비서'로 선출한 뒤 1980년 제6차 당대회를 통해 후계체제를 공고화했다. 이후 김정일은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구조를 정당화하고 주체사상의 해석권을 독점하였다. 자연스럽게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한 후 김정일이 권력을 잡게 되었으며, 김일성의 카리스마적 정통성에 김정일을 일체화시키는 유훈통치를 실시했다(장달중, 2004). 그러나 김정일은 명분과 이상을 중요시하던 김일성보다 실리적이고 이익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통치해나갔다. 1990년대는 사회주의권 붕괴와 연이은 자연재해로 '고난의 행군'이 찾아와 북한의 체제 유지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던 시기이다. 체제 생존을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선군정치를 새로운 통치담론으로 내세워 군사력을 강화하였는데, 2001년 미국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핵 협상도 난항을 맞게 되고 북한의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심화되자 선군정치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다(정성장, 2013). 고난의 행군이 일단락된 1998년부터는 사상, 총대, 과학기술에 의한 '강성대국'론을 주창하였는데, 사상강국, 군사강국과 함께 경제강국 건설을 지향하면서 그 수단으로 과학기술과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된 이후 김정은은 2009년 1월 후계자로 내정되었고,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대회에서 신설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추대되었다. 후계체제 구축작업은 선군정치의 틀에서 이루어져 2011년 김정일 사망 후 12월 30일 김정은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되었다. 그러나 2010년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인되던 시기부터 당의 기능은 서서히 정상화되고 있었으며, 2012년 4월 공식적인 권력승계 이후 김정은 체제는 당 중앙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엘리트 구조도 군보다는 당에 우위를 주는 방식으로 개편되었다(김근식, 2014).

제6차 당대회 이후 36년 만인 2016년 5월 개최된 제7차 당대회는 김정은 체제의 '정상국가화' 지향성을 보여준다. 그동안 지속된 체제위기와 비정상적 상황을 마무리하고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당·국가체제임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일에 비해 짧은 후계기간을 거친 김정은은 장성택을 처형하고 김정남을 암살하는 등 공포정치를 실시하기도 했지만, 인민들에게는 반대로 경제발전을 중시하는 애민(愛民) 리더십과 국제사회의 추세를 파악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스타일로 다가감으로써 지지를 얻으려는 모습을 보인다(김근식, 2019).

북한의 리더십이 바뀌면서 외교정책도 변화해왔다. '자주, 평화, 친선'을 외교정책의 기본이념으로 하는 북한은 김일성 시대에 사회주의 진영 외교와 비동맹국 외교노선을 펼쳤지만,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 체제 변동 및 남한과의 격차 심화, 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남방외교 전략을 구사했다. "대미외교를 중심으로 한 주변 4강 외교를 기본축으로 하고, 아시아 및 서구권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보조축"으로 하는 외교전략으로 전환했다(김홍규, 2014: 181).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후에는 미국과의 직접협상에 더 초점을 두었고, 김정일 집권 이후 1999년부터는 북미,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탈냉전 후 단절됐던 북중, 북러관계 복원에도 나서 전방위외교를 펼쳤다. 2000년 1월 이후에는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국교수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2001년 출범한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2002년 2차 북핵위기가 발발하면서 전방위외교는 장기간 쇠퇴기에 접어들었고, 선군정치와 함께 '핵외교'가 전개되었다(임수호, 2013). 핵개발을 시인한 후 북한은 6자회담이라는 새로운 다자협의체를 받아들였으나 결국 결렬되었고, 김정일의 말년에는 북중관계에 집중했다. 2011년 12월 17일 사망하기 직전인 2010년과 2011년 각각 두 차례씩 무려 네 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여 김정은 후계체제를 구축하고 중국의 지지를 획득하고자 하였다(김홍규, 2014).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북한은 선군정치를 계승하는 외교전략을 보였다. 김정일 시대에는 핵실험이 두 차례 있었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3년 2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총 네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3차 핵실험 직후에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을 채택했고,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는 "일심단결,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막강한 군사력, 자강력은 우리의 사회주의를 떠받드는 3대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핵개발이 북한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 완성을 위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리더십 강화에 핵심적으로 작용한 것이다(박인휘, 2018).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그의 직설적인 외교 수사와 맞물려 전쟁 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부터 정착된 외교 관행대로 김정은도 위기 후에 다시 협상으로 국면을 전환시켰다. 2017년 11월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 시작했다. 2018년 4월 27일에는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6월 12일에는 싱가폴에서 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있었다. '은둔의 지도자'였던 김정은이 국제 외교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했고, 반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김정은-트럼프 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비핵화 추진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남북미 상호 간 불신, 비핵화에 대한 개념 차이 등으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어 답보상태에 있다가(김흥규, 2019) 바이든 행정부로 교체되었고, 2022년 9월 핵무력을 법제화하면서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2018년 북한이 취한 공세적 유화외교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변화나 '정상국가화' 전략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2. 경제적 변화

북한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이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은 생산수단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제20조)고 명시하고 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21). 해방 직후부터 소련식 경제개발 모델을 받아들인 북한은 국가 소유를 전체 인민의 소유로 규정하였고, 중공업우선주의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채택했다. 중공업우선주의

는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경제력과 군사력의 우위를 차지하지 위한 것이었고,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은 일제 식민지경제의 편파성을 극복하기 위해 강조했다가 1957년에는 소련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구체화되었다. 1972년에는 경제 침체를 만회하기 위해서 서방 선진국가와의 무역을 확대하고 차관을 도입했으나 오히려 무역적자 급증으로 1976년 서방에 대한 채무불이행 사태(default)에 놓이게 되었고, 1984년에는 합영법을 도입하여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계 기업이나 소련 기업과의 합작에 어느 정도 성과를 냈으나 서방 선진국 자본을 유치하려는 노력은 실패했다. 1984년 소련과 무역·경제협력협정을 맺은 이후에는 소련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했다(이영훈, 2006).

그러나 1989년 이래 급속하게 진행된 사회주의권의 붕괴 및 체제전환으로 북한은 경제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회주의권 붕괴는 북한에게 제품의 시장 상실과 원료, 연료 공급지의 상실을 의미했고, 북한경제는 4대 난인 식량난, 에너지난, 원자재난, 외화난을 겪게 되었다. 1990-1998년 북한의 GDP는 30.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1995-1997년에는 대량의 아사자가 속출한 고난의 행군이 찾아왔다. 이 시기 국가가 인민들에게 식량과 소비재를 공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실상 계획경제체제가 붕괴되었다. 1990년대 초중반 시·군이나 공장·기업소가 자체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실질적인 자율성을 갖게 된 기업들은 시장경제적 요소를 상당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 합법적으로 존재하던 농민시장은 경제위기 속에서 거대한 암시장, 즉 장마당으로 바뀌었다. 장마당은 2000년에 전국적으로 300-400개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시장 거래품목에 대한 통제가 무의미해지면서 식량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고가의 내구소비재, 심지어 일부 생산재까지 거래되었다(양문수, 2010).

경제위기와 자생적 시장화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실시했다. 그 내용은 가격과 임금, 환율을 대폭 인상하고, 기업의 경영 자율권을 확대하며, 노동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 등이다. 먼저 가격체계를 수정했는데, 식량을 비롯한 모든 물가를 평

균 25배 인상했으며 근로자들의 기본임금도 평균 18배 인상했다. 가격제정원리를 수요자 위주에서 생산자 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가격뿐만 아니라 계획경제 전반에서 분권화를 시도하여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기업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방법이 바뀌어 '번 수입' 지표가 도입되었고, 독립채산제도 대폭 강화되었다. 기업이 경영의 결과로 창출된 부가가치 중 일부를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업 지배인이 노동자에 대한 통제력도 일부 갖게 되고, 물가가 인상되면서 노동 인센티브도 확대되었다. 7.1조치의 후속조치로 2003년 3월 종래의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개칭하고 농산품뿐만 아니라 공산품도 판매하도록 허용하면서 시장 판매행위가 사실상 허용되기도 했다(이석기, 2009; 양문수, 2010). 7.1조치 후 2002년 9월에는 신의주를 개방하고 11월에는 금강산과 개성에 대한 공업지구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1990년대에 급속하게 줄어들었던 대외교류를 확대해나갔다. 특히 무역분권화를 실시하여 '와크', 즉 수출입 허가권을 소지한 회사에만 허용하던 무역활동을 시, 군 및 기업소 단위까지 허용했다. 고난의 행군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경제 회복은 북중 무역의 증가와 남북경제교류, 대북지원의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양문수, 2010; 김병연, 2014).

그러나 2003년은 북한이 '선군경제 노선'을 정식화한 해이기도 하다. 민간경제 부문은 시장경제 요소를 상당히 받아들였으나, '당-군경제' 부문은 기존의 계획과 명령 방식으로 독자적으로 구획되어 있었다. 1955년 정립되었던 "중공업 우위의 경공업-농업 동시 발전" 노선이 "국방공업 우위의 경공업-농업 동시 발전" 노선으로 대체된 것이다(이정철, 2013). 2005년 이후에는 북한의 경제정책 기조가 보수화되었으며, 2009년 11월에는 급기야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구권과 신권을 100:1로 교환하게 하면서 교환한도를 설정하여 민간 보유 화폐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정부부문으로 부(富)를 이전했다. 이어서 2010년 1월에는 외화 사용 및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그 결과 물가와 환율이 폭등하고 상품 공급이 위축되었으며 주민들과 기관, 기업의 원성이 높아졌다. 결국 2010년 5월부터는 시장을 다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였다(양문수, 2010;

김병연, 2014).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경제발전과 주민 생활향상에 더 초점을 맞춰 선군경제 노선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변화하였다. 2012년 '6.28조치'에서 천명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2014년 '5.30조치'로 더욱 구체화되었는데, 내용은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 즉 기업소를 중심으로 한 분권화와 개별 경제주체의 생산성 증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였다. 권영경(2014)은 이러한 조치의 배경으로 북한 내 시장화 현상의 비가역성(irreversible)을 꼽았다(임호열 외, 2015에서 재인용). 시장화 현상에 제동을 걸고 계획경제를 복원하려 했던 화폐개혁이 실패로 돌아가자, 시장을 통제하기보다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 결과 북한에서 운영하는 공식시장이 2010년 200여 개에서 2015년 400여 개로 5년 만에 두 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한 달에 3번 정도 열리던 군 단위 농민시장은 연중무휴의 상설시장으로 바뀌었다(조재욱, 2018). 2018년 조선로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핵·경제 병진노선 하에서 핵무기 병기화를 완결하였다며 경제건설에 총력을 다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손효종, 2018).

이러한 시장화뿐만 아니라 무역의 증가로 2012-2016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김정일 시대보다 개선되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무역은 증가했고,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2015년 동안 북한의 무역의존도는 49%로 전 세계 평균과 10%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았다. 북한 경제를 더 이상 전통적인 사회주의 폐쇄경제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김병연, 2014, 2019). 2013년 3월 북한은 로동당 중앙전체회의에서 경제개발구와 관광구 설치를 결정함으로써 대외무역의 다원화와 다양화 및 관광활성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2013년 11월에는 각 도에 13개의 경제개발구와 신의주 특구 설치를 발표했고(조봉현, 2018), 그 수를 점점 늘려 2020년에는 23개의 경제개발구를 홍보했다.[6] 무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북한 시장의 구매력이 되며 시장에서 공급되는 물건 중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수

6) "북한, 경제 개발구 20여 곳 열띤 홍보…제재 속 투자 모집 비현실적," 「VOA 뉴스」, 2020.12.15.
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economy_north-korean-economic-zones/6050996.html

입된 것이다. 그러나 2016년 5차 핵실험으로 유엔제재 2321호가 채택되고 2017년 세 번의 추가적인 유엔안보리제재가 더해지면서 2017년 북한의 수출은 전년 대비 37% 가량 감소했다. 북한의 무역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김병연, 2019). 이것이 2018년 북한이 비핵화 협상테이블로 나온 주요 원인일 것이나, 협상에 실패하고 2020년부터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으로 국경을 폐쇄하면서 북한 당국은 과학기술 및 산업을 국산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 교육적 변화

북한의 교육정책은 수령 체제이자 일당 지배체제라는 특성상 상술한 정치외교적, 경제적 변화의 긴밀한 영향을 받으며 수립되어 왔다. 1950년대까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소련식 사회주의 교육을 적용했던 북한은 1960년대 김일성의 약수중학교 현지지도 이후 고유의 교육정책을 수립해나갔고, 1970년대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세우면서 소련의 흔적을 지워나갔다. 북한교육의 기본 방향과 지침을 집대성하여 1977년 발표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이하 「테제」)에 따르면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을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테제에서 교육은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인데, 여기서 ‘혁명’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의미한다. 교육사업은 사회주의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이때의 ‘발전’은 경제보다는 정치적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의 북한 교육도 기본적으로 「테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치사상교육은 북한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1980년 김정일 후계체제가 공고해진 후 1984년에는 그의 “력사(역사)적인 교육서한”으로 평가되는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가 발표되었다. 여기서는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승리’의 중요한 과업이 경제건설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교육의 수준은 곧 나라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수준”이고 교육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기술혁명과 경제건설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서한은 북한에서 교육발전을 경제건설에 필요한 요소로 설명한 중요한 문건이며 이후 과학기술교육, 외국어교육이 강화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같은 해 고등중학교 4-6학년 교육과정에는 ‘전자기계실습’ 교과가 도입됐고, 과학기술 수재교육기관인 제1중학교가 최초로 평양에 설립되었다. 1970년대 말까지 사회주의 평등 원리에 따라 예체능 및 이과분야에서만 비공식적으로 실시했던 수재교육을 공식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1984년 평양제1중학교를 시작으로 1985년에는 각 도에 제1중학교를 설치했고, 1999년부터는 시·군·구역까지 200여 개로 확대 설립했다. 제1중학교의 설립은 1970년대 말부터의 경제 침체에 대한 교육적 대응책이었고(조정아, 2004), 1999년의 확대 설립은 고난의 행군기 부족해진 교육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선택이기도 했다.

고난의 행군은 교육 부문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식량난으로 인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정상적으로 출근하기가 어려웠으며, 1994년 이후 오랫동안 교사들에 대한 배급이 중단되었다. 교사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번갈아 결근하며 출근한 교사가 자신의 담당 과목이 아닌 교과목까지 가르쳐야 했다(조정아, 2004). 학교 시설과 기자재도 파괴되었고, 교과서 공급도 원활하지 못했다. 학교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학교시설의 개보수나 교육 기자재, 소모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은 학부모 부담으로 전가되었다. 이와 함께 시장화가 진행되고 경제적 계층이 분화됨에 따라 1990년대 이전에는 예체능 분야를 중심으로 드물게 이루어졌던 사교육이 점점 더 확산되었다. “일반중학교 - 구역 제1중학교 - 시·군 제1중학교 - 평양제1중학교”로 서열화된 중등교육체계는 학교 등급에 따른 국가적 지원과 대학 진학 가능성에 차이를 가져왔고, 자녀를 상급 학교에 보내기 위한 사교육이 퍼져나가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북한 당국은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의 상황을 회복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경제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교육에서의 실리주의’ 기조를 내세웠다. 그 내용은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고 과학기술교육을 강조하며 수재 양성에 집중하는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은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 중 하나로 강조하였고, 과학기술교육 중에서도 IT와 컴퓨터교육을 강화하였다. 중등에서 고등교육으로 연결되는 컴퓨터수재 양성과정은 김정일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였다(조정아, 2007). 그러나 위와 같이 제1중학교가 확대 설립됨에 따라 입학경쟁이 과열되고 수재교육의 비효율성이 심화되자 2006년부터 수재교육정책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집단주의에 기초한 '주체적인 수재교육', '우리 식의 수재교육'을 강조하고, 수재를 더 엄격하게 선발하는 방향으로 바꾸더니 2009년 도 제1중학교와 시 제1중학교의 일부만 남기고 제1중학교를 폐쇄하거나 다시 일반 학교로 전환했다(김유연, 2014).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최초로 제정한 법률은 12년제 의무교육 학제 개편에 대한 것이었다. 1975년부터 1년 유치원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던 11년제 의무교육을 12년으로 연장했다. 소학교는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중학교는 통합 6년제에서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분리한 것이다. 이로써 북한의 학제는 세계적 표준인 12년 초중등교육 학제에 좀 더 가까워졌다. 학제 개편에 대해 한만길, 이관형(2014)은 학생의 연령별 발달단계에 따라 학습수준을 체계화하려는 교육적 목적과 정보화교육을 강화하여 '지식경제형 강국'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경제적 배경, 12년제 의무교육을 김정은의 치적으로 돌려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사상적 배경이 있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12년제 의무교육제도 도입은 고난의 행군기 이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중등일반교육을 강화하여 제1중학교와 일반 학교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김지수, 2013).

김정은 시대에는 초중등교육도 세계적 추세에 따라 변화시키고 있다. 세계적인 교육발전 추세에 대한 언급은 2014년 전국교육일꾼대회 담화문과 2019년 전국교원대회 담화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는 영어교육을 강조하고, 사회과학 교과에서 세계 상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정보기술 과목의 수업시수를 확대하는 등의 변화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

게 세계적 추세에 따른 정책을 도입하고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원정책을 강화하고 교육조건 및 환경도 개선하고 있다. 교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일선 학교에 컴퓨터와 내부망을 보급하여 교육 시설을 현대화, 정보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교원들의 실질적인 생계 보장을 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조건을 개선하는 데 지역의 후원단체와 학부모의 기여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김지수 외, 2019).

북한 초중등교육의 변화는 정치외교적, 경제적 변화와 맞물려 발생하여 왔다. 김일성 유일체제가 공식화되던 1970년대에는 주체사상을 교육의 지도사상으로 규정하는 「테제」가 발표되었고, 김정일 후계체제가 구축되고 대외 경제교류정책이 시도되던 1980년대에는 과학기술교육과 외국어교육이 강조되고, 수재교육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의 경제난은 교육현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경제개혁 조치들을 취했던 2000년대 초반에는 교육 분야에서도 '실리주의' 정책이 실시되었다. 경제정책 기조가 보수화되고 화폐개혁이 실시되던 2000년대 중후반에는 수재교육정책이 변화하고 제1중학교가 축소되었다. 그러나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2008년 이후 '세계적 추세'를 잘 이해하고 적용할 것이 강조되어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제 2 절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이 절에서는 북한 고등교육에 대한 연구들을 개괄하고,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고자 하는 북한교육의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1. 북한 고등교육 연구

북한 고등교육에 대한 연구는 1971년 장옥자의 연구를 시작으로 1970

년대에 일부 진행되었다(이항구, 1978; 김선호, 1979). 북한에 대한 연구가 반공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당시 연구는 주로 “남파 후 귀순한 분의 보고서 수기와 내외문제 연구소, 공산권 문제 연구소에서 발행한 서적과 잡지(장옥자, 1971)” 등을 분석하여 북한 대학의 종류, 입학 절차, 교육과정, 대학생의 생활과 군복무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김선호(1979)는 미국 국회도서관에서 1964-65년 북한의 「고등교육」과 「고등 및 기술교육」을 분석하여 “생산노동의 결합을 표방하는” 농업대학에 대해 연구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70년대의 연구는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고등교육에 대한 사실을 정리하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에는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교수였던 김형찬이 북한 교육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했다. 1980년에는 북한 고등교육의 변천과정을 분석하는 글을 잡지에 발표했고, 1988년 자신의 박사논문을 정리하여 발간한 『북한교육발달사』에서 1980년 논문의 내용을 보강하였다. 1990년에는 「大學敎育」지에 북한 고등교육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기관의 종류,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연구원의 실태 등을 연재했다. 1996년에는 같은 방식으로 한만길, 손계림이 「대학교육」지에 북한 고등교육의 발전과정과 유형, 입학, 학사운영 및 학위제도,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에 대해 연재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북한 고등교육 발전과정의 시기를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장에서 한만길, 손계림(1996a)과 김병로(2018)를 참고하여 북한 고등교육 발전과정을 정리하였다.

1990년대 말부터는 신효숙(1998, 2003, 2005)을 중심으로 해방 후 북한 고등교육체계 형성과정에서의 소련의 영향에 대해 연구하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소련군정기 북한교육 관련 러시아의 고문서를 분석한 그는 북한의 교육정책 및 학교교육 개편안이 소련인 고문 막심츄크 중좌의 지도와 자문을 받아 수립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소련계 한인들도 소련에서의 교직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학계에서 근무하였고, 이들은 김일성종합

대학 설립과 운영, 정치교육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05년 논문에서는 북한의 해외 유학생 및 실습생 파견에 대해서도 분석했는데, 1950년까지 북한은 소련으로만 유학생을 파견하였으나, 6.25전쟁을 계기로 다양한 사회주의권 국가로 파견하였다고 한다. 김선, 임수진(2017)도 분단초기(1945-67) 북한이 고등교육 부문에서 소련 제도를 전이(transfer)한 데 주목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단일 정치세력을 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고등교육 내 소련 중심의 교육방식이 대대적인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았다. 이때부터 점차적으로 '주체'가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과학교육이 고립되고 쇠퇴하였다. 소련의 영향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은 주체사상 확립 이전의 북한 고등교육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2000년대 들어서는 북한 고등교육의 개혁과 변화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조정아, 이춘근(2008)은 북한 이공계 대학의 교육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개혁의 주요 내용과 방향을 정리했다. 북한의 고등교육 개혁은 강성대국론과 과학기술중시정책 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당시 첨단과학기술 관련 학과 증설, 학과 통합, 교육기간 단축, 학점제 및 선택과목제의 부분적 도입, 영재교육 강화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해외의 최신 이론과 제도들을 도입하고 국제교류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이후 2010년대에는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다가 2020년과 2021년 네 건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김경미, 김안나(2020)는 「교육신문」 기사를 분석하여 김정은 시대 북한 고등교육정책의 변화 방향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북한이 세계 일류급 고등교육을 지향하며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대학을 유형별로 특성화하고 있으며 대학교육의 질과 수월성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이인정(2021)은 김정은 시기 북한 교육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흐름에서 고등교육제도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정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교육 교류와 대학 협력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Kim(2021)은 김정은 시대 북한 고등교육제도의 변화를 검토하였는데, 북한 고등교육이 세계적인 교육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김정은 집권 후 이론 중심 교육에서 실용적인 교육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았다. 조정아 외(2020)의 연구는 방대한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에서 밝힌 고등교육 개혁의 특징을 종합한 연구로, '지식경제시대' 북한 고등교육 담론 및 정책, 체계, 교육과정 등을 심층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 북한 고등교육에 대한 연구들의 성과를 상당히 참고하였고, 특히 조정아 외(2020)에서 연구된 내용을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였다. 그럼에도 본 논문은 고등교육정책의 세계적 추세에 따른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하겠다.

남북한의 고등교육을 비교한 연구도 존재한다. Kim & Ahn(1993)은 남북한의 정치체제, 이데올로기, 국가 발전목표와 우선순위에 입각해 고등교육제도를 비교하고, 통일시 문화적·행동적 변화가 필요한 교육적 통합이 정치적 통합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기석(2001)은 국립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의 창설에 대해 연구하고 두 대학이 개교 시기, 설립 취지나 절차, 방법도 같고 교수진 구성에 있어서도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 "일란성 쌍생아"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대학설립안 반대운동 및 서울대와 김대 창립 이후 관련 이해집단과 대학 간 경쟁으로 인해 분단 국가 교육체제가 형성됐다고 보았다. 본 논문에서 남북한 교육을 본격적으로 비교하지는 않지만, 한국의 교육 세계화를 분석한 박재윤 외(2008)의 개념틀을 수정하여 북한에 적용하였다. 남북한 고등교육 비교 연구는 다른 주제에 비해 적게 수행되어 왔는데, 추후 남북 교육통합을 대비한다면 더 활발하게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다.

2. 북한교육의 '세계적 추세' 지향성 연구

'세계적인 교육발전 추세'를 따라가고자 하는 북한교육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직 없지만, 김정은 시대 교육정책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그러한 경향은 중요한 특성으로 주목받아 왔다. 김지수(2013)는 북한

의 12년제 의무교육 추진이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 요구와 세계적인 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새 세대들을 완성된 중등일반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 창조적 능력을 소유한” 인재를 양성하려 한다고 표현되어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의무교육 연한 확대와 학제 개편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교육과 외국어교육을 강화하는 교육과정 개혁도 최근 북한에서 ‘세계적 추세’를 강조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김정원 외(2014)는 ‘세계화’를 강조하는 김정은의 말과 글이 비단 교육 분야에 한정돼있지 않음을 언급하며 김정일 사망 전후로 북한의 외국투자관계법이 여러 차례 제·개정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조정아 외(2015)는 심지어 세계적 교육 추세를 이해하고 그것에 입각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 “김정은 시대 교육정책 방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의 “세계적인 교육발전 추세와 좋은 경험들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받아들여 교육에서도 당당히 세계를 앞서 나가야 한다.”는 말은 그러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적 교육 추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학교교육을 넘어서는 평생교육의 발전, 고등교육체계 통합, 고등교육을 통한 수재 양성, 의무교육 연장, 중등교육의 다양화 및 직업화, 교육정보화, 분과형 교육과정에서 통합형 교육과정으로의 이행, 통합적 연관적 사고능력 함양, 지식전수 위주에서 사고 위주의 교육방법으로의 전환, 탐구발견식 교수방법 토론식 교수방법 등”이다. 그러나 각 항목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지는 않다. 조정아 외(2020)도 김정은 시대의 고등교육 개혁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으나, 세계화 보다는 지식경제시대에 더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최근 발표된 석사학위논문 중 「교육신문」에 드러난 북한의 ‘새 세기 교육혁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연구한 김수현(2019)과 「고등교육」지를 통해 김정일, 김정은 시대 고등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연구한 서유림(2019)은 북한에서 따라가고자 하는 세계적 추세가 어떤 것인지 비교적 자세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두 편 모두 교육 세계화의 흐름이나 그것이 북한 교육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고, 각각의 핵심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인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사실 '정보산업시대'에 맞춘 교육의 현대화와 정보화, 과학기술교육 및 외국어교육에 대한 강조는 김정일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조정아(2004)에 의하면 김정일이 정치무대에 등장한 이후 북한 교육은 사회주의 교육의 '紅'과 '專' 사이에서 무게중심을 잡고자 노력했으며,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는 조치로' 컴퓨터 조기교육을 실시했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도 "세계적으로 치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과학기술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과학기술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보았다(조정아, 이춘근, 2008). 조정아(2009)는 김정일 시대 외국과 교육 교류를 부분적으로 실시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첨단과학기술 및 경제 부문에서 해외 유학을 비롯한 외국 대학과의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았다. 신효숙(2010)도 캐나다의 민간단체나 영국 정부가 북한에 영어 강사를 파견한 사례와 EU 국가들이 북한의 관리들을 대상으로 시장경제 관련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Reed(1997)는 교육 세계화와 북한 사례에 대해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다. 논문은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겪던 1997년의 맥락에서 과연 세계화와 국제화는 북한 교육체제에 무엇을 의미하며 주체사상과 국가정체성 유지와 얼마나 양립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졌다. 북한 교육의 역사적 배경과 세계화 및 국제화에 대한 북한의 관점, 한국의 세계화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정리한 후 향후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상유지 모델로, 현재의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보편적 의무 고등교육을 지향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어 기술의 사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한반도가 독일식으로 통일되어 교육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극적인 구조적, 이념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Reed는 그럴 경우 남한이 북한의 당시 11년 의무교육제를 채택하고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위원회가 조직될 것이며, 북한은 남한 대학들에서 볼 수 있는 민주화 모델을 따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 자유

화 모델의 수정된 버전이다. 이 시나리오가 실행된다면 국제화와 기술화는 북한의 정치적, 교육적 주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만 진행될 것이고, 구(舊) 사회주의 국가들 및 비동맹 국가들과의 관계를 점차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문화적, 학술적 교류로 대체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상기한 연구들을 참고하여 인용하였으나, 김정일 시대부터 김정은 집권 후까지 선행연구보다 더 긴 시기를 연구 범위로 하고, 세계적 추세에 따른 변화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차별화하였다. 특히 결론 부분에서 세계적 추세에 따른 북한 고등교육정책의 변화가 Reed(1997)의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까운 지 판단해보고자 한다.

제 3 절 교육의 세계화 및 동형화[7)]

1. 교육의 세계화 및 동형화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체제로 묶여 있다는 생각은 1970년대 중반 발표된 Wallerstein의 세계체제론에서 이론화되었다. 이후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개념은 1983년 경제학자 Theodore Levitt이 다국적 기업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만든 사회행동 및 기술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1990년대와 2000년대에 활발하게 논의되었다.[8)] Giddens(1990)는 세계화를 "지역적 사건이 수 마일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의해 형성되는 방식으로 먼 지역들을 연결하는 세계적인 사회관계의 강화"로 정의할 수 있다고 보았고, McGrew(1992)는 "현대 세계체제를 구성하는 민족 국가를 초월하는 다양한 상호 연결"이며 "세계의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사건, 의사결정, 활동이 지구상 꽤 먼 곳의 개인과 공동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7) 이 절은 김유연, 유성상(2021) 논문 내용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8) "Theodore Levitt, 81; Economist First to Use the Term 'Globalization'" 「Los Angeles Times」, 2006.7.9. https://www.latimes.com/archives/la-xpm-2006-jul-09-me-passings9.2-story.html

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2차 세계대전 후 1948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체결되면서 국제 무역이 촉진되었고, 1995년에는 GATT 체제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으로 대체되면서 세계화가 더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즉, 세계화는 국가 및 지역의 경제가 세계시장 경제에 통합되는 자본주의의 확장을 의미하며, 그로 인해 개별 국가의 정치문화적 정체성에도 커다란 변화가 초래되는 현상(김안나, 2006)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는 경제 부문에서 시작되어 각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교육은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 중 하나다. 교육은 1991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서비스 산업에 포함되었고, 1994년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을 통해 국가 간 교역의 대상으로 인정되었다. 교육의 세계화는 각국의 교육 관행과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인 논의, 과정, 제도를 의미한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 교육 세계화는 자유무역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방안으로 강조되어 왔다. Bloom(2004)은 세계화가 초래하는 기회와 위협에 교육이 세 가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노동 인력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국제적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편협하지 않은 태도를 함양하고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는 데 활용되는 방식, 세 번째는 전염병이나 실업 등 세계화와 동반되는 기회 및 위협에 도전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각국의 교육이 세계화 추세에 따라 변화할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학교급은 고등교육이다. 5세기 인도의 날란다 대학(Nalanda University)부터 중세시대 유럽의 대학들에 이르기까지 대학은 언제나 국제적인 기관이었으나, 21세기의 고등교육 세계화는 과거에 비해 경제와 사회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훨씬 넓고 깊게 퍼져있다(Altbach, 2016). 20세기 말 세계화가 보편적인 현실이 되면서 재편되는 경제 질서 속 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학 교육을 통해 창조적 지식과 기술 및 정보처리능력을 겸비한 '질 높은 경제활동 인구'를 확보해야 했고, 자율과 경쟁

의 원칙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와 직업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 개혁이 이루어져 왔다(김안나, 2005). 고등교육 제도는 지역, 국가, 세계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운영되는데, 세계화는 그 중에서 세계적 차원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들은 세계화 시대에도 그들이 자리 잡은 공간과 시간의 지역성에 계속 안주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재원인 국가 정부를 필요로 한다(Marginson, 2011).

고등교육 부문의 세계적 차원은 각국 대학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주요 외부요인이 되었다. 1797년 주립대학들의 효율성 점검을 위해 대학별 평가를 시도한 뉴욕 주 이후 미국에서 19-20세기에 퍼져 나갔던 대학 평가는 1990년대에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구병림, 1996; 한석, 2019). 영국의 QS(Quacquarelli Symonds Limited), THE(Times Higher Education) 세계대학 순위나 중국의 세계대학 학술순위(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ARWU) 등 주요 대학 평가는 국제 지식경쟁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Altbach, 2012). 대학 평가에서 연구 생산성은 중요한 지표이고, 세계적 비교의 결과로 연구 역량과 인력 이동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국제화' 전략은 제도와 기관을 보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다. '세계화'는 통합된 세계 경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국제 지식 네트워크의 등장, 연구기관들의 통제를 넘어서는 다른 압력에 의해 형성된 현실을 의미한다면, '국제화'는 대학과 정부가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행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으로 정의된다(Altbach, 2016). 국제화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연결성과 글로벌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세계적 연결성은 기반시설, 유동적 인력과 프로그램, 네트워크에 의해 확보되고, 글로벌 역량은 글로벌 허브와 지식도시, 교육수출산업과 온라인 플랫폼 등에 인프라, 자원 및 마케팅을 집중시킴으로써 연구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형성된다(Marginson, 2011).

Altbach(2016)는 세계화가 고등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며 그 방식과 특징을 몇 가지 논하고 있다. 우선 고등교육의 대중화(massification)는 세계화를 촉진시켰다. 엘리트 교육에서 대중교육, 보편교육이 된 고등

교육은 학생들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전 세계 고등교육 등록 인구가 2억 명에 가까워질 때 국제 학생 수는 5백만 명에 가까워져 10년 내에 갑절로 성장했다. 학생과 학자들의 지리적 이동은 세계화 시대의 핵심적 특징인데, 가장 많은 수의 학생이 아시아에서 영어권 선진국으로 이동한다. EU의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에 참여하는 학생 수도 많으며, 말레이시아나 중국과 같은 중견국으로 이동하는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학자들의 국제 이동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가 집계된 적 없지만, 탑 대학들 간에는 거대한 국제 학자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미성숙한 학문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인재를 유출당한다. 학생과 학자들의 국제 이동은 국경을 넘어 투명하게 보증될 수 있는 교육의 질과 교육기관의 자격을 요구하게 되었다. 역으로 국제적으로 학생을 입학시키거나 학자를 채용하는 교육기관들도 그들이 받은 교육이나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한 인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IT의 발달은 그 모든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특히 인터넷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제적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저작권 등의 문제가 존재하지만, 학자들은 인터넷으로 전 세계의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의 세계화로 인해 정책 입안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이 점점 쉬워지면서 각국 교육정책의 전이(transfer)가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세계 경제가 새로운 생산과 무역의 방식에 의해 변화되고 초국가적인 기업과 기관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국가 교육정책 입안자들이 그들 자신의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역량이 줄어들고 있다(Dolowitz & Marsh, 2000). 그들이 타국으로부터 교육정책을 차용(borrowing)하는 동기에 대한 관점은 ① 교훈을 도출하고 시사점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보는 관점, ② 국제경쟁에서 대등해지기 위한 것으로 보는 관점, ③ 권위에 의존하는 정당화 기제로 보는 관점, ④ 정치적 유용성을 위한 것이라는 관점, ⑤ 초국가적 연합체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는 관점 등 다양하다(성열관, 2010). 이러한 국제적인 정책차용 현상으로 각국의 교육정책이 동형화(isomorphism)되고 있다.

동형화는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조직들이 동질화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DiMaggio & Powell(1983)은 제도적 동형화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했다. 첫 번째는 강압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로, 조직들이 의존하는 다른 조직이나 사회의 문화적 기대로부터 가해지는 형식적, 비형식적 압력에서 비롯된다. 정부 영역 안팎의 법과 규칙이 조직의 행동과 구조를 규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모방적 동형화(mimetic processes)로, 조직들이 스스로의 핵심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목표가 모호하거나 불확실한 환경에 있을 때 다른 조직을 모델로 삼아 모방하는 것이다. 모델로 삼는 조직은 대개 해당 분야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거나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데, 직원의 이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혹은 컨설팅 회사나 협회 등에 의해 명시적으로 모델이 확산된다. 세 번째는 규범적 동형화(normative pressures)로, 한 직업의 작업 조건과 방법을 정의하기 위한 집단적 투쟁으로 해석되는 전문화(professionalization)에서 비롯된다. 전문화의 두 가지 측면이 동형화에서 중요한데, 하나는 대학의 전문가들이 만든 정규교육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 전반에 걸쳐 새로운 모델이 빠르게 확산되는 전문가 네트워크에 의한 것이다. 동형화의 세 가지 유형은 분석을 위한 것이며, 경험적으로 항상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로 인한 교육정책 동형화에 DiMaggio & Powell(1983)의 이론을 적용해보면, 강압적 동형화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개발도상국에 경제 지원을 하면서 교육시장의 개방과 교육 민영화를 강요한 것을 사례로 들 수 있다. GERM(Global Educational Reform Movement)이라고도 비유되는 세계교육개혁운동은 각국에 경쟁 위주의 교육체제, 시장 원리에 따른 학교선택제, 신자유주의적 책무성 등을 요구했다(Sahlberg. 2011). 모방적 동형화는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의 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하는 현상을 사례로 들 수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스스로의 핵심기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선진국의 정책을 모델링하는 것이다. 규범적 동형화의 예로는 '세계대학총장회의'와 같은 전문가 네트워크에서 각 대학들의 발전방안과 비전 등이 공유되고 유사해지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교육 세계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비판적 교육학자들은 GERM과 같은 교육 세계화 현상이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켰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요했다고 지적한다. Burbles & Torres(2000)에 따르면 세계화는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측면에서 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화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함으로써 교육이 학생들을 직업세계에 준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게 한다. 감세와 국가영역의 축소, 학교 선택에의 시장 접근, 학교조직의 합리적 관리, 수행평가, 규제 완화 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틀에 국가 교육정책을 맞춘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초국가적 기구로부터의 외부적 요구가 국가 교육정책의 자율성을 제한한다. 동시에 세계 경제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더 강한 기관들이 부상함에 따라 그러한 경제적 조정과 교환이 매우 통제된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표준화와 동질화가 이루어지면서도 다문화주의가 중요한 의미로 떠오른다.

특히 고등교육 단계에서 세계화는 오랜 시간 발전해 온 대학의 존재양식을 불안정하게 한다. 세계화는 학자들의 학문 경력에 대한 새로운 구조 및 보상체계를 창출하며 동시에 다른 측면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Slaughter & Leslie, 1997). 세계화로 인한 고등교육의 상품화는 매우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다. Tilak(2008)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국내 및 국제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고등교육의 공익성을 사라지게 하고 민영화를 촉진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고등교육의 상품화는 곧 지식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지식 자본주의”를 가져온다. 지식경제시대로의 전환을 묘사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인 지식자본주의는 지식을 글로벌 자본의 가장 중요한 형식으로 보고, 지식 생산의 수단을 민영화한다(Olssen & Peters,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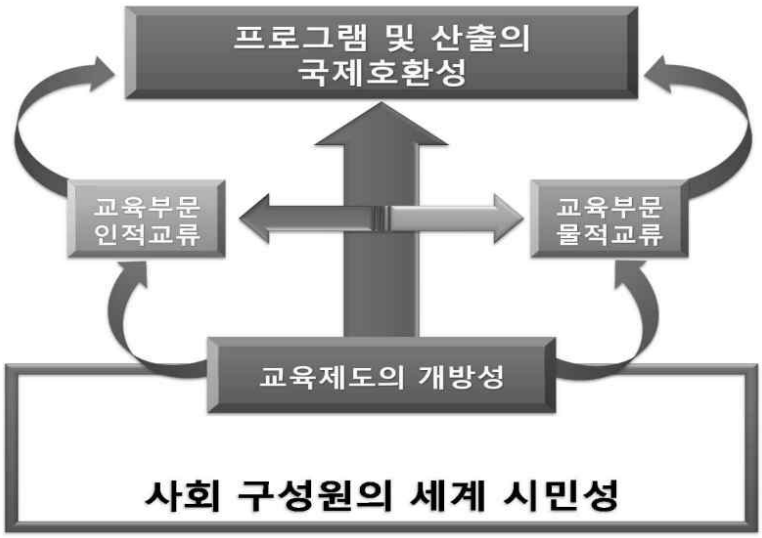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교육 세계화는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세계 경쟁에서 국제학위 등을 이용하여 전문직을 구하는 데 물질적·문화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이들은 주로 엘리트 계층이다. 세계화는 추상화된 상징체계를 조작하고 네트워킹하는, 지식기반경제에서 고액 보수를 받는 상징분석 계급을 탄생시켰다(Lauder et al., 2006).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세계화 시대에 교육의 계층 재생산 기능이 더 강화되었고, 특권 계층이 엘리트 교육이라는 공통된 경험을 통해 그들 간 더 긴밀한 유대와 세계관을 공유하게 한다고 본다. Tilak(2008)은 지식 자본주의가 중하위 계층에 속하는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고등교육에 도달하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비영어권 국가에서 엘리트를 구별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영어 능력인데, Park & Abelmann(2004)는 한국에서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영어 교육이 계층별로 다르게 시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세계화는 국내 각 계층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각국에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친다. Mok(2003)은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 및 중국 본토의 고등교육 개혁 사례를 분석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화의 유사한 경향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각국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를 설정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등교육 개혁은 정부를 탈권력화하기 보다는 국가 주도 통치 패러다임과 경제성장 관리의 맥락 안에서 추진되고 있다. Altbach, Wit & Reisberg(2017)는 고등교육이 적절한 차별화 없이 다양화되었다고 보았다. 이들은 Mok과 다르게 고등교육이 광범위한 목적과 수요자들에 의해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능력 밖이라고 보았다. 세계적 지위를 위해 양성되고 있는 대학들은 기존의 엘리트 대학들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구 국가들은 이득을 얻지만, 개발도상국은 교육의 자율권을 상실하고 우수 인재를 유출당한다(Lauder et al., 2006). 즉, 세계화에 대처하면서 각국 정부가 교육정책에 더 강한 주도권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의견들이 존재한다.

교육 세계화 연구의 대상국들 중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례는 보다 극적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높다. 세계화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더욱 촉진되었으며,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은 세계화와 맞물려 더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서구 중심 국제기구들로부터 유사한 “탈사회주의” 개혁 정책을 요구받았으나, 개별 국가들의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 따라 그것을 다르게 해석

하여 적용하였다. 체제를 전환한 동유럽이나 중앙아시아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교육 세계화 사례도 연구되었으나(Želvys, 2018; Silova & Niyozov, 2020), 본 논문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사례와 비교하기 위하여 중국, 베트남, 쿠바, 그리고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러시아의 사례를 아래 제4절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그림 1> 박재윤 외(2008)의 교육 세계화 분석틀

교육 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 중, 본 논문에서는 박재윤 외(2008)의 정의 및 분석틀을 차용하고자 한다. 교육 세계화는 "교육 서비스 무역을 포함한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 관련 교육 법제의 변화와 개방성의 증가, 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 및 호환성의 증가,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의 부각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추세"로 정의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교육 세계화는 여러 차원에서 발생하지만, 박재윤 외(2008)는 <그림 1>과 같이 사회 구성원의 세계시민성[9]과 그것을 토대로 한 교육제도의

9) 세계시민성이란 초국가적 정치구성체와 국제 제도가 출현하는 세계화 시대에 국가시민성을 넘어서 세계와 인류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갖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Briks(1997)는 국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사람을 세계 시민이라고 보았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위치를 전 지구적 맥락에서 조망하는 능력, 간문화적 관점(cross-cultural perspectives), 전체로서의 공동체 의식, 다양성의 인식, 지구촌에서의 소통능력, 타자에 대한 존중 등 핵심적인 시

개방성,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프로그램의 호환성으로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사회 구성원의 세계시민성은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교육 세계화의 바탕을 형성한다. 교육 제도와 법의 개방성은 교육 세계화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수렴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세계시민성을 함양하는 기제가 된다. 교육 세계화 관련 법규는 교육제도 개방성의 전형적인 지표로서 인적, 물적 교류와 프로그램 및 산출 국제 호환성의 근거가 된다. 개방적인 교육제도를 바탕으로 교육 행위자들의 교류 및 물적 자원의 교환이 발생하며, 이러한 활동이 제도화되어 프로그램 및 산출의 호환성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공인이 이루어진다. 교육활동의 국제호환성은 교육 세계화가 실현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세계화는 궁극적으로 프로그램과 그것을 이수한 것에 대한 국제호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 차원의 질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분석틀을 사회주의 국가들의 교육 세계화 및 북한의 고등교육정책 변화를 연구하는 데 수정하여 적용해보고자 한다.

2. 세계화에 대한 북한의 이해

북한은 세계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구축한 뒤로 북한은 세계가 자주화의 길로 나가는 것이 역사발전의 법칙이라고 주장한다. 세계의 '진보적 인민들'이 자주의 기치와 평화수호의 기치를 위해 적극 투쟁함으로써 세계 자주화 위업의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김병로, 2016: 231). Reed(1997)는 주체사상이 민족주의적 지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김일성주의'를 국제화하고 합법화하는 매개체가 되었다고 보았는데, 북한은 제3세계와 비동맹 국가들에 주체사상을 보급해왔다. 북한이 인식하는 자주화된 세계란 "지배와 예속, 간섭과 압력이 없는 세계이며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권을 완전히 행사하는 세계"이고(김계동, 2012: 74), 세계화는 그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민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제시했다(강운선, 李明强, 2009에서 재인용).

북한 신문기사의 제목에 '세계화'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한국에서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 구상을 발표한 뒤 「로동신문」에 실린 1994년 12월 30일자 기사 "《세계화》는 매국반역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허황한 구호"에서다. 이 기사는 "남조선의 김영삼 역도가 최근 《문을 열고 세계로 나간다》는 이른바 《세계화구상》이라는 것을 내놓고 《세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정부조직을 개편》한다 어쩐다 하며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라는 자극적인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어 세계화가 "탐욕스러운 외세를 끌어들임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팔아넘기고" 사회전반을 예속시키며 국민들을 '외세의존병자'로 만든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여갔다. 외세에 국익을 파는 것이 '세계화'라는 이러한 비판은 김영삼 정부 내내 이어졌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한국 정부와 '세계화'를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미국의 《세계화》 책동"이라며 미국과 제국주의국가들을 '세계화 책동'의 주체로 보았다. 1998년 10월 12일자 「로동신문」 기사에서는 아시아발 금융위기가 세계화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2003년 1월에 연재된 "《세계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기사에서는 '세계화'의 첫 제창자가 미국이며 그것은 결코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약육강식의 '세계화'는 서방 제국주의자들이 "《다당제》나 《시장경제》를 강요함으로써 발전도상나라들이 (…) 저들의 《원조》에 명줄을 걸고 생존해 가는 노예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화에 대한 북한의 이해는 Lauder, Brown, Dillabough와 Halsey(2006)가 정리한 것처럼 세계화를 미국의 신보수주의 세력이 타국에 민주주의를 수출하려는 공세적인 대외정책이라고 보는 관점(Kristol, 2003)과 닮아 있다. 2005년 1월 10일 「로동신문」 기사에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1극 세계화정책'에 대항하는 "다극세계를 주장하는 목소리"로 프랑스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2011년 8월 4일 기사에서는 미국의 "일극세계화에 대처한 지역적 통합 움직임" 사례로 "유럽동맹"과 "아세안공동체 창설 움직임"을 들고 있다. 미국식의 일방적 세계화에는 반대하고,

다원화되는 지역 통합 사례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라는 표현에는 부정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교육이 세계화의 영향을 받고 있음은 자명해 보인다. 임수진(2021)은 김정은 정권 초기의 북한이 세계사회에 대한 진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며 「로동신문」 내 ‘세계’가 언급된 빈도를 <그림 2>와 같이 제시하였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세계화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자본주의식 세계화’에 대한 비난 담론을 극도로 제한했다. 김정은 시기 들어서 문화예술, 교육, 체육 등 문화 분야 전반에서의 ‘사회주의문명국’ 건설과 경제 및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강성대국’ 건설을 강조하면서 ‘세계’ 관련 담론이 급증하였다는 것이다.

<그림 2> 1990-2019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세계’의 언급빈도

출처: 임수진(2021: 261)

특히 교육 분야에서 ‘세계’ 관련 담론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2011년 「고등교육」에서는 2009년 김정일이 김일성종합대학에 하달한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라는 구호에 대해 해설하고 있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세계관으로 가지되, 기존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면에서 세계적 수준, 최첨단을 돌파하겠다는 높은 리상(이상)과 당당한 배심을 가지고 만사를 혁신적으로, 능동적으로

대하는 혁명적 립장(입장)과 창조적 능력을 가지라는" 뜻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호는 1977년 "교육사업의 모든 문제를 자주적 립장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테제」와 대비되며, 교육 발전의 세계적 추세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자국의 교육을 개선하려고 하는 교육 세계화의 흐름을 바탕으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즉, 1990년대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된 세계화에 대한 담론에서는 '세계'가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세계를 의미했다면, 2000년대 이후 교육 분야에서 지향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의 '세계적'이라는 단어는 '선진적'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제 4 절 사회주의 국가들의 교육 세계화

교육 세계화 현상이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때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례는 매우 흥미롭다. 본래 사회주의 국가에서 교육은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한 상부구조로, 고등교육의 경우 국가의 필요에 의한 소수의 엘리트만 양성하는 국가관리 체계였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의 고전적 체제는 누적된 긴장과 모순에 의해 와해되었으며,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체제전환의 길로 나아가게 됐다(Kornai, 1992/2019b). 이에 따라 교육체계도 시장경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방향으로 변화되었고, 국가와 지방정부 및 민간 간, 행정당국과 학교 간 역할을 재정립해야 했다. 국가는 교육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법규와 정책을 통해 거시적으로 간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고, 개별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증가했다(최영표, 구자억, 손계림, 2002). 그 와중에 1990년대 심화된 세계화의 흐름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러한 변화를 더 촉진하였다.

여기서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교육 세계화 사례를 박재윤 외(2008)의 분석틀에 따라 정리해보고자 한다. 다루려고 하는 대상국은 총 4개국이다. 체제를 전환하였으나 과거 사회주의 종주국이자 북한 교육체제 구축

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러시아, 그리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중국, 베트남, 마지막으로 북한과 유사하게 고전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점진적 개혁개방을 실시하고 있는 쿠바의 고등교육에 교육 세계화가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교육 세계화를 분석한 박재윤 외(2008)의 분석틀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세계시민성이 교육 세계화의 바탕을 이루고 있으나, 사회주의 일당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쿠바의 경우 민주주의체제의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분석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교육 세계화 추세를 따라가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그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제도가 점차 개방되었고, 교육부문의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외국 대학과의 교류를 실시하여 프로그램과 그 산출의 국제호환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아래에서는 각국의 사례를 교육제도의 개방성, 인적 교류, 프로그램 및 산출의 국제호환성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2차 자료를 주로 활용하여 분석하였기에 관련 정보 부족으로 법 제도의 개방성 등 각 주제를 세세하고 균질하게 다루지 못했고, 물적 교류에 대해서는 정리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함을 미리 밝혀둔다.

1. 러시아

러시아 연방은 소련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고등교육 시스템 중 하나를 물려받았다.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직업학교 등으로 구성된 소련의 고등교육 체계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잘 발달되어 있었다.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를 기반으로 한 무상 고등교육 제도는 엄격한 이데올로기적 통제 하에서 공학, 의료, 과학 등의 분야에서 높은 자격을 갖춘 인재들을 배출했다. 정부는 고등교육 기관의 주요 소유자이자 고용자로서 각 산업의 요구에 맞추어 각 기관들의 학생, 전공, 프로그램의 수를 계획했다. 소련 고등교육의 공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의 개

인적 발전이나 사회적 이동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각 경제 부문의 수요였다(Froumin & Kouzminov, 2015). 서유럽의 대학들과 비교하면 러시아의 대학들은 전공 내용의 근본적이고 과학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실시한다(Abishev et al., 2016).

러시아의 교육제도는 사회주의체제 전환과 함께 개방되었다. 1985년 집권한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계획경제와 전체주의적 권위체제의 전면적 개혁인 페레스트로이카를 제창했고, 1991년 12월에는 개혁주의자 옐친이 집권하면서 소련이 붕괴되어 급진적 체제전환이 시작되었다. 교육 분야에서도 사회주의 교육의 특징인 집단주의적 훈육과 정치사상교육 대신 교육의 민주화와 다양한 제도, 지방자치, 다민족국가의 민족적 특수성, 교육의 개별화 등이 강조되었다(신효숙, 2012). 고등교육 기관도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게 다양화되었다. 1991년 514개이던 대학 수는 2011년 1,115개로 두 배 이상 증가하고 학생 수는 2.5배 증가했는데, 소련에서 오랜 기간 동안 암묵적으로만 존재했던 가정과 학생들의 강력한 고등교육 수요가 개혁개방 이후 폭발한 것은 고등교육 확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1992년 교육법 개정으로 설립 가능해진 사립대학의 증가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립 고등교육기관은 17년 동안 6배 증가하여 2011년 462개에 달했다. 사립대학 중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곳은 거의 없으며, 공립대학 중에는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와 등록금을 받는 학교가 공존한다. 2019년 기준 86.4%에 달하는 높은 대학등록률(UIS, 2022)은 대학들이 시간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른 시·도 소재 캠퍼스를 건설하여 학생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002년 기준 러시아 전역에 1,300개 이상의 공립 대학 캠퍼스가 존재했다(Froumin & Kouzminov, 2015). 또한 소련 시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학, 생산, 건설 분야의 학문을 지향했지만, 지금은 그들 중 절반가량이 인문학, 사회과학, 경영학, 법학을 전공하고 있다(Schwartzman, 2015).

러시아 고등교육의 변화는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2003년 러시아가 볼로냐 프로세스에 참여하면서 가속화되었다. 1999년 29개 유럽 국가들이 이탈리아 볼로냐에 모여 2010년까지 단

일한 고등교육제도를 설립하고자 출범한 볼로냐 프로세스는 각국의 고등교육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동일한 교육 주기를 도입하여 비교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Dubin et al., 2018). 그 영향으로 러시아도 소련 학위제도로부터 현대 학위제도로의 전환을 시작하게 됐고, 2010년까지 유럽지역 고등교육에 통합되기 위한 개혁 조치들을 취하며 교육제도를 개방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적어도 5개의 러시아 대학이 선도적인 국제 순위 100위 안에 들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과제를 제시했는데, 그것들은 외국인 학생 및 교수 유치, 연구 활동의 국제화, 국제 경영 관행 도입, 세계무대에서의 대학 브랜드 홍보 활동과 같이 세계화와 관련된 것들이었다(Froumin & Kouzminov, 2015).

Gurban과 Tarasyev(2016)는 러시아가 볼로냐 프로세스에 가입한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유럽 공동의 교육 공간을 형성하고 지켜가는 것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국제 분업체계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을 창출하고, 글로벌 노동시장으로의 통합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볼로냐 프로세스에 가입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러시아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유럽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 비교 가능한 학위제도를 도입하는 것,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점수화하여 측정하는 것, 학생, 교사, 행정직원들의 이동성을 높이는 것,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 등이다(Abishev et al., 2016).

러시아의 유학생 교류는 과거 사회주의체제 당시부터 교류가 있는 국가들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개혁개방 이후 2배 이상 증가한 고등교육 인구는 세계화 시대에 활발하게 국제 이동을 실시했다. Bokareva(2014)는 유학 가는 러시아 학생이 매년 7만 명에 달해 '두뇌유출(brain drain)' 문제가 있다고 보았으나, 아래 <표 2>에 따르면 2020년 기준 57,591명의 러시아 학생이 유학을 갔고, 그 인원은 전체 대학생 중 0.9%에 불과하다. Ezrokh(2017)는 러시아 학생들의 외국어 숙련도가 낮고 장거리 여행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 이동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러시아로 유학을 오는 학생은 <표 3>에서와 같이 282,922명에 달해 전체 대학생의 5.0%에 해당됐다. 유학을 가는 학생들

은 독일, 체코, 미국, 영국, 프랑스 순으로 많이 나갔고, 유학을 오는 학생들의 출신국은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순으로 많이 들어왔다. 주로 선진국으로 유학을 가고 과거 소련 연방이었던 국가 학생들이 러시아로 유학을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러시아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호환성은 볼로냐 프로세스에 가입하면서 증진되었다. 정부는 2010년까지 고등교육을 유럽 지역 고등교육과 통합하기로 하여 그에 따른 세 가지 개혁 조치를 취했다. 첫째, 기존에 졸업시험과 입학시험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대학입시제도를 일원화하여 '공통국가시험(Universal State Exam, USE)'실시를 추진하였다. 고등교육 기관마다 개별적인 주관식 작문형과 구술시험으로 이루어지던 입학시험 방식이 전국 범위에서 객관식으로 시행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오만석, 신효숙, 2014). 둘째, 2007년 10월 기존의 5년제 대학교육 모델을 4년제 학사학위와 2년제 석사학위로 대체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학제가 변경되면 학부생들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러시아 대학들은 2011년 2단계 모델로 대량 전환했으며, 5년제 프로그램은 2010년 거의 중단되고 2014년까지 해당 학생들이 거의 모두 대학을 떠났다(Ezrokh, 2017; Dubin et al., 2018). 셋째, 대학 교육의 질 관리와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에 특별 지위를 부여했다. 정부 차원에서 모범 사례를 창출하고 양대 명문대학을 세계 유수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 예산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하기로 한 것이다(신효숙, 2012).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러시아의 볼로냐 프로세스 가입으로 인한 교육개혁은 더 급진적인 변화를 의미했다.

그러나 세계화의 요구에 맞게 고등교육체제를 개혁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경제와 노동시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민첩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고, 변화에 대한 투자를 피하기 위해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일부 대학들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에서 동등한 파트너 역할을 하는 데 관

심이 없었으며, 유학이나 해외 취업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역량을 증진시킬 준비가 부족했다(Dubin et al., 2018). 한편, 세계화로 인한 급진적 변화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균형을 깨트렸고, 수만 명의 러시아 대학 졸업생들이 아무런 지도와 지원, 채용 인프라 없이 노동시장으로 내몰렸다고 분석된다(Froumin & Kouzminov, 2015). 러시아의 급진적 체제전환은 구소련 관료들에게 특권을 부여했고(조한범, 2001), 교육의 개혁 과정에서 입시비리가 고질적인 교육병폐로 등장했다. 2004년 당시 모스크바 소재 대입 보장금액이 1-5만 달러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였다(오만석, 신효숙, 2014). 2009년 USE의 도입은 이러한 부정부패를 제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했다.

2. 중국

중국에서 大學은 명·청시기 최초의 국립대학으로 설립되었던 京師大學堂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최고의 고등교육기구이다. 중화민국 시기에 대학은 중국의 상황에 맞게 서구의 경험을 수용하며 운영되었고, 1949년 사회주의 국가 확립 이후에는 소련의 모델을 적용하여 계획경제에 부합하는 교육기관으로 개조되었다(崔恩珍, 2017). 국가가 대학을 관리하여 학생 선발 및 배치를 담당하고 모든 학문 전공에 대해 국가적으로 통일된 교수 계획, 교재를 도입하는 중앙집권적 고등교육제도였다(Li, 2018). 그러나 마오쩌둥 사망 이후 1978년 덩샤오핑이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에서 '역사적 노선 전환'을 선언한 뒤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했고, 1992년 제14차 중국공산당 전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도입을 공식화하였다. 공유제의 바탕 위에 민영경제, 외자경제를 보완적으로 인정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생산력 제고를 위한 교육개혁을 요청하게 되었다(최영표, 구자억, 손계림, 2002).

중국은 20세기 초반부터 서양의 정책을 동양에 알리는 역할을 했고, 1919-1921년 John Dewey가 중국을 광범위하게 여행하고 강의할 만큼 중국의 교육자들은 다른 나라의 교육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마오쩌둥

집권기에는 자본주의의 영향을 우려해 서양과의 교류를 철저하게 제한했고, 개혁개방을 실시하면서 서서히 교류를 재개하였다(An, 2000). 덩샤오핑은 1978년 유학생 파견 확대를 결정하였고, 1983년에는 “교육은 현대화, 세계, 미래를 직면해야 한다.”고 말했다(Chen, 2011). 1979년 중국은 문화대혁명 시기 황폐화되었던 고등교육체제를 복구하기 시작하였는데, 1984년 전국인민대표와 정협위원들이 참석한 ‘교육과 기술체제 개혁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학교 경영권한 확대, 총학장 책임제 도입, 대학재정 사용권 확대, 국제학술 교류활동 수속 간편화, 졸업생 배정제의 개혁 등을 포함하는 고등교육 부분의 개혁조치 8가지를 제시하였다. 1985년 5월에는 <중공중앙의 교육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中共中央關于教育体制的决定)>이라는 문서에서 ‘대학의 학생모집 계획과 졸업생 배정제의 개혁, 대학경영 자율성 확대’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개혁이 다소 지체되었다가,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면서 본격적인 교육개혁이 시작되었다. 1993년 2월 공포된 <중국교육개혁과 발전강요(中國教育改革和發展綱要, 이하 ‘발전강요’)>는 20세기 말과 21세기 초 중국 교육개혁의 기본 목표와 임무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깊다(최영표, 구자억, 손계림, 2002). 특히 중국공산당은 시장경제 도입과 국가 현대화를 위한 고급인재 양성에 관심을 갖고 고등교육체제개혁에 주안점을 두었다(구자억, 2002).

중국의 교육제도 개방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따른 교육개혁을 실시하던 중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가속화되었다. 전지구화(全球化), 즉 세계화의 흐름은 소위 사회주의 현대화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흐름 뒤에 숨겨져 있었다. 세계화는 중국 내부의 조직적 압박과 경제 및 정치사회의 변화를 야기하는 외부적인 힘의 역할을 했다(Li, 2018). <발전강요>에는 중국의 교육 세계화 계획인 211공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세계적인 신기술 혁명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힘을 모아 약 100개의 대학과 일부 중점대학을 육성한다. 그리고 21세기 초에 일부 대학과 학과의 교육의 질, 과학 연구, 관리가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고 천명했다. 위에서 살펴본 교육 세계화의 특징처

럼 자국의 교육을 세계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엘리트 대학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1993년 7월 <일부 대학과 중점학과를 중점 육성하는 문제에 관한 의견>이라는 법령에서 211공정의 목표를 제시했고, 중앙에서 특별회계로 인민폐 3억 원(한화 480억 원)을 지출하면서 지방과 주관 부서에서도 재정을 출연하도록 했다(최영표, 2002). 1998년 5월 江澤民은 베이징대학 100주년 기념식에서 “현대화 실현을 위해 세계선진수준의 일류대학이 필요하다”라는 제의를 하였고, 1999년 발표된 <21세기를 대비한 교육진흥 행동계획>은 세계일류대학 건설 계획인 985공정을 출범시켰다.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난징대학 등 9개 대학이 이 공정의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2003년에는 34개, 2004년에는 49개 대학으로 확대되었다. World Bank는 13개 국가의 전문가로 구성된 고등교육 태스크포스를 조직하여 중국의 대학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중국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2004년에 64개국 출신의 NGO 및 국제조직 인원이 결성한 대학교육 관련 국제관리기구도 중국 교육개혁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崔恩珍, 2017).

고등교육 개혁과정에서 엘리트 대학이 집중적인 투자를 받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수도 급속하게 증가하여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1980년 중국의 대학 수는 675개였다가 1989년에는 1,075개로 증가하였는데, 정부는 그 수가 너무 급속히 증가했다고 판단하고 대학 합병을 주도하였다. 이에 따라 1992~2002년 10여 년 동안 733개 대학이 288개로 합병되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성인대학을 포함한 전국의 대학이 2,689개, 2015년에는 2,852개로 증가했다. 1998년에는 <21세기를 향한 교육진흥행동계획>에서 2000년까지 대학입학률 11%를 달성하고, 2010년까지 대학 대중화 기준 수치인 15%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계획은 2002년에 조기 달성하게 된다. 2006년 입학률은 22%로, 러시아, 인도, 미국을 앞섰고, 2009년 일반 대학생과 기타 대학생을 포함한 전체 대학생이 2,979만 명에 이르러 세계 최대가 되었다. UNESCO UIS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고등교육 등록률은 63.6%에 달한다. 중국에서도 사립대학 설립이 고등교육 대중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03년까지 전체 대학 수 중 4.3%에 불과했던 사립대학의 비율은 2015년 5월에는 총 722개, 전체 대학 수의 20%를 차지했다(崔恩珍, 2017).

대중화된 고등교육을 바탕으로 중국은 세계 최대 유학생 배출국이 되었다. 중국인 해외 유학생 수는 2005년 12만 명에서 2015년 52만 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했고, 2020년에는 108만 명으로 5년 새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아래 <표 2>에서와 같이 2020년 기준 이들의 유학 목적지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한국 순으로, 자본주의 선진국들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4년에는 110,844명이었지만, 2020년에는 221,653명으로 늘어났다. 중국의 외국인 유학생 중 한국인과 일본인 유학생의 비율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다른 아시아 국가 유학생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2011년에는 중국에 유입된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신국가가 한국, 미국, 일본, 태국 순으로 많았는데, 2019년에는 한국, 태국, 파키스탄, 인도 순으로 변경되어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지표들은 중국 고등교육의 세계화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국 정부는 증가하는 유학생 유출에 제동을 걸기 위해 중외합작대학들을 설립하고, 세계 유수대학들에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기 위한 공자학원도 설립하고 있다(신의항, 2012; IIE, 2020).

중국의 인적 교류는 연구 분야에서도 활성화되었다. 중국 정부는 다양한 출처의 지원을 받아 대학 및 연구소가 외국의 파트너들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개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1998년 EU와 중국 간 과학기술 협정은 이후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EU는 중국 연구기관의 참여를 허용하여 연구 및 기술 개발체계 프로그램을 중국에 개방했다. 이에 중국은 국가 첨단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863 프로그램)과 국가 핵심기초연구 프로그램(973 프로그램)을 EU 연구자와 기관에 개방했다(Cai & Yan, 2015). 다양한 인적 교류는 외국의 유용한 경험으로부터 배우도록 하여 중국의 교육개혁을 촉진했고, 중국의 경제와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An, 2000).

중국 고등교육 프로그램은 WTO 가입 후 국제호환성을 갖추게 되었

다. 이후 중국 대학들은 공동 학위 프로그램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2004년에는 홍콩 대학들을 포함했을 때 그러한 프로그램이 745개까지 증가했다. 앞서 언급한 211공정 및 985공정의 대상인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등은 해당 공정들의 지원으로 해외 유수 대학들과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 교류 프로그램, 국제회의 공동 조직 등 국제 연계를 구축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베이징대는 전략적 제휴 파트너에 상당히 의존했는데, 런던경제대학을 포함한 전 세계 200여 개 대학과 68개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가장 유명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은 예일대와 베이징대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베이징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PKU-Yale 공동 학부 과정, 학생들이 와세다대에서 2년, 그리고 다른 2년 동안은 베이징대에서 공부할 수 있는 PKU-Waseda 공동 프로그램이다. 영국의 대학들도 중국과 합작하고 있는데, University of Nottingham Ningbo China는 2004년 중국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개교한 최초의 중외 합작대학이고, 리버풀대와 시안 교통대는 2006년 합동 대학을 설립하였다(Feng, 2013). 중외 협력대학 운영은 선진적인 대학 운영방식을 차용하고 외국인 투자 및 교육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Chen, 2011), 두뇌 유출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에 의해 고려된 것이다. 또한 중국의 대학들은 교육과정을 국제화하고 있는데, 해외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의 학점을 완전히 이전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이고 있고, 영어 수업을 더 많이 개설하고 있다(Li & Chen, 2011).

그러나 중국 교육부는 2006년부터 중외 협력 프로그램 개설에 제동을 걸었다. 몇몇 프로그램들은 관리 부실, 기능장애, 교육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국의 명문·고급 파트너들만 중국과 협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높였다(Cai & Yan, 2015).

중국 고등교육의 세계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甘陽은 미국의 대학을 벤치마킹하는 베이징대학의 개혁안을 비판하면서 중국 학술의 주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국인의 대학이념과 베이징대의 개혁』에서 개혁안이 “미국 박사 출신들로 교수를 충원하여 SCI급 논문의 수를 늘림으로써 베이징대학의 랭킹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고, 『대학개혁의 합법성과 합리성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당시 개혁안의 종신제폐지론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李猛도 시장논리만을 내세워 중국 사정에 맞지 않는 하버드 대학 모델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베이징대학의 개혁은 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崔恩珍, 2017). Yang(2011)도 중국 고등교육 체계에 필수적인 제도적 구조, 연구방법론, 교육 이념, 문화적 본질 등에서 동서양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고등교육의 핵심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대학들은 강한 '따라잡기' 정신으로 서구의 영향에 반응하고 있으나, 그것이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이라기보다는 공황에 시달려 처방한 임시방편적 치료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3. 베트남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이후 분단된 상황에서 북베트남 정부는 대규모 문맹퇴치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단학제 대학으로 특징 지어진 소련식 고등교육 모델을 도입했다. 전문화된 작은 규모의 대학, 폴리테크닉 대학, 전문대학 등이 설립되어 약 5,000명의 학생이 무료 고등교육을 받았고, 졸업생들은 다양한 정부 요직에 배치됐다. 남베트남의 교육은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으나 1960년대부터 미국 모델로 바뀌어 갔다. 고등교육은 실용 지향적이기 보다 기초 과학, 법학, 경제학, 행정학 같은 학문 지향적인 교육 위주로 실시되었고, 1975년 기준 4개의 공립대학, 3개의 지역대학, 11개의 사립대학 등이 존재했다. 그러다 베트남 전쟁 후 남베트남의 고등교육 기관들은 북베트남식의 사회주의 고등교육 모델을 따라야 했다. 두 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교육개혁이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실시되었고,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대학원 교육이 촉진되어 1976년엔 공식 프로그램이 되었다. 통일 베트남의 고등교육은 모두 공립기관에서 보조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졸업생들은 정부 기관의 보직을 보장받았다(Nguyen, 2009; 이성준, 2012). 그러나 1980년대 초 베트남에 경제 위기가 닥치면

서 교육도 심각한 자원 부족에 직면했다. 대학들은 정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사회주의 관료체제 내에서 자율성도 갖추지 못했다.

베트남의 교육제도는 체제전환 개혁정책인 도이 머이(Đổi mới) 이후 조금씩 개방되었다. 경제 위기에 직면한 베트남 정부는 결국 1986년 중앙집권적 계획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도이 머이를 채택하였고, 1987년 국가교육체제도 조정 프로그램에 착수하였다. 이제 고등교육 기관은 공공기관의 수요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기관과 사회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는 기관으로 변신해야 했고,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대신 학생들로부터의 등록금이나 외국인 투자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야 했다. 교육훈련부의 관리 하에 고등교육 기관들은 경직된 훈련 프로그램 대신, 고용 시장의 요구 조건과 시장경제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훈련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였다(Nguyen, 2009).

이러한 고등교육 개혁과정은 1990년대 초 World Bank가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빈곤을 완화하라고 압박했을 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고등교육 개혁은 신자유주의를 반영하는 World Bank의 처방 중 하나였다. World Bank는 대규모 자금과 저금리 대출, '정치적 기술' 등으로 베트남 교육 지도자들의 사고방식과 이념을 테크노크라틱 이니셔티브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였다. 그 결과, 공립대학이 더 이상 고등교육의 독점권을 행사하지 못함에 따라 사립대학, 반 공립대학(semi-public university)과 다른 직업훈련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비 공립기관들이 경쟁적으로 학생들을 끌어들였다. 정부는 2005년 고등교육 확대를 위해 민영화를 늘릴 뿐만 아니라 공공 고등교육 기관도 규제해야 한다는 <2006-2020년 베트남 고등교육의 실질적·포괄적 갱신안>을 채택했다(Nguyen, 2011). 또한 같은 해에 <고등교육 개혁 어젠다(Higher Education Reform Agenda, HERA)>를 승인하여 2020년까지 거버넌스, 민영화, 자금 지원, 그리고 교육과정 개편의 측면에서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 제도를 개혁하도록 했다(Nguyen, 2011). 이러한 노력으로 2005년 110개였던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은 2016년 556개로

늘어났고, 1992년에는 1.54%, 2001년에는 8.56%였던 고등교육 총 등록률이 2016년에는 28.54%, 2021년에는 35.4%로 급속하게 증가했다(유성상, 2007; Nguyen & Tran, 2018; UIS, 2022).

베트남 정부는 유학생 교류를 위해 국가 예산에서 자금을 확보하고 유학생 장학금을 관리하는 “프로젝트 322”라는 부서를 지정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을 받은 베트남에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학의 길을 택하기 시작했다.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 외에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외국 대학에서 직접 장학금을 받거나 자기 부담으로 유학을 하고 있다. 2007-2008학년도에 미국에서 공부하는 베트남 학생들의 숫자는 45.3% 급증하였고(Nguyen, 2009), 2013년 UNESCO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출신 해외 유학생은 44,038명으로 동남아 지역 2위를 차지했다(Nguyen et al., 2016). U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20년 베트남 파견 유학생 수는 총 132,559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6.4%에 해당되고, 2000년의 9,306명과 비교하면 14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아래 <표 2>에 따르면 베트남 유학생들의 대상국으로는 일본, 미국, 한국, 호주, 캐나다와 같은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상위를 차지했고, 베트남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의 출신국으로는 라오스, 캄보디아, 한국, 중국, 동티모르 순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많았다.

또한 베트남 대학들이 외국인 투자를 받으면서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호환성이 증진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국내 대학과의 공동 연구 및 연구 프로그램, 해외 연구 펠로우십의 형태로 고등교육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해왔다. 그러나 법령 제06/2000/ND-CP호가 제정된 2000년 이후에야 외국 고등교육기관의 참여가 활발해졌고, 정부는 외국인 교육훈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었다. 2001년에는 법령 제18/2001/ND-CP호를 공포하여 베트남에 거점을 둔 영리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허용하였다.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만으로 설립된 최초의 대학은 2001년 호치민에 문을 연 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RMIT) International University Vietnam이었다. 이 호주 대학은 2004년 하노이에도 문을 열었고,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 베트남이 WTO의 1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외국 고등교육기관의 진입은 더 수월해져 RMIT 외에도 많은 외국 대학들이 베트남 대학들과의 공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 중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이 베트남이나 외국 대학의 해당국에서 학위를 이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샌드위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하노이 베트남 국립대학의 경제학부와 협력하는 트로이 주립대학의 학부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은 베트남에서 학위를 마치거나 미국에서 마지막 몇 학기를 보내고 졸업할 수 있다(Nguyen, 2009).

한편, Nguyen & Tran(2018)은 초고속 세계화 과정에 있는 베트남 고등교육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그들이 보기에 도이 머이 이후 고등교육 개혁은 임시적이고 단편적이며 불안정했고, 베트남 대학들의 국제화 전략은 서양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려는 것이었다. 수십 년 동안 진행된 개혁 정책들은 서구 고등교육 모델을 빌리거나 세계 상위 200개 대학의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수입하고자 하는 '불타는' 욕구를 드러냈다. 베트남 고등교육 기관들과 해외 파트너들 간에는 거대한 불균형이 존재하며, 사회문화, 역사, 정치, 경제적 맥락과는 별개로 상호문화성과 같은 측면들은 무시되었다. 그들은 Pham(2016)을 인용하여 베트남 대학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해외 대학은 프랑스, 미국, 영국, 호주, 중국에 가장 많은데, 그 국가들은 베트남의 복잡한 식민통치 역사를 생생하게 상기시킨다고 지적한다. 뒤이어 Fanon(1952)을 인용하며 그들은 서양에 대한 모방과 식민지의 욕망이 베트남 고등교육 정책 결정 과정과 국제화 전략에 미묘하게 스며들고, 잠식하며 위험한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한다.

4. 쿠바

쿠바의 교육 목적은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종합적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고, 고등교육의 목표는 국가의 발전,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교수, 연구, 생산기술 분야의 효과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1959년 사회주의 혁명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고등교육은 농업기

술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Che Guevara가 주창한 “새로운 인간”을 육성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이들이 각 분야에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한만길, 2004).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 고등교육체계는 크게 확대되었고, 동유럽 대학들과의 유대가 강화되었다. 이 시기에 박사과정도 개설되었고, 해외에서 훈련받은 유학생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1960-1980년대에 수천 명의 쿠바인들이 소련이나 동독에서 장학생으로 유학한 뒤 귀국하여 전문가와 숙련기술자로서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했다(Hickling-Hudson & Arnove, 2014). 대학 등록 학생은 30만 명을 넘어섰고, 원격교육도 시작되었다. 이후 2000년 쿠바는 인구 1,100만 명 중 70만 명 이상이라는 대학 졸업자수와 73개 대학, 135개 이상 국가와의 광범위한 국제협력 등을 바탕으로 새천년을 맞이했다.

쿠바는 혁명 후 오래 전부터 우호국 젊은이들에게 무상 대학교육을 제공할 정도로 교육제도가 개방되어 있었다. 그러나 쿠바 대학들이 외국 훈련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국제기구와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1996년이다. 외국 또는 공동 박사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메커니즘을 담은 정책이 시행된 후 수십 명의 박사과정 학생들이 법률, 환경, 교육, 국제 금융,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이 프로그램들을 졸업했고, 이들 프로그램은 거의 모두 스페인 대학들과 연계해 개발됐다. 쿠바의 법은 국가 및 지역의 필요와 과학적 기여에 따라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규제하고 있다. 쿠바 대학은 각국 UN기구 및 협력기관과 함께 213개 프로젝트를 개발한 1996년부터 대학간, 양자간, 다자간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전개하기 시작했고, 2002년에 이러한 프로젝트의 개수는 270개로 증가했다. 2001년 쿠바 대학들은 150개가 넘는 국제기구에 가입했고, 일부는 과학 또는 티칭 교류 프로그램에 깊이 관여했으며, 다른 일부는 글로벌 대학 정책 출판물이나 프로젝트에 관여했다.

쿠바 고등교육의 국제교류는 1990년대 초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변화를 맞이했다. 이전에 학문적 교류의 70%를 차지하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류가 중단되고, 대신 캐나다, 스페인, 독일, 벨기

에 등의 선진국 및 라틴아메리카 대학들과의 교류가 확대되었다. 아래 <표 2>에 따르면 2020년 쿠바 학생들은 스페인, 에콰도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순으로 유학을 간 것으로 나타난다. 학생 교류뿐만 아니라 교육자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 기준 쿠바 전문가들은 500개 이상의 국제 네트워크에 참여하였으며, 연간 800명 이상의 쿠바 교수가 멕시코, 볼리비아, 콜롬비아, 브라질 등 27개 이상의 국가에서 근무하였다. 많은 쿠바의 교수와 연구자들은 국제기구에서 임원직을 맡고 있거나 소속되어 있다. 여기에는 라틴아메리카 대학 연합, 아메리카 간 대학 조직, 이베로 아메리카 대학원 교육 협회, 협력 및 연합 연구를 위한 미주 대학 네트워크, 라틴아메리카 사회과학부 등이 포함된다(Pérez, 2005).

쿠바는 파견하는 유학생보다 유입되는 유학생이 더 많은, 저소득 국가 중 남반구 학생 및 학자 교류에 모범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한 사례 국가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쿠바의 장학금은 주로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 학생들에게 지원되었는데, 1990년대 초 동구권 붕괴 이후 쿠바가 경제난을 겪던 '특별한 시기'에만 의료교육 중심으로 등록금을 받았다. 2000년대 초반 기준 쿠바의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15,000명이 넘으며,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은 계속되는 미국의 금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쿠바와 동맹을 맺는 것에 더 자신감을 가졌다. 중등교육 장학금은 줄어든 반면 대학 장학금은 증가했는데, 대학 장학금의 대다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게 돌아갔다. 2003년 베네수엘라가 쿠바의 지원으로 볼리비아, 에콰도르, 니카라과, 카리브해의 섬나라들을 통합하는 ALBA(the Bolivarian Alliance for the Peoples of Our America)를 형성하면서 쿠바는 해당 국가들로부터 가장 많은 수의 유학생들을 받게 되었다. <표 3>을 보면 2020년에는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들이 쿠바에서 많이 공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쿠바 장학금은 각국의 대학에 지원할 수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수여된다. 국제 장학금 지출 수준에 대한 결정은 쿠바 사회주의의 중앙 집중식 계획경제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국제 장학금 지원은 쿠바 국제

주의(internationalism)의 토대를 제공하는 연대(solidarity)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쿠바의 고등교육은 정부가 대학 각 분야에 대한 자체 평가 및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국제호환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쿠바에서 고등교육 장학금을 받는 대부분 학생들의 출신국은 쿠바에서 얻은 학위의 가치를 자국의 공인된 고등교육기관이 부여한 학위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Hickling-Hudson & Arnove, 2014). 쿠바 고등교육기관들은 2002년 1,165건의 국제협력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협약들은 상호 교류의 틀 내에서 혹은 대학 총장 회의에서 주기적으로 개정된다. 해외에서 수강하는 과정, 모듈, 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공식적 과정이 존재하며, 대학원 학위 인증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 쿠바는 UNESCO와 인가 및 동등성을 관리하는 협정에 서명했고,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고등교육연구소(IESALC)의 활발한 회원이다. 또한 쿠바는 라틴아메리카 10개국에서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의 동등성을 확립하기 위한 안드레스 벨로 협약(Andrés Bello Agreement)의 일원이다. 쿠바는 EU의 ALFA(the European Union's Latin America Academic Training) 프로그램에 일부 참여하고, 대서양 양쪽의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21개국이 서명한 CYTED(the Ibero-American Program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program)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쿠바의 '세계화'는 1990년대부터 지배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쿠바는 '더 나은 세계', 'un mundo mejor es posible'를 창조하기 위한 하나의 길로 국제주의[10]를 제시했다. 이것은 미국이 부과한 경제 제재조치로 인한 고립의 결과이기도 하다. 쿠바인들은 '지원'보다는 '협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는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개인 및 공동체와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쿠바의 국제주의 접근을 보여준다. 의료협력의 사례이기는 하

10) 물론 쿠바의 국제주의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이다. 사회주의는 그 성격상 국제적이며 국경을 초월한 노동자의 연대를 추구한다. 소련은 탈국가적인 제3인터내셔널(코민테른)을 구축하여 타국에 공산주의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21세기 정치학대사전 (검색일: 2023.1.26.)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26492&cid=42140&categoryId=42140

나, 쿠바는 이러한 국제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난 구제를 할 때 장기적 협력, 인도적 돌봄, 맥락화, 다원적 접근, 재난 피해 지역의 집단적·역사적 기억에 대한 존중, 윤리적 입장이라는 여섯 가지 근본원칙에 입각하여 실시한다(Castro, Melluish & Lorenzo, 2014).

그러나 쿠바 고등교육에도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 미국의 제재와 경제의 이중구조화로 인한 빈곤은 쿠바 젊은 세대의 교육에 대한 열망이 사그라지게 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여 관료나 교수로 근무하는 것보다 암시장에 종사했을 때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쿠바의 젊은 세대는 “유토피아에 살고 있지만 내 유토피아는 아니다”라는 관념을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Hansing & Optenhögel, 2015/2015). 쿠바도 달러화 정책을 실시하고 이중경제구조와 불평등이 생겨나면서 대학 입시 경쟁이 심화됐고, 대학생 중 약 80% 정도는 과외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도 있다(Moody, 2019).

5. 사회주의 국가 고등교육 세계화의 특징

UNESCO U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20년 각국의 유학생 수 및 행선지, 출신국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표 2>에는 각국 유학생의 행선지 순위 및 총 유학생 수와 해당국 대학생 중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와 있다.

<표 2> 2020년 각국 유학생의 행선지 순위 및 유학생 수, 비율

순위	러시아		중국		베트남		쿠바	
1	독일	11,055	미국	343,761	일본	40,633	스페인	662
2	체코	6,407	영국	143,867	미국	25,183	에콰도르	441
3	미국	4,901	호주	128,183	한국	19,098	브라질	331
4	영국	3,376	캐나다	81,006	호주	15,959	아르헨티나	287
5	프랑스	2,751	한국	58,746	캐나다	9,243	칠레	256

6	키르기스탄	2,005	홍콩	39,355	프랑스	4,497	독일	188
7	벨라루스	1,902	독일	39,281	독일	3,689	미국	142
8	아르메니아	1,782	프랑스	24,780	영국	3,398	프랑스	114
9	핀란드	1,728	마카오	22,211	핀란드	2,197	캐나다	93
10	이탈리아	1,554	러시아	18,531	뉴질랜드	1,197	이탈리아	83
총계	57,591		1,088,466		132,559		3,249	
비율	0.9		2.2		6.4		1.0	

주1) '총계'는 상위 10위권 국가들로 가는 유학생 수뿐만 아니라, 각국의 총 유학생 수임.

주2) '비율'은 각국 전체 대학생 중 유학 가는 학생의 비율임.

출처: UNESCO UIS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검색일: 2022.12.19.)

http://uis.unesco.org/en/uis-student-flow

사회주의 국가들의 유학생 현황은 나라마다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공통점은 모두 상위 10위 안에 미국과 독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국, 베트남은 미국을 비롯하여 호주, 캐나다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한국도 상위권에 위치한다. 전반적으로 서양 자본주의 국가들로 유학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과 베트남 내에서 세계화가 곧 서양화 혹은 미국화를 의미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崔恩珍, 2017; Nguyen & Tran, 2018). 반면, 러시아는 과거 사회주의 고전적 체제였던 시기부터 교류가 있는 국가들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러시아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독일은 통일 후 서독 자본주의체제로 통합되었지만 구소련 시절 동독이 위성국이었고,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있는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다. 체코 또한 구소련의 위성국으로 당시에도 소련인들이 주로 여행 가던 나라 중 하나였다. 쿠바는 인구가 적은 만큼 유학생 수도 적지만, 에콰도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와 같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2-5위를 차지했다. 총 유학생 수의 경우 중국이 거대한 인구 수 만큼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총 대학생 중 유학생의 비율은 베트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각국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의 수와 출신국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표 3> 2020년 각국 해외 유학생의 출신국 순위 및 유학생 수, 비율

순위	러시아		중국		베트남		쿠바	
1	카자흐스탄	71,368	-	-	라오스	6,227	남아프리카	1,919
2	투르크메니스탄	27,889	-	-	캄보디아	695	콩고	1,767
3	우즈베키스탄	27,397	-	-	한국	491	앙골라	976
4	타지키스탄	21,973	-	-	중국	128	콜롬비아	503
5	우크라이나	21,609	-	-	동티모르	84	나미비아	306
6	중국	18,531	-	-	마카오	59	가나	249
7	인도	12,105	-	-	필리핀	55	차드	156
8	벨라루스	11,614	-	-	미얀마	46	팔레스타인	154
9	아제르바이잔	10,946	-	-	스리랑카	46	아이티	131
10	키르기스스탄	7,291	-	-	나이지리아	43	자메이카	118
총계	282,922		221,653		8,370		7,806	
비율	5.0		0.4		0.4		2.2	

주1) '총계'는 상위 10위권 국가들로 가는 유학생 수뿐만 아니라, 각국의 총 유학생 수임.

주2) '비율'은 각국 전체 대학생 중 유학 가는 학생의 비율임.

출처: UNESCO UIS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검색일: 2022.12.19.)

http://uis.unesco.org/en/uis-student-flow

사회주의 국가들로 유학을 가는 학생의 수는 러시아가 가장 많았다. 구소련 국가였던 중앙아시아 국가들 및 우크라이나, 중국, 인도에서 많은 유학생이 유입되어 총 대학생 대비 유학생 비율이 5.0%였다. 중국에는 총 221,653명이라는 많은 수의 해외 유학생이 집계되었으나 중국 대학생 전체 수 중 비율은 0.4%에 그쳤고, 출신국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국제교육연구소(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IIE) 자료에 따

르면 2019년 재중 해외 유학생의 출신국 순위는 한국, 태국, 파키스탄, 인도, 미국 순이었다. 베트남의 경우 인근 라오스, 캄보디아가 1, 2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한국, 중국, 동티모르 순이었다. 베트남 또한 대학생 전체 수 중 해외 유학생 비율은 0.4%라는 미미한 수준이다. 쿠바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출신 학생들이 유학을 많이 갔고, 총 대학생 대비 유학생 비율이 2.2%로 중국, 베트남보다 높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쿠바의 유학생 장학금 지원은 연대를 바탕으로 한 국제주의의 중요한 수단이다.

이상 사회주의 국가들의 고등교육 세계화를 살펴본 결과, 러시아, 중국, 베트남은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반면, 쿠바의 사례는 다소 구별되는 양상이었다. 먼저, 러시아, 중국, 베트남의 공통적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기구나 프로그램에 가입하면서 교육 세계화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세 국가는 경제 개혁개방과 함께 고등교육 개혁을 실시하였지만, 국가 주도적 구조를 해체하고 국제적 표준에 따라 고등교육제도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국제기구의 권고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러시아의 경우 2003년 볼로냐 프로세스에 참여하면서 대학의 입시제도 및 학제를 개편했고, 중국의 경우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국제 공동 학위 프로그램, 공동 연구 프로젝트 등을 확대시켰다. 베트남은 일찍이 1990년대 초부터 World Bank의 압박을 받아 사립대학과 반 공립대학의 설립을 허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World Bank가 강제적 조치 없이 '정치적 기술'로 베트남 교육 지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 교육 세계화는 냉전 시기가 종료되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치였다.

둘째, 국제 경쟁에 맞서기 위한 국가적 전략으로 명문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세계화시켰다. 대통령의 권력이 강한 러시아는 2009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에 특별 지위를 부여하고 대통령이 직접 총장을 임명하며 연방정부가 예산 집행과 결산을 직접 관할하기 시작했다. 중국 또한 중점대학정책의 연장선상에서 211공정 및

985공정을 통해 소수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등을 '세계선진수준의 일류대학'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베트남도 국제표준에 맞는 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1993년 5개 주요 단과대학들을 통합하여 하노이 베트남 국립대학을 설립하고, 1995년 9개 단과대학들을 통합하여 호치민시에 제2의 국립대학을 설립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했다(Nguyen, 2009). 국가적 차원에서 명문대학을 설립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만 관찰되는 현상은 아니지만, 자본주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교육 세계화의 후발 주자인 사회주의 국가들은 단시간 내에 국제 경쟁순위를 올리기 위해 국가가 더 강한 주도권을 갖고 드라이브를 거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주의체제 당시 설립되었던 국립대학들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편이고, 국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개혁개방 이후 사립대학이 설립되었더라도 명문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 2020년 QS 세계대학 순위에 따르면 세 국가 중 중국은 칭화대학, 베이징대학을 포함한 6개 대학, 러시아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1개 대학이 상위 100위 안에 들었다. 베트남의 경우 호치민 베트남 국립대학이 701-750위 내에 들었다.[11)]

셋째, 서구 중심의 세계적 추세를 쫓아가다가도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체제전환기 구소련 지배세력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러시아에서는 입시비리가 등장했고, 사회주의체제에 익숙한 대학들은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 볼로냐 프로세스 가입에 따라 표준시험제도를 도입할 때에도 기존 학자들의 저항을 받았다. 중국의 경우 고등교육이 정치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구성원들에게 집단주의적 사상이 짙게 깔려 있다. 높은 인구수와 교육열로 입학시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교육 세계화로 인한 대학 서열 심화는 그러한 경쟁을 더 자극하고 있고, 대학 등록금의 상승폭과 해외 유학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육불평등은 악화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고등교육기관에서도 사회주의체제 경험으로 인한 특성 때문에 개혁에 대한 회피와 동기부여의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학점제를 도입하

11)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0 (검색일: 2022.12.19.)
https://www.topuniversities.com/university-rankings/world-university-rankings/2020

고 자격증과 학위제의 일관성을 높여 좀 더 다양한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대학 총장들은 책임과 변화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 차원에서도 최소한의 회의만 개최하는 등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공무원들은 경제 개혁과 고등교육의 상관성에 대해 무지했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장려금이 지급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속되었다(전태준, 2016). Želvys(2018)가 탈사회주의 국가들의 교육 세계화에 대해 지적한 것처럼 개혁개방과 그에 따른 교육개혁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 따라 '개혁'은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됐다.

한편, 쿠바 사례의 경우 '세계화'가 아닌 '국제주의'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서구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제교류를 확장해나가는 양상을 보인다. 쿠바 대학들은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실시하기 이전인 1980년대부터 발전된 의료 및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타국과 협력하였고, 1990년대 초 동유럽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내 장학 유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는 등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쿠바는 라틴아메리카의 고등교육 국제기구에서 비단 수혜국으로서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여국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다. 쿠바에도 아바나대학을 비롯한 명문대학이 존재하나, 국가 차원에서 해당 대학들에 집중 투자한다는 내용은 찾지 못했다. 쿠바에는 오랜 기간 국가가 보장하는 안정적인 고용과 비교적 평등한 사회 환경으로 인해 경쟁을 competition이 아니라 "emulation, 에물라시온"이라고 부르는 전통이 존재한다. 그것은 경쟁이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료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신을 갈고닦는 것이라는 의미이다(Gasperini, 2000). 이러한 쿠바의 사례는 북한 고등교육이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방법론에 대한 설명

북한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이지만,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기도 하다.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로 남북교류는 사실상 중단되었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판문점 선언 등을 계기로 일부 재개되었으나,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다시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직접 방문해 볼 수가 없다. 또한 경제 침체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북한은 통계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후 일부 국제기구의 데이터 외에 신뢰할 만한 양적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공간문헌 분석이나 관계자 면담을 통해 파편적인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차적인 연구방법으로 북한의 고등교육과 연관 있는 북한의 공간문헌을 분석하고, 연구주제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담 자료와 선행연구, 북한 외부 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수집된 정보들을 교차 점검하고자 한다.

문헌 분석은 인간의 개인적이거나 공적인 경험 및 생각을 담고 있는 문서들을 사회 환경과 연관 지어 이해함으로써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돕는다. 문헌에서 알 수 있는 정보를 유형화하고 조직하는 것은 텍스트를 해석하는 보편적 법칙을 도출하고, 사회변화에 대한 추이를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김영천, 2016).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는 문헌들은 북한의 공간문헌과 북한 고등교육 관련 기타 문헌들이다.

북한의 공간문헌 읽기는 당국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며, 북한 연구의 시공간적 한계를 줄여준다(김경미, 김안나, 2020). 북한에 대한 양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신문, 정기간행물, 단행본 등은 당국의 의도뿐만 아니라 북한의 실태에 대한 질적 정보를 제공한다. 그

러나 문헌 분석 시 북한의 출판물이 기본적으로 “조선로동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로동당이 내세운 정치·경제·문화건설의 과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무기”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이주철, 2003). 특히 1970년대 이후 발간되는 모든 공간문헌이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위한 선전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찬양하고 선전선동 기사를 게재하며 체제비판적 내용이나 사건사고 등은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김수현, 2019). 따라서 그러한 프로파간다의 성격을 인식하고 공간문헌의 서술에서 행간을 읽어내야 한다.

북한 고등교육 관련 기타 문헌들에는 북한 대학에서 가르치거나 유학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작성한 수기,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제기구 자료나 신문기사, 선행연구들이 있다. Suki Kim(2014/2015)은 2011년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영어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평양의 영어 선생님』이라는 체류기를 발간했다. Travis Jeppesen(2018/2019)은 2016년 김형직사범대학에서 어학연수를 받은 경험을 『시 유 어게인 in 평양』으로 펴냈고, Alek Sigley(2020)는 2018-2019년 김일성종합대학 박사원 유학생으로 공부했던 경험을 한국의 「北韓」이라는 잡지에 탐방기로 실었다. 북한 대학에서 교수하거나 유학하는 경험은 흔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이 세 사람의 수기는 연구 가치가 있으며, 북한 체제의 특성상 등장인물을 보호하기 위해 경험한 바를 다소 각색하였을 것이기에 이들의 경험이 알려주고 있는 사실들을 주의하여 포착하고자 했다. 국제기구 자료는 주로 UNESCO의 통계자료를 참고하였고, 제4장 제3절에서 교육 분야 물적 교류를 정리할 때는 OECD와 UNOCHA의 자료도 참고하였다. 북한의 경우 국제기구에 통계를 투명하게 보고하지 않고, 국제기구가 직접 조사할 때에도 여러 제약을 가하는 등 자료의 한계가 존재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북한 고등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이 연구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문헌에서 드러나지 않는 북한 고등교육정책 실천의 맥락을 파악

하기 위해 북한 고등교육기관 관련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세계적 추세'에 따른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라는 이슈를 다각도로 예증하는 데 여러 집단에 대한 복합적 사례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질적 연구방법 중 사례연구(case study)는 연구자가 경계를 가진 하나의 사례 혹은 여러 사례들을 탐색하는 것으로, 관찰, 면담, 문서 등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사례를 기술하고 주제에 대해 보고한다. 이때 분석 단위는 단일 사례거나 복합적 사례일 수 있는데, 복합적 사례연구 방법은 하나의 이슈를 탐구하기 위해 여러 사례를 선택하여 연구한다. 복합적 사례연구의 전형적인 형식은 각 사례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사례 내 주제를 제시한 뒤 사례들에 걸쳐 있는 주제를 분석하여 각 사례들의 의미를 주장하거나 해석하는 것이다(Creswell, 2013/2015).

본 연구에서는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라는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 북한 고등교육기관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사례 집단을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재북 당시 고등교육기관 학생이었던 북한이탈주민이고, 두 번째 집단은 북한 대학에서의 근무나 유학 경험이 있는 외국인, 세 번째 집단은 북한 대학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내국인[12]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태어나 그곳의 교육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로 대학교육 수학경험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주었다. 탈북과정에서 그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과 대표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자료와 기타 문헌과의 교차 검증을 통해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들은 아직 경험할 수 없는 북한 대학에서의 교수나 유학 경험을 나누어주었다. 내국인들은 북한 대학과 학술교류를 실시했던 한국 학자들로, 교류 경험뿐만 아니라 북한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주었다.

12) 여기서 내국인은 대한민국 거주민 중 북한이탈주민이나 외국인이 아닌 원주민을 의미한다.

제 2 절 분석 자료 및 절차[13)]

1. 북한 공간문헌 분석

북한 고등교육 관련한 자료로 본 연구에서 기본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북한 문헌은 「교육신문」과 「고등교육」이다. 「교육신문」 기사를 통해 북한 당국이 인식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분석하고, 「고등교육」 기사를 통해 북한 학자들이 연구한 세계 교육발전 추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매년 발표하는 신년사 혹은 신년공동사설 중 교육 관련 내용, 김정일·김정은의 노작 중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제4장 제2절에서는 북한의 법전들에서 교육 교류협력 관련 법령을 제시할 것이다.

「교육신문」은 북한 교육신문사에서 매주 목요일에 발간하는 교육전문 중앙신문이다. 북한 사전은 「교육신문」을 "교육부문 일군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을 튼튼히 무장시키며 우리 당의 교육정책관철에로 그들을 힘 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신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14)] 1948년 4월 15일 「교원신문」이라는 이름으로 창간된 「교육신문」은 주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교육 관련 기사를 싣다가 2004년 3월 4일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을 옳게 결합할데 대한 당의 의도에 맞게" 「교육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 신문은 4면 구성을 기본으로 하지만 신년사가 발표되는 호이거나 교육 관련 전국 단위 행사가 있을 때 6면에서 최대 20면으로 면수가 늘어난다. 주요 내용은 최고지도자 관련 소식이나 당의 교육방침 해설, 사론설, 여러 학교의 모범교수사례나 모범운영사례 등이다(김수현, 2019). 4면에는 모범적인 교원·학생·학부형을 긍정교양기사나 실화(오체르크)로 소개하여 북한 당국이 지향하는 바를 주민들이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

13) 이 절은 김유연, 유성상(2021) 논문 내용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14) 『조선대백과사전 2』.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5. 649쪽.

필, 연재소설, 시, 상식 등 읽을거리가 실리는데, 2010년부터 세계명언과 속담, '유모아(유머)'도 소개하기 시작했다(김유연, 2014).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는 1940-50년대와 2001-2019년 「교육신문」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1960년 10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약 40년간의 자료와 2010년 12월 2일호는 국내에 부재하며,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으로 북한 국경이 봉쇄되면서 2020년부터의 자료는 입수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김정일 위원장이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에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라는 친필 현판을 하사한 것이 북한 고등교육이 본격적으로 '세계적 추세'에 따라 변화하게 된 계기라고 보고, 2009년부터 국내에서 열람 가능한 가장 최근호인 2019년까지 고등교육의 세계적 추세 관련한 「교육신문」의 기사 470건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분석 대상 기사에는 세계적 추세를 소개하고 있는 기사,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며 북한 고등교육의 발전을 재촉하거나 세계적 추세에 맞게 발전한 성과를 보도하는 기사, 국제경연대회나 국제학술토론회 등 각종 국제행사 관련 기사 등이 포함된다. 주된 연구방법은 시기별 담론분석으로, 제4장 제1절에서 '세계적 추세' 관련 공적담론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분석한다. 임수진(2021: 31)은 "한 사회 내에서 '공공성'의 명목을 가지고 창출되는 문장보다 긴 의미의 집합체(textual unit)"라는 공적담론에 대한 Crossley(2005)의 정의를 인용하면서 북한의 공적담론을 "노동당의 선전선동부가 생산하고 언론, 교육, 조직을 통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일련의 발화되거나 문자화된 집합의 총체"라고 보았다. 북한의 신문기사는 공적담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매체이기 때문에 각 시기별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담론의 강조점을 분석하고, 어떠한 맥락에서 세계적 추세 관련 단어들이 언급되는지 살펴보는 작업은 북한 당국의 의도를 드러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학술토론회에 대한 기사들은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관련 기사들과 함께 제4장 제3절에서 정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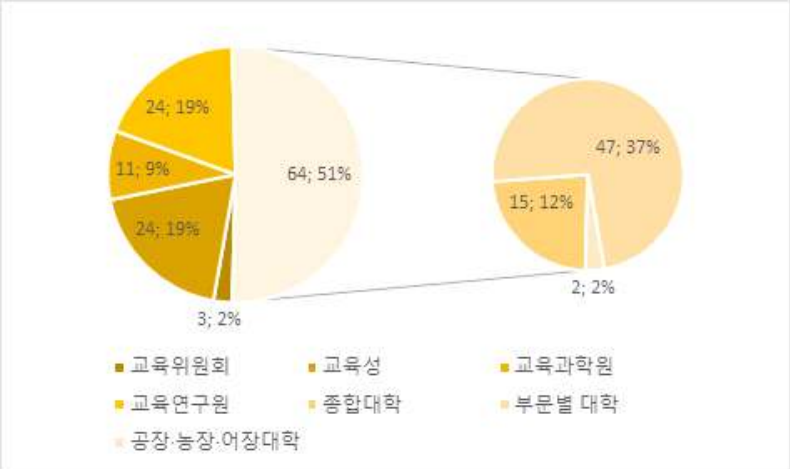
「고등교육」은 주로 북한 고등교육 교원들을 독자 삼아 1983년에 창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등교육정책 전문 잡지이다. 통일부 북한자료센

터에서 2005년 제5호를 제외한 2005-2019년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김정원 외, 2014). 2005-2015년 제6호까지는 격월간으로 1년에 6회 발행되었고, 2016년 제1호부터는 월간으로 연 12회 발행되고 있다. 한 호당 약 50-80개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고 각 기사는 0.5-3쪽 분량으로, 잡지 전반부에는 대학 교육과 관련된 최고지도자의 노작이나 그에 대한 해설, 논설이 주로 실려 있고 후반부에는 교육에 대한 여러 정보 기사들이 나와 있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는 2005-2019년 「고등교육」 113개 호 중 67개 호에서 '세계교육발전추세'라는 코너를 각각 1-3건씩 수록하고 있다. 몇 년도부터 해당 코너를 싣기 시작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코너는 외국이나 국제기구의 교육정책 사례를 소개하면서 "모든 교육일군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의 교육과정개혁의 추세를 잘 알고 그것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받아들이고 우리 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상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15] 본 연구에서는 해당 코너와 함께 외국의 교육정책 사례를 소개하거나 그것을 북한의 교육과 비교하면서 발전을 촉구하고 있는 '자료', '자료 상식', '교육과학' 등의 코너 중 일부를 포함하여 총 152건의 기사를 분석한다. 특히 2014년 제2호부터 2016년 제1호까지는 '세계교육발전추세' 코너가 없고, '자료', '자료 상식', '교육과학' 코너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고등교육」은 북한 고등교육 학계 구성원들이 독자이자 기자인 잡지이다. 대부분의 기사 말미에 기자의 소속과 학위(박사, 학사), 학직(교수, 부교수), 직위(강좌장, 학장, 실장),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데, 더러 '본사기자'라고 나와 있거나 소속을 제외한 학위, 이름 등만 표시되어 있기도 하다. 세계 교육발전 추세 관련 기사 152건 중 기자의 소속이 명시되지 않은 26건을 제외한 126건의 기자 소속을 나누어 보면 <그림 3>과 같다. 약 49%의 기사는 교육위원회, 교육성, 교육과학원, 교육연구원 소속 기자들이 작성했고 약 51%의 기사는 대학 소속 기자들이 작성했다.

15) 박금성,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의 교육과정개혁추세," 「인민교육」 2015년 제4호, 64면.



<그림 3> 「고등교육」 세계 교육발전 추세 관련 기사의 기자 소속 분류 (빈도; 백분율)

교육위원회는 북한의 중앙교육행정기구인 내각 산하 조직으로 보통교육국과 고등교육성을 관할하고 있으므로 '교육성'이 '교육위원회'와 다른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2013년과 2017년에 '교육위원회 김수남'이라는 기자의 기사가 총 3건 등장하여 따로 분류하였다. '교육성'의 분류에는 '고등교육연구소'도 포함하였는데, 24건 기사 중 대부분의 기자 소속이 '고등교육연구소'라고만 나와 있지만 2007년 제1호 "세계고등교육의 발전동향" 기사의 기자 소속이 '교육성 고등교육연구소'라고 명시되어 있어 고등교육연구소가 교육성 소속일 것으로 짐작하여 함께 분류하였다. 고등교육연구소라는 소속은 2005년 제1호부터 2016년 제2호까지 자주 등장했으나 그 이후 2017년 제1호까지는 '교육과학원 고등 및 사범교육연구소'가 등장하여 상위 소속기관을 변경하고 조직을 개편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조정아 외(2020)에 따르면 고등교육 부문에서 세계적 흐름을 연구하고 적용하기 위해 2010년대 중반부터 교육학 연구가 활성화하고 있으며 교육과학원이 중앙교육과학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한다. 2017년 제3호부터 2019년 제6호까지는 '교육과학원' 소속은 등장하지 않고, '교육연구원'이 자주 등장하는데, '교육과학원'을 '교육연구원'으로 개칭한 것일 수 있다. 2018년 8월 16일 「교육신문」

기사를 보면 교육연구원이 '교육정책자문기관'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16] 이러한 교육 연구기관의 변천은 북한 당국이 그만큼 교육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학 소속 기자들의 기사 51%를 나눠서 살펴보면 종합대학 소속 기자가 12%, 부문별 대학 소속 기자가 37%, 공장·농장·어장대학 소속 기자가 2%의 기사를 작성하여 5개뿐인 종합대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고등교육」 내 세계 교육발전 추세 관련 기사 코드, 범주, 빈도

코드	범주	빈도
교육계획, 교육강령, 교육통계, 교육예측, 교육전략, 수재교육, 비교교육, 인재양성	교육계획	21
대학평가, 일류급대학, 연구형 대학, 종합대학, 학제, 이중전공, 선택과목제, 박사원 교육	대학 운영	34
교육내용, 교육형식, 교수방법, 교육평가, 학생평가, 학과목 교육	교육 내용 및 방법	43
교육공학, 교육기술, 교육 정보화, 실험, 전자도서관, 원격교육	교육공학	28
교원양성, 교원교육, 교원관리, 연구사 소개	교원 양성 및 관리	8
과학기술과 교육, 직업기술교육, 교육의 개성화, 교육생태학, STEM교육, 일생학습 등	기타	18

문헌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세계 교육발전 추세 관련 기사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 분포를 살펴본 뒤 위와 같이 기자들의 소속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기사 본문에서 사례로 소개하고 있는 국가들을 별도로 정리하여 제4장 제1절에서 등장 빈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북한 고등교육 학계에서 주로 참고하는 사례국은 어디인지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각 기사의 핵심 주제를 코딩하였다. 이때 제목을 중심으로 분류하였으나 제목으로 명확하지 않을 때는 기사 본문을 참고하였다. 예를 들어 "지식경제시대에서의 일생학습"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일생학습'으로 코딩하였으나. "회색체계리론(이론)에 대하여"와 같이 어떤 내용인지 불분명한 제목의 경우에는 본문을 확인하고 학과목 중

16) "교육사업성과를 담보해나갈 불타는 일념으로," 「교육신문」 2018년 8월 16일, 3면.

‘수학교육’으로 코딩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코드들을 다시 상위 코드로 범주화하였다. 교육강령, 교육통계, 인재양성 등 교육계획 수립과 관련된 코드는 ‘교육계획’으로, 대학 운영에 관한 코드는 ‘대학 운영’으로 범주화하였다.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코드는 함께 분류하였고, 교육기술, 정보화, 원격교육은 ‘교육공학’으로, 교원에 대한 코드는 ‘교원 양성 및 관리’로 범주화하였다. 다섯 가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코드들은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각 범주의 기사 빈도는 <표 4>와 같다. 각 범주 기사의 내용을 요약·분석하여 「고등교육」 기자들이 참고한 세계 교육발전 추세가 어떤 것인지 정리하고자 한다.

2. 심층면담 자료 분석

심층면담의 경우 북한 고등교육기관 관련 경험의 기회가 아직 제한적으로만 개방되어 있어 연구 참여자 모집이 수월하지 않았기에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식을 활용하여 총 14명의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2022년 9월 기준 총 33,857명이 입국했으며, 그 중 약 6.9%인 2,338명이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자가 다년간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며 구축해 온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모집 문건을 배포하여 북한이탈주민 중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가능한 한 최근에 탈북한 자를 연구 참여자로 모집하였다. 모집된 북한이탈주민 연구 참여자 중 J와 K는 본인이 직접 해외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었다. 외국인의 경우 북한의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유학 경험이 있는 이들을 수소문하였다. 유학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실습생으로 방북하였는데, 학위 취득 경험이 있는 유학생도 몇 명 접촉하였으나 면담을 거절하여 부득이하게 실습생 프로그램을 경험한 두 명만 포함하게 되었다. 내국인의 경우 1998년부터 간헐적으로 진행된 남북 대학 간 교류를 가능한 한 최근에 경험한 학자들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했다. 연구 참여자 정보는 <표 5>와 같다.

심층면담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 승인을 받아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진행하였다.[17] 면담은 대체로 연구 참여자들이 원하는 공공장소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편안한 분위기 속에 이루어졌다.

<표 5> 연구 참여자 정보

기호	국적	연령대	경험 종류	경험한 북한 대학	경험 시기
A	한국	50대	학술교류	김일성종합대학	2010년대 중후반
B	한국	40대	학술교류	김일성종합대학	2010년대 중후반
C	한국	50대	학술교류	김일성종합대학	2010년대 중후반
D	중국	30대	교수	평양과학기술대학	2010년대 말
E	중국	30대	교수	평양과학기술대학	2010년대 중순
F	영국	30대	교수	평양과학기술대학	2010년대 말
G	한국(탈북민)	50대	수학	정준택원산경제대학	1980년대 초중반
H	한국(탈북민)	20대	수학	김책공업종합대학	2010년대 중후반
I	한국(탈북민)	30대	수학	김철주사범대학	2000년대 중후반
J	한국(탈북민)	30대	수학	보위부정치대학	2000년대 중후반
K	한국(탈북민)	20대	수학	김책공업종합대학	2000년대 후반 - 2010년대 초반
L	한국(탈북민)	30대	수학	리과대학	2000년대 중후반
M	중국	20대	유학	김일성종합대학	2010년대 중반
N	불가리아	20대	유학	김일성종합대학	2010년대 초반

다만 코로나바이러스-19가 확산세에 있거나 해외 거주 중인 사유로 C, D, E, F는 화상인터뷰를, G는 전화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동일한 기관에 소속되어 김일성종합대학과 함께 교류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A, B는 집단심층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1:1 면담이었다. 대면 면담 시 코로나바이러스-19의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였으며, 모든 면담은

17)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RB 승인번호 2010/001-012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 집단에 따라 달라졌다. ①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북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수학 경험, ② 외국인에게는 북한 대학에서의 근무나 유학 경험, ③ 내국인에게는 북한 대학과의 교류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연구 참여자 중 J와 K에게는 해외 유학 경험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면담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면담 내용이 다소 달라지는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인터뷰 내용은 녹취 후 전사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따라 학술교류, 교수, 수학, 유학 네 사례로 분류하고 코딩하였다. 학술교류에는 내국인, 교수, 유학에는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연구 참여자 면담 내용이 해당되며, 수학은 북한이탈주민 면담 자료가 주요 분석대상이다. 유학에 대한 코드는 '수학'과 '유학'에 모두 포함되었는데, 외국 유학생들은 주로 북한으로 가는 유학에 대해 진술해주었고, 북한이탈주민들은 주로 북한에서 해외로 나가는 유학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먼저 '진술 그대로의 코드(in vivo codes)'로 개방코딩을 진행한 후 주제별로 범주화하여 축 코딩하였다(Flick, 1995/2009). 각 축에서 도출된 코드는 <표 6>과 같다.

<표 6> 심층면담 사례 분석 코드

사례	코드
학술교류	교류 역사, 교류 진행과정, 북측 입장, 세계적 추세, 북한 논문, 국제 협력, 교류 차이점, 변화 평가, 변화 한계, 분야별 상황, 관료주의 등
교수	교수 기간, 가게 된 계기, 가르친 내용, 학생들 특징, 다른 나라와의 차이, 인터넷 상황, 수학여행, 변화 평가, 교육 한계 등
수학	졸업 학교, 배운 내용, 탈북, 유학, 해외 근무, 세계적 추세, 외국 자료 검색, 정보 통제, 연구원 처우, 교수 뇌물, 변화 평가 등
유학	유학 시기, 가게 된 계기, 배운 내용, 기숙사, 외부 연락, 인터넷, 학생교류, 행동수칙, 단체관람, 남북한 비교, 변화 평가 등

심층면담 분석 결과는 제4장과 제5장 곳곳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교수' 사례의 경우 여타 대학에서의 교수 사례도 모집하고자 하였으나 연

구 참여자를 찾기가 어려웠고, 세 연구 참여자 모두 모두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가르친 사례였다. 따라서 제4장 제2절 '교육제도의 제한적 개방성'에서 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학술교류'와 '수학', '유학' 사례는 제3절 '인적·물적 교류'와 제4절 '고등교육정책의 모방'에서 다뤄질 것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평가한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특징과 한계에 대한 내용은 제5장에서 분석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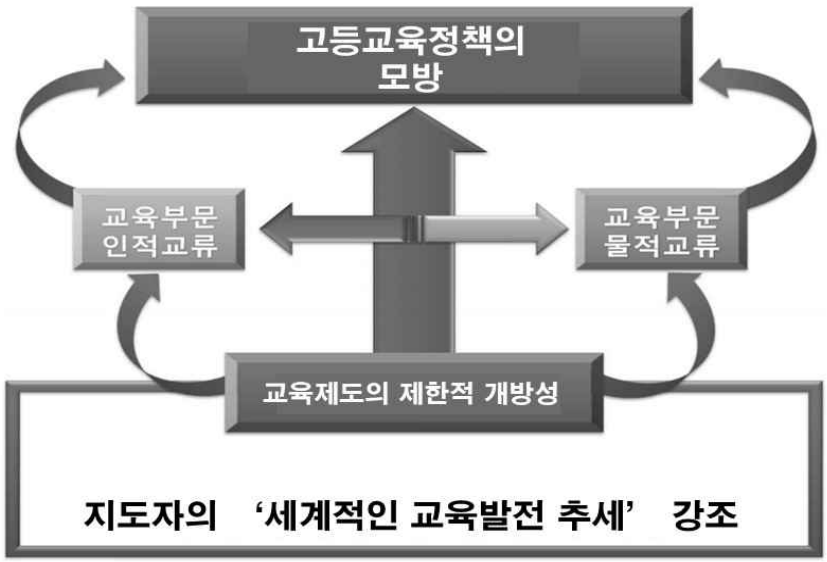
제 3 절 분석을 위한 개념틀

제4장에서는 교육 세계화 개념틀에 따라 '세계적 추세'에 따른 북한 고등교육정책의 변화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교육의 세계화와 동형화를 이론화한 개념틀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세계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관련 요소들을 지표화하여 평가하는 지수(index)도 존재한다.[18]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북한 고등교육정책 연구를 위한 가용한 자료의 범위와 변화의 한계를 고려하여 박재윤 외(2008)가 한국의 교육 세계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수립한 개념틀을 다소 수정한 뒤 활용하고자 한다.

박재윤 외(2008)는 제2장에 제시한 <그림 1>과 같이 사회 구성원의 세계시민성과 그것을 토대로 한 교육제도의 개방성,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프로그램의 호환성으로 개념틀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교육 세계화 개념틀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는 차단되어 있고, 여행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으며 세계시민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 추세'에 따른 북한 고등교육정책의 변화가 사회 구성원들의 세계시민성을 바탕으로 한다거나 그것을 함양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2000년대 이후 최고지도자가 교육 분야에서 '세계적인 교육발전 추세'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배경이라고 할 수

18) 스위스 연방기술원 소속 경기조사연구소인 KOF(Konjunkturforschungsstelle)는 2002년 '세계화 지수'를 도입하여 1970년대부터의 각국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차원 세계화를 측정한다. 그러나 북한은 평가대상국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있다. 이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교육제도가 개방되었고, 교육부문의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교육서비스 개방과 교육의 질 인증(quality assurance)을 주도하는 WTO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등교육 프로그램과 그 산출이 국제호환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세계적 추세'에 대해 연구하고 그것에 맞춰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고등교육정책을 모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박재윤 외(2008)의 개념틀을 수정해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세계적 추세'에 따른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 개념틀

이처럼 북한 고등교육정책 연구에 교육 세계화 개념틀을 변형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사회주의 국가들과 다르게 북한에서는 아직 개혁개방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의 저자 Kornai(1992/2019b)에 따르면,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은 정치구조, 재산관계, 조정기제 중 최소 하나의 영역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아직까지 세 영역에 공식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산관계의 경우 이미

실질적으로는 사적 소유가 된 생산수단이 존재할 수 있으나, 체제 차원에서 그것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 북한은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며 개혁개방을 고려하고 있지만, 그 범위를 매우 제한하여 체제 유지에 무리가 가지 않을 선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체제인 남한에 적용한 교육 세계화 개념틀을 북한 고등교육정책 분석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수정한 개념틀에 따라 제4장에서 '세계적 추세'에 따른 북한 고등교육정책의 변화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제1절에서는 북한에서 '세계적 추세'가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관련 담론을 분석할 것이다. 공식 담론에서 '세계적 추세'를 강조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시기별로 관련 담론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교육제도의 제한적 개방성에 대해 정리할 것이다. 교육 세계화와 관련 있는 북한의 법규를 알아보고 북한 고등교육기관 중 유일하게 외부와 합작하여 개교한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사례를 연구한다. 제3절에서는 인적·물적 교류를 분석한다. 북한 대학생의 유학뿐만 아니라 외국 학생의 북한 유학 및 북한과 외국 학자들 간의 국제학술교류 사례에 대해서도 톺아볼 것이다. 제한적이나마 물적 교류에 대해서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고등교육정책의 모방을 다룰 것이다. 2000년대 이후 북한 고등교육정책의 변화가 어떤 세계 교육발전 추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특징과 요인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제 4 장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양상

제 1 절 고등교육의 '세계적 추세'

본 절에서는 북한 당국에서 인식한 고등교육의 '세계적 추세'가 어떤 것인지 분석하려고 한다. 교육 분야에서 세계적 추세에 따라 발전할 것을 강조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후반부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2019년까지 관련 공적담론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보고, 어느 나라의 사례를 주로 연구하는지 정리할 것이다. 분석 자료는 북한에서 매년 발표한 신년사 혹은 신년공동사설, 2009-2019년 「교육신문」의 관련 기사, 2005-2019년 「고등교육」의 관련 기사, 김정일, 김정은의 관련 노작 등이다.

1. 시기별 담론 분석

「고등교육」의 세계 교육발전 추세와 관련된 기사 152건의 연도별 빈도를 살펴보면 <그림 5>와 같다. 「고등교육」 잡지가 입수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은 북한에서 경제난 극복과 국가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교육을 중시하고 있던 시기이다. 1999년, 2000년 신년사설에서 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중요한 요소로 규정한 이후 북한에서는 중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에서의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며 "세계적으로 치렬(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과학기술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인재 양성에 주력하였다(조정아, 이춘근, 2008). 또한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응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학제를 고려하여 기존에 4-7년이었던 대학 학제를 4년으로 단축하였다. 이에 따라 학과를 통폐합하고 신설하는 문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되었다(신효숙, 2007). '세계교육발전추세' 코너의 시작 시기는 확인할 수 없으나, 2000년대 들어 고등교육을 세계적 추세에 맞게 발전시키려는 북한 당국의 지시로 관련 기사가 꾸준히 등장한 것으로 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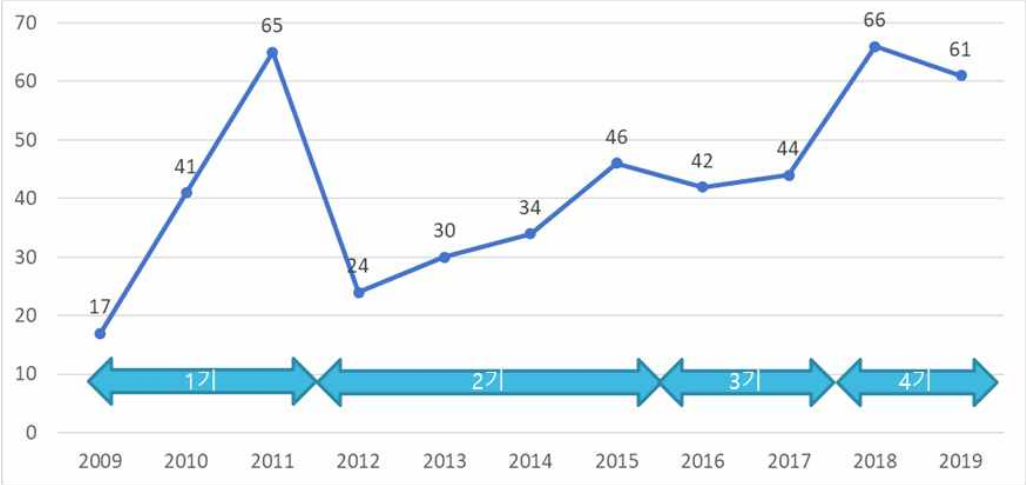
다. 2000년대 중 가장 관련 기사가 많이 실린 연도는 2007년이었다. 국내에서 2004년 자료부터 확인할 수 있는 보통교육 부문 잡지 「인민교육」에도 2008년 제5호에 '세계교육동향자료' 코너가 실린 것을 감안했을 때 2000년대 중후반이 북한 당국이 세계 다른 나라들의 교육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때라고 판단할 수 있다. 김정일 사망 후 첫 해인 2012년에는 중등일반교육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관련 기사가 감소했고, 2013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잡지 발행부수를 두 배로 늘린 2016년 정점을 찍었다.

<그림 5> 연도별 「고등교육」 관련 기사 빈도 추이

「교육신문」의 관련 기사 470건의 연도별 빈도는 <그림 6>과 같다. 상술한 바와 같이 세계 교육발전 추세를 따라가려는 경향은 2009년 12월 김정일이 김일성종합대학에 세계를 보는 안목을 가지라는 구호를 하달한 이후 더욱 강조되었다. 김정일이 김일성종합대학에 해당 친필 서한을 하사한 것은 현판에 적혀 있는 것처럼 2009년 12월 17일의 일이나, 직접 방문한 것은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이 완공된 후인 2010년 4월 12일이었다.[19] 이후 2010년 4월 22일, 29일 「교육신문」에 관련 현지지도 기사가 보도되고 9월 2일에는 현판 사진이 기사 정면에 실리면서 2010년

19) "전자도서관에 남기신 사진," 「교육신문」 2015년 4월 9일, 2면.

부터 세계적 추세에 대한 기사가 급증하였다.



<그림 6> 연도별 「교육신문」 관련 기사 빈도 추이 및 시기 구분

여기서는 월간 잡지인 「고등교육」보다는 교육 전문 중앙신문인 「교육신문」이 시기별 담론 분석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보고, 「교육신문」의 기사 빈도 추이에 따라 세계적 추세 관련 담론을 1-4기로 나누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1기는 세계적 추세 관련 기사가 증가하기 시작한 2009-2011년이고, 2기는 김정일 사망 이후 관련 기사가 급감하였다가 서서히 다시 증가한 2012-2015년이며, 3기는 북핵위기가 심화되며 기사 빈도 증가세가 주춤한 2016-2017년, 4기는 북한이 국제무대에 나서며 세계적 추세 관련 기사도 크게 증가한 2018년과 2019년이다. 북한 당국의 세계적 추세에 대한 강조는 실용적 의미뿐만 아니라 선전선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북한 내외의 정치 상황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져왔다. 공교롭게도 「교육신문」의 기사 빈도 추이에 따른 시기 구분은 그러한 정치 상황 변화와 관련이 있다. 1기와 2기는 김정일 사망에 의해 구분되고, 2기와 3기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 제재 강화 국면에 의해 구분되며, 3기와 4기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시작된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로 구분된다.

(1) 1기

1기는 김정일이 2008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에서 “교육발전의 세계적 추세를 잘 알아야” 한다고 지시한 이후 2009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에 친필 현판을 하사하고 그 내용이 2010년 4월 김정일의 김일성종합대학 현지지도를 계기로 강조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김정일은 2008년 담화에서 북한의 중등일반교육, 고등교육, 수재교육 전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과학, 교원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세계적 추세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 물론 우리는 교육발전의 세계적 추세를 잘 알아야 하며 정보기술을 비롯한 현대과학기술을 교육사업에 적극 받아들이고 다른 나라들의 교육사업에서 좋은 경험들을 배우기도 하여야 하지만 그것도 주체적 립장(입장)에서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나라 사회주의교육의 본성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20]

교육발전의 세계적 추세를 연구하여 북한 교육에 적용해야 하지만 북한식 사회주의교육의 성격에 맞는 범위 내에서 주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의 이와 같은 지시는 2009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에 하달할 때 아래와 같은 구호로 호소되었다.

>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골간이 되라!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 보게 하라! 2009.12.17. 김정일[21]

세계적 추세를 잘 알아야 한다는 지시는 “눈은 세계를 보라!”로, 주체

---

20) 김정일,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08.5.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9), 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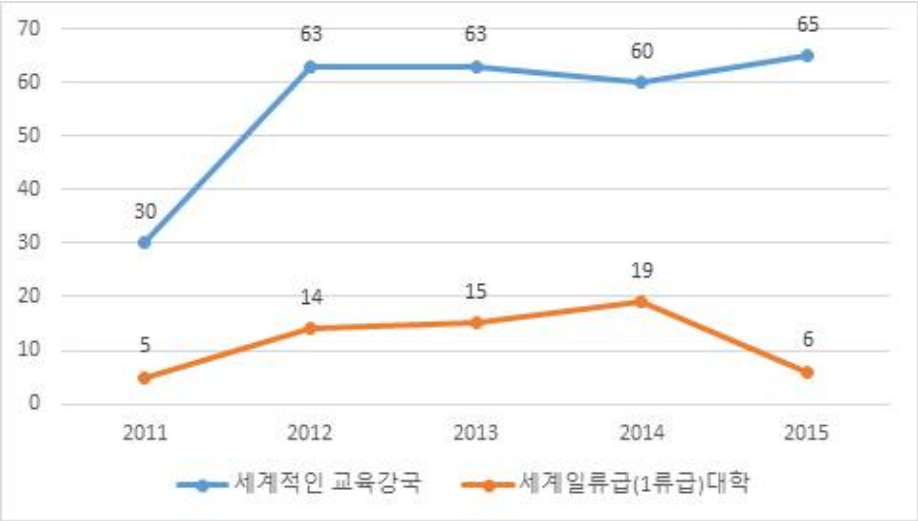
21) 김정일이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에 하사한 친필 현판 내용

적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시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로 상징화되었다. 그 목적은 세계가 북한을 “우러러 보게 하라”는 것이다. 북한에서 ‘영도예술’의 중요한 부분인 구호는 통치 이념과 비전을 간결한 형태로 보여준다(김병로, 2016).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라는 구호는 2010년 4월 12일 김정일의 김일성종합대학 현지지도 이후 2010-2019년 동안 「교육신문」의 관련 기사에서 43회 인용되면서 세계적 추세에 따른 북한 변화의 상징적인 구호가 되었다. 2011년에는 신년공동사설에서도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넓고 혁신적인 안목을” 가질 것이 요구되었다. 2000년대 후반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재학했던 연구 참여자 K는 해당 구호가 처음 나왔을 때 “되게 멋있었”고 “명언”이었다고 회상했다. 북한이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규정한 이후 외부정보 통제 속에 살아 온 북한 대학생들에게 세계를 바라보고 심지어 세계가 우러러 보게 하라는 구호는 생경하고 환상적으로 들렸을 것이다.

1기는 그 외에도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재대국’이나 ‘세계일류급대학’ 등과 같은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2009년까지는 간헐적으로 “세계 첨단을 돌파”하라거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식으로 등장하던 표현이 2010년 4월 공동구호에서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재대국으로 빛내이자!”라고 강조하면서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재대국’을 세우자는 목표로 구체화되었다. 2010년 「교육신문」의 관련 기사들에서는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재대국’을 김일성, 김정일의 노작들과 연관 짓고 있다. 김일성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와 김정일의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가 교육일군 및 교원들이 북한을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재대국으로 만들어가는 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이라는 것이다.[22] 해방 후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 사회주의 교육제도를 설립한 김일성의 업적과 북한 교육을 ‘세기의 상상봉’에 올려 세운 김정일의 영도에 따라 세계적인 인재들을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계를 따라가는 조선이 아니

22)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우리 조국을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 「교육신문」 2010년 4월 15일, 1면.

라 세계가 따라오는 조선”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포부도 밝히고 있다.[23]



<그림 7> 2011-2015년 「로동신문」 키워드 검색 빈도수

‘세계일류급대학’은 김정일이 2009년 12월 11일 김일성종합대학 수영관을 현지지도하며 당, 교육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김일성종합대학을 주체교육과 과학의 최고전당으로, 세계일류급대학으로 더 훌륭하게 꾸려야 한다」에서 언급하였다. 그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일류급대학으로 만들려면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교육신문」 2010년 1월 7일 기사에서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성자립은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1류급의 대학으로 꾸려주시려 마음”을 쓰는 김정일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어야 한다고 적었다.[24] 1990년대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퍼져나가 전 세계 대학들에 영향을 미친 대학 평가에 북한도 2000년대 후반부터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일류급대학’ 혹은 ‘세계1류급대학’이라는 표현은 이후 2011년에 더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기사 제목뿐만 아니라 본문까지 디지털 검색이 가능한 2011-2015년 「로동신문」 중 ‘세계적인 교육강국’과 ‘세계일류급(1류급)대학’을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그림 7>과 같은 빈도로 등

23)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재대국으로 빛내이라,” 「교육신문」 2010년 5월 20일, 2면.
24) “주체적CNC화실현의 큰 몫을,” 「교육신문」 2010년 1월 7일, 3면.

장한다. ‘세계적인 교육강국’은 2012년부터 더욱 강조되었고, ‘세계일류급 대학’은 2014년에 특히 빈번하게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김정일의 담화문과 2010, 2011년 「교육신문」 기사에 따르면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재대국’과 ‘세계일류급대학’의 기준은 그 나라나 대학에서 키워내는 인재의 질에 달려 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발전 정도를 가늠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재부나 자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재가 어떻게 준비되여 있는가 하는 데” 있고,[25] “세계적으로도 일류급대학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대학의 규모와 범위, 교육설비에 따라서가 아니라 대학에서 키워내는 인재들의 질과 수준에 따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독자들의 인재 양성 동기를 자극하면서 동시에 북한 교육의 재정 부족을 양질의 인력 확보로 보충해보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2010, 2011년의 관련 기사들은 ‘CNC기술’, ‘CNC화’라는 단어도 자주 언급하고 있다. CNC는 컴퓨터수치제어(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에서 2009년부터 강조하기 시작했다. 강호제(2015)는 북한의 CNC 관련 기술의 기원이 1982년 시작되었고, 2009년 1월에 북한 국가과학원 연구진에 의해 높은 수준의 CNC기술을 개발하면서 ‘국방 과학기술의 민수 이전(spin-off)’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CNC화’는 생산설비를 컴퓨터로 정밀 수치제어할 수 있게 바꾼다는 의미로, 북한에서는 ‘최첨단 돌파’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2010년부터는 교육 분야에서도 ‘하루빨리’ ‘주체적 CNC화’를 실현하자고 다그치고 있다. “CNC기술의 패권을 틀어쥔 경험에 토대하여 모든 분야에서 세계가 도달한 과학기술 수준을 최단기간 내에” 뛰어 넘는 것이 조선로동당의 ‘최첨단돌파사상’이라고 역설한다.[26]

요약하면, 1기는 김정일의 지시로 세계적 추세에 대해 연구하고 그것을 따라잡을 것이 강조되기 시작한 시기다. 이때 ‘세계적 추세’는 북한 내 새로운 의제로, 대학 학자들의 연구주제이자 성과 산출의 기준이 되

25)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재대국으로 빛내이라,” 「교육신문」 2010년 5월 20일, 2면;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인재대국으로!” 「교육신문」 2011년 1월 27일, 2면
26) “과학연구사업에서 혁신,” 「교육신문」 2011년 6월 9일, 1면.

었고, 김일성종합대학은 '세계일류급대학'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다.

(2) 2기

2기는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후 애도의 분위기 속에서 맞이한 2012년부터 4차 핵실험 전인 2015년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 후계자 김정은은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기반을 다지면서 군사적 도발과 공포정치를 실시하는 한편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을 천명함으로써 경제발전에도 박차를 가했다. 「교육신문」의 기사들에서도 종종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의 성과를 선전했다. 2012년 12월 발사한 은하 3호(광명성 3호 2호기)에 대해 "주체의 위성을 성공적으로 쏴 올려 백두산대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온 세계에 과시"했다고 평가하고,[27] 2013년 2월 단행한 3차 핵실험에 대해 "세계를 디디고 솟구쳐 오르려는 (……) 력사적 쾌거"라고 소개했다. 핵실험을 성공시킨 과학자들을 '영웅들'이라고 칭하며 교육일군들과 교육자들, 학생들에게 그들처럼 살며 교육혁명을 일으키라고 고무하고 있다.[28]

김정은 집권 직후 교육정책의 초점은 중등일반교육 강화에 있었기 때문에 2012년 「교육신문」의 고등교육 부문 세계적 추세 관련 기사 빈도는 상대적으로 2011년 65건에서 2012년 24건으로 63% 급감했다. 2012년에는 김정일에 대한 추모 기사와 더불어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된 12년제 의무교육 학제 개편에 대한 기사가 많이 실렸다. 제2장 제4절에서 정리한 것처럼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행군기 이후 제1중학교에 집중되었던 지원을 일반 중학교에도 분산시켜 중등교육 전반의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다(김지수, 2013).

고등교육 부문에서 세계적 추세를 따라잡는 것은 김정일의 '유훈'이 되어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일류급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장군님의 유훈"이고,[29] 북한을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재대국으로 만드

27) "1류급대학의 영예를 빛내이며," 「교육신문」 2013년 1월 10일, 3면.
28) "핵뢰성 높이 울린 영웅들의 그 정신으로," 「교육신문」 2013년 3월 7일, 1면.
29) "령도업적단위들의 드높은 열의," 「교육신문」 2012년 3월 1일, 1면.

는 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생전의 념원(염원)”이었다는 것이다.[30] 2012년 4월 6일 김정은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에서도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세계를 볼 데 대한 장군님의 뜻대로” “모든 면에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성 사망 후 3년 3개월 동안(1994-1997) 유훈통치를 실시했던 김정일과 다르게 김정은은 김정일이 숨지고 보름도 되지 않아 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됐으나(문순보, 2015), 여전히 북한에서 앞선 최고지도자의 유훈은 반드시 지켜가야 할 권위를 가지고 있다. 김정일 정권 말기에 강조한 세계적 추세 지향성은 그의 사망 후에도 고등교육 부문 발전의 지표가 되어 2013년부터 다시 관련 기사 빈도는 증가하게 되었다.

2009년 김정일이 세계를 보는 안목에 대해 강조한 지 5년이 지난 2014년이 되어서는 「교육신문」에 구체적인 성과들을 선전하는 기사들이 상당히 등장했다. 그 성과들은 주로 교원, 연구사들의 연구 성과나 학생들의 국제경연대회에서의 선전이다. 교원, 연구사들이 연구 성과를 내는 것은 대학들을 ‘연구형 대학’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고등교육」에서는 연구형 대학을 “연구사업을 기본으로 하며 높은 수준의 과학연구 성과를 이룩하고 고급한 창조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과학연구와 교수를 밀접히 결합한 대학”으로 정의하며, 일류급대학은 연구형 대학의 “한 개 모임”이라고 보고 있다.[31] 「교육신문」의 2014년 2월 20일 기사에서도 연구형 대학의 기준을 “1류급의 교원 력량(역량), 1류급의 연구성과, 1류급의 학과목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2014년 「교육신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교원, 연구사들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1월 2일 기사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세계1류급대학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한다. 원자힘현미경을 연구제작한 사례와 “경사대수에서 행렬의 순서지

30) 리성민, “다른 나라들에서 진행하고있는 기술형인재의 양성방식의 특징,” 「고등교육」 2012년 제6호, 77면.
31) 김두학, “연구형대학,” 「고등교육」 2013년 제3호, 65면.

수최대값문제를 비롯한 여러 건의 세계적인 미해명문제들을 해결"한 사례, "유한체와 인클라인대수의 리론 연구 성과"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32] 이 중 원자힘현미경은 1985년 IBM사의 연구원들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33] 북한의 교원, 연구사들이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개발한 것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2010년부터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일류급대학으로 발전시키려 한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14년부터는 위와 같은 연구 성과들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하였다는 기사들이 실리고 있다. 3월 13일 기사에서는 리과대학에서 "비선형 복잡계에서의 카오스와 프락탈에 대한 새로운 리론들과 효과들을 발견"하였다며 이러한 이론과 효과를 서술한 논문들이 "외국의 권위 있는 학술잡지들과 과학기술단행본들에 10여 건 게재"되었다고 강조한다. 이를 계기로 외국 과학자들이 리과대학과의 학술교류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34] 이후 기사들에서도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사례는 계속 등장한다. 실제로 노경란 외(2016)에 따르면 북한 학자들은 2004년 10편의 논문을 시작으로 두 자릿수 국제학술논문을 발표했고, 꾸준히 10-20편씩 국제학술지에 게재하였다.

학생들의 경우 국제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것이 성과로 선전된다. 북한의 학생들이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2007년부터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35] 그러나 해당 대회는 중등학생들, 특히 제1중학교 학생들이 주로 참가하였고,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인터넷 프로그래밍 경연에 참가한 사례가 많이 보도되었다. 2013년 10월 31일 기사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이 7월에는 러시아에서 주최하는 '코드포씨드' 경연에서, 8, 9월에는 인도에서 주최하는 '코드쉐프' 경연에서 연이어 우승했다고 선전했다. 이 사례들은 위에서 인용한 2014년 1월 2일 기사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의 성과로 다시 한 번 언급되었고, 같은

32) "세계1류급대학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토대를," 「교육신문」 2014년 1월 2일, 3면.
33) "원자힘현미경," 미생물학백과 (검색일: 2022.2.23.)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211993&cid=61232&categoryId=61232
34) "학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연구성과," 「교육신문」 2014년 3월 13일, 1면.
35) "북한, 올해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불참…10년 만에 처음," 「VOA 뉴스」, 2017.8.2. https://www.voakorea.com/a/3968116.html

날짜에 리과대학 학생들도 2013년 ACM국제대학생프로그램경연 아시아 지역경연에서 우승했다는 기사가 실렸다.[36] 2010년대 중후반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재학했던 연구 참여자 H는 코드쉐프 경연에 학교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참가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2000년대 후반 리과대학을 졸업한 연구 참여자 L은 본인이 직접 한 국제경연대회에 참가했었다고 말했다. 이전연도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금상을 받은 반면, L이 참가했던 해에는 "동상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성과에 만족하지 못했었다는 것이다. 이를 미루어 보아 북한 학생들이 국제경연대회에 참가하는 횟수는 더 많으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 「교육신문」에서 성과를 소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적 추세에 대한 강조는 2014년 9월 5일 개최된 제13차 전국교육일꾼대회에서도 이어졌고, 거기서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 태형철은 김일성종합대학의 국제학술교류, 연구 성과 등을 발표하였다.[37] 이러한 결실들에 자신감을 얻어 2015년 기사에서는 "세계를 따라가는 식이 아니라 세계를 압도하는 수준으로, 우리 식으로 설계하자."라는 한 걸음 더 나아간 표현이 등장하였다.[38] 세계적 추세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앞서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2기는 새로운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을 이행해가며 교육 분야에서 일부 세계적 수준의 성과를 낸 시기이다. 이때 '세계적 추세'를 따라잡는 것은 김정일의 '유훈'이자 '생전의 념원'이 되었으며, 학자들은 "장군님의 뜻대로" 응당한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시작했다.

(3) 3기

3기는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미 간 군사 긴장이 높아지고, 2017년 9월 6차 핵실험

36) "최첨단돌파의 기상 힘있게 떨치리," 「교육신문」 2014년 1월 2일, 3면.
37)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일류급대학으로 건설하여 수령의 대학, 당의 대학으로서의 영예로운 전통을 계속 빛내여나가겠다," 「교육신문」 2014년 9월 11일, 4면.
38) "세계를 딛고 올라설 배짱으로," 「교육신문」 2015년 1월 22일, 3면.

으로 전쟁 위기까지 고조되었던 2016-2017년이다. 「교육신문」에서는 2016년 1월 14일 “첫 수소탄 시험이 가장 완벽하게 성공한 것은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의 위대한 승리”라며 “세계첨단과학기술의 령마루(영마루)”에 올라섰다고 선전했다.[39] 이는 북한이 중시하는 첨단과학기술의 중요한 부분을 군사기술이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핵 개발은 미 제국주의를 위시한 적대세력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라는 것이다.[40]

이 시기에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반영하듯 고등교육의 세계적 추세 관련 기사 빈도도 2015년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기사 빈도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용의 뉘앙스도 바뀌었는데, 2016년 2월 11일에는 “남의 식이 아닌 우리의 식대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라는 구호가 포함된 주체교육 관련 기사가 실렸고,[41] 4월 7일에는 “모든 교원, 연구사들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과학연구사업 성과로 70일 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라는 사설이 실렸다. 4월 7일 사설은 2016년 2월 7일 발사된 광명성 4호의 “성과적 발사”를 선전하며 “그 기세로 올해 과학연구사업을 힘 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고무하고 있다. 여기서 ‘자강력’이라는 용어는 2015년 12월 처음 등장했으며, 북한이 그동안 사용한 ‘자력갱생’과 유사하지만 국제 제재 속에서 활로를 찾으려 제시한 김정은 시대의 용어이다(김창희, 2017). 2016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자강의 길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혁명과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입니다.”라고 말했다.

‘자강력제일주의’는 2015년부터 강조한 ‘국산화’와 연결된다. 2016년 4월 7일 「교육신문」 사설에서는 ‘자강력제일주의’에 대해 “주체적 력량

39) “우리는 세계첨단과학기술의 령마루에 당당히 올라섰다,” 「교육신문」 2016년 1월 14일, 2면.
40)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 「교육신문」 2016년 1월 14일, 2면.
41) “당중앙이 정해준 침로따라 승리의 한길만을 달려온 주체교육(1),” 「교육신문」 2016년 2월 11일, 2면.

에 의거하여 자기 힘을 비상히 강화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이라고 정의하고, "자강력제일주의에서 기본은 국산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고, 이후 북한 경제부문에서는 수입대체전략에 집중했다. 2016년에는 자강력제일주의를 강조하며 그것을 국산화와 연결시켰고, 교육 분야에서도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야" 하며 "수입병에 물젖은 사람들에게 된타격(몹시 호되게 들이대는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42] 원료와 자재를 국산화하는 것이 경공업부문의 과제인데,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연구사들에게 그 연구개발에 힘쓸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자강력제일주의'와 '국산화'는 북한 주체사상의 '경제에서의 자립'의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와의 소통과 그로부터의 고립을 반복해왔던 북한 역사에서 2016-2017년엔 좀 더 고립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

그러나 교육 분야에서 세계적 추세에 대한 강조는 지속되었다. 2016년 5월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7차 당대회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주요 대학들을 "세계적인 일류급대학들과 당당히 겨룰 수 있는 교육과 과학연구의 중심기지, 국제학술교류의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되었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도 외국의 선진과학기술 성과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제때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되었다.[43] 또한 2015년부터 김정은이 매년 2.16과학기술상[44] 수상자들 중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를 선정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2016년 7월 7일 「교육신문」에 실렸다. 이 기사는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 6명 중 3명이 교육자, 연구

42) "모든 교원, 연구사들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과학연구사업성과로 70일 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교육신문」 2016년 4월 7일, 1면.

43)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교육신문」 2016년 5월 12일, 7면.

44) 2.16과학기술상은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에 우수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수여된다. 과학기술 중시노선을 표방한 김정일에 의해 2003년 9월 제정되었다. "북한 최고 권위의 "2.16과학기술상","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2016.11.21. http://www.nktech.net/inform/nkt_briefing/nkt_briefing_v.jsp?record_no=323

사들이라며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 리과대학 실장 최철웅은 복잡계이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연구결과”를 얻어냈다고 한다.[45] 이후 연구 대상 자료인 2019년까지 「교육신문」에서는 매년 국가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들을 소개하면서 국제적 연구 성과를 낸 교육자, 연구사들을 치하하고 있다.

2017년은 북한에서 “과학교육의 해”로 지정하였다. 김정은의 신년사에서는 “과학교육의 해인 올해에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과학교육시설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라며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2017년 1월 5일 「교육신문」 기사에서는 2017년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돌),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탄생 75돐,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85돐,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발표 40돐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의미를 부여했고,[46] 1월 19일 “과학교육의 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과학교육시설과 환경을 새롭게 개선해야 한다는 신년사 내용을 해설했다. 특히 후원단체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사회단체 등에서 과학교육부문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7] 5월 18일 기사에서는 “과학교육의 해에 이룩된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로 김일성종합대학 3호 교사 개교모임 소식을 전했다. 과학교육의 해의 성과로 주로 시설의 개선이나 신축을 선전한 것으로 보아, 북한에서 2017년을 과학교육의 해로 지정한 것은 후원단체들의 지원으로 과학교육 인프라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3기는 북한이 4-6차 핵실험을 자행하면서 강한 국제 제재를 받고, 국내적으로는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를 내걸었던 시기다. 이 시기에는 ‘세계적 추세’를 받아들일 때 ‘수입병’을 지양하고 주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할 것이 강조되었다. 정치적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었음에도 교육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세계적 추세’에 대해 연구하고 적용

45) “2015년 최우수과학자, 기술자가 된 교육자, 연구사들,” 「교육신문」 2016년 7월 7일, 4면.
46) “과학교육의 해를 교육의 질적강화로 빛내이겠다,” 「교육신문」 2017년 1월 5일, 3면.
47) “과학교육의 해,” 「교육신문」 2017년 1월 19일, 1면.

하였다. 3기에는 김일성종합대학뿐만 아니라 북한의 주요 대학들을 세계 일류급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방향으로 담론 적용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4) 4기

4기는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면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한 차례의 남북미정상회동이 있었던 2018-2019년이다. 이 시기에는 과거와 다르게 연구 대상 기사 중 군사 도발을 선전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2019년 사설에서는 2018년을 "사회주의 조국의 영광스러운 70년 력사에 특기할 민족사적 사변들로 가득" 찼으며 "우리 민족사에 일찌기(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대정치축전"을 경축한 한 해라며 상기된 문체로 평가했다. 이를 반영하듯 4기는 「교육신문」에 세계적 추세 관련한 기사가 가장 많이 등장한 시기이다. 핵·경제병진노선으로부터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노선으로 전환할 것을 천명한 2018년 4월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며 2017년에 이어서 과학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48]

또한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에서 "교원진영을 강화"할 것을 언급한 후 1월 16일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였다. 2월 1일 「교육신문」 기사에 따르면 2017년 2월 김정은이 평양교원대학을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의 본보기대학으로 만든 후 전국에 일반화하라고 지시했으며, 그에 따라 평양교원대학 일군들이 "전반적인 교원양성 부문 대학들의 현실태와 수준, 세계적인 교육발전 추세를 전면적으로 심도 있게 료해(이해)분석"하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해왔다고 한다.[49] 교원대학의 발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초중등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고등교육

48)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 사회경제발전을 떠메고나갈 인재들을 질적으로 키워내자," 「교육신문」 2019년 1월 10일, 1면.
49) "세계를 따라앞서 질풍같이 내달리자," 「교육신문」 2018년 2월 1일, 3면.

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도 세계적 추세에 입각하여 발전시키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 교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국제적 연구 성과를 낸 것을 치하하고 학위·학직을 소유할 것이 강조되었다. 2015년부터 선발한 국가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들을 이 시기에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은 "일부 나라들의 독점물"인 기계를 개발했거나[50] "발전된 몇 개 나라에서만" 만드는 설비를 "우리 식으로" 만든 교원이나 연구사들이다.[51] 2019년 기사에 따르면 2018년 국가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로 선발된 교원들은 연구 성과를 "권위 있는 국제학술잡지들"에 발표하고, 국제학술토론회에 참가했다고 한다.[52] 심지어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 3명이 2018년 세계인명사전 'Marquis Who's Who'[53]에 등록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했다고 선전하고,[54] 김일성종합대학의 또 다른 교원, 연구사 3명이 세계지적소유권기구상을 수여받았다고 보도했다.[55] 북한 대학 교원들의 이러한 성과에 대한 신빙성은 미지수이지만, 노경란 외(2016)가 분석한 바와 같이 국제학술논문을 발표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여타 국가 대학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논문 발표실적을 교수업적 평가에 포함할 정도는 아니지만, 실적을 낸 교원, 연구사들을 모범사례로 제시하며 연구 성과를 낼 것을 독려하고 있다.

학위·학직 관련해서는 김정일부터 일찍이 "대학교원들은 누구나 다 전공분야의 학위학직을 가져야" 한다고 지도한 바가 있다. 북한은 1959

50) "2017년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들(1)," 「교육신문」 2018년 3월 15일, 4면.
51) "2017년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들(2)," 「교육신문」 2018년 3월 22일, 4면.
52) "2018년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 「교육신문」 2019년 2월 28일, 4면.
53) '마퀴스 후즈후'는 미국 뉴저지주 소재 민간 출판사이며, 1899년 세계인명사전을 처음 발간하였다. 그러나 국제 학계에서는 이 사전의 인명 등재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등재 비용으로 수백 달러를 요구하고 있어 상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이러한 비판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세계인명사전에 등재되는 것을 국제적 연구 성과가 인정받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 "너도나도 등재…세계권위 인명사전, 구겨진 신뢰?," 「매일경제」, 2018.5.31. https://www.mk.co.kr/news/it/view/2018/05/346886/
54) "김일성종합대학의 3명의 교원, 연구사들 2018년 최우수학자로 세계인명사전에 등록," 「교육신문」 2019년 3월 21일, 1면.
55) "3명의 교원, 연구사가 세계지적소유권기구상을 수여받았다," 「교육신문」 2019년 3월 7일, 4면.

년 고등교육기관을 확장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강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모든 대학 졸업자를 강사로 채용하였고(김경미, 김안나, 2020), 이후에도 대학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18년 「고등교육」의 기사는 많은 나라 대학들에서 박사학위를 교원자격 기준으로 본다며 16개 세계일류급대학의 교원 구성을 분석해보면 박사학위 소지자가 94.5% 이상이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다.[56] 「교육신문」의 기사들은 교원, 연구사들이나 강좌성원들 100%가 학위·학직을 소유한 김책공업대학 자원탐측공학부[57]와 평양건축종합대학 건축설계기초학강좌[58]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4기 들어서 세계적 추세에 맞게 고등교육 교원들의 학위·학직 소유를 더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교원의 역할에 대한 강조는 2019년 9월 제14차 전국교원대회를 개최하면서 심화되었다. 2014년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 이후 5년 만에 개최된 이 대회에서는 김정은의 담화문 “교원들은 당의 교육혁명방침관철에서 직업적 혁명가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가 전달되었다. ‘직업적 혁명가’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교원 혁명화, 노동계급화의 의미로 강조했던 표현인데, 김지수 외(2019)는 제14차 전국교원대회 담화문에서는 다소 다르게 쓰였다고 보았다. 북한의 교육법과 교원법 등에 제시된 것처럼 이제 교원의 사상성보다는 전문성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이 대회에서 고등교육 부문 과제로는 정보화시대 인재수요 계획을 반영한 대학의 학제·학과 정리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대학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박사원(대학원) 교육 이수자 및 해외 유학생과 같은 우수 인력을 교원으로 배치할 것이 강조되었다(조정아, 2019).

흥미로운 것은 “3.8국제부녀절”을 맞이해서 2019년 3월 7일 여성교육자 및 과학자들에 대한 기사가 크게 실렸다는 점이다. UNESCO UIS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의 고등교육 등록률은 26.8%인데, 남성은

56) 계은희, “고등교육부문 교원진영을 강화하기 위한 세계적발전동향,” 「고등교육」 2015년 제5호, 56-57면.
57) “교원, 연구사들 100%가 학위학직을 소유,” 「교육신문」 2018년 8월 9일, 1면.
58) “강좌성원들 100%가 학위학직을 소유,” 「교육신문」 2019년 9월 26일, 1면.

35.2%이나 여성은 18.1%에 불과하여 고등교육 진학률의 성별 격차가 뚜렷하다. 교육자, 과학자 중 여성의 비율은 알 수 없으나, 「교육신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국가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들은 모두 남성이다. 그러나 국제기구에서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목표 중 하나로 성평등을 요구하고 있고, 북한에서 2021년 7월 공개한 자발적 국가 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보고서에서는 여성의 잠재력 발현을 위한 교육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9년 3월 7일 「교육신문」 기사에서는 여성 교육자, 과학자들이 "국제학술토론회에도 여러 번 참가"했고, "세계적인 교육발전 추세에 대한 연구를 깊이 있게 진행하여 수십 건의 초록을 작성"한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여성들의 연구를 독려하면서도 고등교육 부문 성차별을 가리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59]

이처럼 4기는 고등교육의 세계적 추세 관련 기사가 가장 많이 실렸던 시기이자 교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됐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북한이 한국, 미국과 외교적 협상을 시도하면서 '정상국가'로 인정받으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다시 한 번 대외정책의 변화가 세계적 추세 관련 기사 빈도수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등교육 교원들에게는 국제 연구 성과 산출과 학위·학직 소유를 장려했고, 교원대학을 발전시켜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원교육도 세계적 추세에 맞춰 개선하려 하였다.

2. 참고 국가

「고등교육」의 세계 교육발전 추세 관련 기사 152건 중 86건에는 다른 나라에 대한 언급이 등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사에서는 그 나라를 특정하지 않고 '세계 여러 나라들', '어느 한 나라' 혹은 '발전된 국가', '발전도상 나라들' 등으로 모호하게 표현한다. 이는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없는 북한의 실정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 기사에서 참고하

59) "생의 자욱을 깊이 새겨가는 녀성후보원사, 녀성박사들," 「교육신문」 2019년 3월 7일, 4면.

고 있는 다른 나라 사례가 2차 자료를 인용한 것이기 때문일 수 있고, 북한 내부자료인 만큼 의도적으로 사례 국가를 특정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단 10건의 기사만이 구체적인 국호를 언급하는데, 이 나라들의 등장 빈도를 세어보면 <표 7>과 같다.

<표 7> 「고등교육」 세계 교육발전 추세 관련 기사의 등장 국가 빈도

국가	중국	영국	도이췰란드 (독일)	이전 쏘련 (구소련)	로씨야 (러시아)	일본	네데를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뻬루 (페루)	메히꼬 (멕시코)
등장 빈도	4	3	2	2	1	1	1	1	1	1

등장 국가 중 가장 많이 언급된 나라는 중국이다. 2006년에는 대학의 수재교육 사례 중 하나로 중국의 '대학소년반'을 들고 있고,[60] 2009년에는 중국의 대학 수학실험과목 도입에 대해서,[61] 2010년에는 중국의 한 교수가 논문을 발표한 '회색체계리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62] 마지막으로 2012년에는 지식경제시대의 교원재교육에 대한 기사에서 중국의 정규대학 학생 수의 86%가 재교육을 받고 있다고 적고 있다.[63] 북한과 지리적 인접성, 이념적 동질성, 문화적 유사성 때문에 '혈맹관계'에 있는 중국은 고등교육 개혁에 있어서도 북한이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는 국가이다. 개혁개방 이후 1990년대부터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한 중국의 사례는 김정일 시대부터 연구의 대상이었다. 북한 고등교육도서출판사에서 2017년에 출간한 『지식경제시대 고등교육 발전동향』이라는 도서에는 총 278권의 참고문헌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248권(89.2%)이 2000-2011년 출간된 중국 문헌이다(조정아 외, 2020).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나라는 영국으로, EU 국가 중 이탈리아에 이

60) 한은히, "다른 나라 대학들에서 수재교육을 어떻게 하고있는가," 「고등교육」 2006년 제4호, 60면.
61) 박춘석, "수학실험과목의 도입동향," 「고등교육」 2009년 제5호, 64면.
62) 최향숙, "회색체계리론에 대하여," 「고등교육」 2010년 제6호, 58면.
63) 리순애, "지식경제시대와 교원재교육," 「고등교육」 2012년 제5호, 74면.

어 두 번째로 북한과 수교한 국가이다. 2006년 중국이 등장한 것과 같은 대학 수재교육 관련 기사에서 영국이 대학입학 연령 제한을 없앤 사례를 들고 있고, 2007년 기사에서는 원격교육이 영국 런던대학에서 시작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64] 2016년에는 교육생태학을 소개하면서 생태체계라는 개념이 1935년 영국의 식물학자에 의해 제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65] 2000년 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서방국으로는 처음 북한과 수교를 체결한 영국(김계동, 2012)은 EU와 함께 '비판적 관여'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가능한 한 북한이 외부 세계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외교부, 2021). 2002년부터 북한 공무원 및 영어교사 초청 영어연수 사업도 실시하고, 2008-2017년에는 영국인 영어교사를 북한에 파견하는 등 영어교육 분야의 교류를 활발히 진행했다. 북한의 영어 교과서는 영국식 철자표기를 사용한다(김정렬, 황서연, 2018).

구소련과 러시아를 합치면 영국만큼 많이 언급됐는데, 2006년 대학 수재교육 관련 기사에서 중국, 영국과 함께 일본, 러시아도 언급되고 있다. 2009년 중국이 등장한 것과 같은 "수학실험과목의 도입동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구소련의 사례를 들고 있다. 2016년에는 구소련의 한 경제학자가 1924년에 발표한 논문이 이후 주목을 받으면서 교육경제학이 형성되었다고 하면서 '이전 쏘련'을 언급하였다.[66]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던 북러관계는 1990년대 후반 다시 회복되었다. 구소련은 북한의 건국 초기 고등교육체계 설립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고, 러시아는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고등교육 개혁에 지속적으로 참고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두 번 언급된 독일은 북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럽국가라고 할 수 있으며, 독일 통일 이후 북한이 수시로 수교의사를 타진한 결과 우여곡절 끝에 2001년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김계동, 2012). 교육 분야에서도 북한과 독일 대학들은 동독 시절부터 교류해 온 역사가 있으며,

64) 본사기자, "콤퓨터망을 리용한 원격교육," 「고등교육」 2007년 제5호, 62면.
65) 윤승철, "교육생태학의 발생과 연구대상," 「고등교육」 2016년 제6호, 94면.
66) 김명수, "교육경제학의 형성과 발전과정," 「고등교육」 2016년 제6호, 93면.

2018년 김일성종합대학과 베를린자유대는 인문사회학 분야 교류협력 관계를 맺었다.[67] 독일은 2011년 고등직업기술교육 방식에 대한 기사[68]와 2016년 영국이 언급된 것과 같은 교육생태학 관련 기사에서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이외에 일본, 프랑스는 북한과의 미수교국이지만 복잡다단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네덜란드, 페루, 멕시코는 수교국이다.

노경란 외(2016)는 2005-2015년 동안 Web of Science에 색인된 북한 과학자들이 발표한 논문 총 260편에 대해 공저자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논문들 중에서 국제협력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한 228편에 대해 주로 어느 국가와 공동연구를 수행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또한 연구기관별로 봤을 때 김정일 시대인 2005-2011년과 김정은 시대인 2012-2015년으로 나누어 주로 공동연구를 수행한 해외 연구기관을 정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8> 2005-2015년 북한 과학자들의 주요 국가별 공동연구 수행 추이

국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중국	9	7	12	10	9	14	9	25	14	13	38	160
독일	2		5	3	4	13	2	9	6	3	4	51
호주	1	1	1	1	4	1	2	1				12
미국				1			1			1	2	5
오스트리아								2			1	3
말레이시아						1	2					3
네덜란드							1	1		1		3
한국								2			1	3
기타(17국)				1	3	3		5	1	5	4	22
계	12	8	18	16	20	32	17	45	21	23	50	

출처: 노경란 외(2016).

67) “김일성대·베를린자유대, 인문학 교류…서원(書院) 연구부터 시작,” 「데일리한국」, 2018.5.31. http://daily.hankooki.com/lpage/world/201810/dh20181002114235138420.htm

68) 전용철, “세계 여러 나라들의 고등직업기술교육방식,” 「고등교육」 2011년 제3호, 77면.

북한 과학자들이 공동 저자로 참여하여 국제협력 연구를 실시한 국가는 총 25개국인데, 3편 이상 협력한 경우는 8개국이다. 역시 가장 공동연구를 많이 수행한 나라는 중국이며, 다음은 독일이 차지했다. 특히 김정은 집권 후인 2012년과 2015년 북중 간 국제협력 논문이 크게 증가했다. 노경란 외(2016)는 2015년 북한 과학자들이 국제 학술지에 많은 논문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이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 덕분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협력 연구를 수행한 해외 연구기관도 상위 10개 중 8개 기관이 중국의 연구기관인데,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많이 협력한 기관이 중국의 지린대학, 저장대학, 동베이대학, 중국과학원 순이라는 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지린대학, 저장대학 등과 공동연구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 북한의 국가과학원은 중국과학원과, 리과대학은 난징대학과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표 9> 2005-2015년 북한 과학자들의 주요 해외 공동 연구기관 현황

번호	공동연구기관	2005-2011	2012-2015	계
1	지린대학 (중국)	7	13	20
2	우한대학 (중국)	10	6	16
3	저장대학 (중국)	4	11	15
4	동베이대학 (중국)	1	13	14
5	중국과학원 (중국)	5	8	13
6	상하이교통대학 (중국)	12	1	13
7	TECH UNIV BERLIN (독일)	3	8	11
8	베이징과기대학 (중국)	3	7	10
9	베이징사범대학 (중국)	9		9
10	MAX BORN INST NONLINEAR OPT & SHORT PULSE SPECT (독일)	5	4	9

출처: 노경란 외(2016), 중국 대학 명칭은 원음주의에 따라 수정함.

북한이 세계 교육발전 추세를 탐구하고 국제협력 공동연구를 추진하

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참고 국가는 중국이다. 북한과 중국은 건국 이래로 사회주의체제를 견지해오고 있으며 교육 분야 또한 사회주의 교육학을 바탕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1970년대가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학 정립에 중요한 시기였던 것처럼, 중국에서도 문화대혁명을 통해 무산자 교육혁명을 실현하고자 마오쩌둥의 어록을 이용하여 교육이론을 정립했다(최영표, 2019). 이후 중국에서는 개혁개방을 실시하고 제2장 제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1990년대부터 교육 분야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북한에서도 2000년대 이후 세계적 추세에 따라 교육 분야를 개혁해나가면서 그러한 중국 교육의 변화 모델을 참고하고, 중국 대학들과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 또한 북한과 선린우호관계였던 구(舊)동독 시절의 대학들은 과거부터 북한 대학들과 교류가 있었다. 통일 이후 대사급 외교관계가 폐지되고 북한의 핵개발문제로 난항이 있었으나, 2001년 다시 수교하면서 교류를 재개해왔다(김계동, 2012). <표 8>에 따르면 북한이 세계적 추세에 따라 고등교육정책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무렵인 2010년 독일 학자들과의 공동연구를 많이 수행했다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는 빈도가 감소한 추세이다. <표 9>를 보면 북한 과학자들이 주로 협력 연구를 수행한 독일 연구기관들은 과학기술 분야의 기관들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듯 세계적 추세에 따른 북한 고등교육의 변화는 주로 사회주의권이었던 국가들을 참고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제 2 절 교육제도의 제한적 개방성

박재윤 외(2008)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교육 세계화가 국가 주도 혹은 민간의 자유 활동으로 촉진될 때 어떤 경우든 나라의 제도와 법이 교육 세계화 활동의 범위를 규정한다고 보았다. 법 제도 형태로 표현되는 교육제도의 개방성은 교육 부문 인적, 물적 교류의 근거가 된다. 해당 연구에서는 교육제도의 개방을 곧 교육서비스 무역이라고 보고 우리나라가

참여한 GATS 협정과 관련된 법령의 변화와 교육서비스 무역 실태,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진입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GATS는 교육서비스의 국제적 공급 방식을 외국에서의 교육서비스 공급, 외국에서의 교육서비스 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주재 네 가지로 분류한다. 외국에서의 교육서비스 공급은 소비자의 신체적 이동을 요구하지 않는 원격교육, 가상교육기관 등을 이용하는 것이고, 외국에서의 교육서비스 소비는 공급자의 국가로 소비자의 이동을 수반하는 것으로 유학을 의미한다. 상업적 주재는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타국 내에 기관을 설립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것, 자연인의 주재는 서비스 공급을 위해 교수, 교사, 연구원 등이 일정기간 동안 외국에 체류하는 것을 의미한다(OECD, 2002/2004). 교육제도가 개방되어 있다는 것은 네 가지 교육서비스 국제공급 방식 관련 규정을 법 제도에 명시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 WTO의 GATS 체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교육서비스를 무역하는 단계라고 볼 순 없지만, 교육 부문 국제교류를 위해 교육제도를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북한은 WTO, IMF 등을 제외한 다수의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있다. 교육·연구 분야 관련해서는 1974년 UNESCO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하였고, 1975년 국제교육국(IBE)에도 가입하였다(통계청, 2020). 유엔아동기금(UNICEF)은 북한 주재 국제기구 7개 중 하나로, 북한 아동과 여성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실시하면서 보건,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표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즉, 북한에서 교육서비스를 거래하고 있지는 않지만 1970년대부터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양자간, 다자간 교육 교류협력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GATS의 분류에 따르면 북한에서도 외국에서의 교육서비스 공급은 제외하고 외국에서의 교육서비스 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주재에 해당되는 내용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북한 유학생들이 주로 교류대상국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교육서비스를 '소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일한 외국 교육기관의 북한 진입 사례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상업적'으로 주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법령도 교육 교류협력과 유학, 외국학자 초빙 등

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북한의 교육 교류협력을 위한 관련 법령을 검토해보고, 유일한 외국 교육기관의 북한 진입 사례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설립 경위, 운영 경과 등을 톺아보고자 한다.

1. 교육 교류협력 관련 법령

교육 교류협력 관련 북한의 법령을 살펴보기 전에, 북한 법체계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수령 유일체제를 수립한 1960년대부터 북한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갖는 문건은 수령의 교시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북한의 '사회주의 법치'는 봉건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북한을 법치가 아니라 '인치(人治)'의 국가로 볼 수 있다(정태욱, 2006). 그러나 북한도 건국 시 공포했던 1948년 헌법과 1972년 사회주의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1992년, 1998년, 2009년, 2016년 그것을 개정하였다. '법령'은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하는 최고의 법문건으로, 그 입법형식에는 성문법 체계인 '법'과 문건 형식의 '…에 대하여'가 있다. 1972년 헌법 개정 이후에야 성문법 형식을 갖춘 법들이 여러 건 입법되었고, 1992년 개정 헌법 제18조에서 법을 "국가관리의 기본무기"로 명시한 이후 많은 법을 제정하였다. 유욱(2011)은 이것이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이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입법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고 보았다.

북한에서는 2004년 최초로 대중용 법전을 출간하였고, 2012년에 개정된 법들을 반영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을, 2016년에는 '증보판'을 발간하였다. 2004년 법전은 부문별로 차례가 분류되어 있지 않고 가나다순으로 112건의 법을 나열해놓은 반면, 2012년 법전은 187건의 법을 부문별로 정리해 제시하고 있고, 2016년 법전은 2012-2015년 동안 새로 채택되거나 수정·보충된 법 137건을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다. 2012년 법전에 따르면 '교육, 문화, 체육부문'에는 8개의 법령이 존재하는데, 그

중 교육 교류협력 관련 내용은 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포함되어 있다. 2016년 법전에 따르면 2015년 새로 채택된 교원법에도 교원의 해외 파견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먼저 교육법은 1999년 7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7호로 채택되었다고 2004년 법전에 명시되어 있다. 제1장 교육법의 기본, 제2장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 제3장 교육기관과 교육일군, 제4장 교육내용과 방법, 제5장 교육조건보장, 제6장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법 중 제1장 제11조에 교육 교류협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제1장 교육법의 기본
> 제11조 (교육 분야의 교류와 협조)
> 국가는 교육 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69]

1999년 교육법이 채택된 당시는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기 여파가 남아있어 교육 분야 국제지원을 받고 제한적 교류협력을 실시하고 있던 시기로, 법 제정 시에도 관련 규정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2016년 법전에 따르면 1999년 채택된 교육법은 2005년, 2007년, 2013년, 2015년에 수정보충(개정)되었다. 2004년 법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1999년 교육법 조문에는 조항별 제목이 없었고 2012년 법전에 나와 있는 2007년 버전부터는 조항별 제목이 “교육 분야의 교류와 협조”라고 붙어 있으나, 조항 내용은 1999년부터 동일하다. 비록 북한의 법령이 시행령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육 교류협력을 위한 근거가 되는 법이 교육법 제1장 마지막 조항으로 들어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고등교육법은 2011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36호로 채택되었다고 2012년 법전에 명시되어 있다. 고등교육법은 제1장 고등교육법의 기본, 제2장 고등교육의 실시, 제3장 고등교육

6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평양: 법률출판사. 2012, 1043쪽.

기관의 조직, 제4장 고등교육일군과 학생, 제5장 교수교양 및 과학연구사업의 조직, 제6장 고등교육사업의 조건보장, 제7장 고등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교육 교류협력 관련 내용은 제1장 제7조와 제5장 제44조, 제46조에 규정해놓고 있다.

제1장 고등교육법의 기본
제7조 (고등교육 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5장 교수교양 및 과학연구사업의 조직
제44조 (초빙강의)
고등교육기관은 해당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 일군들을 초빙하여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추세와 새로운 과학리론,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를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나라의 유능한 교수, 박사를 초빙하여 강의에 출연시킬 수 있다.
제46조 (류학(유학)생 교류)
고등교육기관은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 맺은 문화교류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다른 나라에 류학생을 파견하거나 다른 나라의 류학생을 받을 수 있다.[70]

고등교육법이 채택된 2011년은 김정일이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구호를 강조한 이후 북한 고등교육의 세계적 추세 지향성이 두드러지고, 교육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시작했던 시기이다. 교육법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법도 제1장의 마지막 조항에서 국제교류협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해외학자 초빙강의와 유학생 교류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2016년 법전에 따르면 2015년 고등교육법 개정 당시 해당 조항들에는 변경사항이 없었다.

제5장 제44조 초빙강의에 대한 부분은 아래에서 살펴 볼 북한 최초의 국제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이 2010년 10월 개교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

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평양: 법률출판사. 2012, 1050-1054쪽.

아 보인다. 2001년 남측과 북측의 합의에 따라 50년간 공동운영하기로 결정된 평양과학기술대학은 남북한 정부로부터 대학교수 인사문제의 자율권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중국 등 6개국에서 온 50명의 교수진이 부임하였다(이은주, 2017). 평양과학기술대학 개교 이전에도 북한의 대학에 해외학자가 초빙되어 강의한 경우가 있을 것이나, 평양과학기술대학처럼 대거 초빙한 사례는 최초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따라 2011년 고등교육법을 채택할 때 관련 조항을 삽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등교육법에서는 교육 교류협력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학자들”의 양성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 제2장 고등교육의 실시
> 제15조 (과학연구원 교육)
> 과학연구원 교육은 세계적 수준의 학자들을 키우는 교육으로서 박사원교육보다 높은 단계의 고등교육이다.
> 과학연구원 교육년한(연한)은 3~5년이다.
>
> 제3장 고등교육기관의 조직
> 제20조 (과학연구원의 조직)
> 세계적 수준의 학자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과 환경이 충분히 마련된 대학에 과학연구원을 조직할 수 있다.
> 과학연구원을 내오거나 없애려 할 경우에는 중앙교육지도기관을 통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71]

여기서는 과학연구원을 박사원보다 상급 단계의 고등교육이며 세계적 수준의 학자들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2011년 무렵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일류급대학으로 발전시키자는 방향이 강조되었던 것을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학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지 않으나, 본 논

7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평양: 법률출판사. 2012, 1050-1051쪽.

문 제4장 제1절의 담론 분석 결과로 미루어보면 국제적인 연구 성과를 산출하고 국제학술교류를 실시하는 학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교원법의 경우 2015년 10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08호로 채택되었고, 제4장 제37조에서 교원의 해외파견에 대해 규정해놓고 있다.

> 제4장 교원의 자질향상
> 제37조 (다른 나라 파견을 통한 자질향상)
>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교원들의 다른 나라 파견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그들이 세계적인 과학 및 교육발전추세를 폭넓게 깊이 있게 연구하여 자질을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아래 제3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2000년대 들어 북한의 교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사례가 대학 교원 중심으로 소수 발생하였다. 2015년 교원법 채택 시 관련 조항을 삽입한 것은 이후 교원들의 해외파견이 지속·확대될 거라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목적을 '세계적인 과학 및 교육발전추세를' 연구하여 자질을 높여나가는 것이라고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직접적으로 교육 부문과 연관되지는 않으나, 연구 분야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한 조항들은 '과학기술, 지적소유권, 체신부문' 법률들에도 포함되어 있다. 2012년 법전에 따르면 해당 부문에는 16개 법률이 존재하는데, 그 중 국제교류협력 관련 조항은 과학기술법, 쏘프트웨어(소프트웨어)산업법, 콤퓨터(컴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콤퓨터망관리법 4개 법률에 포함되어 있다. 2012, 2016년 법전을 참고하여 발췌해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북한 과학기술, 지적소유권, 체신부문 법률 중 국제교류협력 관련 조항

법령	조항
과학기술법	제1장 과학기술법의 기본 제6조 (새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다른 나라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업 배합원칙) 국가는 새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사업과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업을 합리적으로 배합하도록 한다.
	제3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제31조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와 협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야 한다. 필요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여러 가지 형식의 공동연구, 공동기술개발을 조직할 수 있다.
	제4장 과학기술심의와 보급 제37조(대외과학기술정보자료의 심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른 나라에서 과학기술정보자료를 들여온 경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6장 과학기술인재의 관리 제59조 (핵심과학기술인재의 양성)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 과학,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첨단과학기술분야를 주도해나갈 수 있는 핵심과학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며 국내과학기술수상자와 국제과학기술상수상자를 많이 배출하여야 한다.
	제6장 과학기술인재의 관리 제60조 (유능한 과학기술인재의 배치) 해당 기관은 수재양성체계를 거쳤거나 다른 나라에서 과학기술교육을 받은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를 과학기술연구부문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쏘프트웨어 산업법	제1장 쏘프트웨어산업법의 기본 제7조 (대외교류와 협조원칙) 국가는 쏘프트웨어산업 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쏘프트웨어제품의 생산 제16조 (대외주문계약의 승인)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쏘프트웨어제품 생산을 주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문건을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략)
	제4장 쏘프트웨어제품의 류통(유통) 제34조 (쏘프트웨어제품의 수출) 쏘프트웨어제품을 수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쏘프트웨어제품은 수출할 수 없다.
	제4장 쏘프트웨어의 류통 제35조 (쏘프트웨어제품의 수입)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연구, 교육 같은 데 필요한 쏘프트웨어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쏘프트웨어산업부문의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9조 (반출입 검사) 세관과 해당 기관은 반출입하는 쏘프트웨어제품의 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쏘프트웨어제품은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

콤퓨터 쏘프트웨어 보호법	제1장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의 기본 제4조 (외국인의 저작권보호원칙)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이 개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처음으로 등록한 쏘프트웨어 저작권은 이 법에 따라 보호한다.
	제1장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의 기본 제7조 (쏘프트웨어 보호 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쏘프트웨어 보호 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2장 콤퓨터쏘프트웨어의 등록 제17조 (다른 나라 쏘프트웨어의 리용(이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쏘프트웨어를 쏘프트웨어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다른 나라의 쏘프트웨어는 리용할 수 없다.
콤퓨터망 관리법	제1장 콤퓨터망관리법의 기본 제7조 (콤퓨터망관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콤퓨터망관리 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출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20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 2016.

1988년 채택되어 수차례 개정된 과학기술법의 제3장 제31조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을 발전시킬 것을 규정하면서 필요에 따른 외국과의 공동연구 및 공동기술개발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2011년 개정법 제5장 제42조 '세계적인 과학자, 기술자 양성 및 양성생 파견' 조항에서는 과학기술기관에서 "국제학계가 인정하는" 과학자, 기술자를 양성하는 데 외국에 '양성생'[72]을 보낼 수 있으며, 선발은 실력에 따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개정법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있고 제6장 제59조에서 "국제과학기술상수상자"를 많이 배출해야 한다고 구체화하고 있다. 제6장 제60조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과학기술교육을 받은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를 과학기술 연구 부문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과학기술 분야 유학생들의 진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관련법에도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은 1984년 김일성

72) '양성생'은 '양성반이나 양성소에서 공부를 하거나 그를 마친 사람'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연수생이라고 더 흔히 부르는 명칭인 듯하다. 『조선말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1537쪽.

의 유럽순방 이후 관심이 증대되었고, 1988년부터 진행된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의 실행 사업으로 1990년 '조선콤퓨터센터(KCC)'를 설립하여 시작되었다. 1998년에는 김일성종합대학에 컴퓨터과학대학을, 2002년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정보과학기술대학을 설치하여 IT 분야 인재들을 양성하였다(정명수, 2022). 1992년부터 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벤치마킹한 북한은 소프트웨어 초기 제작단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제협력을 상당히 진행해온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기준 평양 중심구역에는 IT 관련 회사 20개가 존재하고, 중국과의 합작회사도 5-6개이다. 해외 소프트웨어 산업 인력은 5,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국내 인력 중에서도 절반인 15,000명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 등과 연계하여 활동 중이라고 한다(곽인옥, 2018). 2010년대에 북한의 국가과학원에서 근무했던 연구 참여자 L도 IT 분야의 연구원들은 해외 파견을 자주 나간다고 증언했다. 중국으로 제일 많이 나가고 인도에도 가는데, 연구라기보다는 외화벌이의 목적으로 현지 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준다고 한다.

이러한 IT 분야 국제교류 관련하여 2004년 제정된 쏘프트웨어산업법에서는 대외교류와 협조, 대외주문계약, 소프트웨어의 수출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003년 채택된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에서도 해외 법인이나 개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수출할 때와 해외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때는 '쏘프트웨어등록기관'에 등록하고, 소프트웨어 대외주문계약을 진행하거나 수입할 때는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IT 분야 국제교류에 대해 북한 당국이 확실하게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채택된 콤퓨터망관리법 제1장 제7조에서도 외국 및 국제기구들과의 교류협력 발전을 지시하고 있어 컴퓨터 네트워크 분야 국제교류협력의 근거가 되고 있다.[73]

73) 북한이 IT 분야를 발전시키고 국제교류협력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의 인터넷 접속은 철저하게 통제된다. 북한 내 주요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소 등은 과학기술전당을 거점으로 '광명'이라고 불리는 인트라넷으로 연결되어 있다(정은미, 2022). 그러나 국가과학원에서 근무했던 연구 참여자 L에 따르면 "2015년쯤부터"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길을 제한적으로 열어두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2. 평양과학기술대학 사례

사회주의 일당 지배체제의 특성상 북한의 490여 개 대학은 모두 국립대학이다. 유일하게 2010년 개교한 평양과학기술대학은 최초의 사립 국제대학, 남북합작 대학으로 북한 고등교육제도의 제한적인 개방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수령의 승인 없는 외부와의 합작이 불가능한 북한의 특성과 사회주의교육을 고수하기 위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교육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면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사례는 더욱 연구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평양과학기술대학에 대한 기존 문헌자료와 연구 참여자 심층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설립 경위 및 목적, 운영 방식 및 교수 임용, 학생 선발 및 유학 등을 정리하고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설립 경위 및 목적

평양과학기술대학은 평양시 락랑구역의 100만㎡ 부지 위에 17개동으로 설립된 과학기술대학이다. 이 대학이 설립되는 데는 재미교포인 초대 총장 김진경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 학자이자 사업가였던 그는 중국이 개혁개방에 박차를 가하던 1980년대 후반부터 옌볜에 기술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1992년 최초의 중외(中外)합작대학인 4년제 옌볜과학기술대학의 문을 열었다. 그 무렵 북한에도 방문하여 김일성을 설득한 결과 김일성이 “외국동포 김진경이 활동하는데 도와주라”는 지시문을 내렸다고 한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1998년에 김진경은 북한에서 한국과 미국 정보부의 스파이로 의심 받아 사형 통보까지 받았으나 미국 정부의 압력과 진정성 있는 유서 작성을 통해 극적으로 풀려났다.[74]

이후 2001년 김진경은 옌볜과학기술대학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을 설득하였고, 북한 당국으로부터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제5장 제1절에서 보다 상세히 서술하였다.

74) “[최보식이 만난 사람] “나는 공산주의자도 자본주의자도 아니다… 오로지 사랑주의자일 뿐”,” 「조선일보」, 2014.7.7.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06/2014070602441.html

설립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남측 통일부에서도 같은 해 협력사업을 승인했다. 학교 건설에는 중국 업체를 활용하여 2002년 6월 12일 착공식을 가졌고, 2009년 9월 16일 준공식 및 총장 임명식이 있었다(허련순, 2012). 대학 건립비용은 총 400억 원이 소요되었는데, 주로 남한, 미국의 기독교 단체와 미국, 유럽 등의 해외교포사회의 지원으로 충당하였다. 이렇게 해서 평양과학기술대학은 2010년 10월 개교하였고, 2011년 9월부터는 제반 전공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설립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 북한의 국제화, 북한 경제의 자립을 도모하고 동북아시아 협력을 위한 국제 학술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교 당시 천안함 사건 등 악화된 남북관계로 인해 남한 교수 및 교직원들의 파견은 불가능해졌지만, 본래 평양과학기술대학 내에서 남북한 교수진이 교류하면서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다. 또한 옌볜과학기술대학이 중국 내에서 국제화의 창구 역할을 했던 것처럼 평양과학기술대학도 국제협력을 위한 내부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적, 기술적 자원은 국제화뿐만 아니라 북한이 자립으로 경제를 복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북한 내에서 예외적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존재는 북한식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이은주, 2017).

(2) 운영 방식 및 교수 임용

2001년 남북한 양측은 평양과학기술대학을 50년 동안 공동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남측은 (사)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의 김진경 총장, 북측은 교육성의 하광일 총장이 초대 공동 총장으로 선출되었다(이은주, 2017). 그리고 지금까지 북측 운영진인 '조방'과 평양과학기술대학 측 교수진인 '외방'이 신입생 선발, 학사 관리, 교수 임용, 강의 운영 등을 분담하여 맡아 운영하고 있다.[75] 2010년대 말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연구 참여자 D는 심층면담에서 조방이 외방에 행정적으로 이런

75) "전유택 평양과학기술대 총장 특별강연 - 평양과학기술대의 교육환경과 북한의 고등교육," 최종현학술원, 2018.2.23. (검색일: 2022.3.21.) https://chey.org/Kor/issues/IssuesContentsView.aspx?seq=502

저런 요구를 하는데, “서로 잘 안 맞을 때도 있고 (……) 또 잘 될 때도 있”다고 증언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은 4개의 전공으로 운영된다. 설립 당시에는 전자컴퓨터공학부(IT분야), 농업생명과학부(BT분야), 국제금융경영학부(MBA)로 시작했고, 2014년에 의학부를 신설하여 그 안에 의학, 치의예학, 보건학, 약학, 간호학 등의 학과를 설치하였다(박찬모, 2019). 전자컴퓨터공학부는 기초 및 적용 가능한 고급 전자컴퓨터과학 분야를 가르치며 농업생명과학부는 생명과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특수한 농업분야에 대한 교육을 지향하고, 국제금융경영학부는 글로벌비즈니스, 재정, 경제학 등을 가르친다.[76] 의학부는 아직 대학원 졸업생만 배출한 상태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의 모든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며, 20여 개국에서 영입된 외국인 교수진이 자원봉사로 가르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 고등교육법 제5장 제44조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 교수도 초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한 정부가 평양과학기술대학 측에 교수 임용 및 해외교수 초빙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개교 당시 남한 및 해외교수 약 100명이 선발되었으나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남측에서는 파견이 보류되었다. 해외교수들의 출신지는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중국,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 언급된다.[77] 연구 참여자 F는 2017년 9월 미국이 북한 여행금지 조치[78]를 취하기 전에는 평양과학기술대학 외국인 교수 중 약 70%가 미국인이었으며 그들 중 재미교포가 대부분이고 백인 미국인에 대해서는 쿼터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여행금지 조치 이후 미국인을 교수로 초빙하기는 어려워져 홍콩,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등에서 더 초빙했다고 한다. 교수들이 자원봉사로 가르치다 보니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1-2학기

76) 사단법인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홈페이지 (검색일: 2022.3.21.) http://www.nafec.or.kr/

77) “와이파이 터지는 北 유일한 학교…교수 전원 무보수,” 「중앙선데이」, 2018.3.1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449226#home

78)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6월 미국인 대학생 Otto Warmbier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숨지자 9월 북한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취했다. “북한: 미국, 북한 여행금지 조치 1년 더 연장,” 「BBC NEWS 코리아」, 2021.9.2. https://www.bbc.com/korean/news-58419742

동안 가르치고 귀국하는데, 연구 참여자 D는 이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과목별 담당 교수가 자주 바뀌다 보니 “교육의 질이 너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해외교수들의 교육 내용은 조방 측에 의해 검열된다. 2011년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Suki Kim은 『평양의 영어 선생님』에서 자신이 가르쳤던 교재가 담당관(북한 직원들)의 허가를 받은 것이었다고 적었다. 교재에서 강의안까지 모든 것들을 사전에 허가받아야 했기 때문에 교수들이 자체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강의 주제는 피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D도 강의안 PPT가 담긴 USB를 담당관에게 전달했으며 강의실에 CCTV는 없지만, 학생들 중 “누가 감시자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2010년대 중순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가르쳤던 연구 참여자 E 또한 교육 내용에 “한국, 미국 관련된 것”이나 “정치적인 것”이 포함되면 안 된다고 진술했다. 한편 연구 참여자 F는 평양과학기술대학이 개교했을 당시에는 검열이 심했으나, 2010년대 말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주목할 점은 교수들의 교육 내용이 검열될 뿐만 아니라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존재 자체가 북한 내에서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자료인 2009-2019년 「교육신문」 기사에는 평양과학기술대학에 대한 언급이 일절 등장하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 연구 참여자 6명 중 2명은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존재가 북한 내에서 “베일”에 쌓여 있다고 말했다. 평양 사람들 중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이다(I). 한국과 미국 기독교 측 후원으로 재미교포가 세운 학교라는 점을 감안할 때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존재를 북한 내부에 알리기엔 당국에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학생 선발 및 유학

평양과학기술대학에는 매년 학부생 100명, 대학원생 60명 정도가 입학한다. 2011년 개학 당시 총 146명이 입학하였는데,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전국의 대학에서 2년 동안 공부한 학생 중 선발되었으

며 모두 남학생이었다. 이후 학생 입학 경로는 더 다양해졌는데, 2015년부터 여학생의 입학을 허가하여 10명이 입학했다(이은주, 2017). 2010년대 말에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가르쳤던 연구 참여자 F는 입학생들이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다른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평양과학기술대학에 와서 같은 전공을 영어로 공부하는 학생들로 2/3 정도 차지하고, 두 번째는 고급중학교 졸업 후 바로 평양과학기술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로 1/3인 30-40명 정도이며, 세 번째는 군대 제대 후 "거의 서른 살에" 입학하는 학생들로 학년마다 3-5명이 있다. 두 번째 부류의 경우 대부분 평양제1중학교에서 온 여학생들이고 영어 실력이 가장 높다. 보통 세 번째 부류의 학생들은 영어 실력이 낮은 편이라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의 공부를 힘들어했다고 한다. (사)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2021년 기준 평양과학기술대학 재학생 수는 <표 11>과 같고, 졸업생 수는 <표 12>와 같다.

<표 11> 평양과학기술대학 재학생 현황(2021년 4월말 기준)

구분	농생명	국제금융	컴퓨터	치과	의학	어학부
학부	44	60	193	-	61	116
대학원	28	7	30	4	12	

출처: 사단법인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홈페이지 (검색일: 2022.5.31.) http://www.nafec.or.kr/

<표 12> 평양과학기술대학 졸업생 현황(2021년 기준)

구분	학부			대학원			
	농생명	국제금융	컴퓨터	농생명	국제금융	컴퓨터	치과/의학
2014	20	27	52	8	5	31	
2015	-	-	-	8	5	9	
2016	20	28	50	0	0	8	
2017	20	27	54	3	5	13	
2018	20	23	57	8	6	11	
2019	20	18	61	7	9	17	5/

2020	20	22	55	12	4	10	-
2021	14	19	51	8	2	6	4/4
계	134	164	380	54	36	105	9/4

출처: 사단법인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홈페이지 (검색일: 2022.5.31.) http://www.nafec.or.kr/

<표 12>를 보면 2015년을 제외하고 첫 입학생이 졸업하던 2014년부터 꾸준히 100명 이상의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총 873명의 졸업생 중 전자컴퓨터공학부 전공자가 4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 참여자 D에 따르면 입학생들이 학교의 추천을 받아 평양과학기술대학에 오기도 하지만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다고 한다.

> 연구자: 그 학생들이 혹시 지원을 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학교에서 선발을 하는 건지 아시나요?
> D: 상담으로 한다 그랬어요. 본인도 지원을 원해야 되고, 학교에서 이런 제안이 왔을 때 내가 받아들여야만 올 수 있는. 내가 아무리 학교 1등을 해도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하면 올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꼭 뭐 ‘간부집안 애들이어야 한다.’ 이건 아니고, 특히 지방대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성적으로 많이 뽑는 거 같고요. 고등학교(고급중학교)에서 바로 오는 거는 그 수능처럼 시험이 있어요, 거기. 시험 봐서 이제 거기서 등급 매겨 가지고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타 대학에서 평양과학기술대학으로 편입하는 경우 대학 성적이 중요하고, 고급중학교에서 바로 입학하는 경우 대입 예비시험 점수가 중요한데, 두 경우 모두 교수나 교원의 추천과 학생의 의지가 고려된다. 연구 참여자 D는 이때 평양 소재 대학 출신 학생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입학할 수 있는 반면 지방 대학 출신 학생들을 선발할 때 성적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증언했다. 연구 참여자 F도 “아마 그 학생의 부모님이 좀 높은 사람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좀 낮은 사람이면 아주 잘하든지 아니면 교수가 추천해야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북한의 대학 입학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처럼 평양과학기술대학 학

생 선발 시에도 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출신 지역, 경제력 등 가정배경이 입학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김유연, 2022).

북한이탈주민 연구 참여자 6명 중 2명은 주변에 유학 나간 학생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평양과학기술대학에 진학한 친구가 있다고 대답했다. 일부 북한 대학생들은 평양과학기술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유학 가는 것과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재학했던 연구 참여자 K는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는 외국인 교수가 가르치고, 모든 것을 영어로 가르친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평양과학기술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사실상 유학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 D는 그 이유로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학생들 유학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유학을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표 13> 평양과학기술대학 중국 단기연수 내용

차시	시기	방문 장소	학술교류
1	2012년 5월	중국농업대학, 사회과학원, 베이징대학, 톈진 난징대학	
2	2013년 9월	단동 농업시험장, 심양농업대학, 요녕성 경제작물연구소 및 농업시험장, 둥베이농업대학, 국제임업대학	
3	2014년 6월	둥베이재경대학, 다롄 경제무역개발단지, 소프트웨어 엑스포, 훈춘경제산업단지 등	옌볜과기대-평양과기대 심포지움
4	2015년 6월	베이징 칭화대학, 이화원, BAIC Motor, Capital BIO, IBM, IKEA	옌볜과기대-평양과기대 심포지움
5	2017년 6월	중국항공항천대, 중국농업과학원, 상하이국제박람회, 상하이푸단대, 다롄이공대, 디즈니랜드 등	
6	2018년 6월	베이징, 상하이, 다롄 등 의학대학 및 병원	

출처: 사단법인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홈페이지 (검색일: 2022.6.2.) http://www.nafec.or.kr/

"여권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닌" 북한에서(D) 대학원 1학년이 단체로 해외 단기연수를 갈 수 있다는 건 학생들에게 굉장한 특권으로

느껴질 것이다. 방문 장소도 초기에는 베이징과 동북3성 지역 위주였다면 2017, 2018년에는 상하이에도 방문하는 등 범위가 더 넓어졌다. 연구참여자 D에 따르면 평양과학기술대학의 학생들과 그들을 통솔하고 통제할 행정 담당자들이 함께 출국했으며,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가르쳤던 외국 교수들이 중국에서 합류했다고 한다. 해외 연수인 만큼 학생들의 행동은 통제를 받았을 것이나, 출국하여 다양한 장소를 방문해보는 것은 그들의 시야를 넓혀주었을 것이다.

북한이 세계적 추세에 관심을 갖고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 2009년에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준공되고 고등교육법이 채택된 2011년부터 수업이 시작되었다는 점은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북한 학생들이 외국인 교수에게 영어로 수업을 들으며 유학과 연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평양과학기술대학은 북한 교육제도의 제한적 개방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제한적' 개방성인 이유는 평양과학기술대학 내 외국인 교수의 교육 내용이 검열되고,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존재 자체가 북한 내에서 은폐되고 있으며, 평양과학기술대학 외에는 아직 북한에서 국제대학이 설립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제 3 절 인적·물적 교류

세계적인 사회관계의 강화로 정의되는 세계화는 인적·물적 교류에 의해 촉진된다.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만나고 다양한 재화를 교환하는 것이 원시적 형식의 교류협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세기 말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세계화가 가속되면서 인적·물적 교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교육의 세계화 또한 1994년 교육이 서비스 무역의 대상으로 인정되어 학습자와 교육자, 그 외 교육 관련자들이 국경 너머로 교류하면서 촉진되었다.

박재윤 외(2008)는 한국의 교육 세계화 현황을 분석하면서 가장 먼저 인적·물적 교류에 대해 정리했다. 인적 교류에 물적 교류가 수반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둘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외국의 선진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학문을 전파하기 위한 인적 교류는 학생 교류와 교육자 교류로 나누어진다. 물적 교류는 인적 교류에 수반된 물적 교류와 교육 원조, 민간 교육 투자로 분류하였다. 이때 인적·물적 교류는 모두 정부 주도 교류와 민간 교류로 나누어지는데,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경우 공식적으로 사교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간 교육 교류는 전무하다. 2009년부터 자비 유학생 제도를 도입했으나, 그 역시 국가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민간 교육 교류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북한 교육 교류협력의 특징과 분석 가능한 자료를 고려하여 인적 교류 중 학생 교류는 유학에 대해 정리하고 교육자 교류는 학술교류 위주로 살펴본 뒤, 물적 교류는 인적 교류 수반 물적 교류와 교육 원조로 범위를 좁혀서 서술하고자 한다.

1. 인적 교류

(1) 학생 교류

모든 국가는 외국의 선진기술 및 문화를 습득하여 자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필요로 하며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해방 후 고급인력 양성기반이 빈약했던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필요한 각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유학생과 기술 연수생들을 대대적으로 파견하였다. 특히 국가건설 과정에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만큼 1946-1972년 동안 파견된 유학생 7,258명 중 70% 정도가 소련에 집중되었고, 나머지도 사회주의권이나 제3세계, 친북 비동맹권에 해당되었다(<표 14>). 6.25전쟁 중에도 파견되었던 유학생들은 귀국 후 북한 대학들의 신설과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이춘근, 2001).

김형수(2017)는 북한의 과학자, 기술자 및 전문가 양성이 크게 3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유학생정책도 그에 맞게 변화해왔다고 보았다. 1단계는 1946년부터 1960년대까지 '교육기관 신설 및 확장, 외교관 양성' 시기로 고등교육 인재들과 외교관 육성을 위하여 유학생을 파견하였다. 2단계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 말까지 ‘경제건설과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 시기로 경제발전을 목표로 세계 각국의 최첨단 과학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유학생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 동구권 국가들이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고 망명하는 유학생들이 발생하자 북한 당국은 모든 유학생들을 강제소환 하였다. 3단계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선진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시기로 소련과 동유럽에 집중되어 있던 유학생 파견을 상당수 중국으로 전환하고 2000년대 이후 파견국을 다변화하여 선진과학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표 14> 북한 해외유학생 파견 통계(1946-1972)

파견국명	유학생 수	주된 전공분야
소련	5,000	각 분야
동독	400	정밀기계, 영화제작
체코	400	기계공업, 자동차공업
폴란드	400	의학, 공학
헝가리	300	의학, 공학
불가리아	300	의학, 공학
루마니아	50	의학, 공학
중국	300	방직공학
아랍공화국	50	
탄자니아	26	
몽고	20	농업, 축산업
쿠바	10	
버마	2	
총계	7,258	

출처: 김형수(2017).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및 남한과의 수교로 1989-1990년 사이 유학생들을 북한 당국이 강제 소환한 후 1990년대에는 경제난이 가중되

면서 유학생 파견이 어려워졌다. 철저하게 국가의 계획에 의한 국비유학생만을 파견하던 북한은 이때부터 국제기구를 통해 유학생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경제개발자본 유입 및 인도적 지원 수혜를 위해 국제기구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 과정 중 연구생과 실습생들[79]을 파견하였다. 1999년부터는 상대국 및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중국, 일본, 동남아, 유럽, 호주 등의 지역에 시장경제, 과학기술, 농업 등의 분야에 유학생들을 파견하고 있다. 2000년에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회복하여 1990년대 초까지 제한하였던 유학생 교류를 재개하였다(김형수, 2017).

상대국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음에도 필요한 분야의 국제적 인재를 양성할 재원이 부족했던 북한은 2009년 들어서 자비유학생 제도를 도입했다. 본래 부모가 외교관이나 해외주재성원 등으로 발령받아 출국할 경우 대학입학 전 연령의 학생으로서 자녀 1명만 동반 출국할 수 있었으나, 2009년 12월부터는 대학생까지 포함하여 자녀 2명을 동반 출국하여 유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당국이 자녀 1명에 한해서만 왕복운행비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1명은 운행비, 학비, 생활비 모두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즉, 부모 중 한 명이 파견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녀 중 자비유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다. 이들도 교육위원회 유학생지도국의 유학생실력시험을 통과하고 북한에서 재학 중이던 학교 및 청년동맹조직 등에서 관련 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북한 당국은 외교관과 유학생들의 탈북 사례가 발생하자 2013년 2월 자비유학 조치를 취소하기도 하였으나, 해외유학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멈출 수 없기에 2014년 1월 재개하였다고 한다(김수연, 2019). 2019년 자유아시아방송 기사에서는 북한 유학생 중 자비유학생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고 한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관련 인맥을 구축하고 있는 북한 간부의 자녀들이 부모나 현지 지인들의 지원으로 유학을 하고 있는 것이다.[80]

---

79) 북한 유학생 중 연구생은 국비로 3년간 해외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밟는 학생이고, 실습생은 국비로 6개월이나 1년, 2년간 해외 대학원이나 연구현장에서 과학 등의 연수받는 연구자나 기술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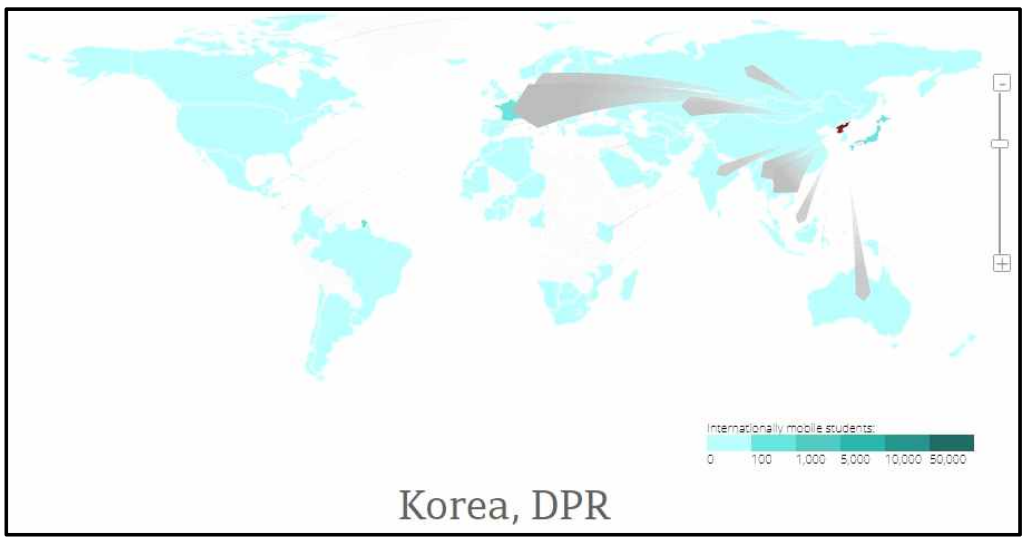
80) “북한학생들의 자비 해외유학,” 「자유아시아방송」, 2019.10.21.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bd81c870c120-c778bbfcd1b5c2e0/newsinsidenk-10092019105526.html

북한은 이처럼 1990-2000년대에 국비유학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상대국의 지원을 통한 유학, 자비유학 등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유학경로를 다양화하고 파견국을 다변화하였다. 이는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각국의 첨단기술 및 학문을 습득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일이 김일성종합대학에 세계를 보는 안목을 가질 것을 지시했던 2009년 12월부터 자비유학생 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각 분야에서 세계적 추세를 따라잡으려면 외국의 선진문화 및 기술에 숙달한 유학생들의 지식이 필수적이다. 국비유학제도를 확대할 만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비유학제도는 적은 비용으로 유학생 수를 늘릴 수 있는 대안이었을 것이다.

북한의 유학생 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는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국제기구의 자료를 통해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고등교육 단계 유학생들의 국제적 흐름을 조사하는 UNESCO의 UIS 통계 홈페이지는 각국의 입국 및 출국 유학생 수를 게시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입국 유학생 수는 나와 있지 않고, 1998-2019년 출국 유학생 수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5>에는 2000-2019년 유학 지역에 따른 북한 유학생 수를 정리해보았다. 북한 유학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에 파견된 유학생 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통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북한 출판물에서 '세계적 추세'를 강조하기 시작한 2008-2010년 출국 유학생 수가 2000명대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부터 중앙 및 동유럽 파견 유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2011년부터는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 해당하는 수치가 누락돼있다. 북한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파견한 지역은 북아메리카 및 서유럽으로, UIS 통계상 2000-2019년 총 유학생 수인 33,812명의 약 34%인 11,356명이 파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별로 나누면 통계에서 제외된 중국에 파견된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자료를 인포그래픽으로 나타낸 웹페이지에서는 북한 유학생의 행선지를 <그림 8>과 같이 보여주고, 유학생 수 순위별로 데이터를 제시한다. <표 16>은 해당 페이지에 나온 2019년과 2020년 상위 20위 유

학대상국의 북한 유학생 수를 정리하였다. 두 해 모두 검색했을 때 상위권에 있는 국가는 프랑스, 태국, 덴마크, 미얀마, 카자흐스탄, 호주 등이다. 미얀마와 카자흐스탄은 과거 사회주의 국가였으며 프랑스는 어학, 건축 등의 분야에서 북한 연수생 초청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태국은 1975년부터 북한과 수교하여 오랜 외교관계를 맺고 있고, 덴마크는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973년 7월 이래로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외교부, 2018). 호주는 북한이 탈냉전 이후 가장 먼저 관계정상화를 이룬 자본주의 국가이며, 2002년 전후부터 북한에 시장경제 연수, 농업과학자 연수, 통계국 관리 연수 등을 지원했다(외교부, 2009). <표 14>와 비교해보면 북한 유학생들의 행선지가 매우 다양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8> 북한의 출국 유학생 행선지 인포그래픽
출처: UNESCO UIS 홈페이지 (검색일: 2022.6.23.) http://uis.unesco.org/en/uis-student-flow

<표 15> 2000-2019년 유학 지역에 따른 북한 유학생 수

유학 지역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동아시아 및 태평양	125	122	105	107	181	119	133	963	1146	1085	883	-	-	-	-	-	-	-	-	-	4969
서남아시아	73	31	102	22	30	206	169	158	139	123	109	93	159	104	100	105	94	41	35	39	1932
중앙아시아	69	69	13	16	23	55	60	50	14	12	18	32	91	87	75	94	112	61	80	120	1151
북아메리카 및 서유럽	496	404	458	604	843	869	753	611	456	677	710	484	417	579	620	654	498	459	469	295	11356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19	19	19	19	20	21	22	40	24	23	29	27	27	26	33	41	76	159	177	35	856
중앙 및 동유럽	47	48	38	30	23	36	22	32	426	221	206	247	202	226	213	278	302	238	137	107	3079
아랍국가	-	-	-	-	-	-	-	-	-	-	-	-	23	52	51	66	76	136	-	-	40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	-	-	-	-	-	-	4	24	45	65	22	19	22	19	20	22	38	41	341
합계	833	697	739	803	1130	1309	1165	1860	2218	2174	2013	1421	1257	1415	1469	1614	1534	1490	1371	1023	

주) '합계'는 UIS Statistics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Total에 해당함.

출처: UIS Statistics 홈페이지 (검색일: 2022.6.23.) http://data.uis.unesco.org/ 자료 재구성

<표 16> 2019-2020년 상위 20위 유학대상국(중국 제외)의 북한 유학생 수

순위	2019년		2020년	
1	프랑스	120	프랑스	140
2	태국	92	태국	92
3	덴마크	63	덴마크	67
4	미얀마	60	미얀마	60
5	카자흐스탄	54	독일	59
6	호주	41	캐나다	54
7	러시아	35	카자흐스탄	54
8	인도	33	호주	41
9	말레이시아	30	러시아	35
10	독일	28	인도	33
11	케냐	28	아일랜드	32
12	캐나다	27	말레이시아	30
13	스페인	19	이탈리아	29
14	인도네시아	19	케냐	28
15	우크라이나	19	인도네시아	19
16	몽골	15	에콰도르	16
17	요르단	13	몽골	15
18	루마니아	10	요르단	13
19	룩셈부르크	8	폴란드	13
20	폴란드	8	룩셈부르크	10
총계	1,023		1,153	
비율	0.3%		0.3%	

주1) '총계'는 상위 20위권 국가들로 가는 유학생 수뿐만 아니라, 총 유학생 수임.

주2) '비율'은 북한의 전체 대학생 중 유학 가는 학생의 비율임.

출처: UNESCO UIS 홈페이지에서 검색 후 자료 재구성 (검색일: 2022.6.23., 2022.12.20.)
http://uis.unesco.org/en/uis-student-flow

북한의 적대국이자 협상대상국인 미국의 경우 IIE 홈페이지에서 미국에 유학을 오는 학생 수를 출신국별로 공개하고 있다. 북한 유학생 데이터는 1974/75년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2000년대 이후 데이터는 <표 17>과 같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북한 유학생들은 대부분 미국 대학과 북한 대학 간 협정에 의한 유학생이거나, 조총련계 학생인 것으로 추정된다.[81] 1990년대 중반부터 2006/07년까지는 매년 100-200명대의 학생들이 미국에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몇 십 명대로 급감한다. 이는 2006년 북한이 자행한 1차 핵실험의 영향으로 북미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2017/18년부터는 북한 유학생 수가 1-3명으로 사실상 학생교류가 거의 단절되었는데, 2017년 Otto Warmbier 사망사건 이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여행금지령을 내리고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등 북미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됐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2018년에는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변화가 있었으나 유학생 수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표 17> 2000-2020년 미국에 유학한 북한 유학생 수

연도	유학생 수	연도	유학생 수	연도	유학생 수	연도	유학생 수
2000/01	127	2005/06	201	2010/11	16	2015/16	18
2001/02	113	2006/07	266	2011/12	15	2016/17	8
2002/03	213	2007/08	65	2012/13	17	2017/18	3
2003/04	174	2008/09	43	2013/14	19	2018/19	2
2004/05	219	2009/10	57	2014/15	8	2019/20	1

출처: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 홈페이지 (검색일: 2022.6.23.)
https://opendoorsdata.org/data/international-students/all-places-of-origin/

북한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파견하는 국가는 중국이나, 중국이 입국 유학생의 출신국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는 UNESCO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1950년에 북중 간 5명씩의 학생을 파견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된 유학생 교류는 1950년대 말 격년제

81) “북한 국적 미국 유학생 17명...13% 증가,” 「VOA」, 2013.11.13.
https://www.voakorea.com/a/1788822.html

로 수십 명씩 파견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1959년 2월 21일 체결한 문화협정으로 더 발전하였다. 1966년에는 문화대혁명으로 중국의 대학들이 휴교 상태가 되면서 교류가 중단되었다가 1972년 북한의 요청으로 유학생 파견이 재개되었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한두 차례의 굴곡이 있었음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북중 간 유학생 교류는 북한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파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서 점점 더 확대되어 왔다(이춘근, 2001). 북한 교육성과 중국 교육부는 2002년 11월 “2002-2010년 교육교류와 협조에 관한 합의서”에 조인하였고,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 등 7개 대학과 중국의 베이징대학 등 12개 대학이 합의서를 채택하여 교류관계를 수립하였다. 2007년 기준 중국에서 공부하는 북한 유학생 연인원은 3,500명에 달했으며 북한의 국가파견유학생은 학부생, 연구생 포함하여 매년 350명이고, 이들은 대부분 이공계열을 전공하고 있다.[82)]

냉전시기 북한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파견했던 러시아의 경우 1990년대 초 소련이 해체되면서 교류가 중단되었으나,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 후에 재개되었다. 2001년 러시아 대학과 북한 대학들 간 교류협정이 다양하게 맺어졌는데, 6월에는 러시아 푸시킨대학과 평양외국어대학이 학생 및 교수들의 러시아 연수에 합의하였고, 8월에는 북한 유학생 80명이 시베리아철도대학에 연수를 가기로 합의하였으며, 9월에는 러시아 원동국립공업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이 학술분야 협력에 합의하였다. 2003년에는 1990년 북한 유학생 철수 13년 만에 러시아민족우호대학에 20여 명의 유학생을 파견하였다(김형수, 2017).

북한의 유학생 선발 및 파견은 철저한 국가의 계획 하에 진행된다. 당 중앙위원회 간부부와 교육과학지도부에서 유학생 파견국, 전공, 학생 수 등을 확정하여 할당된 대학들의 당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지시문을 하달한다. 교육위원회는 파견국 주재 북한대사관의 교육서기관들과 연계하여 대학교 및 전공을 선정하고 유학조건을 협의한다. 유학생 파견인원 수가 할당된 대학에서는 해당 전공학부의 2학년 학생들 중 학업성적, 출신

8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홈페이지 (검색일: 2022.6.28.) http://kp.china-embassy.gov.cn/kor/zcgx/jyjl/200704/t20070401_1350164.htm

성분, 사상동향, 조직생활 등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 대학 당위원회 학생간부부의 담당자는 선발 학생의 친인척 관계와 고등학교 생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다고 한다(김수연, 2019). 이모부가 1980년대 중후반 체코에 유학을 다녀왔다는 연구 참여자 G는 “대단한 가문”이 아니었으며 이모부의 전공과 외국어 실력으로 선발되었다고 말했고, 2010년대 초반 본인이 직접 프랑스에 유학생으로 파견되었던 연구 참여자 K는 집안 배경이 “썩 나쁘지는 않았”으며 김책공업종합대학 재학 시 학급에서 성적이 상위권이었다고 말했다. 1980년대 말 유학생 망명 및 강제소환 사건이 발생한 후엔 학부생 파견을 줄이고 연구생 파견 비율을 높였는데, 연구생 파견의 주요 조건이 기혼자면서 자녀를 둔 남성이어야 했다(김형수, 2017).

유학생으로 선발되면 평양외국어대학의 외국어강습소에서 약 6개월 동안 파견국의 언어를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중앙당과 교육위원회로부터 사전 교육을 받는다. 1956년 불가리아에 파견된 북한 유학생들은 출국 전날 저녁에 모여서 당과 수령이 주는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것과 외국에 있는 동안 외국 처녀들을 사귀지 않고 유학 후 귀국하겠다는 ‘맹서문’을 써야했다고 한다(최권진, 김소영, 2013). 현재도 북한에서는 출국 전 유학생들에게 사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비유학생의 경우 비교적 느슨하게 관리된다.

유학생들은 파견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대학생활의 주의사항을 안내받게 되고 대학기숙사에서 숙식체크를 받으며 생활해야 한다. 단체로 파견된 유학생 중 책임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프랑스로 국비유학을 갔던 연구 참여자 K는 유학 당시 제대군인이자 당원이었던 유학생 책임자에게 전화 혹은 문자메시지로 매일 일과를 보고했다고 한다. 대학기숙사 밖에서 숙식을 하는 연구생이나 실습생들도 보위부담당자의 감시를 받는다. 또한 매주 토요일마다 북한대사관에 모여 생활총화를 진행한다(김형수, 2017). 자비유학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는 유학생들의 생활이 조금 자유로워졌는데, 과거에는 양복만 입어야 했다면 이제 평상복도 허용이 되고, 남한 유학생과의 접촉도 무조건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생활총화 또한 파견국에 북한대사관이 있는 경우 그곳에 모여 진행하지만 없는 경우 대학별로 교수 및 학생들이 모여서 진행한다.[83] 연구 참여자 K는 출국 후 6개월 동안 “항상 조국을 생각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인터넷도 접속하고 외국 드라마도 보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유학생들은 유학 중뿐만 아니라 귀국 후에도 지속적으로 북한 당국의 감시를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이 다소 엇갈렸는데, G는 “다른 나라를 보고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발설을 한다든가 그게 문제지, 그냥 열심히 잘하면 걸림돌은 안 된다.”고 말했고, I는 유학 다녀온 사람에게 여러 제약이 가해지고 감시를 받는다는 건 “옛날의 얘기”라고 말했다. 반면, 2010년대 후반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한 연구 참여자 H는 유학을 다녀오면 오히려 간부로 승진하는 데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도 좋고” “집도 좀 생활이 괜찮은” 학생들은 유학을 피하려 했다고 한다. 2000년대 후반 리과대학을 졸업한 연구 참여자 L은 “나쁜 짓만 안 하면” 감시당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유학을 다녀오면 “무조건” 대학이나 중학교 교원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탑클래스 애들”은 유학을 안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교원이 되면 배급이 안 나오고 사회적 지위도 낮은데, 직업을 바꾸기가 불리하다는 것이다. 즉, 북한 유학생들은 귀국 후 지속적인 감시의 대상이 되고 졸업 후 대부분 대학이나 중학교의 교원으로 배치되며 유학을 다녀온 것이 승진하는 데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2019년 제14차 전국교원대회에서도 김정은이 “나라에서 많은 품을 들여 학생들을 다른 나라에 보내여 공부를 시켰”다며 유학생들을 대학교육 부문에 배치하도록 지시하였다.[84] 유학을 “당의 배려”로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귀국 후 그에 보답하여 열심히 후대를 양성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북한 내에서 문제 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83) “제8회 평화통일 열린강좌(북한의 해외유학) 제4부,” 남북통합문화센터, 2021.12.3. https://www.youtube.com/watch?v=CBvJ_usvJcI

84)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교원들은 당의 교육혁명방침관철에서 직업적혁명가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가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달되였다,” 「교육신문」 2019년 9월 12일, 1면.

흐를수록 감시받는 것은 느슨해지는 듯하다.

역으로 북한에 유학을 가는 입국 유학생에 대한 정보는 정리돼있는 것을 찾기 어렵다. 다만 2016년에 김형직사범대학에서 어학연수를 받은 북한 최초의 미국인 유학생 Travis Jeppesen이나 2018-2019년 간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박사원 유학생으로 현대조선문학을 연구한 호주인 Alek Sigley 등 서양인이 북한 유학 경험을 글로 발표하며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물론 냉전시기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는 유학생 교류가 있었고, 김일성종합대학은 1954년부터 조선어학과 전공에 국한하여 유학생을 받아들였다.[85]

<표 18> 재북 유학생의 구분

기간	구분	내용
장기	대학생	학부생을 지칭
	연구생	대학원생을 지칭, 석사인 학사 연구생(Master's degree)과 박사연구생(Doctoral degree)으로 구분
단기	실습생	학교에 재적하지 않고 조선어를 배우는 자로 중국인 조선 교환 장학생과 중국 외 국가 학생이 있음

출처: 김지예, 조염정, 최유진(2019)의 <표 1>을 재구성

<표 18>과 같이 재북 유학생들은 단기로 공부하는 실습생과 장기로 공부하는 유학생, 즉 대학생과 연구생으로 나뉜다. 2007년 기준 북한에서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은 국가파견유학생 및 자비유학생을 포함하여 매년 70명 정도이며 연인원은 1,500명에 달했다.[86] 2016년 김일성종합대학 홍보자료에 따르면 1954년부터 러시아, 프랑스, 라오스, 베트남, 영국, 중국을 비롯한 31개국에서 온 수천 명의 유학생들과 실습생들이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본과, 박사원교육을 받고 국가학위학직위원회로부터 석사,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고 한다.[87] 2017년에는 김일성종합대학에 중국, 러시

85) "김일성大, 외국인 유학생에 '손짓'… 전공 대폭 개방," 「연합뉴스」, 2017.10.21. https://www.yna.co.kr/view/AKR20171020140600014

8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홈페이지 (검색일: 2022.6.28.) http://kp.china-embassy.gov.cn/kor/zcgx/jyjl/200704/t20070401_1350164.htm

87) 『김일성종합대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2016, 50쪽.

아, 베트남, 몽골, 프랑스, 영국 등 33개국 출신의 유학생 100여 명이 재학했다.[88] Alek에 따르면 그가 유학했던 2018-2019년 당시 북한의 장기 유학생은 200명으로 김일성종합대학과 김형직사범대학에 각각 100명 정도가 있었으며, 95% 이상은 중국인이었다. 그 외엔 베트남에서 온 대여섯 명이 있었고 라오스, 캄보디아, 몽골, 캐나다에서 온 유학생들이 한두 명씩 있었으며, 그들은 모두 해당 국가의 평양 주재 외교관 및 대사관 직원의 자녀들이었다고 Alek은 설명한다(알렉 시글리, 2020).

단기 실습생들은 대부분 중국 정부의 장학금을 받고 김일성종합대학이나 김형직사범대학에서 두 학기 동안 공부하는 단체 중국 유학생들이다. 중국의 국가유학왕(國家留學网) 홈페이지에서는 해마다 중국 대학의 한국어 전공 학부 2-3학년생을 대상으로 약 60명의 조선 교환 장학생을 모집한다(김지예, 조염정, 최유진, 2019). 이들 외에 방학 때 한두 달 정도 단기로 조선어를 배우는 실습생들도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 많고, 프랑스, 독일, 불가리아 등 유럽국가에서 온 학생들도 가끔 있다. Travis도 2016년 한 달 동안 김형직사범대학에서 공부한 미국인이었다. Alek은 탐방기에 재학 당시 러시아의 국립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교, 고등경제대학교, 외교학 학원의 학생들이 여름 단기 조선어 유학을 왔다고 적고 있다(알렉 시글리, 2020). Travis와 함께 공부했던 프랑스 학생은 2014년에도 비공식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10명이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했다고 말했다. 프랑스가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외부에 알리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아, 북한에 유학을 가는 공식 경로와 비공식 경로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트래비스 제퍼슨, 2019).

본래 북한에서 유학생들은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중 한 곳에서 조선어 전공만 공부할 수 있었다. 1970년대에는 원산이나 함흥 등 다른 도시에도 유학생이 있었으나, 언젠가부터 평양의 두 대학에서만 유학생을 유치했다(알렉 시글리, 2020). 그런데 최근 세계적 추세에 따라 북한의 대학들이 변화하면서 유학생 수용 대학과 전공을 확대했다. 김정

88) “김일성大, 외국인 유학생에 '손짓'… 전공 대폭 개방,” 「연합뉴스」, 2017.10.21. https://www.yna.co.kr/view/AKR20171020140600014

은 위원장은 2016년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주년을 맞아 보낸 서한 「주체혁명의 새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임무에 대하여」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일류급대학으로 발전시키라며 정기적인 국제학술교류를 개최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 대학에서 외국인류학생들을 많이 받아 조선어교육뿐 아니라 여러 전공학과들에서 본과생 및 박사원생, 실습생교육을 하도록 하며 박사원생들을 위주로 하여 다른 나라들에 류학을 보내는 사업도 진행하여야 합니다.[89]

이러한 지시에 따라 김일성종합대학은 2018년부터 유학생들의 전공분야를 확대하여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에 나섰다. 2017년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 일본어판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이) 내년도부터 문학대학 이외에 철학과 경제, 법률, 역사 등의 전공과목을 다루는 다른 학부에도 유학생을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90] 또한 2018년부터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뿐만 아니라 평양외국어대학에서도 처음으로 유학생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북한 당국이 2016년 김정은의 서한을 계기로 유학생 유치 범위의 확대를 준비하여 2018년부터 실행해나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8-2019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유학한 Alek이 대학생 단계에서는 조선어만 전공할 수 있지만 연구생 단계에서는 다른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으로 보아 유학 전공 확대는 박사원 단계에 한하여 실행한 것일 수 있다. 그는 현대조선문학을 전공한 본인을 제외하고 법학 석사생, 언어학 석사생, 디지털설계 전공의 박사생, 경제학 박사생 등이 유학 중이었다고 회상했다.

이렇게 2010년대 후반 북한은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유학생들에게 가해지는 통제와 감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북한 당국은 "부르죠아(부르주아) 사상"의 침투를 차단하기 위해서 북한에 방문하는

---

89) "주체혁명의 새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임무에 대하여," 「교육신문」 2016년 10월 6일, 2면.

90) "김일성大, 외국인 유학생에 '손짓'… 전공 대폭 개방," 「연합뉴스」, 2017.10.21. https://www.yna.co.kr/view/AKR20171020140600014

모든 외국인들의 자유로운 행동 및 현지인과의 접촉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유학생들은 북한 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들을 수 없으며, 별도의 분리된 유학생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한다. 예를 들면 Alek과 같이 한 전공에 유학생이 한 명만 있더라도 수업을 혼자서 들어야 하는 것이다. 교과서도 별도의 '류학생용' 교재를 사용한다. 유학생 기숙사에는 '동숙생(同宿生)'이라는 현지인 대학생 몇 명이 한 건물에서 같이 살거나 한 방에서 룸메이트로 지내는데, 그들은 특별한 훈련을 거쳐서 유학생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Alek에 의하면 김일성종합대학과 김형직사범대학의 각 기숙사에 10-15명씩 동숙생이 있었으며 그들은 담당한 유학생들의 일과를 물어보고 대학 보위원에게 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유학생들은 각 대학의 도서관 출입도 금지된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승인 없이 도서관에 들어갔던 외국인은 책 대출을 거절당했다고 한다(알렉 시글리, 2020).

재북 유학생들은 매일 오전 조선어와 역사 등 전공과목을 수강하고 오후에는 박물관이나 전시관 등에 방문하여 '현장학습'을 병행한다. 2010년대 초반 약 한 달 동안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했던 연구 참여자 N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에 2개 수업을 듣고 오후에 과제를 하고, 저녁에는 다른 유학생들이나 북한 동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2010년대 초반까지는 외국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매우 길게 느껴졌다고 한다. 2010년대 중반 실습생으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했던 연구 참여자 M은 인터넷을 쓸 수 있었으나 요금이 상당히 비쌌다고 회상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2010년대 중반 유학생 숙소에 '인터네트(인터넷)실'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유학생 대상 수업은 '류학생용' 교재로 북한 학생들과 분리해서 이루어지지만, 일반 북한 대학의 수업과 마찬가지로 지도자들에 대한 사상교육이 바탕으로 깔려 있다. 2018년 7월 3주간 평양외국어대학교에서 공부한 영국인 Peter Ward는 조선문학 수업이 시작될 때마다 강사들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교시를 소개했다고 한다. 그들은 '절세위인' 김일성과 김정일이 여러 '명작'을 창작했으며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과장했다. 그런 수업을 들으며 Peter는 "신정국가에 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피터 워드, 2018). Alek은 수업에서 글쓰기 과제로 유학생들의 북한 유학생활에 대해 쓰라는 지시를 받은 중국 유학생이 “조선생활이 심심하다”, “평양에 놀 것이 없다”, “류학생 숙소에는 더운 물이 없다” 등 솔직하게 작성하자 교원이 “조선생활이 훌륭하다”,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우리가 원수님 품속에서 행복하다”, “류학생 숙소는 만단의 설비가 갖춰져 있다”라고 고쳤다고 한다(알렉 시글리, 2020).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최고지도자와 북한에 대한 사상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이처럼 해외 유학생뿐만 아니라 재북 유학생도 북한 당국의 감시의 대상이 되고 정치사상교육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생 교류는 북한의 세계적 추세에 맞춘 변화와 대외정책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2000년대 이후 다변화된 북한 유학생들의 행선지는 그만큼 북한이 다양한 국가의 선진 학문을 습득하고자 한다는 뜻이며, 2010년대 후반 유학생을 내보낼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 적극적인 정책을 편 것은 유학생 유치를 중시하는 세계적 추세를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교육자 교류

박재윤 외(2008)는 교육 세계화의 인적 교류 중 교육자 교류의 사례로 국내 대학의 외국인 교원 수,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 사업, 국내 연구 인력의 해외 방문 연구 활성화 사업, 초·중등학교 교원 국외 연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초청사업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북한의 경우 외국인 교원이나 연구자의 유치, 북한 연구자의 해외 방문 연구 등에 대해 정리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편적인 정보들을 모아보고, 대학 교원들의 국제학술교류에 대해 톺아보고자 한다.

먼저 외국인 교원 유치에 대해 살펴보면, 북한 당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영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외국어 원어민 교사를 초빙해 평양외국어대학, 김일성종합대학 등에 배치하였다. 2010년까지 이들은 대학교수와 영어교원들을 지도했고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지 못했다. 캐나다의 NGO인 Global Aid Network는 2004년 7월부터 북한의 과학자 및 기술자를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할 '캐나다-북한 과학·기술 영어교육센터(Canada-Korea Science & Technology English Education Centre, CKSTEEC)'를 설치하고 2005년에 프로그램이 중단될 때까지 4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고 한다. 2008년에는 북한에서 1년 동안 영어수업을 진행할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교습자격증 소지자를 모집했다.[91] 영국 정부 산하 영국문화원은 2000년부터 북한의 영어교원들을 훈련할 강사들을 평양에 파견해왔다. 2015년까지 15년 동안 영국인 강사들이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평양외국어대학 등에서 4,000명의 북한 영어교원들을 가르쳤다.[92] 2011년 또 다른 캐나다의 민간 구호단체 메노나이트는 평양의 한 고등중학교에 파견할 영어교사 2명을 모집했으며, 이것이 외국인 교사가 북한의 고등중학교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첫 사례였다.[93] 중국어 교원들도 초빙하였는데, 북한 교육성의 초청으로 매년 2명의 중국 한어교원이 평양외국어대학에서 1년 동안 가르친다고 한다. 이러한 외국인 교원 유치는 제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등교육법 제5장 제4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외국인 교원을 초빙한 사례는 위에서 살펴본 평양과학기술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김일성종합대학 홍보자료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 대학교수들이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초빙강의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도 프랑스, 몽골, 중국 등 여러 나라의 수십 개 대학에서 조선어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94] 북한 대학의 교원이 해외연수를 가는 사례도 있는데, 주요 사례는 <표 19>와 같다.

---

91) KOTRA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 (검색일: 2022.7.12.)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520&CONTENTS_NO=1&bbsGbn=247&bbsSn=247&pNttSn=43257

92) "영국문화원, 15년 간 북한 영어교사 4천명 교육," 「VOA」, 2016.2.10.
https://www.voakorea.com/a/3183599.html

93) "북한, 고등중학교에 영어 원어민 교사 초청," 「VOA」, 2011.3.22.
https://www.voakorea.com/a/canadian-ngo-nkorea-118448004/1339953.html

94) 『김일성종합대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2016, 51쪽.

<표 19> 북한 대학 교원들의 주요 해외연수 사례

주관	기간	장소	참가자	내용
중국 국가유학기금 위원회	2000-	중국	북한 대학 중국어교원들 매년 5-7명	중국어강습 수강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2004-	독일	북한 정부, 연구소, 학자 등	시장경제 국가 및 기업회계 제도 연수
시라큐스대학	2007-	미국	김책공업대학 소장학자 6명	방문학자로 초청
ELIC	2008	캐나다	북한 대학 영어교원들	영어교육 연수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2011-2017	캐나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외국어대학, 원산경제대학, 평양상업대학, 인민경제대학 교원들 총 40명	시장경제 관련 과목 이수

출처: 신효숙 외(2007) 및 다수의 신문기사, 웹사이트 참고하여 작성

미국의 시라큐스대학은 2001년부터 IT부문을 중심으로 김책공업종합대학과 교류해왔다.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IT 활용 사례를 연구하다 북한에도 관심을 갖게 된 Stuart Thorson 교수가 주한 미대사를 통해 북한의 뉴욕 대표부를 소개받으면서 김책공업종합대학과 연결이 됐고, 2009년까지 12번의 연구 관련 교류가 이루어졌다. 2007년부터는 시라큐스대학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석사이상 소장학자 6명을 방문학자로 초청했고, 5년간 같은 방식으로 초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라큐스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포항공과대학교를 비롯한 남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 대학의 IT 관련 학자들은 공동으로 디지털 박물관을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하였으며,[95] 2006년 개관한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은 시라큐스대학의 협력으로 오픈 소스 프로그래밍을 통해 체계가 구축되었다.[96]

95) “미 시라큐스대학, 김책공대 학자 6명 매년 초청,” 「한겨레」, 2007.3.2.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93806.html

2000년대 중반부터 비정기적으로 북한에 영어교사들을 파견하던 캐나다 민간단체 ELIC(English Language Institute in China)가 2008년 즈음에는 북한의 학자와 전문가들을 캐나다로 초청했다. 이들은 밴쿠버 인근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연수를 받았다.[97] 2000년대 중후반 김철주사범대학에 재학했던 연구 참여자 I는 2008년 당시 교육성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4개 대학[98]에서 외국어교원들을 선발해서 캐나다에 두세 달 연수를 보냈다고 회상했다. 귀국 후 그들은 문법에 치우쳐있던 북한의 영어교육을 회화 위주로 바꾸려 시도하고 기존에 서술형이던 시험방식을 선택형으로 변경하는 등 "안목이 달라졌다"고 한다. 중국어교원들 중에서도 중국 국가유학기금위원회의 초청으로 2000년부터 매년 5-7명이 선발되어 6주간 여름 중국어강습을 받는다.[99]

경제, 경영학 분야에서도 해외연수가 시행되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은 2004년 봄부터 북한과 시장경제 학습 세미나를 진행해왔고, 2005년 북한의 경제 및 재정 전문가들을 독일에 초청해 시장경제체제의 국가재정 운용과 민간부문 회계, 금융의 기능 등에 대해 교육했다.[100] 재단 소속의 Walter Klitz 한국사무소 대표는 1년에 최소 두 차례씩 방북하여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경제 강연을 했다.[101]

2011-2017년 7년 동안은 북한 교수들이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대

---

96) "<인터뷰> 北과 과학교류, 토슨 美시라큐스대 교수," 「연합뉴스」, 2009.6.19. https://www.yna.co.kr/view/AKR20090619130500014

97) "북한, 영어 교육 적극 권장," 「자유아시아방송」, 2008.6.26.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eng_canada-06262008162746.html

98) 연구 참여자 I는 평양에서 외국어 학과가 있는 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외국어대학, 김형직사범대학, 김철주사범대학 4개 대학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2014년 설립된 평양관광대학에서도 외국어를 가르칠 것이나, 2008년 당시에는 4개 대학이 전부였다고 한다.

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홈페이지 (검색일: 2022.6.28.) http://kp.china-embassy.gov.cn/kor/zcgx/jyjl/200704/t20070401_1350164.htm

100) "北 경제·재정전문가 獨서 시장경제 학습," 「DailyNK」, 2005.9.30. https://www.dailynk.com/%E5%8C%97-%EA%B2%BD%EC%A0%9C%EC%9E%AC%EC%A0%95%EC%A0%84%EB%AC%B8%EA%B0%80-%E7%8D%A8%EC%84%9C-%EC%8B%9C%EC%9E%A5%EA%B2%BD%EC%A0%9C-%ED%95%99/

101) "北 노동당 간부들, 자본주의 훤히 꿰뚫어," 「동아일보」, 2011.5.12.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110512/37150947/1

학에서 경제, 경영, 무역 등 시장경제 관련 과목을 이수했다. 2011년 시작된 '캐나다-북한 지식교류협력프로그램(Canda-DPRK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 KPP)'에 따라 매해 6명씩 이 대학에서 6개월 동안 공부하여 7년 동안 총 40명이 연수를 받았다. 이들은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외국어대학, 원산경제대학, 평양상업대학, 인민경제대학 등 6개 대학에서 경제, 경영, 임업 등을 가르치고 있는 현직 교원들이다. 이들이 수강한 과목은 정규강좌로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의 일반 학생들도 함께 강의를 수강하였고, 일부 과목에서는 국제무역, 파이낸스 관련하여 학생들과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 교수들은 수강 과목 관련하여 현장실습에도 참가하고, 캐나다 내 주요 금융, 경영, 법률단체 전문가들을 만났다.[102] 이 프로그램은 북미지역 최초의 경제학·경영학 부문 장기 북한 교수 연수로,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박경애 교수는 이를 통해 "우리가 북한과 관계를 맺고 또 북한이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는 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103]

북한과 외국 학자들 간 국제학술교류는 상호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육자 교류 방식이다. 북한 신문기사에서는 북한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토론회에 대한 소식을 보도하고 있다. 2009-2019년 「로동신문」, 「민주조선」, 「교육신문」에 등장한 관련 기사내용을 정리해보면 <표 20>과 같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2회로 총 13회 개최된 국제학술토론회가 보도되었으며, 2017년 "조선학에 관한 국제학술토론회"와 2018년 "김책공업종합대학 창립 70돐(돌) 국제학술토론회"를 제외한 11회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제1절에서 분석한 것처럼 2009년 김정일이 김일성종합대학에 '세계일류급대학'으로 발전할 것을 지시한 이후 「교육신문」의 세계적 추세 관련

102) KOTRA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 (검색일: 2022.7.12.)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520&CONTENTS_NO=1&bbsGbn=247&bbsSn=247&pNttSn=118445

103) "북한 대학교원 40명 캐나다 대학서 시장경제 연수," 「프리덤뉴스」, 2018.3.30.
http://www.freedo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15

기사가 2011년까지 급증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2011년 「교육신문」 기사 중에는 김일성종합대학이 “국제적인 학술교류의 거점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선전했다.[104] 김일성종합대학의 중요성을 보여주듯 2011년과 2016년 토론회는 각각 창립 65주년, 70주년을 기념하여 열렸다. 2010년대 후반부터는 김일성종합대학뿐만 아니라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주요 대학들도 “세계일류급대학들의 체모”를 갖출 것이 요구되면서[105] 2018년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도 국제학술토론회가 개최된 것으로 보인다.

<표 20> 2009-2019년 북한 신문에 보도된 북한 측 개최 국제학술토론회

개막일자	토론회명	개최장소	주제	분과	외국 참가자 소속기관
2011.9.20.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65돐 기념 국제학술토론회	김일성 종합대학	교육 및 과학발전과 김일성종합대학	경제 및 금융학 역사학 철학 법률 언어학 문학 수학 물리 생명과학	조총련 - 조선대학 중국 - 교육부 - 사회과학원 - 지린대학 - 하얼빈공업대학 - 옌볜대학 - 양저우대학 - 옌타이대학 - 다롄이공대학 - 다롄외국어학원 - 동베이사범대학 - 랴오닝대학 - 중산대학 - 베이징대학 - 푸단대학 - 인민대학 - 칭다오해양대학 - 칭다오과학기술대학 - 후아중농업대학

104) “드세찬 사회주의경쟁열풍,” 「교육신문」 2011년 12월 1일, 1면.

105) 2019년 10월 31일 「교육신문」 기사는 조선로동당에서 “모든 대학들이 세계일류급대학들의 체모를 갖추고 학생들이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으로 세계를 앞서 나갈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로 자라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적었다. “새 교수방법창조열풍으로 세계를 압도해나가자,” 「교육신문」 2019년 10월 31일, 3면.

					러시아 - 극동연방대학 - 모스크바국립대학 몽골 - 몽골국립대학 베트남 - 사회과학 및 인문학종합대학[106] 독일 - 베를린자유대학 - 베를린훔볼트대학
2012.8.21.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	김일성 종합대학	사회적 진보와 번영을 위하여	국제정치학 경제학 지구환경과학 다국어정보처리 의학	조총련 - 조선대학 중국 - 교육부 - 사회과학원 - 랴오닝대학 - 옌볜대학 - 지린대학 - 인민대학 - 칭화대학 러시아 - 모스크바국립대학 독일 - 베를린훔볼트대학 - 뮌스터응용과학대학 폴란드 - 그단스크대학
2012.10.4. (「교육신문」 보도일자)	김일성종합대학과 유라시아-태평양대학련합의 공동학술토론회	김일성 종합대학	-	의학 생명공학	몽골 - 몽골국립대학 오스트리아 - 빈수의학대학[107]
2013.10.24. (「교육신문」 보도일자)	김일성종합대학과 중국 길림대학과의 학술토론회	김일성 종합대학	-	사회과학 지질학	중국 - 지린대학
2013.10.24. (「교육신문」 보도일자)	김일성종합대학과 중국 연변대학과의 학술토론회	김일성 종합대학	사회적 진보와 과학교육의 발전	사회과학 화학 의학 농학	중국 - 옌볜대학

2014.9.23.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	김일성 종합대학	조선의 언어학, 문학, 력사학	언어학 문학 역사학	조총련 - 조선대학 중국 - 칭다오대학 - 상하이외국어대학 - 옌볜교육출판사 러시아 - 조선어 관련 기관 몽골 - 몽골국립대학 - 인민대학 독일 - 베를린자유대학 프랑스 - 파리제7대학
2015.5.28. (「교육신문」 보도일자)	조로친선 학술토론회	김일성 종합대학	김일성종합대학과 로씨야련방 대학들에서의 조선어 및 로씨야어교육	언어학	러시아 - 모스크바국립대학 등 여러 대학
2015.8.25.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2015	김일성 종합대학	과학발전과 문명국 건설	수학 의학 생명과학 농학	중국 - 인민대학 - 옌볜대학 - 난징대학 - 베이징대학 미국 - 뉴욕대학 덴마크 - 광대역알고리즘 센터 벨기에 - 브뤼셀자유대학 영국 - 레스터대학
2016.9.29.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돐 국제학술토론회	김일성 종합대학	과학발전과 사회적 진보	사회정치학 경제 및 금융학 문학 역사학 언어학 수학 물리학 생명 및 환경과학	조총련 - 조선대학 중국 - 국제우호연락회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 연구기관, 단체들”

2017.5.9.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	김일성 종합대학	생태환경 보호와 의학 및 농업의 발전	생태환경보호 생명과학 및 의학 농업	“여러 나라 대학”
2017.11.18.	조선학에 관한 국제학술토론회	인민문화궁전	-	-	“세계 여러 나라의 주체사상신봉자들”
2018.9.26.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2018	김일성 종합대학	과학발전과 인간의 복리 증진	사회과학 의학 및 생명과학 산림과학 및 생태환경보호 농업	중국, 러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 과학연구기관”
2018.9.19.	김책공업종합대학 창립 70돐 국제학술토론회	김책공업 종합대학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	지구과학 및 광업 금속 및 재료 기계 및 에너지과학 정보통신 및 자동조종 측정 및 분석 정보과학	조총련 - 조선대학 중국 - 지질대학 러시아 - 극동연방대학

주) 토론회명과 주제는 북한 신문기사의 표기를 그대로 따르고, 외국 참가자 소속기관은 남한식으로 표기했다.

북한 신문기사들은 국제학술토론회의 주제와 분과, 참가자 등에 대해 보도한다. 일반적으로 도입부에서는 토론회 개막식 전 참가자들이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했다고 시작하며 개막식 참가자 및 개막연설 연설자와 내용, 토론회 분과, 발표된 논문들의 제목과 발표자, 폐막식, 토론회 기간 동안 참가자들에게 진설된 연회나 북한 내 여행 등에 대해 보도하는 정형을 따른다. 폐막식에서는 “김정은원수님께 올리는

106) 호치민시 인문사회과학대학교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07) 기사는 오스트리아라고 명시하지 않고 “윈수의종합대학”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과 유라시아-태평양대학련합의 공동학술토론회 진행,” 「교육신문」 2012년 10월 4일, 4면.

감사편지"가 채택되기도 한다.

국제학술토론회의 주제는 '과학발전'이나 '사회적 진보'와 같이 포괄적인 경우가 많고, 2014년의 언어학, 문학, 역사학, 2017년의 생명과학, 의학, 농학처럼 특정 분야만 다루기도 한다. 개막식 후에는 각 분과별로 토론회가 진행되는데, 2011-2018년 국제학술토론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개최된 분과토론 분야는 의학, 생명과학, 언어학 순이었다. '농학'과 '농업'을 합친다면 언어학만큼 자주 다뤄지기도 했다.

2012년에는 유라시아-태평양대학연합과, 2013년에는 지린대학 및 옌볜대학과 김일성종합대학 양자 간 학술토론회가 개최되었고, 2015년에는 북한과 러시아 간 친선학술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외엔 모두 여러 나라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학자들이 참가한 국제학술토론회였다. 외국 참가자들의 소속기관 42개 중 25개가 중국 기관으로 59.5%를 차지했고, 러시아와 독일의 기관도 3개씩 등장하였다. 가장 여러 차례 등장한 기관은 조총련의 조선대학교로 총 5회의 국제학술토론회에 참가하였고, 다음으로 중국의 옌볜대학이 4회 참가하였다. 2015년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덴마크, 벨기에, 영국 등 서양국가에서 많이 참석하여 주목되는데, 당시 외국 대학 소속으로 평양에서 개최된 다른 국제회의에 참가했던 연구 참여자 C는 해당 회의가 "북한에서 있었던 국제회의로는 최고 큰 규모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개최된 국제학술토론회 보도 기사들에서는 외국 참가자들의 구체적인 소속기관을 명시하지 않았다.

<표 21> 평양과학기술대학 주최 국제학술대회

차시	기간	주제	참가자
1	2011.10.4.-10.8.	세계평화를 위한 과학기술대협력	Peter Agre(노벨화학상), David Alton(영국상원의원),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중국 등 6개국과 북한의 학자 30여 명

2	2013.10.8.-10.12	과학과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북한 주재 스웨덴, 독일, 영국 등 6개국 대사와 Neil Scolding(줄기세포연구), David Hilmers(우주인) 등
3	2015.10.19.-10.24.	산업기술과 국제화교육의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북한 주재 영국, 독일, 스웨덴, 브라질 등 4개국 대사와 미국, 캐나다, 벨기에 등 10여 개국 저명학자와 전문가
4	2019.10.3.-10.4.	Key note speech 및 5개 분과별 논문발표	Novoselov Konstantin(노벨 물리학상), Paserin Vladimir 외 15개국 42명의 발표자, 13개국 51명 참석, 각국 대사관 38명

출처: 사단법인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검색일: 2022.7.19.)
http://www.nafec.or.kr/

국제학술토론회는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도 개최되었다. 제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평양과학기술대학 관련 소식은 북한 공간문헌에 보도되고 있지 않지만, <표 21>과 같이 2011, 2013, 2015, 2019년 총 4회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2017년에는 미국의 북한 여행금지령 때문에 학술대회가 최소 되었다. 주제는 모두 과학기술 관련이었고, '협력'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참가자 중에는 노벨상 수상자와 같이 저명한 학자들도 포함되었다. 박찬모(2019)에 따르면 평양과학기술대학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학생들의 국제화이며, 국제학술대회 개최 시 학생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국제화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2013년 제2차 국제학술대회에서는 2010년 입학한 대학원생 중 20여 명이 석사학위논문을 영어로 발표했다. 2010년대 중순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가르쳤던 연구 참여자 E는 학생들과 함께 국제학술대회 실무를 준비했고, 몇몇 학생들은 연구한 과제를 발표했다고 회상했다.

국제학술교류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지만, 남북한의 학자들 간에도 학술교류가 이어져왔다. 남북한 학자들 간 최초의 교류는 1989년 남한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이 제정된 후 런던에서 열린 '유럽한국학대회'에서였다.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채택된 이후에는 남북 학자들 간 교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는데, 1990년대의 학술교류는 제3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1992년 한중수교가 이루

어지면서 지리적으로 가깝고 북한 학자들이 비교적 쉽게 나올 수 있는 중국에서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모든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가 활발해졌는데, 학술교류 또한 제3국을 통한 교류뿐만 아니라 한반도 내에서 직접 왕래하는 방식이 병행되었다. 2000년대 경제·경영학 분야에서는 국제고려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에서 활발한 교류가 일어났고, 통일안보 분야에서도 2001년 '민족통일대토론회', 2003년 '남북해외학자 통일회의' 등이 개최되었다. 특히 비정치적인 분야인 언어학·한국학·역사학 학술교류에서 <표 22>와 같이 양적, 질적으로 상당히 활발한 교류가 일어났다.

<표 22> 2000년대 남북한 간 주요 언어학·한국학·역사학 학술교류

연도	행사명	분야
2001-	한국사남북협력사업	역사학
2001-2003	일제 조선 강점의 불법성 학술회의	역사학
2001	21세기 조선민족문헌의 발굴과 연구	한국학
2001	남북한 언어동질성회복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언어학
2002	한민족 전통문화의 현대적 조명	한국학
2002	남북언어정보 표준화 회의	언어학
2003	국호 영문표기 문제 학술회의	한국학
2004	일본해 표기의 부당성에 관한 남북토론회	한국학
2004	일제 약탈문화재 반환 남북공동 학술토론회	역사학
2004	고구려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기념 남북공동전시회	역사학
2005	고구려 유물 전시회	역사학
2005	제7차 코리아학 대회	한국학
2006	고구려고분군 남북 공동실태조사	역사학

출처: 김병로(2018).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학술교류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IT분야는 북한이 남북한 교류를 통해 선진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했다. 남한의 한국과총(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은 1990년대부터 '남북민간과학

기술교류추진협의회'를 발족하여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남북 학자 간 교류를 제도화하려고 노력했다. <표 23>에서와 같이 2000년대 남북한 간 과학기술 분야 학술교류는 과총이 주도적으로 주최한 행사가 많았다.

<표 23> 2000년대 남북한 간 주요 과학기술 학술교류

연도	행사명	분야
2001-2004	남북과학기술용어비교조사연구	과총 주관
2001	북한에서의 농약 성능시험	화학연구원 주도
2001	북한의 최근 과학기술동향 조사분석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관
2004	ISMI'04 & ISPITI'04 및 남북과학기술 대표단 회의	과총 주관
2005	ICMIP 다국어정보 처리국제 학술회의	과총 주관 IT 용어 표준화 논의
2005	남북화학기술세미나	과총 주관
2006-2008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교육	북한 학생, 학자 및 전문가들에게 IT 교육
2006	민족과학기술학술대회	포항공대 주관 정보·생명·나노 · 환경공학 관련 토론
2007	민족화학학술토론회	과총 주관 평양에서 실시
2007	민족과학기술토론회	과총 및 북한 민족과학기술협회 주관
2007	클론기술과 그 응용분야 국제학술 토론회	과총 주관
2007	다국어 정보처리 국제학술 대회	과총 주관
2008	자성물리 & IT산업 국제학술회의	과총 주관

출처: 김병로(2018).

그러나 남북한 간 학술교류는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5.24조치가 발효되면서 그 규모와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었다. 또한 2009년 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중앙정부의 하향식 통제와 승인을 통해서만 남북교류가 가능하도록 했고, 남북한 학술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남북교류협력을 금지하였다. 따라서 2008년 이후 남북한 양자 간

에는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사업,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등 소수의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만 학술교류가 지속되었다.

대신 제3국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토론회에 남북한이 참가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교류가 이루어졌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최종현학술원과 중국 연변대학은 두만강포럼(Tumen River Forum)을 매년 개최하여 남북한 학자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다.[108] 국제고려학회도 2009년 제9차 코리아학 국제학술토론회를 주최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평양사회과학원을 초빙하였다. 상기한 평양과학기술대학의 국제학술대회 중 2015년 '산업기술과 국제화교육의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에는 숭실대학교 총장 등 남한 학자 6명도 참석하였다. 2017년 몽골에서 열린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동북아 지역회의 및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미팅'과 중국에서 열린 '화학기술 및 산업협력방안 도출을 위한 국제화학 세미나'에도 남북한 학자들이 참여하여 최악의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 속에서도 교류의 명맥을 유지했다.

<표 24> 남북한 대학 간 주요 학술교류

연도	남한 대학	북한 대학	내용
1998	성균관대학교	고려성균관	총장 방북/최초 자매결연
1998	강원대학교	농업과학원 원산농업대학	총장 방북/학술교류 논의
1998	경남대학교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 방북/협력의향서 교환
1999	고려대학교	김일성종합대학	공동연구방안 논의
2000	이화여자대학교	김일성종합대학	학술토론회 추진
2000	부산대학교	김일성종합대학	남북교류추진단 발족
2001-2002	한양대학교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술교류 협정/공학관련 강의
2006	연세대학교	김일성종합대학	학술교류협정 제안

108) 최종현학술원 홈페이지 (검색일: 2022.7.26.)
https://www.chey.org/Kor/Conferences/ConferencesContentsForumView.aspx?seq=80&subseq=18&board=16&title=%EB%91%90%EB%A7%8C%EA%B0%95%ED%8F%AC%EB%9F%BC

2006	서울대학교	김일성종합대학	사회대 교수 방북 및 교육인프라 지원/교류/연구 모색
2015	서울대학교	(중국)옌볜대학 김일성종합대학	대학주최 학술회의 주제: “고등교육의 발전과 전망”
2016	서울대학교	(중국)옌볜대학 김일성종합대학	대학주최 학술회의 주제: “새 시대 일류급대학과 일류급학과의 건설과 발전”
2018	서울대학교	(중국)옌볜대학 김일성종합대학	대학주최 학술회의 주제: “대학교의 학과 건설”

출처: 김병로(2018).

<표 24>와 같이 남북한 대학 간 교류도 제한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최초의 교류는 1998년 성균관대학교의 정범진 총장이 방북하여 고려성균관과 자매결연을 성사시켜 이루어졌다.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소속 교수는 2002년 8주 동안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120여 명의 학생들에게 IT교육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서울대학교는 2006년 김일성종합대학과 교류한 이후 2015, 2016, 2018년 중국 옌볜대학과 함께 3자 교류를 실행해왔다(김병로, 2018). 2004년 정운찬 당시 서울대 총장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성자립 당시 김일성대 총장을 만나 대학 간 교류를 제안했고, 2005년 6월 서울대 교수진이 방북하여 김일성대에 공동연구, 방문 강의, 교육인프라 지원 등을 제안하면서[109] 2006년 학술교류가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는 중국 옌볜대학이 ‘항일전쟁승리 7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의 학자들을 초청해서 교류가 성사되었다. 2015, 2016, 2018년의 학술회의는 모두 고등교육의 발전이 주제였다. 2015년 학술회의에 참가했던 연구 참여자 B는 당시 김일성종합대학 측에서 “왜 우리가 세계 일류대학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담에 관한 글들”을 발표했다고 회상했다. 연구 참여자 A는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종합대학에 세계일류급대학이 되어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종합대학 학자들이 국제협력과 대외 진출하는 것에 대해 “자꾸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2015년 학술회의는 남한, 북한, 중국의 학자들이 모두 준

109) “성자립 김일성대총장 “서울대와 교류 긍정검토″,” 「연합뉴스」, 2005.8.1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1075437?sid=100

비해 온 논문을 발표하면서 활발히 교류하여 “꽤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공식 행사 후엔 남북한 양자가 비공식적으로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추후의 학술교류 방식을 상의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2018년에는 북한 학자들이 두만강포럼과 별도의 행사를 갖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 학술회의 규모가 축소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측에서는 2015, 2016, 2018년 학술회의에 매번 다른 학자들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연구 참여자 B는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길 바랐기 때문에 아쉬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북한 교육자들과의 교류는 2017년 미국의 북한 여행금지령과 2010년 한국의 5.24조치와 같이 국제 정세와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왔다. 북한 당국에서 교원들의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처럼, 세계적 추세에 따라 고등교육을 변화시키려면 더 많은 국제 교육자 교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물적 교류

(1) 인적 교류 수반 물적 교류

국가 간 인적 교류가 일어남에 따라 그에 수반된 물적 교류도 일어난다. 외국인의 국내 유학과 내국인의 해외 유학을 통하여 유학경비의 유입과 유출이 발생한다. 박재윤 외(2008)는 국제기구의 국가별 1인당 고등교육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유학 수입액과 해외 지급액을 계산하고 연도별 유학 수지를 비교했다. 북한의 경우 정확한 유학생 수를 알기 어렵고, 출국 유학생의 유학비용을 상대국이나 국제기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유학 수지를 계산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다만 박재윤 외(2008)의 방법에 따라 입국 유학 수입액과 해외 유학경비를 추산해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 북한에서 공부하는 장기 유학생은 2018-2019년 200명이었고, 단기 실습생은 매년 중국에서 약 60명, 다른 국가에서 약간 명이 있었다. 북한에서 대학은 공식적으로 무상교육이지만, 유학생들로부

터는 학비와 기숙사비를 받고 있다. 한 중국인 유학생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 유학비용은 학비와 기숙사비 포함 2011년 기준 연간 5,000달러였고, 2016년 기준 연간 7,300달러였다.[110] Alek은 2018년 기준 김일성종합대학 석사과정의 연간 학비가 7,000달러, 한 학기 기숙사비가 1,500달러였다고 전했다.[111] 즉, 학비 및 기숙사비 포함 북한 유학비용은 2011년 5,000달러에서 2016년 7,300달러, 2018년 10,000달러로 점점 증가하였다. 물론 2018년 데이터는 Alek이 연구생이었기 때문에 대학생보다 더 비쌌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8-2019년 북한의 장기 유학 수입액을 추산해보면 200만 달러이다. 단기 실습생의 유학비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으나, 중국에서 모집하는 단기 실습생은 한화 18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김지예, 조염정, 최유진, 2019). 2010년대 중반 실습생으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했던 연구 참여자 M은 중국 정부에서 북한 유학비용을 부담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비용은 알지 못했다.

<표 25> 북한의 주요 유학대상국별 유학경비 규모 추산

유학대상국	유학생 수1)	국가별 1인당 고등교육비($)2)	유학경비 규모($)3)
중국	350*	m	m
프랑스	120	17,420	2,090,400
태국	92	m	m
덴마크	63	19,684	1,240,092
미얀마	60	m	m
카자흐스탄	54	m	m
호주	41	20,647	846,527

110) “北최고명문 김일성종합대 유학비용 연간 800만원,” 「연합뉴스」, 2016.10.1. https://www.yna.co.kr/view/AKR20161001025600014

111) “[뉴스초점] 북한 최고의 김일성대학, 유학비 얼마나 드나?” 「자유아시아방송」, 2018.12.18. https://www.rfa.org/korean/in_focus/spotlightnews/newsfocus-12182018140916.html

러시아	35	9,024	315,840
인도	33	m	m
말레이시아	30	m	m
독일	28	19,324	541,072
케냐	28	m	m
캐나다	27	24,496	661,392
스페인	19	13,800	262,200
인도네시아	19	m	m
우크라이나	19	m	m
몽골	15	m	m
요르단	13	m	m
루마니아	10	m	m
룩셈부르크	8	47,694	381,552
폴란드	8	11,192	89,536
총 계			6,428,611

주1) UNESCO UIS 홈페이지(2019년 추정) (검색일: 2022.6.23.)
http://uis.unesco.org/en/uis-student-flow,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홈페이지, 2007년 기준)
주2) OECD Total expenditure on educational institutions per full-time equivalent student (2018년), m(missing data) (검색일: 2022.7.26.) https://stats.oecd.org/
주3) 국가별 1인당 고등교육비×유학생 수

북한 유학생의 해외 유학경비를 추산해보면 <표 25>와 같다. <표 16>에 제시한 2022년에 검색된 상위 20위 유학대상국의 북한 유학생 수와 중국 파견 북한 유학생 수에 2018년 기준 국가별 1인당 고등교육비를 곱하였다.[112] 유학대상국 중 OECD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결측치인 국가가 절반 이상이고, 기숙사비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교육비만

112) 2022년 UNESCO UIS 홈페이지에서 검색된 상위 20위 유학대상국의 북한 유학생 수는 2019년 기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OECD 홈페이지에서 검색된 국가별 1인당 고등교육비는 2018년이 가장 최근 데이터이다.

분석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파악한 유학경비 규모는 642만 달러였다. 그러나 북한 유학생의 경비는 상대국이나 국제기구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수치가 북한 당국의 고등교육재원에서 유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북한 유학생 수용을 대상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고 본다면 북한 당국이나 학생이 부담하지 않은 유학경비는 교육 원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2) 교육 원조

물적 교류 중 많은 비중은 국가 간 주고받는 교육 원조가 차지한다. 1995년 8월 대홍수 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원조를 요청한 북한은 그 후 주로 원조를 받는 위치에 머물러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인도적 차원의 식량 및 보건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교육 관련 지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윤종혁 외, 2006).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대부분 초중등교육 단계에 집중되어 있으나, 북한교육의 물적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걸 고려하여 여기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북한 당국은 교육 분야의 국제 원조를 유도하기 위해 2005년 '조선교육후원기금'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 비정부단체는 북한 내 기관, 기업소, 단체, 주민뿐만 아니라 해외동포와 국제 자선단체 및 인사를 대상으로 교육 후원사업을 강화하고자 설립되었다.

2000년대 이후 대북지원의 내용과 규모는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의 Financial Tracking Service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공적개발원조(ODA)와 민간증여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UNOCHA에 보고된 사항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제외된 내용도 상당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부터 최근까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자료에서 교육 및 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복합 분야의 내용과 규모를 정리해보면 <표 26>과 같다. 2009년 이후 최근 2022년까지는 교육 분야 지원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표 26> UNOCHA에 보고된 2000년대 대북 교육 원조

연도	지원기관	수여기관	분야	내용	규모($)
2000	호주정부	국제적십자사	복합	보건 교육 및 의약품을 위한 현금	324,675
2001	스웨덴정부	UNICEF	교육	교육	100,000
	뉴질랜드정부	UNICEF	교육	교육	82,840
	Korean Welfare Foundation	북한정부	복합	학용품 4박스, 초콜릿과 의약품 3박스	1,941,359
2002	노르웨이정부	UNICEF	교육	교육	223,720
	스웨덴정부	UNICEF	교육	기초교육 우선순위	104,574
2003	European Commission (EC)	Deutsche Welthungerhilfe	교육	평안북도 2개 군 내 약 38개 학교와 다수 유치원의 단열 개선	448,852
	이탈리아정부	북한정부	복합	강원도 교육, 보건영양 분야 인도적 활동	415,290
	Korean Welfare Foundation	Korean Welfare Foundation	복합	300,500 그루의 나무들, 5,000 세트의 학교 물건들, 옷들	345,303
	핀란드정부	UNICEF	교육	기초교육 우선순위	112,935
	덴마크정부	UNICEF	교육	기초교육 우선순위	157,497
	노르웨이정부	UNICEF	교육	교육 프로그램	217,955
2004	핀란드정부	UNICEF	교육	기초교육	262,134
	UNICEF	UNICEF	복합	교육을 위한 50,000달러, 수도와 위생을 위한 100,000달러	150,000
	스웨덴정부	UNICEF	교육	기초교육	374,350
	뉴질랜드정부	UNICEF	교육	기초교육 - 학생 유지 및 학습 성과 향상	188,916
	EC의 인도적 지원 및 시민 보호부	UNICEF	교육	용천군의 제2유치원, 어린이집, 제1소학교 재건축	258,725
	이탈리아정부	UNICEF	교육	용천군의 제2유치원, 어린이집, 제1소학교 재건축	365,409

	남아프리카정부	UNICEF	교육	기초교육	79,428
	UNICEF 한국위원회	UNICEF	교육	용천군의 제2유치원, 어린이집, 제1소학교 재건축	200,000
2005	스웨덴정부	Cooperazione E Sviluppo - CESVI	복합	보건, 교육, 수도 및 위생, 농업, 조정 및 NGO 프레임	281,440
	스웨덴정부	Concern Worldwide	복합	보건, 교육, 수도 및 위생, 농업, 조정 및 NGO 프레임	281,440
	스웨덴정부	Triangle	복합	보건, 교육, 수도 및 위생, 농업, 조정 및 NGO 프레임	281,440
	스웨덴정부	FAO	복합	보건, 교육, 수도 및 위생, 농업, 조정 및 NGO 프레임	1,098,535
	스웨덴정부	UNICEF	복합	보건, 교육, 수도 및 위생, 농업, 조정 및 NGO 프레임	707,200
2007	한국정부	UNICEF	복합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250,000달러 외	3,150,000
2008	노르웨이정부	Universitetet i Oslo	교육	교환학생, 보건정책	16,610

출처: UNOCHA FTS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검색일: 2022.8.1.)
https://fts.unocha.org/countries/118/flows/2000

UNOCHA에 보고된 대북 교육 원조는 대부분 ODA로, 북유럽과 오세아니아 국가들이 UNICEF나 국제적십자사 등을 통해 북한에 지원한 비중이 크다. 이탈리아정부도 2003, 2004년, 남아프리카정부도 2004년, 그리고 한국정부도 2007년 지원한 바 있다. 정부 외 기관으로는 Korean Welfare Foundation이 2001, 2003년, EC가 2003, 2004년 지원하였다. 다른 개발도상국 지원과 마찬가지로 대북 교육지원도 2000년부터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두 번째 목표 '보편적 초등교육 실현'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2015년부터는 SDGs의 네 번째 목표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위해 실행되고 있다.

가장 여러 차례 교육 원조를 받은 기관은 UNICEF이다. UNICEF는 다른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1995년 북한의 영유아를 위한 식량 및 보건

사업을 시작했으며, 1997년부터는 200여 개의 분교와 14개의 어린이 센터를 지원하는 등 교육사업도 진행하였다. 2001년에는 유니세프-북한 3년 정기 협력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취약한 지역에 교과서 및 학용품 등을 지원하였다. 2000년대 UNICEF의 북한 교육지원은 유아교육 및 보육, 학교 용수 및 위생 개선, 소학교 교과서 및 학용품 지원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윤종혁 외, 2006), 현재는 보건, 영양, 용수 및 위생 개선사업을 통해 북한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과 권리를 증진시키고 있다.[113] 2004년에는 용천군의 제2유치원, 어린이집, 제1소학교 재건축을 진행했는데, 4월에 있었던 용천역 폭발사고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3년 EC는 Deutsche Welthungerhilfe(German Agro Action)를 통해서, 2005년 스웨덴정부는 여러 NGO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등 국제 NGO들도 북한 교육 원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Deutsche Welthungerhilfe는 1962년 설립된 독일의 NGO로, 1997년부터 북한에 대한 긴급구호를 시작했고 2000년부터 평안북도로 지원 지역을 확대하면서 소학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 지원 및 온실 건설, 위생 프로그램 등을 실시했다. 1985년 설립된 CESVI는 이탈리아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997년 평양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긴급구호 및 개발지원 사업 등을 실행했다. 교육 관련 사업으로는 2003년 강원도 원산시, 문천시 소재 10개 보육원 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였다. Concern Worldwide는 1968년 아일랜드에서 설립되었으며, 1997년 대북지원을 시작했다. 2004년 덕천군과 회창군의 250개 학교 및 병원 시설에 화장실을 설치했다. 1994년 창립된 Triangle Génération Humanitaire는 프랑스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2000년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간척지 및 종묘장 복구, 독거노인 지원, 병원 단열 사업 등을 시행했다.[114]

UNOCHA 자료에는 빠져 있으나, UNESCO의 북한 교육지원 활동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북한이 1974년 UNESCO에 가입한 이후 교

113) UNICEF 홈페이지 (검색일: 2022.8.2.) https://www.unicef.org/dprk/what-we-do
114)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북한채널 홈페이지 (검색일: 2022.8.2.) http://nkproject.org/linker/list.php?vi_left=news&link_id=worldngo

육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협력을 진행했는데, 인도적 지원 사업이 아닌 회원국의 요청에 따른 참여사업(participation program)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 UNESCO와 북한의 교류협력은 오랫동안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다가 1990년대 북한이 공식·비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며 확대되었으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UNESCO 한국위원회도 북한 교육지원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UNESCO의 북한 지원사업은 크게 북한 교육의 질적 개선, 새로운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보급, 교육 정보 시스템 구축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2004년 북한 교육성과 함께 모두를 위한 교육(EFA) 계획을 수립하였고, 평양에서 학습평가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2003년 북한의 컴퓨터 교육 관련 담당자들에게 중국 연수 기회를 제공했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2004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05년 말 지방 수준 회의를 개최하였다(윤종혁 외, 2006).

중국 측의 북한 교육지원 또한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 북중수교 후 양국의 교육부장들이 여러 차례 대표단을 인솔하고 교류하였으며, 2005년 10월 중국의 교육부장이 북한 대표단을 만나 컴퓨터를 무상으로 기증하였다고 한다.[115]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에는 교육 부문에서 한국정부의 지원과 노르웨이정부의 교환학생 관련 사업만 UNOCHA에 보고되었다. 그러나 2005년 설립된 조선교육후원기금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원사항을 업로드하고 있으며, 매년 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2013년에는 독일, 영국, 캐나다 등 각국의 10여 개 단체에서 조선교육후원기금에 각종 자재와 지원금을 후원했다. '스위스 조선-베트남 소규모 대상 재단'이 3개 고급중학교 건설에 45,000달러 규모의 건설 자재를 기증했고, 남아프리카 교육협조대표단이 축구공과 학용품을 전달했으며, 독일 단체 EWDE가 평안남도 청산농업전문학교의 농업실습조건 개선을 위해 49,000유로를 지원했다고 한다.[116] 2020년에는 같은 홈페이지에 국제사회

1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홈페이지 (검색일: 2022.8.2.) http://kp.china-embassy.gov.cn/kor/zcgx/jyjl/200704/t20070401_1350164.htm

116) "北교육기금에 국제사회 후원 이어져," 「연합뉴스」, 2013.6.26. https://www.yna.co.kr/view/AKR20130626223500014

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19 방역물품을 후원받았다고 공개했다. 스웨덴 코리아마음재단이 의료용 비접촉식 체온계 800개를 기증했고, 재미동포들이 소독약을 후원했다.[117] 2021년에는 프랑스의 NGO인 SPF(Secours Populaire Francais)의 후원으로 평원군 운봉고급중학교를 건설하여 개교했다고 한다.[118] 북한이 핵실험을 자행하면서부터 교육 분야의 정부 ODA는 감소하고 민간단체 중심으로 교육지원이 실행되어 온 양상이다.

UNOCHA에 한국정부와 Korean Welfare Foundation의 지원활동이 보고되어 있지만, 한국의 대북 교육지원은 훨씬 더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수행해왔다.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같은 교원단체들과 NGO들의 학용품 및 교과서용지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인력양성 사업과 함께 물적 지원이 시행된 경우가 많았는데, 4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윤종혁 외, 2006).

첫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컴퓨터 인력양성 협력사업이다. 2001년부터 남북 IT협력 전문기업인 하나프로그램센터가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조선콤퓨터센터 출신의 전문인력 20여 명을 중국 단동에서 4개월 동안 교육시켰는데, 이 사업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로 이관하여 2006년 '우리민족인재양성센터'를 창립하였다. 둘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의 교육현대화 사업이다. 이 NGO는 2005년 후반 김일성종합대학 기숙사 설비 중 학생복지후생용품을 지원했다. 셋째, 한양대학교와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학술교류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양대학교 교수 두 명이 2002년 두 달 여간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각각 '컴퓨터 운영체제 구현'과 '데이터베이스 응용개발 및 관리시스템 구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평양과학기술대학 건립 및 운영도 교육지원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은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계 및 해외교포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총 400억 원의 예산

117) "북한 민간교육기금, 스웨덴서 코로나 구호품 후원받아," 「연합뉴스」, 2020.8.5.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4167500504

118) "대북지원: 프랑스 민간 후원으로 학교 세운 북한… 한국도 지원 가능할까?" 「BBC NEWS 코리아」, 2021.11.26. https://www.bbc.com/korean/news-59399331

으로 평양과학기술대학을 건축하였다. 외국인 교수들이 자원봉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나, 인건비를 고려한다면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됐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대북 물자지원은 인적교류와 마찬가지로 2010년 5.24조치 이후 대폭 축소되었다. 교육지원 중에는 유일하게 평양과학기술대학에 대한 민간 차원의 후원이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1995년 국제사회에 원조를 요청한 이후 지금까지 주로 교육지원을 받는 시혜적 위치에 머물러 있으며, 호혜적 물적 교류는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제 4 절 고등교육정책의 모방[119]

교육 세계화는 교육제도의 개방성과 인적·물적 교류에 더해 학위와 자격 등의 교육활동이 국제호환성을 갖춤으로써 실현된다. 국가 간 학문 자격의 상호 인정은 쉽게 전환할 수 있는 학점 단위와 동등한 학위에 대한 단일 시스템의 도입, 자격을 기록하는 동일한 양식에서 비롯된다(Dubin et al., 2018). 여러 국제기구에서 교육 프로그램 호환 및 결과 인정을 시행하였는데, 대표적으로 OECD는 1993년 파리 세미나에서 교육과정, 교육기관을 통한 학생 및 교수의 국제화를 논의하였다. 미국, EU, 일본 등은 자국의 교육시장을 개방하였고, 타국도 WTO의 GATS에 따라 교육시장을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EU의 고등교육 상호 교류 프로그램인 ERASMUS 사례에서 보듯이 인접 국가들 간 교육 프로그램 호환 및 결과 인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박재윤 외, 2008).

그러나 북한은 164개국이 소속되어 교육서비스 개방과 교육의 질 인증을 주도하는 WTO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평양외국어대학에서 유학한 학생들은 본국에서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북한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국제호환성을

119) 이 절은 김유연, 유성상(2021) 논문 내용을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2000년대 이후 '세계적 추세'에 대해 연구하고 그에 맞춰 고등교육정책을 모방하고 있다. 2016년 「교육신문」에서는 "우리의 교육 실태를 세계교육발전수준과의 관계에서 보고 그 수준을 릉가(능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찾고 과학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북한 고등교육 전문잡지인 「고등교육」 분석을 통해 북한이 따라잡고자 하는 세계적 추세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고등교육정책의 변화와 비교함으로써 담론과 실천의 간격을 논의할 것이다. 2005-2019년 「고등교육」 내 '세계교육발전추세' 코너의 내용을 <표 4>와 같이 교육계획, 대학 운영,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공학, 교원 양성 및 관리, 기타로 나누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1. 교육계획

교육과학에 대한 북한 당국의 관심은 김정은 시대에 크게 증가했다. 김정일 집권 당시에는 과학기술체제 개혁이 본격화되었다면,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교육개혁이 가속화되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처음으로 열렸던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발표하였고, 고등교육 분야의 개혁 방향도 2013년 전국과학기술자대회와 2014년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발표하였다. 현 시대를 '지식경제시대'로 인식하면서 국가교육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입각하여 각 지역과 학교 단위에서 교육정책을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별로도 교육발전전략을 작성하여 이에 기초한 교육과정을 설계해나가도록 하고 있다(조정아 외, 2020).

「고등교육」의 세계 교육발전 추세 관련 기사 중 '교육계획'으로 범주화된 기사 21건을 살펴보면, 그 중 4건만 김정일 시대에 작성된 것이고 나머지 17건은 김정은 시대에 작성된 것이다. 2018년 제11호에 실린 "교육계획 리론과 기술의 발전동향"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교육계획 작성은 계획경제체제였던 사회주의 국가들과 유럽을 비롯하여 '일부 발전된

나라들'에서만 진행되어 왔는데,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사회경제 발전에서 인재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함에 따라 교육계획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국제교육계획기구(IIEP),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UNICEF,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에서도 교육계획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교육발전의 수량적인 특면을 중시했는데 이제는 질적 측면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계획의 수립에 주목하면서 교육통계를 통해 교육발전전략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과학적인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교육예측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세계 교육발전 추세로 소개하고 있다.[120] 2017년 제2호에 실린 "교육에서 통계학의 응용"은 교육에서 통계학이 응용될 때 중요한 지표는 평균값과 분산도라고 적고 있다. 엑셀(Excel)과 매트랩(Matlab) 같은 통계처리 프로그램을 비롯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교육 실천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교육사업을 과학적 토대 우에서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김일성종합대학의 경우 2020년 경제학부에 통계학강좌를 설치하며 주요 전공과목에 통계학을 추가하고,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의 지원금으로 통계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북한 내부에서는 통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통계는 1965년 이후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국제기구에 주기적 혹은 간헐적으로 보고하는 통계도 초·중등학교 수나 학생 수, 등록률 및 문해율, 학생 1인당 교원 비율과 같이 기초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북한이 국제협력과 함께 과학적인 교육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통계자료를 정교화하고 공개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다(양운철, 2020; 조정아 외, 2020).

교육발전전략은 곧 인재양성 전략이기에 '인재양성' 코드도 교육계획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2010년 제4호 "여러 나라들의 인재양성비률" 기사에서는 나라마다 인재 요구구조가 다르지만 대체로 기사, 기수, 기능공의 비율을 1:3:10으로 양성한다고 적고 있는데, 2015년 학술형 인재와 실

120) 한광일,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교육예측동향," 「고등교육」 2017년 제5호, 62면.

천형 인재의 양성을 강조하면서는 그와 관련된 기사가 실렸다. 학술형 인재는 원리와 법칙을 연구하여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체계화하는 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인재이며, 실천형 인재는 원리와 법칙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서 실천 활동을 해나가는 인재라고 한다.[121] 또한 지식경제시대 인재의 필수적 자질은 '창조력(창의력)'이라고 강조한다. 창조에 대한 비상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창조적 인재는 사회발전과 인류발전의 핵심역량이라는 것이다.[122] 북한 당국은 세계적인 인재양성 추세에 주목하면서 '세계적인 인재강국'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교육 사례를 참고함에 따라 2014년부터 비교교육에 대한 기사들도 실렸는데, 비교교육학의 특징이나 비교과정 5단계, 비교연구법의 종류 등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교육과 외국의 교육을 비교하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2. 대학 운영

2009년 12월 김정일의 김일성종합대학 방문 이후 김일성종합대학은 '세계일류급대학'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다. 제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에서 19-20세기에 퍼져 나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대학 평가 풍조를 북한에서도 신경 쓰게 된 것이다. 2016년 김일성종합대학 홍보자료는 김정일이 생전 김일성종합대학을 27회 현지지도하고 2000여 차에 걸쳐 "강령적 가르치심"을 주면서 "세계일류급대학으로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었다고 적고 있다.[123] 2014년 제3호 「고등교육」 기사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일류급대학으로 만드는 것이 김정일의 '역사적인 현지말씀'이기 때문에 교원들이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우기 위해 '투쟁'을 했다고 말한다. 그러다가 2016년 제7차 로동당대회에서 김정은은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주요 대학들을 세계적인 일류급 대학들과 당당히 겨룰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121) 최영복, "학술형인재와 실천형인재," 「고등교육」 2015년 제2호, 26면.
122) 리영삼, "지식경제시대 창조적인재의 본질과 특징," 「고등교육」 2016년 제4호, 59면.
123) 『김일성종합대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2016, 4쪽.

주장했고, 2017년 1월 5일 기사에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연구부 부장도 “대학을 세계일류급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년차별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다. 2010년대 초반에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일류급대학으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다면, 후반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하여 주요 대학들을 세계적인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담론이 진화하였다.

「고등교육」 2017년 제2호에서는 세계일류급대학을 정의하고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세계일류급대학은 “세계적수준의 교육력량과 선진적인 학과를 가지고 국제적으로 이름 있는 뛰여난(뛰어난) 인재와 시대를 대표하는 의의 있는 과학연구 성과들을 달성하여 사회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연구형 대학”이며,[124] 구체적으로 세계 대학순위 1-100등을 의미한다고 언급하기도 한다.[125] 그 특징으로 세계일류급대학들은 교육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과학연구사업에 집중하며 세계 교육발전 추세에 맞게 인재양성체계를 확립하고 있다고 보았다.[126] 또한 일류급 대학은 지식 창조형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본과와 박사원, 과학연구원에서 선발된 수재들의 ‘창조정신과 창조적 능력’을 키워주고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정의에서 보듯이 북한 학자들은 세계일류급대학이 반드시 연구형 대학이어야 한다고 본다. 연구형 대학의 개념은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연구-교육의 연결을 중요하게 보는 연구중심대학과 유사하다(이춘근, 민철구, 2001). 연구중심대학 육성은 1990년대부터 국제적인 흐름이 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BK21 사업을 추진했고, 일본은 ‘국공사 TOP 30’ 사업을 실시했다. 북한에서 연구형 대학 추진의 사례로 들고 있는 국가는 중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이다(조정아 외, 2020). 「고등교육」에서는 연구형 대학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튼튼한 ‘교육과학핵심(학자)’을 키워야 하며, ‘우리 식의 학점제’를 바르게 선택하여 실시하

124) 조성철, “세계일류급대학과 창조형인재육성,” 「고등교육」 2017년 제2호, 61면.
125) 장관호, “연구형대학과 1류급대학의 관계,” 「고등교육」 2016년 제2호, 21면.
126) 김혜선, “세계1류급대학건설에서 주목되는 몇가지 문제,” 「고등교육」 2011년 제3호, 76면.

고 과정안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127] 또한 2016년 기사에서는 세계적인 과학연구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국제학술교류 활동도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며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중 SCI급 국제학술논문을 발표한 학자들도 소개한다.[128]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의 연구 기능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일찍이 교육과 연구, 생산의 결합을 강조하며 현장지원을 목적으로 연구를 발달시켜왔기 때문에 대학원 교육 및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조정아 외, 2020). 그러나 「고등교육」의 2005, 2006년 '세계교육발전추세' 코너에는 박사원 교육에 대한 기사가 세 건 실려 외국의 대학원 교육을 소개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대학원에서는 기초이론교육을 강화하고, 박사원생들을 연합 양성하며 민간평가기구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을 박사원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어느 한 나라'에서는 외국인학생 수가 약 40% 정도라고 적고 있다.[129] 조정아 외(2020)에 따르면 2000년대 전후로 북한에서 20, 30대 박사 양성에 힘을 쏟기 시작했고 2014년을 기점으로 「로동신문」과 「교육신문」에 등장하는 박사학위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 「고등교육」의 기사들 내용처럼 대학원 교육의 세계적 추세를 탐구하여 북한의 박사원 교육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사원 교육과 관련하여 본과교육과 박사원 교육을 연계시키는 '본과학사통일양성방식'이나 '련속(연속)고등교육체계', 그리고 학점제, 선택과목제, 제2전공제와 같은 학제도 세계 고등교육의 동향으로 소개하고 있다. '련속고등교육체계'는 대학 본과교육과 박사원 교육, 박사원 이후 교육을 연속적인 과정으로 결합시키는 것이다.[130] 여기서 '박사원 이후 교육'은 박사후과정(post-doctorial program)을 의미한다. 선택과목제, 제2전공제처럼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에 대한 기사들도 등장하는

127) 신동천, "연구형대학의 실현방도," 「고등교육」 2014년 제5호, 77면.
128) 본사기자, "세계과학계가 인정하는 학자집단으로," 「고등교육」 2016년 제10호, 11면.
129) 공철혁, "최근 박사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주목되는 문제," 「고등교육」 2006년 제5호, 60면.
130) 고영경, "련속고등교육체계," 「고등교육」 2015년 제1호, 30면.

데, 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학점제 실시를 거론하고 있다. 실제로 김책공업종합대학 같은 일부 중앙대학에서는 2000년대에 학년제를 학점제로 대체하고 선택과목제를 도입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교육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선택형 교육과정을 부분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2016년에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에 선택과목을 도입했다(조정아 외, 2020).

「고등교육」에서는 여러 전공을 한 학과에서 가르치는 '교차학과'와 학과의 통합, 융합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단과대학으로부터 종합대학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5년 제4호에는 '부문종합대학'과 '종합대학'에 대한 기사가 각각 1건씩 등장하여 대학들을 종합대학화하는 것은 사회와 경제발전의 요구이며 과학기술 발전의 요구라고 한다. 단일한 학과의 전문교육으로는 대학 졸업생들이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학문과 학과들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여러 분야들이 서로 침투·융합되고 있다는 것이다.[131] 북한에서는 대학을 학문의 수에 따라 단과대학, 다과성대학, 종합대학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2010년대 중반에 '부문종합대학'과 '지역별 종합대학'의 두 축으로 종합대학화를 실시했다. 그러나 2019년 말에 북한 당국은 그간 종합대학으로 전환했던 학교들 중 대부분을 다시 분리하고 원래의 단과대학 체계로 되돌렸다. 그 이유로는 예산이나 교통망의 부족 등이 추정된다(조정아 외, 2020).

3. 교육 내용 및 방법

김정일은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교육강령을 편성하는 데서 다른 나라의 교육내용과 방법들도 연구하여 좋은 것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교시했다.[132] 이를 반영하듯 「고등교육」의 세계교육발전 추세 관련 기사 152건 중 43건은 고등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

131) 리철, "종합대학의 본질과 특징," 「고등교육」 2015년 제4호, 80면.
132) 로춘식, "원격교육과 그 발전동향," 「고등교육」 2006년 제2호, 53-54면.

한 기사이다. 이를 세분화하여 보면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구체적인 학과목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다.

대학의 교육과정은 본래 학문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해야 하지만, 국가의 필요에 의한 엘리트 양성체계인 북한의 고등교육은 대학 교육과정도 전체적인 틀은 교육성에서 작성한다. 그만큼 북한 당국의 교육정책이 개별 대학 교육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단, 전문성 있는 대학의 전공과목 교육과정은 해당 단과대학에서 작성하여 교육성이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조정아, 이춘근, 2008). 선행연구들에서는 김정은 시대 고등교육 내용 변화의 핵심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라고 보고 있다. 실용화는 교육내용을 현실에서 "써먹을 수 있는" 지식으로 구성한다는 것이고, 종합화는 학문 분야 융합과 학과통합 등을 통해 통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이며, 현대화는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에 맞는 최신 과학기술 지식을 교육내용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서유림, 2019; 조정아 외, 2020). 「고등교육」의 2009년 제3호 기사에서는 이러한 대학 교육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가 세계 교육발전 추세라며 '어느 한 나라'나 '많은 나라'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김정일 시대 때부터 외국의 사례를 통해 고등교육 내용 개선 방향을 잡아나간 것이 김정은 시대의 변화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제3호의 해당 기사에서는 다른 나라 대학들의 교육내용뿐만 아니라 교육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그 특징은 첫째, 교수의 설명 위주였던 강의식에서 벗어나 토론식 교수법처럼 학생들에게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 둘째, 설계적인 성격의 과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창조력과 탐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성격의 실험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과학연구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133] 2017년 제10호 기사에서는 세계적으로 대학 교육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교육방법으로 '문제에 기초한 교수방법', '실례에 기초한 교수방법', '학습소조에 기반한 교수방법', '자체 학습에 대한 지도방법', '지도교원 선정에 의한 교수방법'을 소개한다.[134] 이 중 '문제에 기초

133) 한충성, "다른 나라 대학들의 교육내용 및 방법개선에서 주목되는 몇가지 문제," 「고등교육」 2009년 제3호, 60면.

한 교수방법'은 1950년대 중반 캐나다의 한 의과대학에서 개발되고 우리나라에 1990년대 말 소개된 것으로, 구성주의 학습모형 중 가장 활발하게 사례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문제중심학습(PBL; 남미경, 윤갑정, 2016)을 의미한다. 북한에서도 최근 이러한 교육방법들을 대학에 적용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과거부터 강조했던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에 비해 교수자의 역할을 축소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한 학습자 중심교육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평가에 대한 기사도 12건 등장하는데,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4건씩 실려 당시에 교육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2건의 기사 중 7건을 교원대학이나 사범대학 교원이 작성하여 주로 교육학계에서 연구되는 주제라고 볼 수 있다. 교육평가는 학생의 실력에 대한 평가와 "교육분야의 모든 인적 력량, 물질적 조건, 교육활동" 등에 대한 평가로 나뉜다. 후자의 경우 교육평가지표체계를 세우는 것이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널리 이용되는 방법으로 전문가상담법을 세세하게 소개한다.[135] 전자의 경우 학생들의 지식 습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시험내용이 개선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응용문제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고,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결합한 다양한 평가방법을 쓰고 있으며,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자체평가와 호상(상호)평가를 결합하고 있다고 한다.[136] 한 기사에서는 세계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평가가 비판적으로, 창조적으로 사고하도록 하기 위한 시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한다.[137] 실제로 기존에는 주로 주관식 서술형 필기시험이나 구술시험을 실시하던 북한 학교들이 근래에는 객관식 시험, 선다형 시험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대학입학시험은 2017년부터 전국적인 컴퓨터 원격시험으로 전환되었다(조정아 외, 2020). 그러나 여전히 정치사상교육이 우선시되고 집단주의

134) 김룡진, "세계 여러 나라 고등교육에서 널리 리용하고있는 교수방법 몇가지," 「고등교육」 2017년 제10호, 63면.
135) 김미정, "교육평가지표체계의 구성방법," 「고등교육」 2014년 제2호, 74-75면.
136) 강일, "시험내용개선 움직임," 「고등교육」 2007년 제2호, 37면; 라영남, "학생실력평가방법의 발전추세," 「고등교육」 2013년 제1호, 74면.
137) 라영남, "학업성적평가의 발전추세," 「고등교육」 2008년 제3호, 43면.

가 강조되는 북한에서 교육평가 방법의 변화가 얼마나 학생들의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독려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 외에 개별 학과목의 세계적 추세에 대한 기사가 20건 등장한다. 그 중 수학교육과 외국어교육에 대한 기사가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이 실려 있다. 2005년 제1호 기사에서는 수학의 발전 역사에 대해 간략히 짚고 21세기 수학은 인접 과학기술 분야들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138] 2008년 제5호 기사에서는 수학이 "복잡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푸는 데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내용에서 점점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139] 수학은 북한의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초등, 중등 교육과정에서 많은 시수를 차지하는 주요 과목이다. 제1차 12년제 의무교육강령에서는 김정일의 "수학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과학적인 사고능력을 키워주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한 담화문을 인용하고 있다(김지수 외, 2019).

외국어교육의 경우 전통적으로 내용 습득을 중요시하던 문법-번역식으로부터 학습과정을 중요시하는 과제교수법으로 세계적 추세가 변화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외국어교육의 목적은 "언어지식 소유량을 늘이는 것과 함께 소유한 외국어지식을 옳게 활용할 줄 알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외국어시험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하는데, 그 예로 TOEFL 시험을 들고 있다.[140] 북한은 1990년대에 제1외국어를 러시아어에서 영어로 변경하고 외국어교육을 강화했으며, 김정은 시대에 세계적 추세에 따른 발전과 국제교류를 확대 추진하면서 영어교육을 더욱 강조해왔다. 실제로 김정일 시대부터 주목하던 외국어교육의 세계적 추세를 2013년 개정 교육과정에 상당히 반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지수 외, 2019). 「고등교육」 기사 중에는 수학과 외국어교육 외에도 생물학, 간호학, 의학, 경영학 교육 등의 세계적 발전 추세에 대한 기사들도 실려 있다.

---

138) 김준용, "21세기 수학발전전망," 「고등교육」 2005년 제1호, 60-62면.
139) 김성숙, "교육에서 중시되고있는 수학," 「고등교육」 2008년 제5호, 62면.
140) 김령애, "최근 외국어시험방법의 추세와 그 특징," 「고등교육」 2009년 제6호, 63면.

4. 교육공학

「고등교육」의 세계 교육발전 추세 관련 기사 중 28건은 교육공학 주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부 '세계교육발전추세' 코너에 등장한다. 2007년 제2호 "교육공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그것이 새롭게 나온 학문이라며 "교육공학은 교육활동을 구성하는 매 요소들 사이의 가장 효과성이 높은 결합을 설계하며 여기에 적중한 각종 교수수법과 구조, 교육설비와 기재들을 개발하여 교육에 리용하며 체계화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한다. 국제적으로 educational technology라고 명명하는 것과 다르게 'IE: Instruction Engineering'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의미는 유사하다. 비슷한 용어로 '교육기술'이라는 용어도 등장하는데, 2008년 제1호 "교육기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그것을 "학습과정과 학습자원에 대한 설계, 리용, 관리와 평가에 대한 리론과 실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교육공학은 학문 분야의 하나로 정의한다면 교육기술은 이론과 실천으로 보고 있다.

'세계교육발전추세'에서 소개하는 교육기술은 컴퓨터지원교수(CAI: 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교수용 다매체(멀티미디어), 컴퓨터모의실험, 인공지능모의체계 등 교육정보화와 관련된 기술들이다. CAI는 2005, 2006년 소개된 뒤 2019년에 한 번 더 다뤄지고 있는데, 2005년 제6호 기사에서 "학습을 콤퓨터로 진행하는 정보체계"라고 정의한 뒤 2006년과 2019년 기사에서는 CAI 프로그램 개발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수한 CAI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결조건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에서 '개발단위'를 국가적으로 정하고 개발사업을 의탁한다며 여러 사례들을 나열했다. 교수용 다매체 관련해서는 2008년 제2호 기사에서 "일정한 교육강령의 요구에 맞게 교수정보를 담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정의한 뒤 그 특성에 대해 적고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용 멀티미디어를 개발하여 보급·이용하고 있으나 그 적용 수준은 지역별, 학교별로 큰 편차가 있다고 한다(조정아 외, 2020). 컴퓨터모의실험은 2007년 제5

호 기사에서 컴퓨터의 초고속화, 대용량화, 전문화로 인해 여러 자연과학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모의실험 방식으로 소개되고 있고, 2013년 제3호 기사에서는 컴퓨터망(네트워크)을 통한 모의실험까지 다루고 있다. 인터넷 접속은 제한하고 있으나, 북한 내부에 설치한 인트라넷은 활발하게 이용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 교육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2012년 제6호 기사에서는 인공지능모의체계까지 다루면서 최신 교육기술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김정일 시대부터 북한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교육기술은 원격교육 관련 기술이다. 북한 당국은 1940년대 후반 성인 대상 우편교육을 시작하였고, 1970년대에는 TV와 라디오를 활용한 방송교육을 실시했다. 2000년대 들어서 원격교육은 컴퓨터망에 기반을 둔 e-Learning 교육으로 발전해왔다(김지수, 2019). 김정은 시대에는 국가적 교육목표로 내건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격교육 확대가 더욱 중요해졌다. 「고등교육」의 교육공학 주제 28건 중 11건이 원격교육 관련 내용으로, 그 중 10건은 김정일 시대에, 1건은 김정은 시대에 등장하였다. 이는 그만큼 오래 전부터 북한 교육 당국이 원격교육 관련 세계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006년과 2007년 기사들은 '원격교육'과 '먼거리교육'이라는 표현을 혼용하면서 세계적 발전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콤퓨터망을 리용한 원격교육" 기사에서는 원격교육이 영국 런던대학에서 교재와 학습과제 등을 우편물로 보내던 것에서 시작하였으며 그러한 1세대부터 라디오, TV, 녹음기를 이용하는 2세대, 위성, 유선TV, 컴퓨터망으로 교원과 학생이 접촉하는 3세대,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4세대 원격교육으로 발전했다고 적고 있다.[141] 2007년까지는 TV 원격교육도 언급하고 있으나, 그 한계인 "교수정보 전송의 한방향성"을 위성통신기술로 극복하였다며 그 뒤의 기사들에서는 컴퓨터망을 통한 원격교육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특히 2009년과 2010년 기사들은 원격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컴퓨터망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조정아 외(2020)에 따르면 북

141) 본사기자, "콤퓨터망을 리용한 원격교육" 「고등교육」 2007년 제5호, 62면.

한은 현재 3G 통신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4G에서 활용되는 다이어미터 프로토콜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은 2006년부터 전자도서관을 통해 원격강의를 운영하였고, 2010년 원격교육대학을 개교하였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가 김정은 시대의 교육목표로 제시되면서 2010년대 중반에는 김일성종합대학과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에 원격교육체계가 수립되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은 2015년 20여 개의 기업소, 공장에 소속된 110여 명을 제1기 졸업생으로 배출했다. 「교육신문」은 원격교육대학의 교원, 연구사, 편집원들이 "모든 애로와 난관을 자체로 뚫고 나가면서 우리 식의 원격교육방식을 확립해갔다."며 CAI체계와 평가체계를 실현했다고 보도했다. 원격교육대학은 2019년 이후 주요 대학 부설 원격교육학부로 변경되었고, 정규 고등교육과 함께 현업 노동자나 교원들에 대한 재교육, 일반 주민 대상 평생교육 등에 활용되고 있다(조정아 외, 2020).

5. 교원 양성 및 관리

북한에서 교원의 위상은 '직업적 혁명가'로, 전문성을 갖고 학교 교육을 전담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이 중단되면서 초·중등 교원들은 학부모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교육부와 학교의 요구에 따라 각종 물품을 걷어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었다(김정원 외, 2014). 고등교육 부문 교원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 대학에 입학하여 생활하기 위해서는 뇌물이 필요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북한 당국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5년 교원법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2019년 제14차 전국교원대회에 보낸 담화에서 김정은은 교원의 자질향상이 기대만큼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교원 진영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김지수 외, 2019).

「고등교육」의 세계 교육발전 추세 관련 기사 중 교원 양성 및 관리에 관한 기사는 8건으로, 모두 김정은 시대에 등장한다. 2017년 기사까지

는 주로 초·중등 교원 양성 및 관리에 대한 기사들이고, 2018년과 2019년의 기사는 모두 대학 교원에 대한 기사들이다. 전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교원 양성의 질과 관리수준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자기식의 질보장체계'를 세우고 있다고 한다. 지식경제시대에는 지식의 '로화(노화)주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는 교원 재교육을 강화하고 있고,[142] 교원양성체계를 개선하며 종합대학에서 교원을 양성하기도 하고 교원양성기관들을 종합대학화한다는 것이다.[143] 그러나 아직 부문별 대학으로 분류되는 북한의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을 종합대학화하려는 시도는 관찰되지 않았다.

고등교육 부문 교원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 대학들에서 박사학위를 교원자격 기준으로 본다며 16개 세계일류급대학의 교원 구성을 분석해보면 박사학위 소지자가 94.5% 이상이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다. 또한 교수 초빙제와 겸임제를 장려하여 "교육원가를 줄이고 교육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근친번식'으로 교육과 과학연구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타 대학 졸업생들을 교원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한다.[144]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1950년대 말 고등교육기관을 확장하면서 모든 대학 졸업자를 강사로 채용하였고(김경미, 김안나, 2020), 채용 후 대학 교원들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관행을 김정은 시대에 박사학위 취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연구 성과를 내도록 독려하고 있어 「고등교육」에서도 국제적 학술성과를 낸 교원들을 모범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이 교원들은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와 리과대학 자연과학연구원 연구사로 모두 이공계열 학자들이다.

이외에도 '기타'로 분류된 세계 교육발전 추세 관련 기사들에선 과학기술과 교육의 관계, 직업기술교육, 일생학습(평생학습)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

142) 리순애, "지식경제시대와 교원재교육," 「고등교육」 2012년 제5호, 74-75면.
143) 리명선, "교원양성사업에서의 몇가지 발전추세," 「고등교육」 2017년 제12호, 62-64면.
144) 계은희, "고등교육부문 교원진영을 강화하기 위한 세계적발전동향," 「고등교육」 2018년 제5호, 56-57면.

제 5 절 소결

이상 박재윤 외(2008)의 교육 세계화 개념틀을 수정하고 적용하여 '세계적 추세'에 따른 북한 고등교육정책의 변화 양상을 분석해보았다. 북한 공간문헌을 분석한 바, 2008년 김정일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교육발전의 세계적 추세를 잘 알아야" 한다고 지시할 때 즈음 북한 교육 당국은 다른 나라의 교육 추세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적용하기 시작했다. 김정일이 김일성종합대학에 세계를 보는 안목을 가질 것을 지시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교육신문」 기사의 세계적 추세 관련 담론을 분석해보면 1-4기로 시기를 나눌 수 있다. 1기(2009-2011년)는 김정일의 지시 이후 세계적 추세 관련 기사가 급증하면서 북한을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재대국'으로 만들고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일류급대학' 수준까지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힌 시기다. 2기(2012-2015년)는 김정일 사망 후 북한의 그러한 포부가 김정일의 유훈이 되고 교육자들의 국제학술논문 발표, 학생들의 국제경연대회 우승 등 구체적인 성과들을 선전하기 시작한 시기다. 3기(2016-2017년)는 북한이 4-6차 핵실험을 자행하여 국제사회에서 지탄 받은 시기로, '자강력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세계적 추세 관련 기사가 감소하였다. 마지막 4기(2018-2019년)에는 북한이 미국, 한국과 외교적 협상을 시도하면서 다시 세계적 추세 관련 기사가 급증하였고, 교육 분야에서는 제14차 전국교원대회가 개최되는 등 교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었다.

정리하면, 2009년 이후 북한에서 '세계적 추세'는 고등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으며, 대학 학자들의 연구주제이자 성과 산출의 기준이 되었다. 이것은 1970년대 주체사상이 통치이념으로 정립된 후 외부의 영향을 인정하지 않던 북한의 고등교육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하며, 1984년부터 강조된 김정일의 발전교육론[145]의 연

145) '교육'과 '발전'의 관계는 오래 전부터 교육이론의 연구 주제가 되어 왔다. 이 두 개념을 어떻게 위치시키느냐에 따라 '교육에서의 발전(Development in Education)', '교육을 통한 발전(Development through Education)', '발전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Development)' 등 다양한 접점이 생겨난다. 이때 '발전'은 교

장선상에서 경제건설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더 부각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스스로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전지구적 교육 세계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과거 사회주의권이었던 국가들, 특히 중국의 사례를 많이 참고하고 있다. 북한 내 세계적 추세에 대한 강조는 선전선동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져 왔다.

개념틀에 따라 북한의 고등교육정책 변화를 제2장 제4절에서 살펴본 사회주의 국가들의 교육 세계화와 비교해보면 세 가지 차이점이 발견된다.

첫째, 교육제도의 개방성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WTO 가입국들의 경우 1994년 체결된 GATS의 서비스무역에 교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교육 분야 법령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교육시장을 개방해왔다. 사회주의 국가들도 개혁개방과 함께 교육제도를 개방하였다. 러시아는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2000년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본격적으로 고등교육을 변화시켰고, 2003년 볼로냐 프로세스에 참여하면서 교육제도 개방을 가속화하게 되었다. 중국은 1993년 교육 세계화 계획인 211공정의 목표를 제시하는 법령을 통과시켰고, 2001년 WTO 가입 후 교육제도를 더 개방하였다. 베트남도 도이 머이 이후 교육제도를 조금씩 개방하다가 2000년 법령 제06/2000/ND-CP호를 제정한 이후 외국인 투자를 활발하게 받게 되었다. 쿠바는 오래 전부터 교육제도를 개방하고 있었으며, 1996년 이후 외국의 훈련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국제기구와의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회주의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사교육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시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WTO GATS체제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다. 1999년 채택된 교육법과 2011년 채택된 고등교육법, 2015년 채택된 교원법에서 교육 교류협력과

육의 내재적 가치에 주목할 경우 교육 그 자체가 발전을 뜻하고, 외재적 가치를 강조할 경우 국가의 정치, 경제 등 여타 분야의 발전을 의미한다(Robeyns, 2006; 유성상, 유은지, 박인영, 2016). 김정일의 '발전교육론'에 대해서는 이하 제5장 제2절에서 더 설명하고자 한다.

외국 교수 초빙 및 북한 교원의 해외 파견, 유학생 교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만큼 교육제도를 개방했다고 볼 수 없다.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진입 사례의 경우 중국은 다수의 중외 협력대학을 유치했고 베트남은 RMIT를 비롯한 여러 외국 대학과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북한은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사례만 존재한다. 근본적으로 정치경제체제 개혁개방 없이 교육제도를 전면 개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표 27> 2020년 각국 유학생의 행선지 순위 및 유학생 수, 비율

순위	러시아		중국		베트남		쿠바		북한	
1	독일	11,055	미국	343,761	일본	40,633	스페인	662	중국	350[1]
2	체코	6,407	영국	143,867	미국	25,183	에콰도르	441	프랑스	140
3	미국	4,901	호주	128,183	한국	19,098	브라질	331	태국	92
4	영국	3,376	캐나다	81,006	호주	15,959	아르헨티나	287	덴마크	67
5	프랑스	2,751	한국	58,746	캐나다	9,243	칠레	256	미얀마	60
6	키르기스탄	2,005	홍콩	39,355	프랑스	4,497	독일	188	독일	59
7	벨라루스	1,902	독일	39,281	독일	3,689	미국	142	캐나다	54
8	아르메니아	1,782	프랑스	24,780	영국	3,398	프랑스	114	카자흐스탄	54
9	핀란드	1,728	마카오	22,211	핀란드	2,197	캐나다	93	호주	41
10	이탈리아	1,554	러시아	18,531	뉴질랜드	1,197	이탈리아	83	러시아	35
총계	57,591		1,088,466		132,559		3,249		1,153[2]	
비율	0.9		2.2		6.4		1.0		0.3	

주1) 북한의 중국 파견 유학생 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홈페이지에 표기된 2007년 기준 추정치.

주2) 중국 파견 유학생 수 제외

주3) '총계'는 상위 10위권 국가들로 가는 유학생 수뿐만 아니라, 각국의 총 유학생 수임.

주4) '비율'은 각국 전체 대학생 중 유학 가는 학생의 비율임.

출처: UNESCO U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검색일: 2022.12.20.) http://uis.unesco.org/en/uis-student-flow; http://kp.china-embassy.gov.cn/kor/zcgx/jyjl/200704/t20070401_1350164.htm

둘째, 인적·물적 교류 규모가 미약한 수준이며, 호혜적 교류보다는 시혜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은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던 유학생 파견을 상당수 중국으로 전환하고 파견국을 다변화하였다. 2009년에는 자비유학생 제도도 도입하여 유학생 파견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표 2>에 북한 데이터를 더한 <표 27>을 보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북한의 유학생 수와 비율은 아직 매우 적다. 이 장의 제3절에 언급한 것처럼 UNESCO 데이터에 북한의 중국 파견 유학생 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북한 유학생 수와 비율은 쿠바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러시아, 중국, 베트남, 쿠바 유학생 행선지에는 상위 10위 안에 모두 미국, 독일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북한은 독일만 포함되어 있다. 북한에서 유치한 유학생 수 데이터는 UIS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은데, 제3절에서 수집하여 분석한 자료들에 따르면 더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자 교류의 경우도 북한의 외국인 교원 유치와 대학 교원 해외연수는 초보적인 수준이다. 교육 세계화 시대에 각국은 해외 우수 연구자를 유치하여 첨단 분야 연구 성과의 노하우를 습득하고 학생들이 세계적 수준의 강의를 들을 기회를 확대하려 하며, 연구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연구 인력의 해외 방문 연구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핵심은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그와 같은 일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결핍경제(shortage economy)[146]에서 대학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북한은 해외 인적 교류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많

146) Kornai(1992/2019a)는 고전적 사회주의 경제가 거시적·미시적 원인들의 결합효과로 부족현상에 시달리게 되는 결핍경제(shortage economy)라고 분석했다. 일례로 불완전경쟁의 틀 속에 있는 자본주의하의 사적 기업은 이윤 증대를 일차 목표로 하여 재화를 생산하고 잉여를 남기지만, 고전적 사회주의하의 국유기업은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인정을 일차 목표로 하여 구매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이윤을 남기는 데는 관심이 없다. 사회주의체제에 내재된 부족현상으로 북한은 1970년대부터 경기 침체를 경험하였으며 199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 후로는 고난의 행군을 겪었다. 제2장에서 정리한 것처럼 시장화 및 무역의 증가로 2010년대 들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개선되었지만, 핵실험으로 인한 대북제재가 가해지면서 경제에 타격을 입었다. 더 이상 북한경제가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는다는 의미에서 여전히 결핍경제라고 할 수 있다.

은 경우 교류 상대국의 지원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교원을 초빙하는 경우 캐나다 등의 민간 구호단체의 지원을 받았고, 평양과학기술대학도 한국인과 미국인들이 후원하는 민간단체의 지원으로 세워졌으며 외국인 교수진은 자원봉사로 북한에서 가르치고 있다.

물적 교류 또한 많은 비중이 일방적인 교육 원조에 해당된다. 1995년 자연재해로 국제사회에 구호 요청을 한 이후 아직까지 북한은 주로 원조를 받는 입장에 있다. 북한 유학생들의 유학비용은 상대국이나 국제기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해외 유학 지급액이라기보다는 교육 원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호환성은 부족하지만, 고등교육정책의 세계적 추세를 연구하여 모방하고 있다. 러시아가 참여한 볼로냐 프로세스나 중국, 베트남의 공동 학위 프로그램의 사례에서 보듯이 교육 세계화는 각국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이 국제호환성을 갖춤으로써 실현되기도 하고 촉진되기도 한다. 북한에서도 4-7년이었던 대학 교육기간을 4년제로 단축하는 등 국제표준을 고려하여 교육체계를 개편하였으나, WTO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중국 외 타국 학생이 북한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매우 소수이기 때문에 고등교육 프로그램이 국제호환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2000년대 중후반 세계 교육발전 추세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교육계획의 수립, 대학 운영,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공학, 교원 양성 및 관리 등 고등교육 전반에 그것을 적용해왔다. 1970년대부터 통계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교육통계체계 구축과 통계에 근거한 교육계획 수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학 평가 순위를 의식하여 주요 대학들을 세계일류급대학 수준으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으며, 대학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고 토론식 교수법이나 원격교육체계 등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이전의 북한 대학교육을 고려하면 놀라운 변화이다.

사회주의 국가들 교육 세계화와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공통점은 명문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점과 역사적,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북한 고등교육이 세계적 추세를 지향하면서 김

일성종합대학은 ‘세계일류급대학’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부여받았고, 최고지도자의 관심 속에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 2010년대 후반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주요 대학들도 세계일류급대학 수준까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담론이 진화하였으나, 북한 신문에 보도된 국제학술토론회 13회 중 11회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개최된 데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적 추세에 맞춰 발전하기 위한 지원은 김일성종합대학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북한 고등교육정책도 역사적, 사회적 맥락 내에서 변화하였다. 상기한 교육제도의 제한적 개방성, 미미한 인적·물적 교류,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호환성 미비 등의 특징은 북한이 체제 개혁개방을 실시하지 않은 채 세계적 추세를 따라잡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대학 교수들에 대한 배급이 약화되면서 자리 잡은 관습들은 북한 고등교육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박재윤 외(2008)의 개념틀에 따라 정리한 세계적 추세에 따른 북한 고등교육정책의 변화 및 타국의 교육 세계화와 비교해본 차이점을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북한만의 독특한 특징과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요인을 더 심화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제 5 장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특징 및 요인

제 1 절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특징

2009년 김정일이 김일성종합대학에 방문하여 세계를 보는 안목을 기를 것을 지시한 이후 북한 고등교육의 세계적 추세 지향성은 점차 강화되어 교육제도, 정책, 인적·물적 교류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주체사상에 근거하여 교육문제들을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 국가에 국한하여 교류를 실시하던 북한 교육당국이 2000년대 들어 교육법, 고등교육법, 교원법 등에 외국과의 교류협력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인적·물적 교류의 대상국을 넓혀 나갔다. 뿐만 아니라 대학 교원들의 SCI급 국제학술논문 발표를 장려하면서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주요 대학을 세계일류급대학 수준까지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출입하고 원격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술적으로는 세계 대학들과의 동형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이와 같이 고등교육을 개혁해나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다.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를 제2장에서 살펴본 사회주의 국가 고등교육 세계화의 특징과 비교해보면, 국가 주도로 명문대학을 집중 육성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를 지향함에도 아직 개혁개방을 실시하지 못한 북한의 고등교육정책 변화는 다른 자본주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구별되는 차이점을 보인다. 이 절에서는 북한 고등교육정책의 변화가 보이는 특징을 박재윤 외(2008)의 개념틀에 따라 교육제도 개방성, 인적·물적 교류, 프로그램 및 산출의 국제호환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1. 통제사회의 교육제도 개방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첫 번째 특징은 정치경제체제를 완전히 개혁개방하지 않고 제한적으로만 교육제도를 개방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교육제도 개방은 개혁개방과 국제기구 가입으로 가속화되었으나, 북한은 아직 전면적으로 개혁개방을 진행하지 않고 사회를 강하게 통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제도의 일부분만 개방하였다.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김정은 집권 후의 6.28조치, 5.30조치 등 경제개혁 정책이 시행되고, 무역이 더 활성화되었으나 아직까지 북한의 정치구조, 재산관계, 조정기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은 정치적 주권에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만 '모기장식'[147]으로 개혁개방정책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교육제도 개방도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교육제도가 '제한적으로' 개방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개방의 범위가 매우 좁다는 뜻이다. 북한은 외국인 유학생을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평양외국어대학 세 학교에서만 받고,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유일한 외국 합작 대학일 정도로 교육제도를 일부만 개방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개방을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와의 접촉에 대한 통제가 과도하게 가해진다는 뜻이다. 사회통제는 여타 사회주의, 자본주의 국가들에도 모두 존재하나, 개혁개방을 진행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통제는 점차 느슨해진 반면, 북한의 사회통제는 여전히 강하고 촘촘하다. 이러한 통제적 교육제도 개방의 특징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라는 구호에 상징적으로 함축되어 있다. 김정일이 세계적 추세를 잘 알아야 한다며 "세계를 보라"고 지시했기에 북

147) 경제체제를 전면 개방하지 않고 일부 지역을 경제개발구로 지정하여 부분 개방하는 북한의 개방정책을 흔히 '모기장식 개방'이라고 부른다(신정화, 2010; 유현정, 2014). 전면 개방에 따른 정치체제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한정적으로만 개방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2014년 로동신문 사설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어긋나는 온갖 잡사상과 이색적인 풍조가 우리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상적 모기장을 든든히 쳐야 한다."며 '사상적 모기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 노동신문 "사상적 모기장을 든든히 쳐야 한다"," 「경향신문」, 2014.2.27.
https://www.khan.co.kr/politics/north-korea/article/201402271652471

한 학자들은 외국 학자들과 교류하며 세계 교육발전 추세를 연구하고 북한 고등교육에 적용해왔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를 “주체적 립장”에서 받아들여 눈은 세계를 보되 발은 “자기 땅”에 붙여야하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와 적용에는 여러 제약이 따른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라는 말은 세계적 추세를 북한에 적합하도록 ‘우리 식’으로 적용한다는 뜻이지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물리적, 정신적 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리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는 자유가 부족하다. 북한의 학자와 학생들이 세계적 추세를 경험하고 탐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발을 해외에 내딛어 자유롭게 배울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북한 내외의 여행에 제약을 받는다. 1998년 헌법 개정 시 “공민은 거주, 려행(여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5조)라는 조항을 추가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내에서 지역을 이동하려면 관혼상제 등 ‘사적 용무’에 한해서 발급해주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하고(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2), 국외로 이동하는 것도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장사하기 위해 뇌물을 주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북중 국경지대를 통행하는 현상이 늘어났지만, 학자와 학생들이 연구 및 유학 목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가의 통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제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이 2009년에 자비유학생 제도를 도입했으나, 자비유학생일지라도 파견국, 전공, 학생 수 등은 당 중앙위원회 간부부와 교육과학지도부에서 결정한 데 따라야 하고 유학생활도 당국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2010년대 초반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한 달 동안 공부했던 불가리아인 연구 참여자 N은 북한 학생들과 대화 중 꿈이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학생들이 “세계일주 여행”이라고 대답하는 것을 듣고 씁쓸했다고 회상했다. 북한 인민들에게 자유로운 세계여행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학자들이 국제학술교류를 실시하는 것도 당국에 사전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연구 참여자 A는 2018년 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 옌벤대학의 학술회의 규모가 축소됐던 것을 설명하며 북한 학자들이 학술 교류하는 것을 당국으로부터 허가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또한 학자와 학생들이 “세계적 추세를 잘 알아야” 함에도 외부 정보에 접근하는 데 제약을 당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주민 통일의식』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부소식을 주로 듣고(51.24%), 북한 공식매체는 크게 신뢰하지 않았다.[148] 북한의 언론은 사실 전달보다는 사상교양자적 기능을 더 중요시하고 정세적 차원에서는 ‘대적 투쟁과 대외선전의 무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김영주, 2003) 외부소식을 객관적으로 전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정보산업시대’임을 강조하고 IT분야를 발전시키고 있음에도 북한 주민들은 국가 내부망만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 접속은 당국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된다. 북한이 2021년 공개한 VNR은 정보기술 접근과 관련하여 내부 전산망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교육신문」 기사는 “미제가 다른 나라들에 인터네트 개방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 《저들이 목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149] 북한은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인터넷을 금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전체 인구의 0.1% 미만만이 인터넷을 사용한다(We Are Social, 2022).[150] 외국의 정보화기술을 수입하고 모방하여 ‘광명’이라고 불리는 내부망과 원격교육체계를 구축했으나, 그것을 외부와 연결시키지 않고 북한 내부 소통에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대에 국가과학원에서 근무했던 연구 참여자 L에 따르면 “2015년쯤부터” 인터넷 접속 경로를 제한적으로 열어두었는데, 북한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원이라도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 여러 차례의 승인과 검열을 통해 필요한 내용만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고 한다. 2000년대 후반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재학했던 연구 참여자 K도 인터넷은 세 명의 서명

148) 로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의 보도에 대해 2011-2020년 조사 참여자 중 28.69%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35.4%는 일부만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김병로 외,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주민 통일의식』. 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388-389쪽.

149) “청년들을 대상으로 감행되는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 「교육신문」 2018년 2월 22일, 2면.

150) We are social 홈페이지 (검색일: 2022.10.8.)
https://wearesocial.com/uk/blog/2022/01/digital-2022-another-year-of-bumper-growth-2/

을 받아 전자도서관 제일 위층의 “비밀스러운 방”에서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 K: “전자도서관 제일 위층에 되게 비밀스러운 곳, 비밀스러운 방에 인터넷이 되는 게 있다.” 라고 듣기만 했어요. (…) (컴퓨터가) 한 댄가, 두 댄가 있는데 거기 검색 받으려면 세 명의 사인을 받아야 된다, 총장 사인 받아야 되고 무슨 당비서 사인을 받아야 되고 보위부장인가 보위, 아무튼 뭐 그쪽에 사람 세 명 사인을 받아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사용해도 검색 기록 이런 걸 다 남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 L: 여기 저기 다니면서 사인도 받아야 되고, 그게, 하, 인터넷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건 할 수 없이 다운로드 받는 과정이지, 근데 그것도 2015년쯤부터 조금씩 열어 놨지, 그 전엔 안 열어 놨거든요? (…) 검색을 못 해 봐요, 인터넷에서는. 내가 그냥 어디 뭐 있는지 알고 제출해서 그거를 받아보겠다고 내는 거지, 내가 여기(웹페이지) 안에서 하루 종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필요한 거 찾지 못 하거든요.

김일성종합대학 유학생 숙소에도 2010년대 중반 ‘인터네트실’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중반 즈음이 북한에서 학자 및 유학생들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던 시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학생 중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인원은 매우 소수이며, 대학 교원이나 연구원도 인터넷 상 검색을 할 수는 없고 사전 승인된 자료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북한의 학자와 학생들은 외국 자료를 주로 과학기술전당이나 인민대학습당에서 열람한다. 2010년대 후반 김책공업종합대학 박사원에 재학했던 연구 참여자 H는 두 장소에서 PDF로 업로드돼있는 외국 논문을 검색했다고 한다. 그러나 외국 논문들 중에서도 북한 당국의 검열을 통과한 자료만 볼 수 있으며, 최근 논문을 열람하지는 못하고 약 5년 전 자료까지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구 참여자 L에 의하면 그러한 외국 자료들은 북한에서 파견 보내는 교수나 연구원들이 해외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외국 웹사이트 자료를 “통째로 떠온” 결과물이다.

L: 북한에서 교환교수 내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연구원으로 내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그럼 이 사람들이 3년 정도 나가 있는데, 들어올 때는 아예 그냥 사이트를 통째로 떠오거든요. (…) 외국에 다녀오는 사람들이 보면 평균 3-4테라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 안에 꽉 채워 가지고. 이제 내가 뭐 이제 귀국이 한 달 남았다면 노트북을 한 달 동안 돌리는 거예요. 한 달 돌려서 사이트도 뜨고 뭐 필요한 데이터도 충분히 확보하고 그걸 가지고 오면 그것만큼은 장려하고, 국가에서. 그걸 '융성자료'라고요.

연구자: 융성?

L: 네, '융성자료'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 "문익점이 목화씨를 그때 훔쳐 가지고 들어온 거는 도둑질이 아니다. 이건 애국이다." 북한이 추구하는 바는 그거라서 외국에 나갔던 기술인재들은 그냥 데이터 빵빵하게 들어가거든요. (…)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 집이라던가 공공기관에 비치해두고 이용하면서 참고하는 거죠.

연구 참여자 L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보편화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외국에서 수집해 온 자료들을 북한 당국이 선택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에서 외국 자료를 검색했다는 연구 참여자 K는 정치적 문제가 없는 이공계열 자료의 경우 비교적 최신 자료도 열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직원이 아닌 일반 학생은 외국 자료를 대출하기가 어려웠다고 회상했다.

북한 주민들은 외국 자료뿐만 아니라 외국인과의 만남에도 제약을 받는다. 제4장 제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부르죠아 사상'이 침투될 것을 막기 위해 북한에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의 행동 및 현지인과의 접촉을 통제한다. 재북 유학생들은 북한 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들을 수 없고, 기숙사에서도 북한 사람 중에서는 특별 훈련을 거친 '동숙생'과만 소통할 수 있다. 유적지나 박물관에 현장학습을 갈 때도 안내원이 동행하여 가이드하고 유학생들을 감시한다. 2016년 김형직사범대학에서 공부한 Travis는 수기에 구소련이 했던 것처럼 북한 정권도 외국인들을 도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적었다. 외국인의 일거

수일투족을 북한 당국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이러한 통제 때문에 Travis와 Alek은 북한이 George Orwell의 소설 『1984』 속 경찰국가와 같다고 느꼈다. 국가가 국민 개개인을 감시하고 사상을 통제하는 스탈린주의 체제를 모델로 한 경찰국가는 기술독재를 기반으로 국민들을 우민화한다. 전체주의체제의 끊임없는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이중사고(doublethink)'[151]를 할 수밖에 없다. 김일성종합대학 박사원에서 공부한 Alek(2020)은 탐방기에 북한 생활에서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북한 사람들의 위선(僞善)이었다고 적었다. 그는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들에 대해 그들의 지식에 대한 갈망이 충족되지 못하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 나는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지식에 대한 갈망을 느꼈다. 이런 측면에서 그들은 다른 나라의 학자들과 똑같다. 내가 만났던 학자들은 아름답고 매력적인 인격의 사람들이었다. 그들도 지식인답게 외국학자들과 학술교류나 협력하고 싶어 했으며, 외국의 연구 활동과 외부 세계 전반에 호기심이 많다. 그러나 아쉽게도 북한의 내외적 상황은 그들의 지식에 대한 탐구를 저해했다. 그들은 북한 최고대학의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쓸 수 없다(반면에 우리 유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쓸 수 있었다). 외국 책을 접할 기회도 별로 없다. 중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가서,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동료들을 만나거나 그들과 생각을 교류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알렉 시글리, 2020).

외국인에 대한 북한의 과한 통제는 종종 규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 심지어 고문으로 이어졌다. 극단적인 예로 북한에서 억류되

---

151) '이중사고'는 George Orwell이 『1984』에서 사용한 조어로, 두 개의 상반된 내용을 모두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이다. 감희(2021)는 만성적 속박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중사고로 설명할 수 있으며 특히 김일성 사망 시의 집단적 애도장면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고 예를 들었다. 『1984』 속 주인공 윈스턴이 빅브라더에 대해 그러했듯이 북한 사람들도 이중사고를 통해 김일성에 대해 '사랑의 아버지' 대 '두려운 아버지'의 두 가지 모순되는 신념을 모두 받아들이는 숙련가라는 것이다.

었다가 2017년 미국으로 송환된 뒤 사망한 Otto Warmbier 사건이 있다. 과거에도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되어 신체적 위해를 당한 적이 있었으나, Otto Warmbier 사건은 평범한 대학생이 사망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파장이 컸다.[152] 미국 국무부는 그의 사망 3개월 뒤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취했고,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평양과학기술대학의 교수 채용이나 국제학술토론회 개최 등에 큰 영향을 끼쳤다.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제시되었던 목표처럼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주요 대학들이 세계일류급대학들과 경쟁하고 국제학술교류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북한의 과도한 통제는 북한 대학들이 세계적 추세를 지향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라는 말은 정신적 통제로 해석될 수도 있다. 외부 자료 검색, 국제학술교류나 공동연구, 유학 등에 대한 감시는 물리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북한 학자와 학생들을 통제한다. 연구 참여자 A는 북한의 생활총화, 숙청과 같은 끊임없는 감시체계가 북한 학자들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과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보았다.

> A: 북한 안에서 그거(자본주의 경제) 잘못 공부했다가는 주변에 눈치 보이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 자본주의 경제를 배웠다고 조금 소리치고 뭐 해야 된다고 자꾸 그러면 옆에서 “어쭈, 저놈 이상한 물 들었네.” 자꾸 이러면 나중에 심각하게 딱 비판할 때 당하거든요. (…) 시장과 개혁, 이런 새로운 분야를 국가에서 막 뭐한다고 해서 잘못 따라 하다가는 숙청할 때 자기가 제일 먼저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북한 내에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 내가

152) 미국 버지니아주립대학교 경영학부 소속이었던 Otto는 2015년 말 패키지여행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가 평양 양각도호텔에서 정치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2016년 3월 북한 최고 재판소가 그에게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고, 북한 당국은 17개월 동안 그를 억류했으며, 2017년 6월에야 그가 혼수상태임을 알리며 석방했다. 결국 그는 고문으로 뇌조직이 손상되어 식물인간이 된 상태였으며, 미국으로 송환된 지 6일 후에 사망했다. “오토 웜비어” 나무위키 (검색일: 2022.9.20.)
https://namu.wiki/w/%EC%98%A4%ED%86%A0%20%EC%9B%9C%EB%B9%84%EC%96%B4

뭐 %를 말하기는 그렇지만 내 감각으로는 그동안에 (북한 학자들과) 얘기해본 바로는 자본주의 경제학이 왜 나쁜가를 90% 얘기하고, 10% 정도를 “이렇게 효용성이 있는데 주의해서 잘 활용하면 된다.” 그 정도 배운다고 봐요.

지식인 계층은 북한에서 일찍이 사상적 개조와 끊임없는 감시의 대상이었다. 북한에서 “일정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사회계층”으로 정의되는 ‘인테리’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의 한 성원”이 될 것을 요구받는다. 김일성 시대부터 지식인은 생산실천과 분리되어 개별적이고 시간이 소요되는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혁명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보고 통제를 가해왔다(조정아 외, 2008). 특히 연구 참여자 A가 언급한 경제학 분야 등 사회과학 연구에는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서로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구조는 학자들이 스스로를 검열하여 혁신에 소극적이게 만들고 있다.

또한 세계적 추세를 지향할 때 북한 학자와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세계시민성이 아닌 경쟁의식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교육 세계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세계시민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시민(citizen)이 아닌 인민(people)의 지위에 머물러 있으며, 북한 고등교육의 세계적 추세 지향성은 주민들의 세계시민성이 아닌 지도자의 의지를 바탕으로 추구되고 있다. 1960년대 후반 수령 유일체제를 수립한 이후 북한 주민들은 조선로동당의 방침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었고, ‘사회주의 대가정’의 일원으로서 어버이 수령의 지도를 받아야만 했다. 「고등교육」에서 지식경제시대 인재의 필수적 자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창조력’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발휘될 수 있는 것이지만, 북한 주민들의 자율성은 매우 제한받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세계적 추세를 따르는 것 또한 김정일과 김정은의 교시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식 담론을 벗어난 다른 방식은 존재할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 연구 참여자들에게 재북 당시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았는지 물어봤을 때 모두 들어본 적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경쟁의식은 세계적 추세 관련 공식 담론에서 쉽게 관찰된다. 북한 「교육신문」의 기자들은 오늘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 강자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약자가”[153] 되는 “세계적인 과학기술경쟁”[154]이 벌어지고 있다는 시대인식을 보인다. 약자로 뒤처지지 않고 “세계와 경쟁하자면 세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155] 북한에게는 성열관(2010)이 정리한 교육정책 차용 동기에 대한 관점 중 두 번째인 국제경쟁에서 대등해지기 위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 적용된다고 하겠다.

북한은 공식 담론 상 국제경쟁에서 대등해질 것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앞서 나가고자 한다. 김정일은 2009년 김일성종합대학에 하사한 현판에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 보게 하라!”라고 적었고, 2015년 「교육신문」 기사에서는 “세계를 따라가는 식이 아니라 세계를 압도하는 수준으로, 우리 식으로 설계하자.”라는 표현이 등장했다.[156] 이는 북한 당국이 스스로를 “세상에 부럼 없”는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라고 홍보하는 것처럼 세계적인 경쟁에서도 앞서 나가야 한다는 조급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후반 국제경연대회에 참가했으나 “동상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성과에 만족하지 못했었다는 연구 참여자 L의 경험에서 북한의 국제적인 경쟁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의 경쟁의식은 특히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 2009년 「교육신문」의 제50차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대한 기사에서 기자는 “조선이 미국을 보기 좋게 누르고 순위권에서 앞선 것을 보니 잠재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 단장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다.[157] 2017년 “위대한 당의 령도(영도)따라 교육혁명의 드세찬 불길로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아래와 같이 적고 있

153) “교원과학자들은 더 높은 과학연구성과로 조국의 부강번영에 적극 기여하자,” 「교육신문」 2009년 7월 16일, 1면.
154) “CNC-《련하기계》의 첫 개발자들,” 「교육신문」 2010년 3월 4일, 4면.
155) “인재와 교육,” 「교육신문」 2014년 4월 3일, 4면.
156) “세계를 딛고 올라설 배짱으로,” 「교육신문」 2015년 1월 22일, 3면.
157) “우리 나라 학생들이 제50차 국제수학올림픽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교육신문」 2009년 8월 6일, 1면.

다.

>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의 웃음,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높아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다. (…) 우리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와 창공높이 메아리치는 아이들의 노래소리는 미국본토에 떨어지는 수백발의 핵탄보다 더 위력하다. 모든 교육일군들과 교육자들은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발양시켜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북《완전파괴》를 쥐쳐대는(떠들어대는) 늙다리미치광이가 완전히 기절초풍하게 하여야 한다.[158]

미국에 대한 북한의 적대감은 6.25전쟁 이후의 국가 정체성이라고 할 만큼 뿌리가 깊다. 북한에게 '미제'의 존재는 대외적으로 생존을 위한 협상의 대상이고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결속을 위한 명분이다. 인용한 사설에서처럼 교육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미제와 그 추종세력"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절초풍"하도록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설이 쓰였던 2017년은 세계적 추세 관련 기사 분석 시기 중 대외 적대감이 가장 높았던 3기에 해당되며 당시 북미관계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호전적인 내용의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다.

그러나 적대감만이 미국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설명해주진 않는다. 북한의 공식 담론에서는 지속적으로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지만, 정작 외부 정보를 알고 있는 주민들은 미국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다. Travis는 그의 책에 "미국을 향해 내비치는 적대감을 내게 드러낸 북한 사람은 여행하면서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고 적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한 연구 참여자 H는 북한 학생들이 미국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묻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H: 그냥 학생들의 감정이 미국이 다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

158)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교육혁명의 드세찬 불길로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자," 「교육신문」 2017년 10월 5일, 1면.

교육도 발전하고 뭐도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 최고라고 생각하지, 모든 분야에서. 연구에서도 최고. 적대감은 잘 모르겠어요. (…) (미국이 최고라는 것을)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외국에도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아무튼 미국이 제일 강한 나라니까, 뭐 잘 사니까 강한 나라겠죠. (…) 지방은 잘 모르겠는데 평양은, 대학생들 다 아는 거 같아요. 엄청 외국하고 교류가 많아지고, 또 교수님들 중에 외국 가서 유학하신 분들 많고 이러니까. 그래 갖고 진짜로 우리 교수님 중에 어떤 분은 강의하시다가 막 "하버드 대학생들은 지금 너네하고 똑같은 나이에 앉아서 밤에 2시간씩 자며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야, 세계적인 학자가 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강의하니까 끄떡끄떡 졸아 가지고." 엄청 그렇게 들었거든요.

2010년대 중후반 김일성종합대학과 학술교류한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 A도 북한 학자들이 외국의 대학들과 교류하고 싶어 하는데, 특히 미국의 대학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공식 담론에서는 미국을 적대시하고 있지만 실상 북한 주민들은 세계적인 미국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정책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등 주요 대학을 세계일류급대학으로 발전시키려 하는 북한 당국이 세계 대학평가 순위에서 늘 가장 많은 상위권 대학들이 소재한 미국의 교육정책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고등교육」 등 공간문헌의 세계 교육발전 추세 관련 여러 기사에서는 참고 국가를 '어느 한 나라'라고 익명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그 중에는 북한과 적대관계에 있는 미국, 일본, 한국이 포함될 것으로 추측된다. 실상은 미국 소재 일류급대학들의 성과를 참고하면서도 공식석상에선 적대감과 경쟁의식만 내비쳐야 한다는 점도 북한 사람들에 대한 당국의 정신적 통제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베이징 컨센서스의 영향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두 번째 특징은 인적·물적 교류가 중국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고등교육 국제 교류는 1990년대 이후 외교관계를 반영하여 다각화되었으나, 냉전시기 소련이 주요 교류 대상국이었던 것처럼 현재는 중국에 교류가 집중되어 있다. 국제교류에 외교관계가 반영돼있는 것은 비단 북한만의 특징이 아니지만, 북한의 교육 교류는 학자 및 유학생의 관심사보다 국가적 목적 위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직접적으로 외교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에게 가장 밀접한 교류대상국이며 동시에 개혁개방 후 극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해온 바람직한 모델이다. 북한과 중국은 6.25전쟁 이후 혈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서방과의 완충지대로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이다. 탈냉전과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는 다소 소원해졌으나, 중국에 북한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이념적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다시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다. 1990년까지 북한의 대외무역 중 대중무역은 11%에 불과했으나, 1991년부터는 22%로 중국이 최대 비중의 교역국이 되었고, 이후 핵문제와 북일관계 악화 등으로 타국과의 교역이 감소하면서 대중 의존도는 더 높아졌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북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의 지원이 단절된 북한을 도우면서 종속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김계동, 2012). 북한은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중국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으며, 고등교육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제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고등교육」의 세계 교육발전 추세 관련 기사에서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는 국가이며, 북한 학자들이 국제협력 공동연구를 가장 빈번하게 함께 수행한 국가이다. 그도 그럴 듯이 <표 20>에 정리한 북한 측 개최 국제학술토론회의 외국 참가자 소속기관 중 59.5%가 중국 소재 기관이다. 북한이나 중국에서 개최되는 학술토론회에서 학자들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그 결과 다양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온 것으로 보인다. 학생교류 또한 중국과 가장 밀접하게 이루어져왔는데, 북한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중국에 파견하기도 했고 재북 유학생의 출신국도 중국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00년대 후반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유학생으로 선발됐던 연구 참여자 K는 당시 북한 유학생의 행

선지가 중국밖에 없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북한 입장에서 이념적 동맹국인 중국은 사회주의 교육학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발전시켜왔다는 점에서 가장 가깝게 참고할 수 있는 국가이며, 안심하고 학생과 학자들을 파견할 수 있는 유일한 행선지이다.

더 넓게 보면 북한뿐만 아니라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중국 모델을 참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와 대조시켜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라고 부른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2004년 Joshua Cooper Ramo가 영국 외교정책센터를 통해 발표한 보고서의 제목이다. 1989년 미국이 중남미 국가들에 제시했던 신자유주의적 개혁처방인 워싱턴 컨센서스가 대부분의 국가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으로 판명난 상황에서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개념은 중국 내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황핑 외, 2016).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축적한 부를 작은 국가들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활용하면서 북한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은 국제사회의 표준 준수와 시민사회 조성을 강요하는 World Bank나 IMF와 같은 서구 국제기구에 금융지원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었다(Halper, 2010/2011).

Ramo는 베이징 컨센서스를 개발도상국 발전에 대한 세 가지 원칙으로 정의하고 있다. 첫 번째 원칙은 첨단기술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후발기술로부터 발전을 시작해야 한다는 기존의 가치를 재정립하여 첨단기술을 혁신해야 하고, 그 변혁을 통해 개혁 중의 마찰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원칙은 발전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면 그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발전 도상에 희망, 야심, 정치적 불안정, 잘못된 정보, 두려움 등이 존재하나, 지속가능성과 평등성을 우선순위에 두며 혼란을 관리하는 것이다. 마지막 원칙은 패권적인 강대국에 대한 지렛대의 역학, 즉 비대칭적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여 다자안보를 제시하며 모든 나라가 스스로를 방위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자주적 이론을 주장한다(황핑 외, 2016).

베이징 컨센서스는 '권위주의 체제하의 시장경제 발전'을 의미하기도 한다. Stefan Halper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네트워크가 미국과 서구 국가들이 행사했던 영향력과 함께 이들의 자유주의체제를 서서히 침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효과로 인해 북한뿐만 아니라 이란 등 중동 지역에서 핵확산 방지 노력이 지장을 받았고, 미얀마, 캄보디아, 앙골라 등에서 인권, 투명성, 거버넌스를 증진할 수 있었을 개혁이 저지되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대량살상을 위장하였고 아프리카에서는 격렬한 폭력이 지속되었다. 중국의 국가 주도형 자본주의 모델은 서구의 의제에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길을 가면서 독재체제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대안의 길을 세계적으로 선전하고 있다(Halper, 2010/2011).

중국의 대학들은 베이징 컨센서스를 위한 중요한 자원이다. Alan Hunter는 중국 모델의 문화전략 중 하나가 최첨단 IT, 제조업, 문화적 창의성 간의 시너지를 내는 융합(convergence)인데, 그러한 융합은 중국의 대학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중국은 연구의 향상, 학생 수 증가, 국제화의 측면에서 고등교육을 빠르게 개혁해왔고, 중국 정부는 국제적 인식의 관점에서 대학들이 네 가지 핵심적인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했다. 그것은 첫째, 세계 수준의 연구 성과를 생산하는 것, 둘째, 개발도상국의 교육 거점이 되는 것, 셋째, 다음 세대를 중국의 '세계시민'으로 양성하는 것, 넷째, 융복합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제2장 제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은 1993년 <발전강요>에서 교육 세계화 계획인 211공정을 발표했고, 1999년에는 세계일류대학 건설 계획인 985공정을 가동시켰다. 2009년부터는 베이징대학 및 칭화대학 같은 9개의 일류 대학들로 구성된 그룹 'C9'을 출범하여 중국 전체 연구 예산의 약 10%를 투자하고 있다. 또한 중국 대학들은 미국 대학에 대항하여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해당국 미래 세대들의 중국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증진시키는 투자로 간주하고 있다(Alan Hunter, 2015).

북한 또한 중국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받고 있는 국가로서 베이징 컨

센서스의 영향을 받고 있다. 북한 고등교육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철저한 국가 주도의 고등교육 발전이라는 점이다.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길을 걸으며 독보적인 성장을 이룩한 중국의 사례는 사회주의 진영이 아니었던 국가들에게도 권위주의 체제하의 발전모델을 제시한다. 하물며 사회주의 동맹국인 북한은 중국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대학교육 또한 중국의 국가 주도 발전모델을 참고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대학은 국가의 필요에 의한 소수 엘리트를 양성하는 기관이었다.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이후 대학교육 대중화의 길을 갔으나, 여전히 211공정, 985공정, C9 등 고등교육의 발전 및 세계화를 위해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1980-90년대 대학 수가 급속히 증가했을 때는 정부가 대학 합병을 주도하였다. 북한도 김정일의 교시로 시작하여 국가 주도로 세계 교육발전 추세를 따라잡으려 하고 있으며,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주요 대학을 세계일류급대학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2010년대 중반에 종합대학화를 실시했다가 2019년 말 다시 대학들을 분리한 것도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 교육체제이기에 가능한 일방적 정책이었다. 북한에서 인민들이 정부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할 확률은 거의 없으며, 대학도 당국의 선도를 따라가고 있다. 일당 독재인 북한의 체제를 고려할 때 국가 주도 모델이 반드시 중국을 따라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고등교육정책 수립 시 가장 유사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첨단기술의 혁신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혁신주도형 성장모델로, 개발도상국이 후발기술이 아닌 첨단기술부터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는 방대한 문제들이 산재해있었는데, 보건의료나 경제, 관리 등의 측면에서 가시적인 진보가 이루어져야만 단결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일부 영역에서의 혁신이 초고속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개혁의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광대한 국토 전체에 전선이 매설되기를 기다리기 전에 일부 지역에라도 먼저 광케이블을 까는 것이다

(황핑 외, 2016). 북한 또한 전국적인 인프라는 열악하지만, 평양을 중심으로 첨단기술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주요 대학들의 지식 생산이 자리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식경제시대'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2009년 CNC화와 함께 그와 같은 시대인식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2010년 김정일은 "CNC기술을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들이 개척되면서 인류는 인간의 지식에 토대하여 발전하는 지식경제시대에 들어섰다"며 최첨단 돌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조정아 외, 2020). 이후 북한 학자들은 이공계열 중심으로 첨단기술을 습득하고 연구하여 국제적 학술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북한 과학자들이 발표한 국제학술논문은 물리학, 화학, 수학 분야 논문이 많은데, 노경란 외(2016)에 따르면 2015년 북한의 논문 발표가 급증한 것은 대부분 중국과학원 등 중국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덕분이었다.

세 번째는 비대칭적 군사전략을 위해 고등교육 자원이 활용된다는 점이다. 중국은 초강대국 미국에 대항해 비대칭적 역량을 구축하고 있으며, 베이징 컨센서스는 모든 나라가 자주적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는 다자간 안보를 제시한다. Ramo는 중국이 군사력을 기르는 것이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상책"이라는 손자병법(孫子兵法)의 가르침처럼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황핑 외, 2016: 104). 북한은 탈냉전 후 1993년 NPT를 탈퇴하면서 미국과 직접적으로 협상해왔고, 핵을 개발하면서 비대칭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은 화평굴기(和平崛起)를 지향하는 중국에도 부담이 되지만, 정작 북한의 군사 도발로 국제 제재가 가해질 때마다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핵 개발을 묵인해왔다.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집착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구 사회주의 동맹국들을 뒷배 삼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장 제1절에서 분석한 것처럼 북한 「교육신문」에서는 수소탄 시험을 "세계첨단과학기술의 령마루"에 올라서게 한 성과로 선전했으며, 핵실험을 성공시킨 과학자들을 따라 배울 것을 장려한다. 1950년대부터 소련의 핵 기술을 배워온 북한은 1962년 영변에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하였고,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대학에 핵물리학원을 설치하여 국내 핵물리학 연구진을 양성해왔

다.[159] 현재도 김일성종합대학에 '핵물리학과'와 '원자에네르기연구소'가 존재한다(조정아 외, 2020). 2000년대 후반 보위부정치대학을 졸업한 연구 참여자 J는 군수업 관련된 북한 대학들에 대한 정보는 외부에 전부 공개되지 않는다고 증언했지만, 북한 고등교육 자원의 일부는 군사전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러니한 것은 북한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중국의 고등교육 세계화가 미국식을 따르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북한은 미국을 적대시하고 세계화가 '미제에 의한' '일체화'라고 비판하며 <표 17>과 같이 미국 파견 유학생 수를 줄여나갔다. 그러나 제2장에서 인용한 것처럼 중국 내에서는 베이징대학의 개혁안이 "미국 박사 출신들로 교수를 충원하여 SCI급 논문의 수를 늘림으로써 베이징대학의 랭킹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 존재하며, 중국 대학들이 하버드 대학 모델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崔恩珍, 2017). 중국의 대학들은 서양에서 규정해놓은 경쟁의 질서 속에서 미국 대학들을 벤치마킹하면서 대항해나가려 하고 있다. 중국식 교육 세계화 모델을 참고하고 있는 북한 또한 국제적인 대학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더 많은 연구 성과를 생산하려 하고, 유학생 교류를 확대하려 하는 것이 결국 서양 중심 세계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북한과 중국의 정치·경제체제가 상당히 다르고 고등교육 여건의 차이도 크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의 정책을 무차별하게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세계 교육발전 추세를 주체적으로 해석하여 교육현실에 맞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 『지식경제시대 고등교육 발전동향』 책의 참고문헌 중 89.2%가 중국 문헌인 것처럼,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개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인 중국의 사례는 북한 고등교육정책을 수립하는 학자들에게 시금석이 되고 있다.

159) "북한, 핵 기술·인력 어떻게 만들어졌나," 「한겨레」, 2006.10.13.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64187.html

3. 국제호환성 미비한 '세계적 추세' 모방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세 번째 특징은 프로그램의 국제호환성이 미비하지만 세계적 추세를 모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간 학문 자격을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호환성은 국제적 차원의 질 평가체계를 통해 보증되며, 교육 세계화가 실현된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 러시아는 볼로냐 프로세스에 가입하여 고등교육을 유럽 지역의 것과 통합하기 위한 개혁 조치들을 취했고,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후 다수의 공동 학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교육과정을 국제화함으로써 국제호환성을 갖추게 되었다. 베트남은 2000년 이후 대학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졌고 2007년 WTO에 가입하면서 더 많은 공동 프로그램을 유치했으며, 쿠바는 정부가 대학 자체 평가 및 인증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유학생들의 출신국에서 학위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은 두 가지 이유에서 아직 국제호환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교육서비스의 개방을 주도하는 WTO의 GATS 체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 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를 중심으로 교육 개방을 주장하는 국가들은 고등교육을 서비스로 간주하고 GATS의 규칙을 고수한다. 2022년 현재 WTO 가입국은 164개국이고, 이 외에 30개국이 옵서버(observer)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 사례로 살펴본 러시아, 중국, 베트남, 쿠바도 모두 WTO 회원국이다. 북한도 1997년 IMF 사절단을 공식 초청해 가입 의사를 밝혔고 2005년 WTO 옵서버 가입을 시도하였으나, 미국, 일본 등의 반대와 핵실험 문제, 통계 공개문제 등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기구와 북한 양측 모두 미온적인 태도로 돌아섰다(최장호, 최유정, 2018). 북한의 핵 개발은 체제 생존을 위한 비대칭 전략이지만, 그로 인한 국제 제재, 국제기구 가입 제한 등 기회비용이 지나치게 큰 비효율적 전략이다. 2018-2019년 북한은 한국,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가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2022년 9월 핵무력을 법제화

하였다.[160] 그러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상 북한의 WTO 가입은 불가능하다. 인접 국가들 간 교육 프로그램 인정 시스템도 활발하게 개발되어 있는데, 24개국이 가입해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교류협의회(University Mobility in Asia and the Pacific, UMAP)에도 북한은 가입되어 있지 않다.[161]

둘째, 북한 교육의 특성상 국제적인 질 인증이 적용되기 어렵다. 학생 및 학자의 국제 교류는 프로그램의 국제호환성을 위해 국가 간 고등교육의 질 보증을 필요하게 하였다. 세계적으로 고등교육이 확대되어 전통 있는 대학들뿐만 아니라 신생 사립대학, 원격교육 프로그램 등이 증가했기 때문에 교육의 질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이 제기되었다(Altbach, 2016). 한 예로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질 평가를 시작한 홍콩의 경우 대학 학자들이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부 국회의원들은 대학 졸업자들의 성취 수준 감소를 고려했을 때 그만한 "돈의 가치(value for money)"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홍콩 대학보조금위원회(UGC)는 성과 지표 또는 품질 보증 메커니즘에 의해 고등교육 질이 향상된다고 보고 졸업생과 같은 "산출물"에 대해 연구하고 측정해왔다. UGC는 대학이 자체 평가를 제대로 제도화했는지 점검하기 위해 1990년대 세 차례의 RAE(Research Assessment Practice)와 1997, 2003년 두 차례의 TLQPR(Teaching and Learning Quality Process Audit)을 실시했다(Mok, 2005b). TLQPR은 교육과정이 어떻게 설계되는지, 교수법과 학습법은 어떤 과정으로 결정되고 개선되는지, 교직원들은 교육 임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등의 질문을 중심으로 각 대학의 교수학습을 평가한다(Mok, 2000).

북한 고등교육 프로그램이 국제 질 인증을 받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사상교육이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따르면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사상교육은 북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세계적 추세에 맞게 교육을

160) "與 "북한 핵무력 법제화, 여전히 국제정세 오판…고립자초"," 「연합뉴스」, 2022.9.9.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9033901001

161) UMAP 홈페이지 (검색일: 2022.12.20.) https://umap.org/member-directory/

변화시키고 있는 김정은 시대에도 정치사상교육은 '5대 교양(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핵심 내용으로 하여 이어져오고 있다(차승주, 2019). 제4장 제3절에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에서 유학생 대상 수업은 '류학생용' 교재로 분리되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북한 학생 대상 수업과 마찬가지로 정치사상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8년 평양외국어대학교에서 조선문학 수업을 수강한 영국인 Peter Ward의 김일성, 김정일 위대성교양 때문에 당황했다는 진술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피터 워드, 2018). 북한 고등교육은 교육내용을 실용화·종합화·현대화하고 토론식 교수법 및 학습자 중심교육을 도입하는 등 세계적 추세에 맞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고한 정치사상교육 내용 때문에 TLQPR과 같은 질 인증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사상교육을 이어가는 한, 북한 고등교육이 국제호환성을 갖추기는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고등교육 프로그램이 국제 질 인증을 받기 어려운 이유로 또 하나는 능력에 따른 평가 및 선발체계가 공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 교육당국은 세계적 추세에 따라 고등교육정책을 변화시키고자 하지만, 재정적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2006년 기준 북한의 GDP 대비 국가 교육예산의 비율은 8.0%로, 2019년 남한의 비율 18.7%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낮은 비율의 빠듯한 교육예산을 소수의 종합대학, 중앙대학 및 국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전공에 집중하여 지원하고 있다. 교육예산이 불균등하게 지출되다 보니 수도-지방 간, 대학 간 교육격차가 큰 상황이고, 무상교육을 표방함에도 예산 부족분을 학생들에게 부과하다 보니 그 과정이 비공식적이고 은폐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조정아 외, 2020). 고난의 행군기 이후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교원들에 대한 배급도 크게 약화되었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 결과에 따르면 실상 대학 교수들도 학생들로부터 '과목 대처비'라고도 하고 '도덕점수'라고도 하는 금액을 받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형편이다(김유연, 2022). 연구 참여자 L은 학생들이 교수의 "수입원"이라고 표현하며 경제적 도움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 교수들이 시험 부정행위를 눈감아 주기도

하고 성적을 올려주기도 한다고 증언했다. Alek Sigley(2020)에 따르면 그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유학한 2018-2019년 장기 유학생의 95% 이상을 차지하던 중국인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자녀였고, 그 중 다수는 교수에게 “뇌물을 바침으로써 과목을 통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학교육이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갖기 어렵고, 국제 교류 시에도 북한 학생 및 학자들의 자격이나 북한 고등교육의 질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유학생 교육에 있어서도 능력에 따른 평가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북한 고등교육 프로그램이 국제 질 인증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 북한은 과학기술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은하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및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살림집 등을 건축하고 제공해왔다. 또한 응용분야 연구소들에게 수익사업을 장려하여 이익 중 일부를 과학기술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IT 등 일부 핵심 분야는 해외진출을 확대하여 수익을 통치자금 및 국방 분야 과학자 장려용으로 활용하고 있다(이춘근, 김종선,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원과 연구사들의 형편은 전반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며, 대학 졸업 후 직장에 배치될 때도 부정부패가 존재한다(김유연, 2022). 이렇게 교육과 직업배치 체계에서 능력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다 보니 당국의 요직에 유능한 인재들이 자리하지 못한다. 국가과학원에서 근무했던 L은 열악한 처우 때문에 의욕을 상실했고, 의도적으로 시험에 낙제하여 노동자가 되었다고 진술했다.

> L: (북한) 대학에서 1등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에 배치해줘야 되잖아요. 영어를 엄청 잘 하면 최소 외무성에는 배치를 해줘야 되는 거고. 성 중앙기관에 그냥 들어만 앉아 있으면 충분히 먹고 사는 그런 자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좋은 자리에 대한 배치가 없어요. 대학생은 그냥 대학 졸업하면 ‘똥통’에 박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올라와야 돼요. (…) 실력 있는 사람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회다 보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대학이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교육열풍이 안 분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 잘해서 인생이 나아져야 공부를

하지, 그러지 않으면 왜 공부를 해요? 저는 그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바보같이 공부 잘하는 척 까불다가 인생이 되게 어려워졌다고. 저도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대학 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졸업 배치는 내가 원하지 않던 아주 나오기 어려운 곳으로 갔고, 그럴수록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길을 돌고 돌아서 노동자, 제일 하층으로 오는 데 8년이 걸렸어요.

선발 및 보상체계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은 북한 고등교육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홍콩의 예로 돌아가서 국회의원들이 고등교육을 위한 국가재정 투입에 대해 ‘돈의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일 것이다. 대체로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 규모와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되느냐가 대학의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교수들의 보수 수준은 학자들의 국제 이동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북한은 세계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교원, 연구사들에게 물질적 보상을 충분히 제공하기 보다는 그들의 헌신을 요구하게 되었다. 김정일은 2008년 5월 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제국주의 세력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 책동”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와 난관”이 있지만, 교육일군들이 각성하여 교육사업에 매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162] 북한의 경제난과 교육자원 부족의 이유를 외국의 압박 때문인 것으로 돌리면서 교육 종사자들의 ‘각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교육신문」에서 교원, 연구사의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긍정교양기사는 난관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의 “자신만만한 배짱과 담력” 그리고 “피타는[163] 탐구와 헌신적인 투쟁”으로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했다는 클리셰를 따른다.[164]

---

162) 김정일,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08.5.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9), 2면.

163) “[북한어] (주로 ‘피타게’, ‘피타는’ 꼴로 쓰여)몸과 마음을 다 기울여 힘겨움을 이겨 내며 애쓰다.” 네이버 국어사전 (검색일: 2022.10.10.) https://ko.dict.naver.com/#/entry/koko/1ad836585eca4797b9a845af46be19ff

164) 예를 들면, 휴대용 플라즈마 절단기를 개발했다는 김책공업종합대학 나노물리

북한 고등교육 프로그램은 국제호환성이 미비하기 때문에 소수의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을 뿐이다. 북한은 입국 유학생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Alek은 유학 당시 95% 이상 차지하던 중국 유학생들을 제외하면 장기 유학생으로는 평양 주재 외교관 및 대사관 직원의 자녀들이던 베트남인 5-6명, 라오스인 2명, 그리고 캄보디아, 몽골, 캐나다, 호주에서 온 유학생 1명씩이 전부였다고 회상했다(알렉 시글리, 2020). 2016년 Travis와 함께 김형직사범대학에서 공부했던 프랑스인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 때문에 북한에 유학을 가는 경로는 비공식적으로도 존재한다. 국제사회의 일원이지만 핵 개발로 국제제재를 받고 있고, 세계적 추세를 따르려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의 국제호환성을 갖추지 못한 북한의 특수성 때문에 유학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호환성이 미비하다고 해서 세계적 추세에 맞춘 북한 고등교육정책의 변화가 의미 없다고 볼 순 없다. 제4장 제4절에서 분석한 것처럼 북한은 2000년대 이후 세계 교육발전 추세를 연구하여 고등교육 부문에 적용함으로써 기술적으로 세계 고등교육 추세에 상당히 동형화되었다. 통계자료를 근거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대학을 세계일류급의 '연구형 대학'으로 발전시키려 하고, 교육 정보화 관련 기술을 도입하며 교원들의 학위 취득을 강조하는 등 1990년대 고난의 행군기 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던 시기와 비교하면 북한 고등교육은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대학 내 학생 평가뿐만 아니라 입시과정에도 비리가 만연해있었는데, 2017년 대학입학원격시험을 도입한 후로는 비리가

공학연구소 과학자들은 "연구사업에 필요한 자료도, 이 기술을 개발해본 경험도 없었지만" "기어이 세계를 앞서나갈 혁명열, 투쟁열로 심장을 불태우며" 밤낮 없이 연구를 수행했다고 한다. 「교육신문」 기자는 '2017년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 중 한 교수가 "그 어떤 명예와 보수, 직위도 바람이 없이 높은 실력과 순결한 량심(양심)으로 과학탐구의 길을 꿋꿋이 걷는 과학자"라며 칭설한다. 대의를 위한 개인들의 자발적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이 교원과 연구사들이 연구 성과를 내는 데에도 적용된다. "교원, 연구사들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강성국가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자," 「교육신문」 2013년 7월 18일, 1면; 우리 식의 휴대용플라즈마절단기 개발," 「교육신문」 2017년 1월 12일, 1면; "2017년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들(3)," 「교육신문」 2018년 3월 29일, 4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김유연, 2022). 북한은 DiMaggio & Powell(1983)가 정리한 세 가지 동형화 유형 중 모방적 동형화 메커니즘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핵심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타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의 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하듯이 북한도 중국, 영국, 독일 등의 교육발전 추세를 북한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개혁개방 시대를 대비하여 고등교육의 국제 호환성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제 2 절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요인

그렇다면 북한은 왜 세계적 추세에 맞게 고등교육정책을 변화시켜왔을까? 2009년 김정일이 “세계를 보라!”라고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김정은 시대에 그러한 기조를 계승·발전시킨 요인은 무엇인가? 아직까지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실시하지 않아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고 있고 경제적 역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세계적인 교육강국’이 되려는 목적이 무엇일까?

어느 나라건 교육정책은 미래에 대한 준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정책은 국가 발전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변화의 요인을 추적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북한이 세계적 추세에 맞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분야는 교육뿐만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도 해당된다. 김정은 집권 후 2010년대 중후반에는 ‘최첨단 돌파’라는 구호를 통해 선진경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넘어 첨단과학기술 분야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있다(최은주, 2019). 이 절에서는 북한의 미래 발전방향을 가리키는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요인을 국제적 맥락 및 북한 내 경제, 사회적 맥락과 연관지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세계화 시대의 학술적, 경제적 경쟁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대학 간 국제 비교와 경쟁을 유발했고, 각국이 대학 평가순위를 신경 쓰게 만들었다. QS, THE, ARWU 등 주요 대학 평가 결과는 매년 전 세계 언론에서 헤드라인으로 다뤄진다(Altbach, 2012). 각 대학은 순위가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에 따라 찬사를 받기도 하고 압박을 느끼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정부 보조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받기도 한다. 북한도 치열한 세계화 시대 국제경쟁의 영향으로 고등교육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1절에서 분석한 것처럼 북한 당국은 작금을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 강자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약자가”되는 “세계적인 과학기술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 담론에서는 “세계를 압도하는 수준”으로 앞서 나가고자 함에도 북한 대학들은 주요 세계 대학 순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세계적 추세에 따라 고등교육정책을 변화시킨 것은 더 이상 밀려나지 않기 위한 추격전략(catch-up strategy)이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고등교육정책 변화는 김정은 시대 경제발전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 김정일이 세계를 보는 안목을 가질 것을 지시했던 2009년 UN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명목 GDP는 216개국 중 119위였다.[165] 고난의 행군기 이후 2000년대 들어 추격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은 ‘단번도약’으로 집약된다(최은주, 2019). 위에서 베이징 컨센서스의 원칙 중 하나로 정리한 것처럼 북한도 후발국가임에도 첨단기술을 혁신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과학기술 발전을 경제 건설의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삼고 첨단기술 혁신을 통해 빠르게 선진 경제수준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그것을 연구하고 적용할 인재들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이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기관차, 국력을 과시하는 중요징표라면, 과

165) UN Statistics Division 홈페이지 (검색일: 2022.10.11.)
https://unstats.un.org/unsd/snaama/basic

학기술의 어머니는 교육"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이러한 발전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166] 북한의 주요 대학들을 세계일류급대학 수준으로 성장시켜 과학기술을 선도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추동할 인재들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2000년대 이후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생 및 교원, 연구사들의 해외 교류를 확대한 것은 대외 경제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제4장 제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은 2009년 자비유학생 제도를 도입하고 2018년부터 김일성종합대학의 유학생 전공 분야를 확대하였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북한 교원 및 연구사들이 독일, 미국, 캐나다 등에 시장경제나 영어교육 관련 연수를 가기도 했고, 2011년부터는 정기적인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러한 교육정책의 변화는 200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무역이 증가한 사실과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 제2장 제1절에서 인용했듯이 2012-2015년 북한의 무역의존도는 전 세계 평균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대외무역을 다원화, 활성화하는 만큼 다양한 국가와 거래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것이 북한 당국이 학생들의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경제 분야 교원들에게 시장경제 교육을 이수하게 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교육을 경제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것은 김정일 시대부터다. 제2장 제4절에 정리한 것처럼 1977년에 발표된 북한의 공식적 교육강령인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을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자본주의 국가들의 교육 목적과 구별된다. 「테제」를 바탕으로 교육사업이 운영되던 시기의 교육과 발전의 관계를 근대화 이론이나 인적자본론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1984년 발표된 김정일의 서한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는 교육발전을 경제건설에 필수적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이후 과학기술교육과 외국어교육이 강화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2008년 발표된 담

166)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교원들은 당의 교육혁명방침관철에서 직업적혁명가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가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달되였다," 「교육신문」 2019년 9월 12일, 1면.

화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에서 김정일은 아래와 같이 말했다.

> 뒤떨어진 교육 실태를 외면하고 계속 방임한다면 현대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일 수 없고 정치사상적으로나 과학기술적으로 준비된 훌륭한 인재를 키워낼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혁명과 건설, 조국의 앞날에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야 하며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167]

김정일은 북한의 교육 실태를 뒤떨어졌다고 평가하며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에 맞추어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정은 시대의 교육과 발전의 관계에 대한 인식도 김정일 시대 발전교육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김정은은 2014년 제13차 전국교육일꾼대회에서 발표한 담화문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에서 “지금 시대와 혁명의 절박한 요구에 비해볼 때 나라의 교육사업은 응당한 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혁명의 목표가 모든 학생들을 “강성국가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교육 실태를 후진적 상태로 평가하며 과학기술 및 경제 발전을 위한 교육발전을 추동하는 것이 김정일, 김정은의 교육 관련 노작에서 포착되는 패턴이다.

북한의 교육을 ‘세계 선진수준’과 비교하며 세계적 추세를 잘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도 김정일 시대부터다.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에서 김정일은 북한의 교육사업이 그동안 많이 발전하였음에도 “아직 현실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교육 수준은 “세계 선진수준에 비하여 뒤떨어졌”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중등일반교육 단계에서 외국어교육을 강화하여 “세계 선진 과학기술을 널리 받아들이

167) 김정일,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08.5.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9), 2-3면.

고 과학문화 분야에서 국제적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조급증은 1931년 Stalin의 연설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다. "구 러시아 역사에서 하나의 특징은 낙후와 후진성으로 인해 겪은 계속적인 패배였다. (……) 우리는 선진국에 50년에서 100년 뒤처져 있다. 그 간극을 10년 안에 메워야 한다."[168]

세계 선진수준과의 비교의식은 2009년 김정일이 "……눈은 세계를 보라!" 구호를 하달한 이후 더욱 강조되었고, 김정은의 2014년 담화문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와 2019년 노작 「교원들은 당의 교육혁명방침관철에서 직업적 혁명가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에서 심화되었다. 전자에서는 '세계적인 교육발전 추세와 좋은 경험들'을 현실에 맞게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면, 후자에서는 "세계에 도전하고 세계와 경쟁하며" 빠른 시일 내에 발전된 나라들의 교육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언술이 전개되었다(조정아, 2019).

Kornai(1992/2019a)에 따르면 사회주의 국가들은 지도부의 조급증과 빠른 발전에 대한 약속 때문에 중앙집권적으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주로 투자재나 국산품, 중공업, 군수공업, 신규 설비 혹은 거대 설비 등에 우선적으로 자원이 투입된다. 그 외 다양한 '우선순위 투자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는데, 투자 프로젝트의 계획 입안자들에게 강한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종종 비현실적이고 팽창된 계획이 만들어진다. 해당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과 완공 시기는 고의적으로 과소평가되며,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그 프로젝트는 지도자가 인민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중단될 수 없다. 미디어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조명하고, 관련 기관의 부서들은 사업의 진척을 모니터한다. 우선순위 사업의 요구사항은 모두 수용되며 "가장 혹독한 부족상황 속에서도 물자가 공급된다." 한편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업에서는 상대적인 지체가 발생하고 무성의하게 관리되는데, 그 후과는 얼마간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Kornai, 1992/2019a: 322).

---

168) J. V. Stalin(1947: 356), Kornai(1992/2019a)에서 재인용.

세계적 추세에 맞게 고등교육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은 북한의 우선순위 투자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김정일의 교시 이후 세계적 추세 지향성은 북한 학자들에게 우선순위가 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주요 대학들에는 세계일류급대학 수준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사명이 생겼고, 국제 연구 성과를 도출한 학자들에게는 “국가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라는 명예와 함께 살림집 등 물질적 보상이 주어졌다. 2015년 김일성종합대학 학자들과 교류했던 연구 참여자 B는 당시 학술회의 분위기를 아래와 같이 회상했다.

> B: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김일성종합대학 몇 주년에 관한 서신 같은 것을 보내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류급 대학이 되어야 된다는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그걸 받들어서 정말 일류급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뭔가 계속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저는 지난 2015년 미팅에서 제일 좀 인상적이었던 게 (…) 북한이 생각하는 일류급 대학이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세계적 추세가 이런데, 여기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중심이고, 이러이러한 카테고리가 충족되어야 일류급 대학이다.” 이런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많이 놀랐죠. 물론 거기서 약간 어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세계적 추세가 어떻고 예를 들면 교육과 연구와 국제협력, 이런 카테고리를 얘기하더라고요.

대학 교수와 연구사들에게 충분한 월급이 제공되지 않고, 외부 자료를 자유롭게 검색해볼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김정은이 지시했기 때문에 북한 학자들은 학교를 세계일류급대학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교육 당국에 세계적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요구하지는 못하고 부족한 상황에서도 최고지도자의 교시를 따라 “최첨단을 돌파”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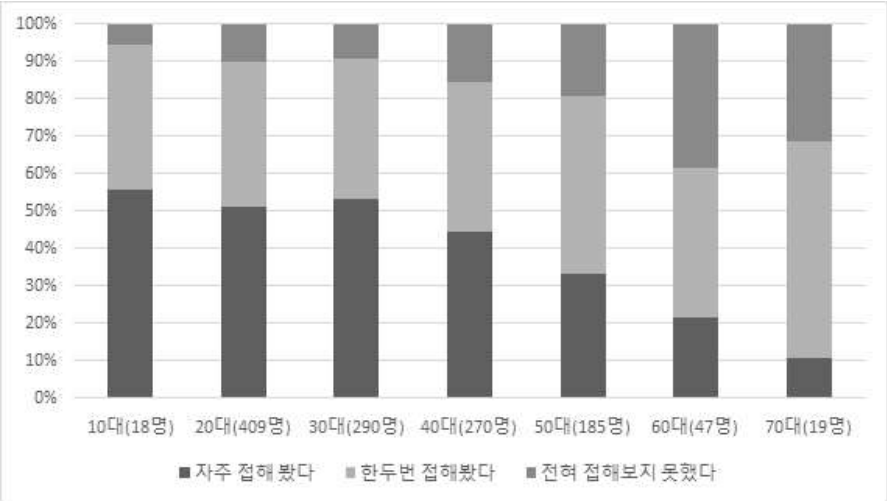
2. 엘리트 및 청년세대의 특성

우선순위 투자 프로젝트를 결정할 때는 대중동원과 정치 캠페인이 고려된다(Kornai, 1992/2019a). 신규 설비나 거대 설비 건설이 우선순위로 선정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은 빠른 성장에 대해 약속한 만큼 인민들에게 지도부가 잘해나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길 원하며, 가시적 성과를 내보이길 좋아한다. 미디어는 당의 지시에 따라 그러한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지도자의 업적을 칭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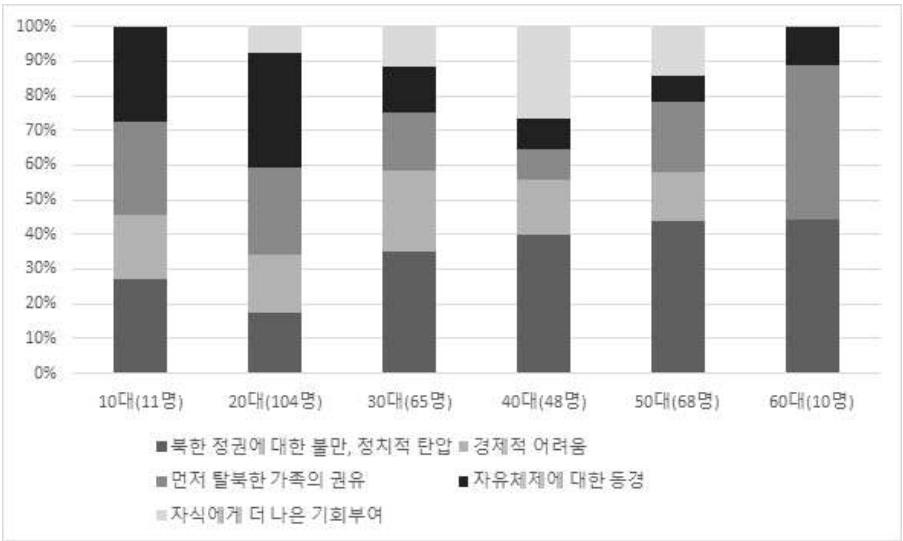
북한이 '세계적 추세'에 맞게 교육정책을 변화시키는 이유에는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동기도 포함된다. 고난의 행군기 이후 시장화와 대외무역이 확대되면서 북한에도 외부 정보가 유입되기 시작했고, 외국의 발전상을 알고 있는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북한 당국은 경제, 과학기술, 교육 등 분야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중국, 대만, 베트남 등에서 한류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에도 유입된 한국 콘텐츠들은 북한 주민들의 '남조선'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호의적으로 바꾸어 놓았고(강동완, 2021), 일부 주민들의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자각에도 영향을 미쳐 탈북까지 이어지는 사례들도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에서 남한문화를 자주 접할수록 지도자에 대한 지지도와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약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병로 외, 2022).

특히 북한에서 '새 세대'라고 칭하고 남한 및 서양 언론에서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는 1980-1990년대생 청년세대는 외부 정보와 문화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학령기에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배급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의무교육이나 사상교육을 느슨하게 받은 이 세대는 장마당에서 외부 정보를 듣는 데 익숙하고 그에 대한 단속을 피할 줄 안다. 2010-202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북한주민 통일의식』 결과 중 남한문화 경험도를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자주 접해봤다'의 비율이 40-70대에서는 점점 낮아지는 반면, 10-30대에서

는 50%대로 높았다(그림 9).



<그림 9> 북한이탈주민 연령대별 재북 당시 남한문화 경험도
출처: 김유연(2022).



<그림 10> 북한이탈주민 연령대별 탈북 결심 이유
출처: 김유연(2022).

또한 <그림 10>과 같이 탈북 결심 이유를 연령대별로 나눠보았을 때 30-50대는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 정치적 탄압'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20대는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을 1위로 꼽았다(김유연, 2022). 개인별, 지역별 차이는 존재하나 북한의 청년세대 중 많은 이들이 한국 콘텐츠를 향유하고, 일부 사람들은 자유체제를 동경하여 탈북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이다.

김철주사범대학 출신으로 해외 출장을 자주 다녔던 30대 연구 참여자 I는 북한 사람들, 특히 “나하고 같이 자라난 세대”도 “알 건 다” 알지만, 참고 사는 거라며 씁쓸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I: (외국에 나가면) 그냥 교육 받았던 거 하고 너무 틀리고,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북한에) 있을 때도 알긴 알았어요.
연구자: 뭔가 ‘외국이랑 우리(북한)랑 다르구나.’
I: 저기 사람들도 다 알 건 다 알거든요.
연구자: 그렇죠.
I: 알 건 아는데, 그렇다고 뭐……. 그렇지 않으면 뭐, 그렇게 이해하고 사는 거뿐이지. 뭐 모르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제 주위에 있던 분들, 이런 내 동창이나 나하고 같이 자라난 세대 정도는, 어느 정도는 다 알죠.
연구자: 외부 정보들을 다 들으니까.
B: 네, 어느 정도 다 알죠. 그래도 그렇고 참고 사는 거죠. (웃음)

청년세대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 북한 당국은 외부 정보 유입을 단속하는 한편 그것을 의식하고 교육 및 청년정책을 바꿔나가기도 한다. 김정은은 집권 후 조선로동당의 발전 3대전략 중 하나로 ‘청년중시’를 내세우며 청년동맹의 위상을 강화하고, 청년운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2016년에는 1993년 이후 23년 만에 청년동맹 대회를 개최하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명칭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변경하였고, 2015년에는 청년미풍선구자대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등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청년 관련 행사도 연달아 개최하였다(배영애, 2018).

세계적 추세에 따라 교육정책을 변화시키는 것도 청년세대의 지지를 얻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 K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구호를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멋있었”고

“명언”이었다고 말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 다녔던 20대 K처럼 북한에서 해당 구호를 희망적으로 받아들인 청년들이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해외 유학 기회를 얻었거나 평양과학기술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북한 변화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을 수 있다. 필자가 수행한 다른 연구에 참여한 20대 북한이탈주민은 김정은 위원장이 학생들을 외국에 많이 내보내고,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는 등 “젊은 사람들 마음을 알아주는 듯”했다고 말했다. 특히 리설주의 헤어스타일과 패션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과거에 규제했던 외국 방식의 의복 착용을 허용해주는 것을 주민들이 좋아했다고 한다. 2015-2017년에는 다시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부침은 있었지만, 젊은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이 청년세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김정은 지지도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김병로 외, 2022). 세계적 추세를 받아들이고 고등교육에 적용하려는 북한 당국의 노력 뒤에는 이러한 청년세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동기가 작동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뿐만 아니라 엘리트 계층도 북한 당국이 신경 쓰고 있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 시대의 북한 엘리트 계층은 만주 항일운동을 함께 했던 이념적·혈연적 공동체였으나, 김정일 집권 후에는 아버지 세대의 엘리트들과 함께 당 전문부서나 내각에 전문성으로 등용된 테크노크라트들이 대거 발탁되었다(배국열, 2010). 김정일 시대에는 빨치산 2세대인 60대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했는데, 그들도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국가 전면에 나서서 일할 일군들을 김정일이 40대 젊은 엘리트들로 교체했다. 이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외국에 대한 경험도 풍부했다(전현준, 2008).

즉, 김일성은 항일무장투쟁의 경험을 공유하는 엘리트들을 카리스마적으로 이끌었다면, 김정일은 당근과 채찍 방식을 이용해 다양한 연령대의 엘리트들을 통제하는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을 보였다고 평가된다. 거래적 리더십은 Burns가 처음 제시하고 Bass 등이 발전시킨 개념으로 리더와 팔로워 간 ‘주고 받기(gives-and-takes)’식 상호교환에 주목한다. 김정일의 리더십 중 권력엘리트에 대한 물질적 ‘선심정

치'는 거래적 리더십의 '조건적 보상(contingent reward)'으로, 숙청·강등·감시 등은 '예외에 의한 관리(management by exception)'로 설명 가능하다(임재천, 권지연, 2014). 부모가 보위부에서 근무했다는 연구 참여자 J는 소학교 때부터 고급중학교 초반까지 해외에서 유학을 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가 고급중학교 재학 시 북한으로 귀국했던 J는 북한이 특이한 국가가 아니고 외부 정보를 알고 있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J: (북한이)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데, 어떻게 보면 또 열어 놓기도 하고. 그니까 정부에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적정 시기에는 풀었다가 딱 당근, 채찍을 적절하게 쓰는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 소수가 다수를 지배해 가지고 흔들고 있죠. 여기(남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흔드는 거고, 거기(북한)는 그냥 힘으로 내려 누르는 거고, 사실상 구조상의 부분은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 외부 정보들을 접하는 사람이 극소수일 뿐이지.
연구자: 주로 이제 평양에 있는.
J: 그 평양에서도 이제 그런, 간단히 메달로 하면 금, 은, 동 급이라고 하면 동 밑의 부류들은 몰라요. 금, 은, 동 사이에는 어느 정도 네트워킹이 돼있는 상황이고, 적정선에서는 (외부 상황을) 다 알고, 그 금, 은, 동이
연구자: 알지만, 뭔가 "세계적인 흐름이랑은 우리나라(북한)가 정치를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기 안에서 우리끼리 으쌰으쌰 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합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J: 금, 은, 동 안에서는 자기가 사는 이 상황이 엄청 편하고, 다루기도 쉽고.
연구자: 그렇죠. 그냥 당에서 요구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
J: 이런 정치구조에서도 내 삶은 엄청 '해피해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바꾸려고 안 하는 거예요.

J는 북한을 합리적 지배연합이 작동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여타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북한의 엘리트들은 외부 정보를 알고 있고 북한 정치체제의 특수성도 인지하고 있지만, 스스로의 안위를

추구하며 체제에 순응하여 살고 있다는 것이다. 박영자(2013) 또한 북한 정권이 20년 이상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붕괴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절대 권력자와 소수 지배연합' 구조의 공고함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체제를 움직이는 지배연합은 장기 지속성과 견고한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을 김정은 체제에 충성하게 만드는 것은 선심-특혜적 예산분배(pork-barrel projects)와 정치적 후견(patronage)인데, 다른 한편 김정은은 대내외적 위기를 반란을 잠재울 기회로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외 정세를 바탕으로 김정은 정권이 지배연합을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전략은 첫째, 핵 개발 및 첨단기술 산업 발전으로 체제 자부심을 강화하는 것, 둘째, 남한과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위기 및 병폐를 부각시키는 것, 셋째, 세계화시대에 조응하는 반제 이데올로기 구축 및 사상교육 강화, 넷째, 전쟁 위기 고조와 신민족주의의 부흥이다(박영자, 2013). 첫 번째와 세 번째 전략이 세계적 추세에 따른 고등교육정책 변화와 관련이 있는데, 특히 첫 번째 전략에서 언급된 체제 자부심이 엘리트 계층의 합리적 충성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해 보인다. 이념과 혈연이 중심이 되었던 김일성 시대의 지배연합과 다르게 김정일, 김정은 시대에는 최고지도자와 지배연합 간 일종의 합리적 거래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엘리트들의 예외적 행동이 관리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자발적 충성을 얻어내기 위한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 세계화 시대의 고등교육 발전 추세를 북한 대학에 적용하여 기술적 동형화를 추구함으로써 엘리트들의 체제 자부심을 발양하는 한편, 그러한 첨단기술을 반제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데 활용하여 내부 결속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제 6 장 결론

제 1 절 요약 및 논의

1990년대 초반 냉전 종식 이후 세계화 현상은 급속도로 퍼져나가 교육에도 영향을 미쳤고, 체제를 전환한 사회주의 국가들도 교육을 개혁해 나갔다. 우리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제사회에서 비합리적 국가로 묘사되지만, 북한 또한 교육 세계화의 영향을 받아 고등교육을 변화시켜왔다.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자주적 교육정책을 고수하던 북한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 외국의 교육정책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했고, 2009년 김정일이 김일성종합대학에 세계를 보는 안목을 가질 것을 지시한 이후 본격적으로 세계 교육발전 추세를 고등교육에 적용해왔다.

본 논문은 '세계적 추세'에 따른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북한 공간문헌 및 기타 자료 분석을 통해 당국과 학계에서 인식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박재윤 외(2008)의 교육세계화 분석틀을 변형하여 북한이 고등교육정책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북한 대학 관련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들과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타 사회주의, 자본주의 국가들과 구별되는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특징과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009-2019년 「교육신문」의 기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세계적 추세 관련 담론은 네 시기로 구분해서 읽을 수 있다. 2009-2011년은 김정일이 세계적 추세를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재대국'을 건설하고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일류급대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시기다. 2012-2015년은 김정일 사망 후 고등교육의

세계적 추세 지향성이 그의 '유훈'이 되고, 학생 및 학자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했던 시기다. 2016-2017년은 북한이 4-6차 핵실험을 자행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상대적으로 세계적 추세보다 '자강력제일주의'를 강조했던 시기다. 2018-2019년은 한국,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고 다시 국제무대로 나오면서 세계적 추세 관련 기사가 증가하고, 특히 교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던 시기다.

북한은 제한적으로 교육제도를 개방하고 있다. 1999년 채택된 교육법과 2011년 채택된 고등교육법은 교육 교류협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의 경우 외국 교수 초빙과 유학생 교류, 세계적 수준의 학자 양성을 위한 과학연구원 교육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채택된 교원법은 교원의 해외파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의 외국 교수 초빙에 대한 조항은 평양과학기술대학 개교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2010년 개교한 평양과학기술대학은 북한의 유일한 사립 국제대학이자 남북합작 대학으로, 외국인 교수진이 영어로 북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매년 학부생 100명, 대학원생 60명 정도가 입학하여 전자컴퓨터공학부, 농업생명과학부, 국제금융경영학부, 의학부에서 공부하고, 대학원 1학년의 경우 단체 중국 연수도 가는 등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교수들의 교육 내용이 북한 측에 의해 검열되고,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존재 자체가 북한 내에서 은폐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평양과학기술대학 외에도 다양한 인적·물적 교육 교류가 진행되어 왔다. 먼저 인적 교류 중 학생 교류의 경우 1980년대까지 소련과 동유럽에 집중되어 있던 유학생 파견을 상당수 중국으로 전환했고, 2000년대 이후 국제기구 및 상대국의 지원으로 파견국을 다변화하였다. 2009년에는 자비유학생 제도도 도입하였다. 북한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도 점점 증가하여 2017년 기준 김일성종합대학에 33개국 출신의 유학생 100여 명이 재학했다. 2018년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뿐만 아니라 평양외국어대학에서도 유학생을 수용하기 시작했고, 김일성종합대학은 유학생 전공분야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에 나섰다. 교육자 교류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외국어 원어민 교사를 초빙했고, 북한 대학의 교원이 해외연수를 가기도 했다. 2011-2018년 동안에는 매년 1-2회로 총 13회 국제학술토론회가 북한에서 개최된 것으로 북한 신문에 보도되어 있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전까지는 남북한 학자들 간에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물적 교류는 인적 교류 수반 물적 교류와 교육 원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자의 경우 2018-2019년 북한의 장기 유학 수입액은 200만 달러로 추산되고, 가능한 범위에서 파악한 북한 학생들의 해외 유학경비 규모는 642만 달러였다. 후자의 경우 1995년 8월 대홍수 후 북한이 국제사회에 원조를 요청하였다. 주로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북한이 가장 여러 차례 원조를 받은 기관은 UNICEF였고, 여러 국제 NGO들도 외국 정부의 대북 교육 원조를 전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 정부와 NGO들도 2010년 5.24조치 이전까지는 활발하게 대북 교육 지원을 실시했다.

WTO 가입국들은 교육제도의 개방성과 인적·물적 교류를 바탕으로 고등교육 프로그램이 국제호환성을 갖추면서 교육 세계화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WTO에 가입하지 못했고, 고등교육 프로그램이 국제호환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2000년대 이후 '세계적 추세'에 대해 연구하고 그에 맞춰 고등교육정책을 모방하고 있다. 2005-2019년 「고등교육」 내 '세계교육발전추세' 코너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북한 학계에서 교육계획, 대학 운영,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공학, 교원 양성 및 관리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교육계획 작성이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중요해지고 있다며 교육통계를 바탕으로 교육발전전략을 세우려 하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는 통계 역량을 개선해나가려 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초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통계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또한 세계일류급대학을 정의하고 그 특징을 소개하는데, 세계일류급대학이 반드시 연구형 대학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북한 당국에서는 SCI급 논문 출판을 장려하고 있으며, 박사원 교육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교육 내용 및 방법의 경우 실용화, 종

합화, 현대화가 세계 교육발전 추세라며 소개하고 있고, 토론식 교수법, 문제에 기초한 교수방법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연구하여 대학 교육에 적용하고 있다. 교육공학 중에서는 CAI, 교수용 멀티미디어, 컴퓨터모의실험, 인공지능모의체계 등의 주제에 주목하고 있고, 특히 원격교육 관련 기술을 연구하여 2010년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을 개교하는 등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의 질 보장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학위를 취득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2009년 이후 북한에서 '세계적 추세'는 고등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으며, 대학 학자들의 연구주제이자 성과 산출의 기준이 되었다. 북한 내 세계적 추세에 대한 강조는 선전선동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져왔다.

위와 같은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에 대한 분석과 연구 참여자 심층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구별되는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특징을 박재윤 외(2008)의 개념틀에 맞추어 세 가지로 도출하였다.

첫째, 정치경제체제를 완전히 개혁개방하지 않고 제한적으로만 교육제도를 개방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교육제도 개방은 개혁개방 및 국제기구 가입으로 가속화되었으나, 북한은 아직 사회를 강하게 통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제도의 매우 좁은 부분만 '모기장식'으로 개방하였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라는 구호에 함축되어 있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은 반드시 발을 북한 땅에 붙여야 한다는 물리적, 정신적 통제를 받고 있다. 물리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국내외의 이동에 제한을 받고 있고, 외부 정보에 접근하는 데도 많은 제약이 가해지며, 인터넷 접속은 극소수의 학자들에게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허용된다. 북한 당국의 물리적 통제는 외국인들에게도 적용되어 Otto Warmbier 사망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도 발생하였다. 정신적으로도 북한 주민들은 통제를 받고 있는데, 교육의 세계적 추세를 지향할 때 학자 및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세계시민성이 아닌 경쟁의식이다. 북한의 경쟁의식은 특히 미국을 겨냥하고 있어 북한 학자와 학생들이 사실상 미국을 동경하

고 미국 사례를 참고하고 있음에도 공식적으로는 적대감만 드러내야 한다.

둘째,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중국은 북한 학자들이 세계 교육발전 추세를 연구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는 국가이며, 국제협력 공동연구도 가장 빈번하게 함께 수행한 국가이다. 학생교류 또한 중국과 가장 밀접하게 이루어져 왔다. 북한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적·교육적 발전에서 중국 모델을 참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베이징 컨센서스'라고 부른다. 북한의 고등교육정책 변화는 철저한 국가 주도의 발전이라는 점, 후발기술이 아닌 첨단기술의 혁신을 추구한다는 점, 비대칭적 군사전략을 위해 고등교육 자원이 활용된다는 점에서 베이징 컨센서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호환성이 미비하지만, 세계적 추세를 모방하고 있다. 북한은 교육서비스의 개방을 주도하는 WTO의 GATS 체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등교육 프로그램이 국제호환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도 2005년 WTO 옵서버 가입을 시도하였으나 핵문제, 미국, 일본 등의 반대, 통계 공개문제 등으로 무산되었다. 또한 북한 교육의 특성상 프로그램이 국제적인 질 인증을 받기가 어렵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사상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능력에 따른 평가 및 선발체계가 공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성적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빠듯한 교육예산을 소수의 대학과 전공에 집중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 교원들이 배급이나 노임을 충분히 받지 못하다 보니 학생들로부터 뇌물을 받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교육체계에서 능력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은 북한 고등교육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0년대 이후 세계 교육발전 추세를 연구하여 고등교육 부문에 적용함으로써 기술적으로 세계 고등교육 추세에 상당히 동형화되었다.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세계적 추세에 맞게 고등교육정책을 변화시키려는 요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세계화 시대의 학술적, 경제적 경쟁에서 추격하려는 것이다. 고등교육의 대중화 및 세계화로 대학

간 국제 비교와 평가가 중요해졌다. 북한은 국제경쟁에서 더 이상 밀려나지 않기 위해 세계적 추세에 따라 고등교육정책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단번도약'하기 위한 '우선순위 투자 프로젝트'로 전개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대외무역이 증가한 것도 세계적 추세에 따라 외국어 교육을 개선하고 시장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교육을 경제발전과 연결시키기 시작한 것은 김정일 시대부터다. 김정일과 김정은의 노작들은 북한 교육의 실태를 세계 선진수준과 비교했을 때 뒤떨어졌다고 평가하며 과학기술 및 경제 발전을 위한 교육발전을 고무하고 있다.

두 번째는 주민들, 특히 엘리트와 청년세대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다. 고난의 행군기 이후 시장화와 대외무역이 확대되면서 북한 주민들도 외부 정보를 듣게 되었고, 젊은 청년들은 그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청년세대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 북한 당국은 외부 정보 유입을 단속하는 한편 교육 및 청년정책을 바꿔나가고 있다. 세계적 추세에 따라 교육정책을 변화시키는 것도 청년세대를 포섭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엘리트 계층 또한 외부 정보를 잘 알고 있으며, 김일성 시대와 다르게 김정일, 김정은 시대에는 최고지도자가 거래적 리더십으로 그들을 통제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의 고등교육 발전 추세를 북한 대학에 적용하여 기술적 동형화를 추구함으로써 엘리트들의 체제 자부심을 발양하는 한편, 그러한 첨단기술을 반제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데 활용하여 내부 결속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 고등교육이 세계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것처럼 박재윤 외(2008)의 교육 세계화 정의와 개념틀에 비추어봤을 때 북한 고등교육이 세계화의 영향은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세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육제도의 개방성이 매우 제한적이고, 인적·물적 교류에 교육서비스 무역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호환성이 부족하다. 세계시민교육 또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제2장에서 제시한 Altbach(2016)의 교육 세계화 논의에 비추어봤을 때도 북한 고등교육은 아직 대중화가 되지 않았고, 능력에 따른

평가와 선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보 통제로 인해 북한 학생과 학자들이 국제적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 즉, 북한 고등교육정책은 Reed(1997)의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세 번째, 중국 자유화 모델의 수정된 버전으로 변화해왔다고 보는 것이 가장 가까울 것이다. 북한은 정치적, 교육적 주권에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만 고등교육 세계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학술교류도 늘려가고 있으나, 그것이 구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대체하고 있지는 않다.

북한이 참고하고 있는 중국식 국가 주도 대학교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대학교육의 핵심인 학문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이다(Zha & Hayhoe, 2014). 학문의 자유는 대학교육의 핵심이며 고등교육의 진정한 발전은 학문의 자유 없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정부와 대학의 관계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며 학문의 자유는 여러 국가에서 위협받고 있다(Altbach, 2016). 북한에서도 김일성, 김정일 시대부터 최고지도자의 통치에 반하는 학자들이 숙청된 역사는 오래되었다.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북한에서는 연구 참여자 A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자들이 주변의 눈치를 보는 수동적인 지식 전달자가 될 뿐이다. 학문의 자유와 학생 선택권 부재는 연구 참여자 H가 탈북하게 된 이유이기도 했다. 그는 재북 당시 외국 서적을 통해 외국 학생들이 교육받는 방식을 알게 됐고, 학생이 전공과 과목을 선택해서 배운다는 것과 제한사항 없이("구석이 없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부러움을 느꼈다. 그는 사상에 제약을 가하는 북한 교육에 회의감을 느끼고 "워낙에 생각을 하면서 살아 있는 게 사람"이라는 인간 존재에 대한 고민과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탈북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북한이 세계적 추세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고등교육정책을 변화시키더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대학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학문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여 학자들이 다양하게 사고하고 연구한 결과를 외국의 학자들과 소통하며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 대학들이 세계일류급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

의 교육이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계획과 전략이 중요한데, 거기에는 북한 학계에서 인식하고 있듯이 통계체계 정교화와 공개가 선결조건이다. 2021년 북한이 발표한 VNR 보고서에서 교육위원회가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서술한 바, 교육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다양한 데이터를 측정하고 국내외에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 기사에서처럼 북한 학자들은 교육통계, 교육예측, 비교교육학 등의 세계적 추세에 관심을 보이나, 정작 북한의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예측도, 외국과의 비교도 불가능하다.

통계뿐만 아니라 전반적 체제가 더 개방될 필요가 있다. 김정일이 하달한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라는 구호는 북한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의 학자와 학생들이 가감 없이 세계 교육발전 추세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2차 자료로만 배울 것이 아니라 발을 직접 해외에 내딛어 자유롭게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국제교류를 더 확대하고 여러 제약들을 완화하며 편향되지 않게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학자들의 인터넷 접속을 더욱 원활하게 허용해주어야 세계적 추세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2장에서 정리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교육 세계화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세 가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선진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WTO 가입이 필수적이다. 현재 북한은 여러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으며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는 경제상황으로 시혜국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핵문제로 인한 대북제재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한의 교육이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적 추세’를 따라잡고 김일성종합대학이 ‘세계일류급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WTO의 당당한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명문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교육 세계화 방식은 단기적 해결책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론 교육 불평등을 가져온다.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에서 보듯이 세계 대학 순위에 오르기 위한 조급증으로 소수의 대학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은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북한 또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소수 대학을 세계적 추세에 맞게 발전시키려 하고 있으나, 교육 세계화의 이익을 평등하게 분배할 때 사회 구성원 전반의 세계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다. 아직 폐쇄되어 있는 북한 사회에서 특히 해외 유학은 소수의 엘리트들에게 부여되는 특권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개방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으로 쿠바의 지역 중심 '국제주의'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 쿠바와 북한은 World Bank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5개국에 포함된다는 사실 외에도 미국의 제재로 인한 공통점을 상당히 공유한다. 앞으로 북미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북한 교육 세계화의 방향도 달라지겠지만, 미국의 지속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프트파워를 형성한 쿠바의 사례는 북미관계 변화와 독립적으로 북한이 취해나갈 수 있는 대안적 교육 세계화의 길을 제시한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 중 하나로 알려진 북한에 교육 세계화가 어떤 영향을 끼쳤고,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특징은 무엇인지 분석함으로써 교육 세계화의 특수한 사례를 보여주었다. 교육 세계화는 각국에 상이하고 불평등한 영향을 끼친다. 서구 선진국의 대학들은 오랜 학문 전통과 넉넉한 예산의 지원을 받으며 세계 대학평가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대학들은 언어의 장벽과 예산 부족을 극복하고 서구 대학들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한다. 세계화는 1990년대 초

냉전 종식과 함께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체제 개혁개방을 실시한 사회주의 국가들도 교육 세계화의 중요한 참여자로 대학교육을 개혁해나갔다.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의 대학들은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교육 세계화가 맞물리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서 고등교육 개혁에 대해 연구되어 왔다(Mok, 2005a; Froumin & Kouzminov, 2015; Nguyen & Tran, 2018).

북한 교육 세계화 사례의 연구 가치는 그 희귀성에 있다 하겠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교육 세계화의 가장 후발주자로서 고등교육을 변화시켜나가고 있다. 북한이 2010년대 들어 세계적 추세에 관심을 갖고 여러 분야를 변화시켜나가고 있음에도 관련 연구가 부족한 것은 북한이 여전히 '은둔의 왕국(Hermit Kingdom)'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World Bank 미가입 5개국 중 하나일 정도로 폐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병로(2016)는 북한이 6.25전쟁 이후 전쟁에서 다시 패하지 않기 위해 전시대비 사회체제를 발전시키면서 외부에 대해 '자폐적 적대성(autistic hostility)'을 가진 국가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2000년을 시작으로 2007,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실시할 때나 2018-19년 북미정상회담에 나올 때면 외부에 체제 개방에 대한 희망을 주다가도 다시 핵을 개발하는 등 자폐적 국가로 되돌아갔고,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19가 확산되는 펜데믹 상황에서는 아예 국경을 봉쇄해버리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169] 그런 북한이 세계 교육발전 추세를 연구하여 고등교육에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외부에서 볼 때 모순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으며, 고등교육정책 변화 자체도 눈은 세계를 보면서도 발은 자기 땅에 붙여야 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이중성은 비단 교육정책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며, 경제, 과학기술, 문화정책에서도 세계와 소통하면서도 단절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북한이 수령 유일체제임에도 다양한 의견을 가진 관료들로 구성된 지배연합 내 역동성이 존재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용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을 위한 기초자료로

169) "North Korea a hermit kingdom again," 「East Asia Forum」 2022년 1월 4일. https://www.eastasiaforum.org/2022/01/04/north-korea-a-hermit-kingdom-again/

쓰일 수 있다. 제4장 제3절에 정리하였듯이 북한은 1995년 8월 대홍수 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원조를 요청하였고, 국제적 지원과 교류협력의 대상이 되었다. UNICEF와 UNESC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제NGO들의 교육 원조를 받았으며, 미국, 캐나다, 독일 등의 단체 및 대학들로부터 교원연수 초청을 받았다. 한국 또한 대북 지원 및 협력의 중요한 주체로서 다양한 교육지원과 학술교류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북한의 군사도발,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로 국제·남북 교류협력이 중단되다시피 한 상태이다.

혹자는 북한의 미래가 예측하기보다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자폐적 적대성'이 만성화된 사회는 외부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개방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주변국 등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김병로, 2016: 477). 특히 동서독의 예에서 보듯이 북한과의 인적 교류 확대는 남북한 통일 전후의 사회통합과 미래세대의 상호이질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김창환, 2016: 145). 따라서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이 다시 활성화될 때를 대비하여 북한 교육의 현황과 당국의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각 분야의 세계적 발전 추세를 파악하고 주요 대학을 세계일류급대학으로 성장시키고 싶어하는 북한이 관심 있을 만한 주제에 대한 교류협력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북한 대학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파트너십을 다변화하여 고등교육 발전의 외연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파편적인 정보들을 종합하고 내국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연구 참여자들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타국 교육 세계화 사례 연구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자료의 한계가 명백하다.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 북한이기에 국제기구 자료에 의존했지만 그 또한 정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가장 기초적인 정보인 교육예산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연구에 한계가 내재되어 있다. 둘째, 코로나바이러스-19 펜데믹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2020년 이후 공간문헌은 입수할 수가 없었다.

펜데믹 상황은 세계화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북한의 경우는 더 극단적인 바, 2019년까지 점증되었던 세계 교육발전 추세에 대한 강조가 2020년 이후 어떻게 바뀌었는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아직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진 북한의 특수한 사례기에 자유주의적 교육 세계화 및 능력주의 교육체계와 비교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나, 본 연구가 그러한 신자유주의적 교육 세계화와 능력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제2장에서 정리하였듯이 교육 세계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며, 능력주의에 대해서도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이 아직 폐쇄되어있고 능력에 따른 선발 및 배치체계가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능력주의 체계를 거울삼아 현실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감희(2021). 북한 사람 이해하기 - 북한에서는 왜 민주화운동이 일어날 수 없는가. 파주: 한울.

강동완(2021).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 실태와 의식변화: 김정은 시대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5(2), 97-131.

강운선, 李明强(2009).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세계시민성 비교 연구. 사회과교육, 48(4), 175-185.

곽인옥(2018). 북한 소프트웨어산업의 e-business 환경 및 특징에 대한 연구.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8, 1-34.

구병림(1996). 대학평가의 제문제. 대학교육, 84, 106-114.

구자억(2002).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중국고등교육의 개혁: 1990-2000년 고등교육관리체제의 개혁을 중심으로. 중국교육연구, 1(1), 109-129.

김경미, 김안나(2020). 김정은 시기의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 방향 분석. 미래교육학연구, 33(3), 1-24.

김계동(2012). 북한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서울: 명인문화사.

김근식(20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 윤영관 편, 북한의 오늘. 서울: 늘품플러스.

_____(2019).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전략. 윤영관 편, 북한의 오늘 Ⅱ. 서울: 늘품플러스.

김기석(2001). 一卵性 雙生兒의 탄생, 1946: 국립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의 창설. 서울: 교육과학사.

김동규(1990). 북한의 교육학. 서울: 문맥사.

김병로(2016).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_____(2018). 서울대와 북한 대학 (김일성대 포함) 대학원생 학술교류 방안. 미발간 자료.

김병로, 김학재, 송원준, 조동준, 최은영, 이정철(2022).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주민 통일의식. 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병연(20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 윤영관 (편), 북한의 오늘. 서울: 늘품플러스.

_____(2019). 김정은 체제의 북한 경제. 윤영관 (편), 북한의 오늘 Ⅱ. 서울: 늘품플러스.

김선, 임수진(2017). 분단초기(1945-1967) 북한 고등교육에서의 소련 제도의 전이와 변용. 교육사회학연구, 27(3), 1-28.

김선호(1979). 북한의 대학교육: 생산교육의 이론과 실제. 북한학보, 3, 97-130.

김수연(2019). 북한의 간부양성체계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수현(2019). 북한의 「교육신문」 기사에 나타난 '새 세기 교육혁명'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수현, 손욱(2020). 북한 「경제연구」로 분석한 경제정책 변화: 텍스트 마이닝 접근법. BOK 경제연구, 2020-6, 1-35.

김안나(2005). 세계화에 따른 고등교육정책의 변화와 대학의 갈등.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7, 91-109.

_____(2006). 교육사회학 연구주제의 탐색을 위한 세계화 이론과 교육연구의 동향 분석. 교육과학연구, 37(1), 29-48.

김영천(2016). 질적연구방법론 Ⅰ : Bricoleu.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김영화(2010). 교육사회학. 파주: 교육과학사.

김유연(2014). 북한 제1중학교 정책 실태 및 변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_____(2022). 교육 - 새로운 세대. 김유연, 박상민·이혜원, 송원준, 이종민, 정은미, 이정철 (저), 북한사회변동 2012-2020. 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유연, 유성상(2021). 북한 고등교육 학계에서 인식한 '세계 교육발전 추세'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22(4), 859-887.

김정렬, 황서연(2018). 북한 제1중학교와 남북한 일반중학교 영어교과서 어휘 분석.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6), 223-231.
김정원, 김지수, 김은주, 한승대, 강구섭(2014).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서지 정보 구축.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지수(2013). 북한 의무교육제도의 전개와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추진에 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3(3), 59-82.
김지수, 김지혜, 김희정, 김병연, 한승대, 강호제, 김선(2019). 김정은 시대 북한 유·초·중등 교육 연구.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김지예, 조염정, 최유진(2019). 북한의 외국어로서 조선어 교육과정 연구 - 유학생 A의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漢城語文學, 41, 99-144.
김창희(2017). 북한의 자강력제일주의와 인민노력동원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85, 99-121.
김형수(2017). 유학생정책의 변화와 전망. 정근식 (편), 북한의 대학: 역사, 현실, 전망. 과천: 진인진.
김형찬(1980). 북한고등교육의 변천과정. 北韓, 101, 174-194.
_____(1988). 북한교육발달사. 서울: 한백사.
_____(1990a). 북한 고등교육 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 - 북한의 고등교육(1). 大學敎育, 44, 53-63.
_____(1990b). 북한 고등교육 기관의 종류 - 북한의 고등교육(2). 大學敎育, 45, 47-51.
_____(1990c). 북한 고등교육 과정 및 학사 운영 - 북한의 고등교육(3). 大學敎育, 46, 49-53.
_____(1990d). 북한 고등교육 연구원의 실태 - 북한의 고등교육(완). 大學敎育, 47, 48-51.
김홍규(20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외교. 윤영관 (편), 북한의 오늘. 서울: 늘품플러스.
_____(2019). 김정은 시기 북한 외교. 윤영관 (편), 북한의 오늘 Ⅱ. 서울: 늘품플러스.
남미경, 윤갑정(2016). 문제중심학습(PBL)이 예비보육교사의 자기조절학습능력과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성별, 학년, PBL사전경험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9), 243-270.
노경란, 김은정, 최현규(2016). 국제학술논문을 통해 본 북한의 과학기술 지식생산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4), 205-227.
문순보(2015). 김정일-김정은 유훈통치 3년 비교. 월간북한, 2015.2., 63-69.
박영자(2013). 김정은 체제의 통치행위와 지배연합. 국방연구, 56(2), 71-96.
박인휘(2018). 김정은 시대의 외교전략. 박재규, 김갑식, 김근식, 김동엽, 김성경, 김흥규, 박인휘, 박형중, 서보혁, 이기동, 조봉현, 조재욱(저), 새로운 북한 이야기. 파주: 한울아카데미.
박재윤, 이혜영, 정일환, 김용(2008). 세계화 시대의 교육제도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박찬모(2019). 북한의 ICT 인력양성과 남북 교류협력 방안. 정보과학회지, 37(5), 8-14.
배국열(2010). 김정일시대 북한 경제엘리트에 관한 연구. 북한학보, 35(2), 75-101.
서유림(2019). 김일성 시대 이후 북한 고등교육 내용과 방법 연구 - 『고등교육』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열관(2010). 교육정책 전이 및 차용 연구의 종합적 분석틀에 대한 이론적 고찰. 비교교육연구, 20(2), 1-25.
손효종(2018). 북한 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평가와 함의. 주간국방논단, 1716, 1-8.
신의항(2012). 중국 고등교육의 국제화.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2.6, 265-290.
신정화(2010).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의 변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4(2), 133-158.
신효숙(1998). 해방 후 북한 고등교육체계의 형성과 특징 - 김일성 종합대학의 창립과 운영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2(2), 195-224.
_____(2003).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_____(2005). 북한사회의 변화와 고등인력의 양성과 재편(1945_1960). 현대북한연구, 8(2), 39-83.

_____(2007). 북한의 대학교육과 대학입시. 수행인문학, 37(2), 39-71.
_____(2010). 김정일 정권의 교육정책. 평화학연구, 11(3), 203-227.
_____(2012).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의 교육개혁 경험. 이장로, 김병로 (편), 체제 전환국의 경험과 북한 교육개혁 방안. 파주: 한울아카데미.
알렉 시글리(2020). [호주 유학생의 북한 탐방기 ②] 류학생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北韓, 578, 74-85.
양문수(2010).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 파주: 한울.
양운철(2020). 남북한 통계통합의 과제. 세종정책브리프, 2020-13, 1-23.
오만석, 신효숙(2014). 현대 러시아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혁 정책. 비교교육연구, 14(1), 185-209.
외교부(2009). 호주 개황. 서울: 외교부.
_____(2018). 덴마크 개황. 서울: 외교부.
_____(2021). 영국 개황. 서울: 외교부.
유성상(2007). 베트남의 교육현황 및 발전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유성상, 유은지, 박인영(2016). 국가발전에 관한 오천석과 정범모의 교육발전 논의 비교: 한국의 교육발전론 비평. 아시아교육연구, 17(2), 1-32.
유욱(2011). 북한의 법체계와 북한법의 이해 방법 - 북한 헌법에 나오는 법령・정령・결정 등 입법형식을 중심으로. 북한법연구, 13, 7-68.
유현정(2014).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에 대한 평가와 전망. 국가전략, 20(1), 37-59.
윤종혁, 이석희, 신효숙, 이대현(2006). 북한 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윤종혁, 이찬희, 이석희, 신효숙, 박영은(2007). 통일 시대에 대비한 북한 교육 지원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이석기(2009). 북한 기업관리체계의 변화. 윤영관, 양운철 (편),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와 사회: 계획에서 시장으로?. 파주: 한울.
이성준(2012). 베트남의 교육개혁 경험과 변화. 이장로, 김병로 (편), 체제 전환국의 경험과 북한 교육개혁 방안. 파주: 한울아카데미.

이영훈(2006). 북한 경제발전전략의 지속과 변화.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경제. 서울: 경인문화사.

이은주(2017). 최초의 국제대학, 평양과학기술대학. 정근식 (편), 북한의 대학: 역사, 현실, 전망. 과천: 진인진.

이인정(2021). 김정은 시기 북한 고등교육 변화와 남북 대학 협력의 과제. 도덕윤리과교육, 70, 239-260.

이정철(2013). 선군경제, 시장 그리고 개혁. 장달중 (편), 현대 북한학 강의. 서울: 사회평론.

이주철(2003). 북한연구를 위한 문헌자료의 활용.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북한연구방법론. 파주: 한울아카데미.

이춘근(2001). 북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의 변천 및 특징. 과학기술정책, 132, 96-106.

이춘근, 김종선(2015). 북한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시사점. STEPI Insight, 173, 1-29.

이춘근, 민철구(2001). 연구중심대학의 효과적 육성방안. 과학기술정책, 128, 41-53.

이항구(1978). 북한의 내막9: 북한의 대학체계와 교과과정. 北韓, 79, 246-255.

임수진(2021). 북한사회의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 연구 -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수호(2013). 탈냉전기 대외정책과 대외관계. 장달중 (편), 현대 북한학 강의. 서울: 사회평론.

임재천, 권지연(2014). 북한 권력엘리트 관리에서 나타난 김정일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 특성을 중심으로. 東西硏究, 26(1), 5-27.

임호열, 최장호, 방호경, 임소정, 김준영, 주셴핑, 진화림, 정은이(2015).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달중(2004). 김정일 체제와 주체비전: 이데올로기, 당, 그리고 군중을

중심으로. 장달중, 이즈미 하지메 (편), 김정일 체제의 북한: 정치·외교·경제·사상. 서울: 아연출판부.

장옥자(1971). 북한교육: 북한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 교육연구, 37, 107-124.

전태준(2016). 체제전환국의 고등교육개혁 비교 - 베트남·중국·러시아의 사례가 북한에 주는 함의.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현준(2008).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정명수(2022). 북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연구 -남북 소프트웨어 개발 협력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성장(2013). 통치 이데올로기 -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 주의로. 장달중 (편), 현대 북한학 강의. 서울: 사회평론.

정영철(2018). 김정은 시대 북한의 세계경제 인식의 변화: 침략과 약탈의 공간에서 생존과 경쟁의 공간으로. 통일과 평화, 10(1), 187-230.

정은미(2022). 의식주와 정보화. 김유연, 박상민·이혜원, 송원준, 이종민, 정은미, 이정철 (저), 북한사회변동 2012-2020. 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정태욱(2006). 북한의 법치주의론과 그 발전방향. 아세아여성법학, 9, 145-162.

조봉현(2018). 북한경제 호전의 진실. 박재규, 김갑식, 김근식, 김동엽, 김성경, 김흥규, 박인휘, 박형중, 서보혁, 이기동, 조봉현, 조재욱 (저), 새로운 북한 이야기. 파주: 한울아카데미.

조재욱(2018). 김정은 시대 시장화 진전과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 박재규, 김갑식, 김근식, 김동엽, 김성경, 김흥규, 박인휘, 박형중, 서보혁, 이기동, 조봉현, 조재욱 (저), 새로운 북한 이야기. 파주: 한울아카데미.

조정아(2004). 김정일 시대의 북한 교육 정책. 아시아교육연구, 5(2), 42-72.

_____(2007). 교육에서의 실리주의와 교육의 불균등발전: 2000년대 북한 교육의 변화. 교육사회학연구, 17(4), 109-131.

_____(2009). 2000년대 북한의 교육 전략과 교육생활세계의 변화. 북한

경제리뷰, 2009.4., 30-45.
_____(2019). 전국교원대회를 통해 본 북한의 교육 정책과 전망. Online Series, CO 19-20, 1-7.
조정아, 서재진, 임순희, 김보근, 박영자(2008).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조정아, 이교덕, 강호제, 정채관(2015).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서울: 통일연구원.
조정아, 이춘근(2008). 북한의 고등교육개혁과 이공계 대학 교육과정. 북한연구학회보, 12(1), 207-233.
조정아, 이춘근, 엄현숙(2020).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서울: 통일연구원.
조한범(2001).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사회상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최권진, 김소영(2013). 불가리아 북한 유학생의 인생 여정 -이상종 씨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7(1), 199-234.
최영표(2002). 중국대학의 세계화 지향, 211工程計劃. 비교교육연구, 12(2), 43-63.
_____(2019). 북한과 중국의 교육학 이론 비교 -1970년대 교육학 교재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연구, 16(1), 1-19.
최영표, 구자억, 손계림(2002).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혁에 따른 중국고등교육의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29(2), 81-112.
최완규, 이주철, 김영수, 류길재, 오승렬, 이우영, 김영재(2001). 북한 국가성격의 변용에 관한 연구: '예외국가'의 공고화. 서울: 한울아카데미.
최용환(2005). 세계화시대 북한 국가-사회관계의 변화. 사회과학연구, 13(2), 242-283.
최은주(2019).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단번도약과 혁신체제 구현. 성남: 세종연구소.
최장호, 최유정(2018).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과 북한 경제.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崔恩珍(2017). 1990년대 이래 중국의 대학개혁과 서구대학모델 수용의

함의. 중국근현대사연구, 74, 259-287.
통계청(2020). 2020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대전: 통계청.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2022). 2022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통일부 통일교육원(2021). 2021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한만길(2004). 쿠바의 사회변화와 교육개혁 연구. 비교교육연구, 14(3), 177-193.
한만길, 손계림(1996a). 북한 고등교육의 발전 과정과 유형. 大學敎育, 80, 71-79.
_____(1996b). 북한 대학의 입학, 학사운영 그리고 학위제도. 大學敎育, 81, 50-60.
_____(1996c). 김일성종합대학과 북한의 권력 엘리트 양성. 大學敎育, 83, 49-57.
_____(1996d). 북한의 과학기술 교육과 김책공업종합대학. 大學敎育, 84, 39-47.
한만길, 이관형 (2014). 북한의 12년 학제 개편을 통한 김정은 정권의 교육정책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18(2), 233-254.
한석(2019). 국내·외 대학평가제도의 비교 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9.7., 315-339.
허련순(2012). 사랑주의 - 옌벤과기대 평양과기대 설립 총장 김진경이 국경과 이념을 넘어 가고자 하는 나라. 서울: 홍성사.
황핑, 조슈아 쿠퍼 레이모, 존 윌리엄슨, 조셉 스티글리츠, 추이즈위안, 아리프 딜릭, 위커핑, 장쥔쥐(2016). 베이징 컨센서스. 서울: 소명출판.

<해외 문헌>

Abishev, N. K., Bidaibekov, Y. Y., Dalinger, V. A. & Knyazyev, O. V. (2016). Higher Education in Russia and Kazakhstan in Modern Condition. *Rupkatha Journal on Interdisciplinary Studies in Humanities*, 8(2), 117-127.
Altbach, P. G. (2012). The Globalization of College and University Rankings.

Change: The Magazine of Higher Learning, 44(1), 26-31.

Altbach, P. G. (2016). *Global Perspectives on Higher Educ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Altbach, P. G., Wit, H. D. & Reisberg, L. (2017). EXECUTIVE SUMMARY. In Mihut, G., Altbach, P. G. & Wit, H. D. *Understanding Global Higher Education: Insights from Key Global Publications.* Rotterdam: Brill.

An, S. (2000). Globalization of Education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form,* 9(2), 128-133.

Bloom, D. E. (2004). Globalization and Education. In Suárez-Orozco, M. M. & Qin-Hilliard, D. B. (Eds.). *Globalization: Culture and Education in the New Millennium.*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okareva, M. (2014). Social causes of Russian students' motivation to study abroad. *Procedia -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27, 124-128.

Burbules, N. & Torres, C. (Eds.). (2000). *Globalization and education: Critical perspectives.* London: Routledge.

Cai, Y. & Yan, F. (2015). Demands and Responses in Chinese Higher Education. In Schwartzman, S., Pinheiro, R. & Pillay, P. *Higher Education in the BRICS Countries: Investigating the Pact between Higher Education and Society.* London: Springer.

Castro, M., Melluish, S. & Lorenzo, A. (2014). Cuban internationalism - An alternative form of globaliz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iatry,* 26(5), 595-601.

Chen, D. (2011).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China and Its Development Direction. *Higher Education Studies,* 1(1), 79-83.

Creswell, J. W. (2015). 질적 연구방법론 - 다섯 가지 접근.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2013).

DiMaggio, P. J. & Powell, W. W. (1983).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2), 147-160.

Dolowitz, D. P. & Marsh, D. (2000). Learning from abroad: The role of policy transfer in contemporary policy-making. *Governance: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and Administration,* 13(1), 5-24.

Dubin, M. N., Bezbakh, V. V., Frolova, E. E. & Galkina, M. V. (2018). The Models of Higher Education in Russia and European Countries at the beginning of the XXIst century: the Main Directions of Development. *European Journal of Contemporary Education,* 7(4), 653-667.

Ezrokh, Iu. S. (2017). The Bologna Process for Russian Higher Education: Myths and Reality. *Problems of Economic Transition,* 59(7-9), 627-640.

Feng, Y. (2013). University of Nottingham Ningbo China and Xi'an Jiaotong-Liverpool University: glob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China. *Higher Education,* 65(4), 471-485.

Flick, U. (2009). 질적 연구방법. (임은미, 최금진, 최인호, 허문경, 홍경화 역). 파주: 한울아카데미. (원서출판 1995).

Froumin, I. & Kouzminov, Y. (2015). Supply and Demand Patterns in Russian Higher Education. In Schwartzman, S., Pinheiro, R. & Pillay, P. *Higher Education in the BRICS Countries: Investigating the Pact between Higher Education and Society.* London: Springer.

Gasperini, L. (2000). *The Cuban Education System: Lessons and Dilemmas.* DC: World Bank.

Giddens, A.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Gurban, I. A. & Tarasyev, A. A. (2016). Global trends in education: Russia case study. *IFAC-PapersOnLine,* 49(6), 186-193.

Halper, S. (2011). 베이징 컨센서스. (권영근 역). 파주: 21세기북스. (원서출판 2010).

Hansing K. & Optenhögel, U. (2015). 쿠바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불평등: 물자부족경제와 개혁의 산물. *en Nueva Sociedad,* 255, 4-18. (원서출판 2015).

Hickling-Hudson, A. & Arnove, R. F. (2014). Higher education and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the extraordinary case of Cuba. In Streitwieser, B. (E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and Global Mobility.* Oxford: Symposium Books.

Hunter, A. (2015). Chinese Universities: Capital for the Beijing Consensus?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16(2), 67-76.

Jeppesen, T. (2019). 시 유 어게인 in 평양. (최은경 역). 서울: 메디치미디어. (원서출판 2018).

King, R., Marginson, S. & Naidoo, R. (2011). *Handbook on Globalization and Higher Education*. Cheltenham: Edward Elgar.

Kim, E. (2021). Changes in North Korea's higher education and education management system during the Kim Jong Un Era. *Asia Pacific Journal of Education,* 41(2), 281-298.

Kim, R. & Ahn, Y. S. (1993). Higher Educ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Higher Education Policy,* 6(2), 29-36.

Kim, S. (2015). 평양의 영어 선생님. (홍권희 역). 서울: 디오네. (원서출판 2014).

Kornai, J. (2019a).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 1. (차문석, 박순성 역). 파주: 나남. (원서출판 1992).

Kornai, J. (2019b).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 2. (차문석, 박순성 역). 파주: 나남. (원서출판 1992).

Kristol, I. (2003). The Neoconservative Persuasion. *The Weekly*

Standard, 47, 23-25.

Lauder, H., Brown, P., Dillabough, J. & Halsey, A. H. (2006). *Education, Globalization, and Social Chan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Li, J. (2018). *Conceptualizing Soft Power of Higher Education: Globalization and Universities in China and the World.* Singapore: Springer Nature.

Li, M. & Chen, Q. (2011). Globalization, internationalization and the world-class university movement: the China experience. In King, R., Marginson, S. & Naidoo, R. *Handbook on Globalization and Higher Education.* Cheltenham: Edward Elgar.

Marginson, S. (2011). Imagining the global. In King, R., Marginson, S. & Naidoo, R. *Handbook on Globalization and Higher Education.* Cheltenham: Edward Elgar.

McGrew, A. (1992). A global society? In Hall, S., Held, D. & McGrew, A. (Eds.). *Modernity and Its Futures.* Cambridge: Polity Press.

Mok K. H. (2000). Impact of Globalization: A Study of Quality Assurance Systems of Higher Education in Hong Kong and Singapore.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44(2), 148-174.

Mok, K. H. (2003). Similar Trends, Diverse Agendas: Higher education reforms in East Asia. *Globalisation, Societies and Education,* 1(2), 201-221.

Mok, K. H. (2005a). Riding over socialism and global capitalism: changing education governance and social policy paradigms in post-Mao China. *Comparative Education,* 41(2), 217-242.

Mok, K. H. (2005b). The quest for world class university: Quality assurance and international benchmarking in Hong Kong. *Quality Assurance in Education,* 13(4), 277-304.

Moody, K. C. (2019). *The People's Professors of Cuba.* Maryland: Lexington Books.

Nguyen, D. P., Vickers, M., Ly, T. M. C. & Tran, M. D. (2016). Internationalizing Higher Education (HE) in Vietnam. *Education + Training,* 58(2), 193-208.

Nguyen, H. T. (2009) Market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Vietnam in the Era of Neoliberal Globalization: Policy & Practice. MA thesis, Simon Fraser University.

Nguyen, N. & Tran, L. T. (2018). Looking inward or outward? Vietnam higher education at the superhighway of globalization: culture, values and changes. *Journal of Asian Public Policy,* 11(1), 28-45.

Nguyen, T. K. Q. (2011). GLOBALIZATION AND HIGHER EDUCATION IN VIETNAM.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23(1-2), 117-136.

Olssen, M. & Peters, M. A. (2005). Neoliberalism, higher education and the knowledge economy: from the free market to knowledge capitalism. *Jornal of Education Policy,* 20(3), 313-345.

Park, S. J. & Abelmann, N. (2004). Class and Cosmopolitan Striving: Mothers' Management of English Education in South Korea. *Anthropological Quarterly,* 77(4), 645-672.

Pérez, R. H. (2005).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Cuba. In Wit, H. d., Jaramillo, I. C., Gacel-Avila, J., Knight, J. *Higher Education in Latin America: The International Dimension.* Washington DC: World Bank Publications.

Reed, G. G. (1997). Globalisation and Education: the case of North Korea. *Compare,* 27(2), 167-178.

Rizvi, F. (2007). Postcolonialism and Globalization in Education.

Cultural Studies ↔ Critical Methodologies, 7(3), 256-263.

Robeyns, I. (2006). Three models of education: Rights, capabilities and human capital. *Theory and Research in Education,* 4(1), 69-84.

Schwartzman, S. (2015). Demands and Policies for Higher Education. In Schwartzman, S., Pinheiro, R. & Pillay, P. *Higher Education in the BRICS Countries: Investigating the Pact between Higher Education and Society.* London: Springer.

Silova, I. & Niyozov, S. (2020). *Globalization on the Margins: Education and Post-Socialist Transformations in Central Asia.* Charlotte: Information Age Publishing.

Slaughter, S. & Leslie, L. (1997). *Academic Capitalism: Politics, Policies, and the Entrepreneurial University.*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Smith, H. (2000). Bad, mad, sad or rational actor? Why the 'securitization' paradigm makes for poor policy analysis of north Korea. *International Affairs,* 76(1), 111-132.

Tilak, J. B. G. (2008). Higher Education: a Public Good or a Commodity for Trade?. *PROSPECTS,* 38(4), 449-466.

Yang, R. (2011). Self and the other in the Confucian cultural context: Implications of China's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for comparative studies. *Int Rev Educ,* 57, 337-355.

Zha, Q. & Hayhoe, R. (2014). The "Beijing Consensus" and the Chinese Model of University Autonomy. *Frontiers of Education in China,* 9(1), 42-62.

Želvys, R. (2018). Globalization and development of education in Post-Socialist countries. *Вестник КазНУ. Серия педагогическая,* 4(57), 11-17.

<북한 문헌>

「고등교육」 2005~2019.
「교육신문」 2008~2019.
「로동신문」 1994~2019.
「민주조선」 2009~2019.
『김일성종합대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2016.
『조선대백과사전 2』.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5.
『조선말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평양: 법률출판사, 20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 평양: 법률출판사, 2016.

강일(2007). 시험내용개선 움직임. 고등교육, 2007(2), 37.
계은희(2015). 고등교육부문 교원진영을 강화하기 위한 세계적발전동향. 고등교육, 2015(5), 56-57.
고영경(2015). 련속고등교육체계. 고등교육, 2015(1), 30.
공철혁(2006). 최근 박사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주목되는 문제. 고등교육, 2006(5), 60.
김두학(2013). 연구형대학. 고등교육, 2013(3), 65.
김령애(2009). 최근 외국어시험방법의 추세와 그 특징. 고등교육, 2009(6), 63.
김룡진(2017). 세계 여러 나라 고등교육에서 널리 리용하고있는 교수방법 몇가지. 고등교육, 2017(10), 63.
김명수(2016). 교육경제학의 형성과 발전과정. 고등교육, 2016(6), 93면.
김미정(2014). 교육평가지표체계의 구성방법. 고등교육, 2014(2), 74-75.
김성숙(2008). 교육에서 중시되고있는 수학. 고등교육, 2008(5), 62.
김일성(1977).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 발표.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1984).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 전국교육일군열성

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동경: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김정일(2008).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준용(2005). 21세기 수학발전전망. 고등교육, 2005(1), 60-62.
김혜선(2011). 세계1류급대학건설에서 주목되는 몇가지 문제. 고등교육, 2011(3), 76.
라영남(2008). 학업성적평가의 발전추세. 고등교육, 2008(3), 43.
라영남(2013). 학생실력평가방법의 발전추세. 고등교육, 2013(1), 74.
로춘식(2006). 원격교육과 그 발전동향. 고등교육, 2006(2), 53-54.
리명선(2017). 교원양성사업에서의 몇가지 발전추세. 고등교육, 2017(12), 62-64.
리순애(2012). 지식경제시대와 교원재교육. 고등교육, 2012(5), 74-75.
리영삼(2016). 지식경제시대 창조적인재의 본질과 특징. 고등교육, 2016(4), 59.
리철(2015). 종합대학의 본질과 특징. 고등교육, 2015(4), 80.
박금성(2015).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의 교육과정개혁추세. 인민교육, 2015(4), 64.
박춘석(2009). 수학실험과목의 도입동향. 고등교육, 2009(5), 64.
본사기자(2007). 콤퓨터망을 리용한 원격교육. 고등교육, 2007(5), 62.
본사기자(2016). 세계과학계가 인정하는 학자집단으로. 고등교육, 2016(10), 11.
신동천(2014). 연구형대학의 실현방도. 고등교육, 2014(5), 77.
윤승철(2016). 교육생태학의 발생과 연구대상. 고등교육, 2016(6), 94.
장관호(2016). 연구형대학과 1류급대학의 관계. 고등교육, 2016(2), 21.
전용철(2011). 세계 여러 나라들의 고등직업기술교육방식. 고등교육, 2011(3), 77.
조성철(2017). 세계일류급대학과 창조형인재육성. 고등교육, 2017(2), 61.

최영복(2015). 학술형인재와 실천형인재. 고등교육, 2015(2), 26.
최향숙(2010). 회색체계리론에 대하여. 고등교육, 2010(6), 58.
한광일(2017).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교육예측동향. 고등교육, 2017(5), 62.
한은히(2006). 다른 나라 대학들에서 수재교육을 어떻게 하고있는가. 고등교육, 2006(4), 60.
한충성(2009). 다른 나라 대학들의 교육내용 및 방법개선에서 주목되는 몇가지 문제. 고등교육, 2009(3), 60-61.

<신문기사>

“<인터뷰> 北과 과학교류, 토슨 美시라큐스대 교수,” 「연합뉴스」, 2009.6.19.
“[뉴스초점] 북한 최고의 김일성대학, 유학비 얼마나 드나?” 「자유아시아방송」, 2018.12.18.
“[최보식이 만난 사람] “나는 공산주의자도 자본주의자도 아니다… 오로지 사랑주의자일 뿐″,” 「조선일보」, 2014.7.7.
“김일성대·베를린자유대, 인문학 교류…서원(書院) 연구부터 시작,” 「데일리한국」, 2018.5.31.
“김일성大, 외국인 유학생에 '손짓'… 전공 대폭 개방,” 「연합뉴스」, 2017.10.21.
“너도나도 등재…세계권위 인명사전, 구겨진 신뢰?,” 「매일경제」, 2018.5.31.
“대북지원: 프랑스 민간 후원으로 학교 세운 북한… 한국도 지원 가능할까?” 「BBC NEWS 코리아」, 2021.11.26.
“미 시라큐스대학, 김책공대 학자 6명 매년 초청,” 「한겨레」, 2007.3.2.
“北 경제·재정전문가 獨서 시장경제 학습,” 「DailyNK」, 2005.9.30.
“北교육기금에 국제사회 후원 이어져,” 「연합뉴스」, 2013.6.26.
“北 노동당 간부들, 자본주의 훤히 꿰뚫어,” 「동아일보」, 2011.5.12.
“北최고명문 김일성종합대 유학비용 연간 800만원,” 「연합뉴스」, 2016.10.1.
“북한: 미국, 북한 여행금지 조치 1년 더 연장,” 「BBC NEWS 코리

아」, 2021.9.2.
“북한, 경제 개발구 20여 곳 열띤 홍보…제재 속 투자 모집 비현실적,″ 「VOA 뉴스」, 2020.12.15.
“북한, 고등중학교에 영어 원어민 교사 초청,” 「VOA」, 2011.3.22.
“북한, 영어 교육 적극 권장,” 「자유아시아방송」, 2008.6.26.
“북한, 올해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불참…10년 만에 처음,” 「VOA 뉴스」, 2017.8.2.
“북한, 핵 기술·인력 어떻게 만들어졌나,” 「한겨레」, 2006.10.13.
“북한 국적 미국 유학생 17명...13% 증가,” 「VOA」, 2013.11.13.
“북한 노동신문 “사상적 모기장을 든든히 쳐야 한다”,” 「경향신문」, 2014.2.27.
“북한 대학교원 40명 캐나다 대학서 시장경제 연수,” 「프리덤뉴스」, 2018.3.30.
“북한 민간교육기금, 스웨덴서 코로나 구호품 후원받아,” 「연합뉴스」, 2020.8.5.
“북한학생들의 자비 해외유학,” 「자유아시아방송」, 2019.10.21.
“성자립 김일성대총장 “서울대와 교류 긍정검토″,” 「연합뉴스」, 2005.8.15.
“與 “북한 핵무력 법제화, 여전히 국제정세 오판…고립자초″,” 「연합뉴스」, 2022.9.9.
“영국문화원, 15년 간 북한 영어교사 4천명 교육,” 「VOA」, 2016.2.10.
“Theodore Levitt, 81; Economist First to Use the Term ‘Globalization’” 「Los Angeles Times」, 2006.7.9.
“와이파이 터지는 北 유일한 학교…교수 전원 무보수,” 「중앙선데이」, 2018.3.18.

<웹사이트>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http://www.nktech.net/
사단법인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http://www.nafec.or.kr/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북한채널. http://nkproject.org/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http://kp.china-embassy.gov.cn/kor/
최종현학술원. https://www.chey.org/Kor/CiasMain.aspx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https://www.iie.org/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index.do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https://www.topuniversities.com/university-rankings
UMAP. https://umap.org/
UNESCO UIS. http://uis.unesco.org/
UNICEF. https://www.unicef.org/
UNOCHA FTS. https://fts.unocha.org/
UN Statistics Division. https://unstats.un.org/
We are social. https://wearesocial.com/uk/
YouTube. https://www.youtube.com/

Abstract

A Study of North Korea's Higher Education Policies Since the 2000s

: Changes in Line with 'Global Trends'

You-Yeon Kim

Department of Education, Sociology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apid globalization of education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in the early 1990s appears to have been different and unequal from country to country, and this is true for socialist countries, too. North Korea, considered the world's most closed society, has also been influenced by the globalization of education and has been changing its higher education policies according to global trends since the 2000s. This study identifies the aspects, characteristics, and main causes of such changes. North Korea's official literature has been analyzed to reveal what trends officials have perceived and adapted, and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globalization of education by Park et al. (2008) has been applied to describe North Korea's change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North Korean refugees as well as others familiar with North Korea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and primary causes of changes in North Korean higher education policies have been analyzed by comparing them with the policies of other socialist countries.

In articles in *Kyoyook Shinmun* (*Education Newspaper*), the discourse related to North Korean education and global trends was analyzed to be divided into four periods. The first phase was 2009-2011, when Kim Jong-il began to emphasize becoming a "global educational powerhouse" and issued a slogan to Kim Il-sung University: "Plant the feet firmly on our land and look out over the world." The second phase was 2012-2015, when the "injunction" to catch up with global trends in educational development came after Kim Jong-il's death and concrete achievements began to take shape.

The third phase was 2016-2017, as articles related to global trends decreased in light of North Korea becoming further isolate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llowing its fourth to sixth nuclear tests and a "Self-strengthening First" line came into focus. The fourth phase was 2018-2019, when articles on global trends increased amid North Korea's attempted diplomatic negotiations wi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role of teachers was emphasized at that time. Through an analysis of the phases, it is seen that the emphasis on global trends in North Korea have had not only a practical meaning but also a characteristic of propaganda, with the varying degrees in response to fluctuating external relations.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hanges in North Korean higher education policies according to the conceptual framework are as follows: The openness of the overall educational system is strictly limited. The Education Act of 1999, the Higher Education Act of

2011, and the Teachers Act of 2015 each include provisions related to educ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Higher Education Act in particular stipulates not only an exchange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lectures by foreign professors but also a focus on education at the institute of scientific research to cultivate "world-class scholars." In the status quo, The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the only private international university jointly established by South and North Korea and symbolizes the limited degree of openness of the North Korean educational system, hosting foreign faculty to teach local students in English-only curriculum.

Also, educational exchanges of personnel and goods have continued on a small scale. North Korea has diversified the destinations for its students studying abroad since the 2000s and introduced a self-funded study abroad system in 2009. In the late 2010s, a few North Korean universities actively attracted international students, thereby expanding its pool of inbound students. As for educator exchanges, foreign professors have been invited to teach in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professors have been training abroad since the 2000s.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s were held annually in North Korea from 2011 to 2018. Exchange of goods is heavily focused on humanitarian purposes and reciprocity is yet to be achieved.

Furthermore, North Korea has imitated global trends in higher education. Local scholars are interested in establishing educational plans and are trying to improve statistical capacity. Likewise, education authorities are trying to develop major universities, including Kim Il-sung University, into "world-class universities" and "research-type universities," and scholars seek to make educational content more practical, comprehensive, and modern while also

introducing discussion-based teaching methods and “problem-based teaching methods.” They are interested in various forms of educational technology and want to realize a vision of “making all people well-versed in science and technology” by establishing a remote education system. Among other things, education authorities are encouraging teachers to earn degree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teacher training program.

Essentially, since 2009, global trends have become an important basis for North Korean authorities to establish higher education policies and have become a key research topic for university scholars as well as criteria for performance evaluatio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ree characteristics of changes in North Korean higher education policy were determined. First, the educational system was opened only on a limited basis, without complete reform or opening of its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North Korean students and scholars are geographically and psychologically limited to their own nation, even though they are obligated to understand the world, as embodied Kim Jong-il’s slogan for Kim Il-sung University. They cannot enjoy the freedom of movement both at home and abroad and are restricted from accessing external information and contacting foreigners. In terms of academics and realization, North Koreans are indoctrinated to maintain a sense of competition with the outside world rather than cultivate a spirit of global citizenship.

Second, international exchange is notably concentrated in China. This is the country that North Korean scholars refer to the most when attempting to grasp a sense of global trends and with which most joint cooperation research has been conducted. North Korean higher education policies seem to be strongly guided by the Beijing

Consensus in that it is thoroughly state-led, pursues innovation in high-tech technologies, and uses higher education resources for asymmetric military strategies.

And third, the international compatibility of North Korea's higher education program is insufficient, yet it imitates global trends. Although the country attempted to join the WTO, which leads the trade in education services, as an observer in 2005, its application failed due to nuclear issues, opposition from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a transparency problem regarding statistics. Additionally, it is difficult for North Korean higher education programs to receive international quality assurance because North Korea provides political ideological education and does not have a solid evaluation and selection system based on merit. Nevertheless, North Korean higher education has technically become quite isomorphic to global trends by studying the educational development policy of other countries and applying them in its own manner since the 2000s.

The question becomes what primarily causes North Korea to change its higher education policy in line with global trends despite the inherent difficulties. The first cause is academic and economic competition in the modern era of globalization. Amid fierce international competition, North Korea is changing its higher education policy according to global trends and developing it as a "priority investment project" to "take a leap forward." The second cause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ite and the youngest generations. As marketization progressed after the Arduous March, external information was introduced to North Korea, and younger generations have been more sensitive to cultural changes, such as the Korean Wave. The nation's elite have also been seen following "transactional leadership" during the Kim Jong-il and Kim Jong-un

eras, and it has been determined that education authorities are trying to develop higher education policies as a means of strengthening their own pride and esteem.

In terms of evaluating North Korean higher education as globalized, in light of the definition and conceptual framework of educational globalization by Park et al. (2008), North Korean higher education has been influenced by globalization. Still, it is difficult to characterize that it has been globalized just yet. Ultimately, North Korea's state-led university education violates academic freedom, so for North Korean universities to attain a level at which they can compete with world-class universities, they must first be willing to guarantee academic freedom and freedom of communication, refine and disclose the nation's statistical system, and open up the overall system.

This study's significance is in showing a special case of educational globalization by analyzing changes in the higher education policy of North Korea, where is known to still maintain the basis of socialist economic system. In practical term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international and inter-Korean cooperation.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that the available data may not fully reflect the situation on the field, that the situation post-2020 has not been analyzed, and that the paper cannot capture sufficient critical perspectives on the educational globalization and meritocratic system.

keywords : educational globalization, educational isomorphism, global trend, educ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socialist education, North Korean higher education
Student Number : 2017-38256

감사의 글

긴 고민 끝에 박사과정을 시작한 것은 목소리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석사과정 졸업 후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느꼈고, 박사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연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에서 더 나아가, 한 명의 박사를 탄생시키려면 온 가족과 여러 스승의 도움이 필요했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큰 빚을 졌습니다.

먼저, 박사과정을 지도해주신 유성상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교육 그리고 다양한 국가들의 교육에 대한 교수님의 열정과 실천은 언제나 도전을 줍니다. 생각을 확장시킨 후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 질문을 제기해주시고 조언해주신 덕분에 학위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석사과정을 지도해주셨던 김석향 교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분단문제와 북한이라는 대상에 대해 막연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저를 학문의 세계로 인도해주셨고, 연구자의 자세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논문을 지도해주신 심사위원분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 여건 상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참여해주셔서 통찰력을 제공해주신 심사위원장 우용제 교수님과 부위원장 김범수 교수님, 그리고 북한교육 연구의 선행연구자로서 세심한 조언을 해주신 조정아 부원장님, 신효숙 교수님 네 분 덕분에 부족한 논문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김학재 교수님, 이정철 교수님께도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김정원 박사님, 김지수 박사님, 전남대학교 강구섭 교수님, 그리고 안경식, 정재훈 팀장님 덕분에 보람 있는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업무에 참여하고 교육학이라는 학문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고등교육 관련된 귀중한 경험을 나누어준 연구 참여자분들께도 사의를 표합니다. 그분들의 증언이 아니었으면 이 논문은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북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시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관계자분들과 영문초록을 감수해준 김태환 선생님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같은 학기 박사학위논문 심사를 받으며 새벽에도 연락을 주고받고 서로 위로했던 남유진 선생님과 교육사회학 전공 학우들, 오랜 동료이자 친구 손명아 선생님, 매사에 기도로 동역해주는 멘토 김성은 언니에게도 고맙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큰 감사는 사랑하는 남편 정우형과 아들 정이든에게 드립니다. 결혼 후 5년의 시간 동안 변함없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준 덕분에 졸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10개월 아기 이든이가 밤잠을 잘 자준 덕분에 논문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육아에 큰 도움을 주신 양가 부모님, 특히 친정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북한에 대한 마음의 뿌리를 제공해주신 친할아버지와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늘 격려해주신 친정아버지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산과 같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서 저에게 비전과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허락해주신 목소리가 부끄럽지 않게 학자의 언어를 연단해가겠습니다.